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SDG의 핵심 원칙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17개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성평등(목표5) 및 기후변화 대응(목표13)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SDG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목표 달성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2022년 극빈상태에 놓인 세계인구는 2019년에 비해 2,300만 명 증가하였고,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도 1억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난민 규모는 사상 최고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SDG 종료 이후를 대비한 POST-2030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POST-203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표 개발 ▲정책 결정자와 통계 전문가 간 협력 확대 ▲비전통적 데이터(위성 데이터, 빅데이터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통계연구원은 SDG 지표 개발 및 분석을 포함하여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통계 생산 방법론, 기후변화 관련 지표 연구, 경제 활력 제고와 실질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통계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통계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SDG 보고 체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통계연구원장 김진

김진



발간사	003
주요 결과	006
인포그래픽	010

SDG 목표별 분석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 (☞ 관련 지표 1.2.1)	017
공적 소득비례연금 수급률 및 가입률은 개선 중 (☞ 관련 지표 1.3.1)	019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GDP 대비 6.74%로 증가하지만 OECD 평균에는 크게 미달 (☞ 관련 지표 1.b.1)	021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최근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증가 (☞ 관련 지표 2.1.1)	023
농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지표 2.3.2)	025
식량 관련 유전자원의 보전과 실용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2.5.1)	026
이상기상 및 생산여건 변화로 최근 식품가격은 상승 추세 (☞ 관련 지표 2.c.1)	026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8.5% 증가 (☞ 관련 지표 3.4.2)	029
DTP, 홍역, 폐렴구균 등 주요 백신 접종률 높게 유지 (☞ 관련 지표 3.b.1)	031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적은 편 (☞ 관련 지표 3.c.1)	033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 15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 달성 (☞ 관련 지표 3.d.1)	034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최소속달 수준 도달 청소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80% 중반대 유지 (☞ 관련 지표 4.1.1)	037
유아교육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5%에 육박 (☞ 관련 지표 4.2.2)	039
코로나19 이후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회복세이나 취약 집단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 (☞ 관련 지표 4.3.1)	040
성인 문해율이 높아지면서 성별 격차도 감소 (☞ 관련 지표 4.6.1)	041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 (☞ 관련 지표 5.5.1)	04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편 (☞ 관련 지표 5.5.2)	045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편 (☞ 관련 지표 5.5.2)	046
여성을 향한 폭력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뚜렷이 감소 (☞ 관련 지표 5.2.1 / 5.2.2)	047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지속적인 공공 급수시설 보급으로 식수 서비스의 지역 격차 개선 (☞ 관련 지표 6.1.1)	051
산업 부문별 물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물 스트레스 완화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6.4.1 / 6.4.2)	052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 '높음'으로 유지 (☞ 관련 지표 6.5.1)	054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관련 지표 7.2.1)	057
국가 에너지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율은 둔화 추세 (☞ 관련 지표 7.3.1)	060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평균적인 삶의 수준 개선 속도를 나타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을 약화 (☞ 관련 지표 8.1.1)	063
평균적인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나타내는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을 저하 (☞ 관련 지표 8.2.1)	064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실업률은 전년 대비 증가 (☞ 관련 지표 8.5.2)	066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 (☞ 관련 지표 8.8.1)	067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9.2.1)	071
제조업 고용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남성 대비 절반 수준 (☞ 관련 지표 9.2.2)	072
연구개발 자본과 인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체 연구개발 수행 비중과 여성 인력 비율의 증가 추세 뚜렷 (☞ 관련 지표 9.5.1 / 9.5.2)	073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가구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가운데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낮은 수준 (☞ 관련 지표 10.1.1)	077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산 불평등은 악화(☞ 관련 지표 10.4.2)	079
사회적 이동성은 OECD 중위권이며 임금 분배, 사회적 보호, 근로조건 등에서 개선 필요 (☞ 관련 지표 10.4.2)	081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적절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임대료 부담 완화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11.1.1)	083
초미세먼지(PM2.5) 개선은 정체 (☞ 관련 지표 11.6.2)	085
정주환경 만족도 증대를 위한 공원 등 공간시설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11.7.1)	086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확장 (☞ 관련 지표 11.3.1)	087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식품 폐기량 다시 증가, 감량 노력 가속화 필요 (☞ 관련 지표 12.3.1)	089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인 반면 재활용률은 답보 상태 (☞ 관련 지표 12.4.2)	091
재활용률은 상위 수준이나 정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필요 (☞ 관련 지표 12.5.1)	093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늘어 (☞ 관련 지표 12.c.1)	09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원 (☞ 관련 지표 12.1.1)	097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2.3% 감소 (☞ 관련 지표 13.2.2)	099
폭염, 호우 등 극한기상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대응 필요 지표 (☞ 관련 지표 13.1.1)	103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단위 제도 시행 중 (☞ 관련 지표 13.1.2 / 13.1.3)	105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산도는 연평균 pH 8.10~8.17 수준을 유지 (☞ 관련 지표 14.3.1)	109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24년에 감소 (☞ 관련 지표 14.a.1)	112
해양쓰레기 수거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라스틱 비중은 여전히 높아(☞ 관련 지표 14.1.1)	113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영향 확대 중 (☞ 관련 지표 14.4.1)	114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수단 충실히 이행 중 (☞ 관련 지표 14.6.1)	116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토지전용 등에 따라 모든 광역시도에서 산림비율 감소 (☞ 관련 지표 15.1.1)	119
육지, 담수 및 산악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면적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15.1.2 / 15.4.1)	122
적색목록지수 악화 추세 지속되는 가운데 생태계 적색목록지수 개발 중 (☞ 관련 지표 15.5.1)	123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공직에서 장애인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OECD 최하위권(☞ 관련 지표 16.7.1)	127
보건, 주민자치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인허가에 서비스 만족도 상승 (☞ 관련 지표 16.6.2)	130
범죄 두려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16.1.4)	130
살인 발생 감소세 주춤(☞ 관련 지표 16.1.1)	132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 관련 지표 16.9.1)	133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ODA 규모 확대 지속 (☞ 관련 지표 17.2.1)	135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규모 증가 (☞ 관련 지표 17.2.1)	137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17.3.1 / 지표 17.11.1)	139
인터넷 이용률은 97.4%에 이르지만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은 저조 (☞ 관련 지표 17.6.1 / 17.8.1)	141

부록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개요	144
SDG 통계 데이터 현황	146
SDG 지표 총괄표	147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59
용어 약어	164



주요 결과

글로벌 수준의 SDG 이행현황 평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유엔의 SDG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SDG의 달성은 위협에 처해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SDG의 목표들을 2030년까지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고 야심차며 변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UN 2024).

SDG 지표에 대해 정량적인 추세분석을 통해 2030년까지의 글로벌 목표 달성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2024년 기준 유엔 SDG의 135개 세부목표 중 17%만이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48%는 목표달성을 위한 경로에서 다소 혹은 심각한 정도로 이탈하고 있으며, 나머지 35%는 정체 혹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 2024).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전쟁이 동반하는 경제적 혼란, 점점 더 현실화되는 기후위기 등 SDG의 실현은 이제 더욱 거대하고 복잡한 도전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2022년 극빈 상태에 놓인 세계 인구는 2019년 대비 2,300만 명 증가하였고,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도 1억 명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대수명의 진보는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미래의 번영을 이끌어갈 교육 수준도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난민 규모는 사상 최고인 3억 7,400만 명에 이르며, 민간인 사상자 규모는 2022년과 2023년 사이 72% 증가했다. 다중 환경위기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2023년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고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한계치인 1.5°C에 매우 근접하였으며,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과 취약국가들은 더욱 심각한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들어서, 국가간 소득 불평등의 개선은 더욱 요원하다. 개도국의 SDG 달성을 위한 투자 갭은 연간 4조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주요 결과

한국은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 등 SDG 이행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글로벌 SDG 지표에 기반한 SDG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SDG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서는 총 67개의 SDG 지표를 대상으로 한국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DG의 5가지 지향점인 5P, 즉 사람(People)과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람(People):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평균 빈곤 갭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정도는 최근 개선세가 주춤하며,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21년 높게 나타났던 식품가격이상지표(IFPA)는 2022~23년 ‘정상’ 범위로 복귀했으나 식품물가상승률은 수년간 5%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은 높게 평가되는 한편, 그간 감소해오던 자살률이 2023년 전년대비 뚜렷이 증가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유아교육과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나타내고, 공직과 관리자급의 여성 대표성은 꾸준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여성을 향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Planet):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코로나19 시기의 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반동을 지나 2022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온실가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과 공급 비율, 국가 에너지 효율은 모두 장기적으로 개선세에 있으나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폭염과 호우가 자연재난 인명피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림면적, 적색목록지수, 해양산도, 어업생산량 등 여러 측면에서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쇠퇴가 드러나며, 물 스트레스와 물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약부문에 더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소비 단계뿐 아니라 생산·제조·유통 등 식품 공급망 전과정의 관리가 요구된다.

번영(Prosperity): 1인당 실질 GDP는 2023년 1.3% 성장에 그쳤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고,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며 고용상황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제조업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편인 한국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은 꾸준히 개선되는 반면 자산 불평등은 최근 악화를 보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감소하며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시민의 녹색 공간 확충은 과제로 남아있다.

평화와 협력(Peace and Partnership): 공직자 집단의 다양성 측면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정책적 노력에 따라 늘고 있으나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인허가 서비스, 공청회·청문회,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만족도에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며,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져 안전 수준이 개선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3년과 2024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현대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인터넷의 이용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자와 저소득·저학력 등 취약계층과의 격차는 해소가 필요하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분석결과를,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쟁, 기후위기 등 세계사적 위기가 한국 사회에도 직간접적,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 및 연령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주요 결과

1 빈곤퇴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평균 빈곤갭은 최근 개선세가 주춤하고,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수급률은 증가. GDP 대비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2020년까지 크게 늘었으나 OECD 평균 대비 낮음

2 기아종식



식품가격이상지표는 최근 '정상' 범위로 복귀했으나 식품물가상승률은 수년간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최근 다시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오랜 기간 늘지 못하고 정체

3 건강과 웰빙 증진



그간 감소해 오던 자살률이 2023년 다시 증가. 한국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과 아동 백신 접종률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보건의료인력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여전히 적음

4 양질의 교육 보장



국제자료(PISA)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학력수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유지됨. 유아교육과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도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나타내고 문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은 계속 증가 중이나,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편차 존재

5 성평등달성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 및 민간기업의 관리자급에서 여성 대표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여성을 향한 성폭력과 범죄는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더욱 다양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공공급수의 보급이 계속 늘고 지역 격차도 개선 중이며 통합물관리(IWRM)의 이행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물 스트레스 수준과 물 이용 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노력 요구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공급 비율, 에너지원단위로 나타나는 국가 에너지효율은 모두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과 에너지원단위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나 주요국 대비 양호한 편이고,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며 고용상황은 개선을 보임. 산업 재해율은 증가하나 사고성 사망만인율 등 치명적 재해는 감소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부가가치와 고용에서의 제조업 비율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함.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 규모는 그간의 투자로 높은 수준에 있으나 향후 예산 변동에 따른 추이에 주의 필요

10 불평등 감소



소득 불평등이 꾸준히 개선되는 한편 자산 불균형은 최근 악화를 보이고, 가구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은 특히 소득 1분위에서 증가가 두드러짐. 사회적 이동성 지표에서는 공정한 임금, 사회 보호, 근로조건 등에 개선이 요구됨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주요 결과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감소하며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고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조성면적은 증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시민의 녹색 공간 확충이 더욱 요구되며,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최근 정체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전체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에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다시 증가한 음식물류 폐기물(식품 폐기)뿐 아니라 생산·제조 단계 등 식품 공급망 전 과정의 관리가 요구됨.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



1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2년 다시 감소를 나타내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폭염과 호우의 비중이 높아 강화된 대응이 요구



14 해양생태계 보존
장기 모니터링에 따른 해양산성화 속도는 전 지구나 인근 해역과 비슷하게 나타나며, 해안쓰레기의 대부분을 플라스틱이 차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오랜 기간 감소 중이나 총허용어획량 제도 등 어업자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 필요



15 육상생태계 보호
산림면적과 적색목록지수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육지, 담수, 산악 지역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도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국제권고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 준비 중



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장애인과 청년 세대로 나타나는 공직자 집단의 다양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 가운데 살인 발생의 감소세는 최근 주춤



17 글로벌 파트너십
한국의 ODA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GNI 대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비중은 높은 편이나 직접투자와 교역은 저조.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자 및 저소득·저학력 등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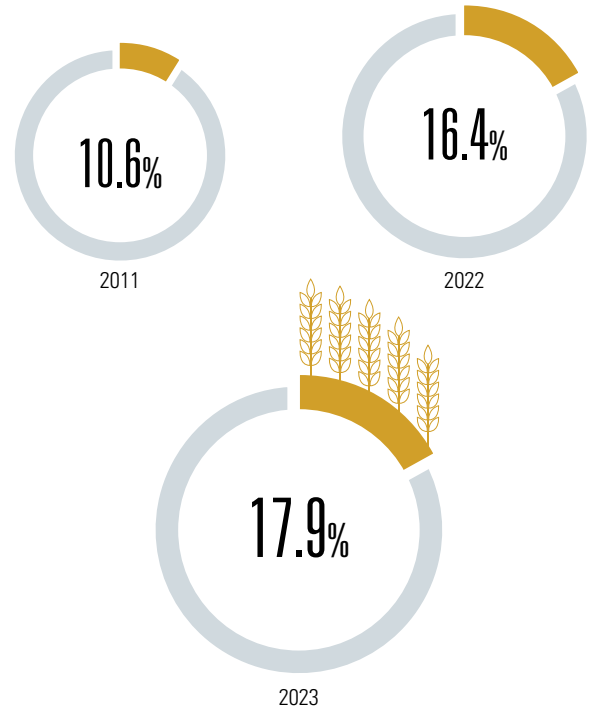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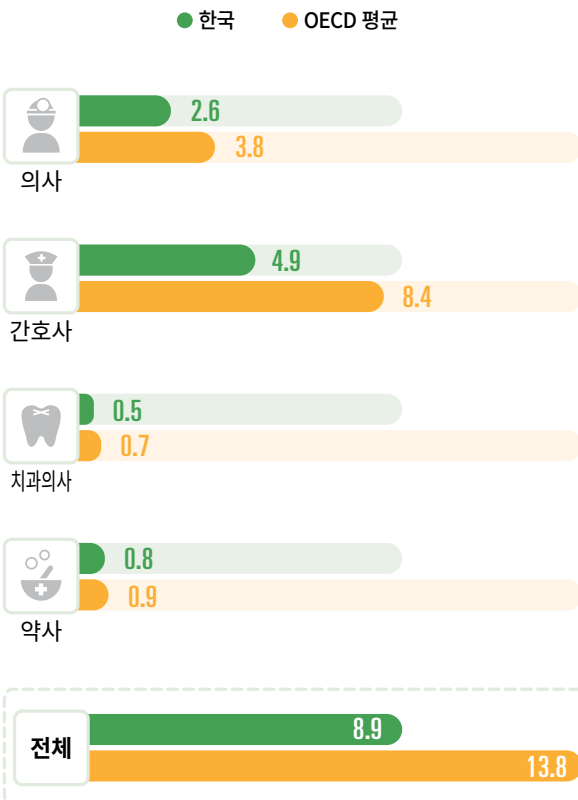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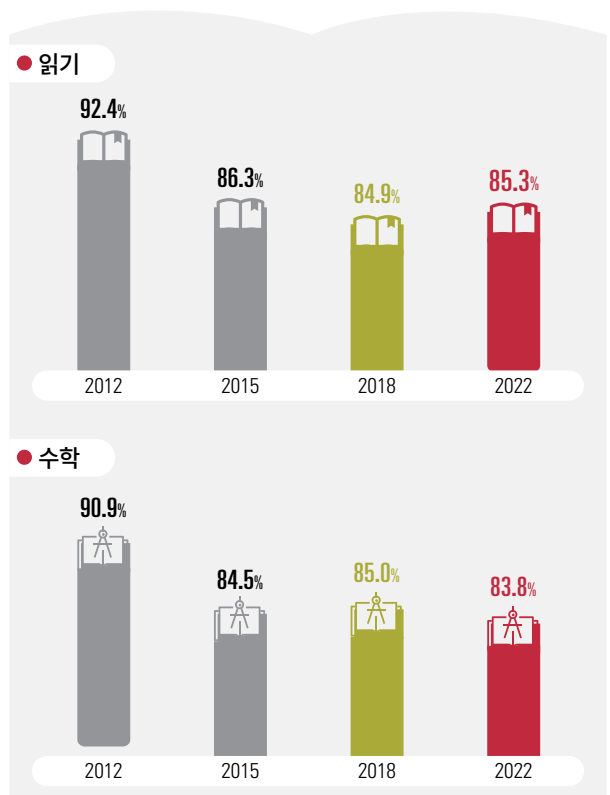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증가



보건의료인력 확대에도 OECD 국가 중 적은 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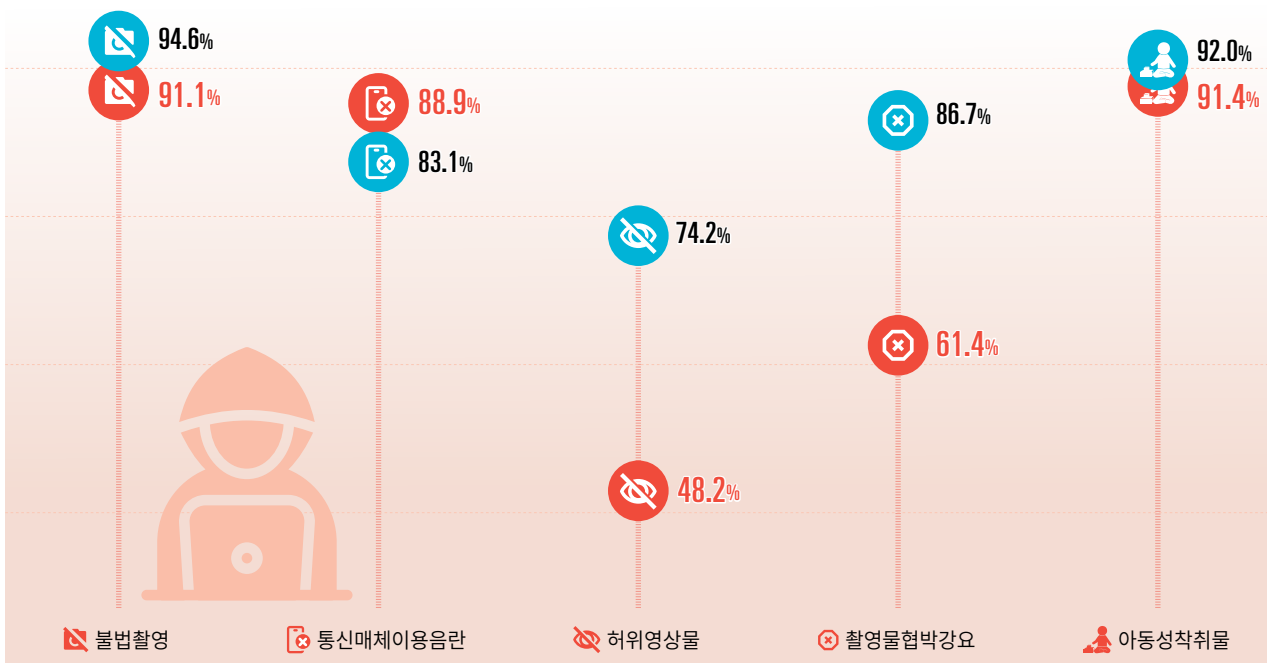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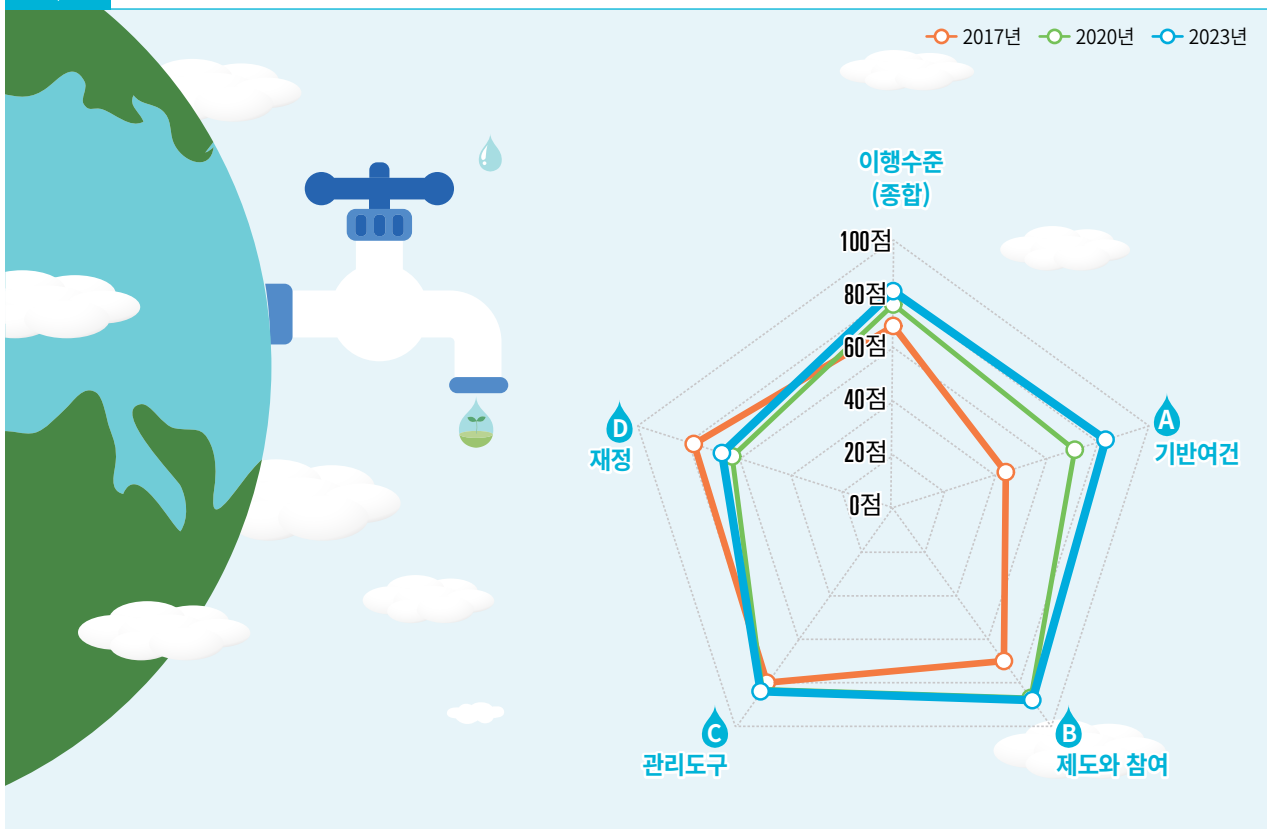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감소

● 2020 ● 2023



통합물관리이행 수준은 높음, 2023

○ 2017년 ○ 2020년 ○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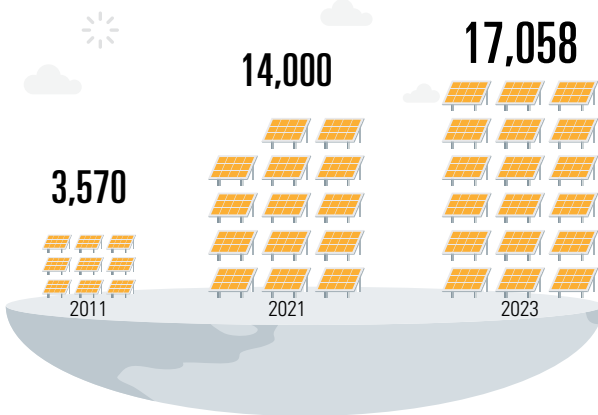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중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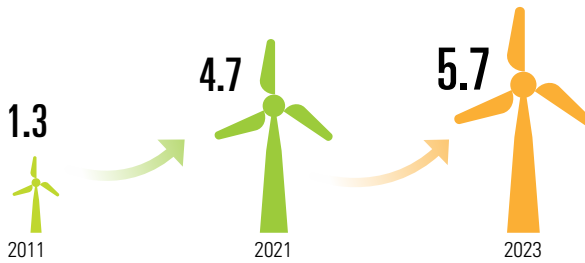
● 생산량

(천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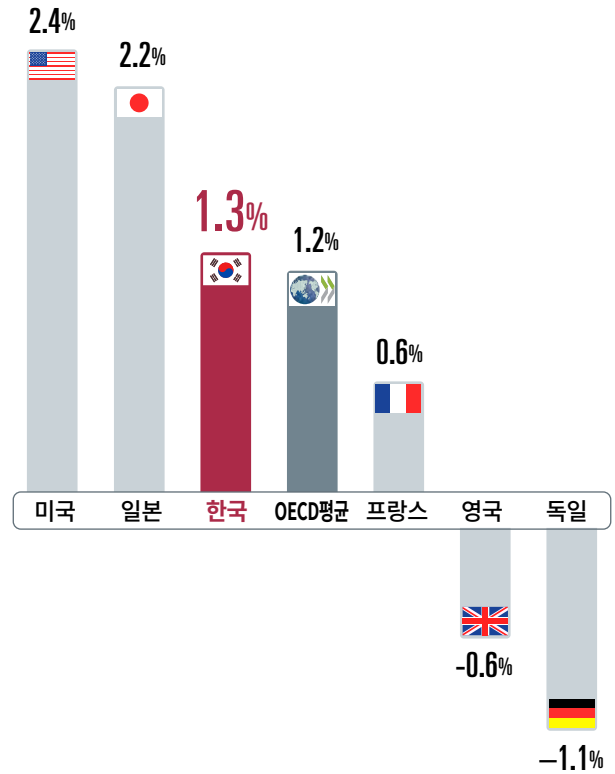


●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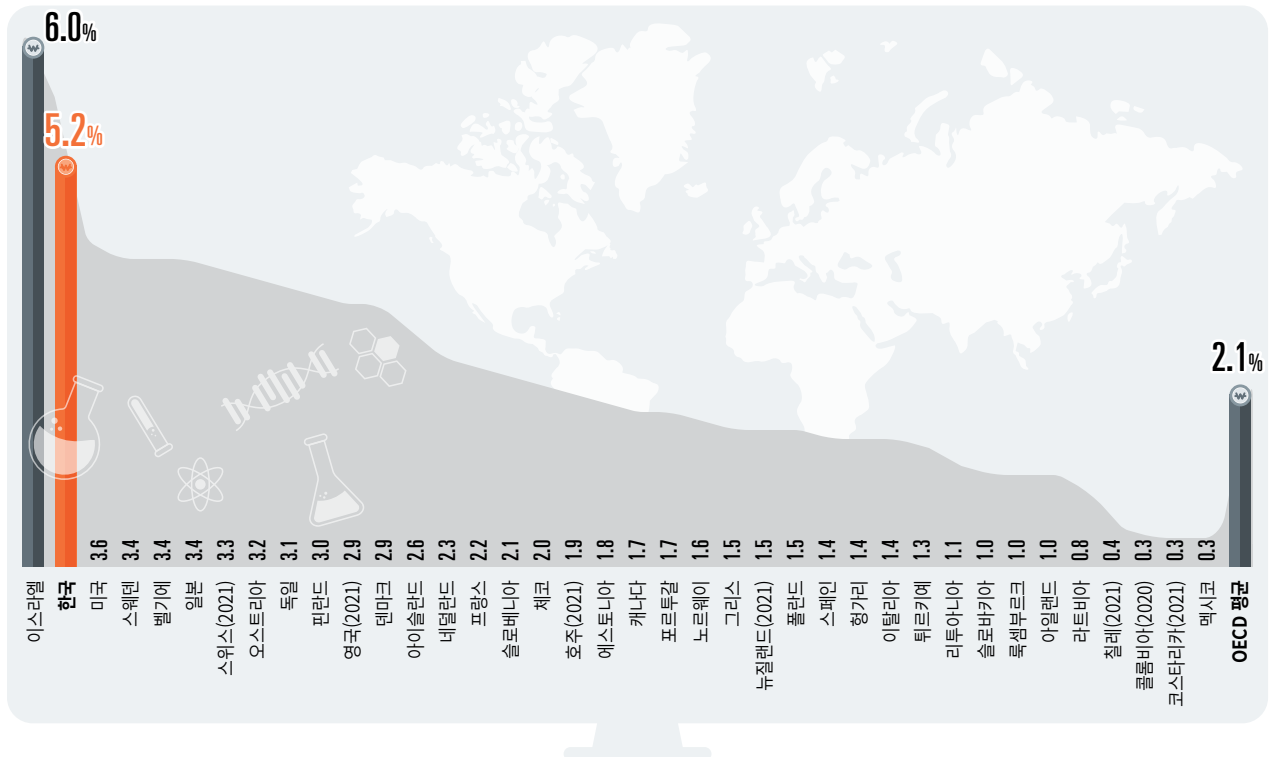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약화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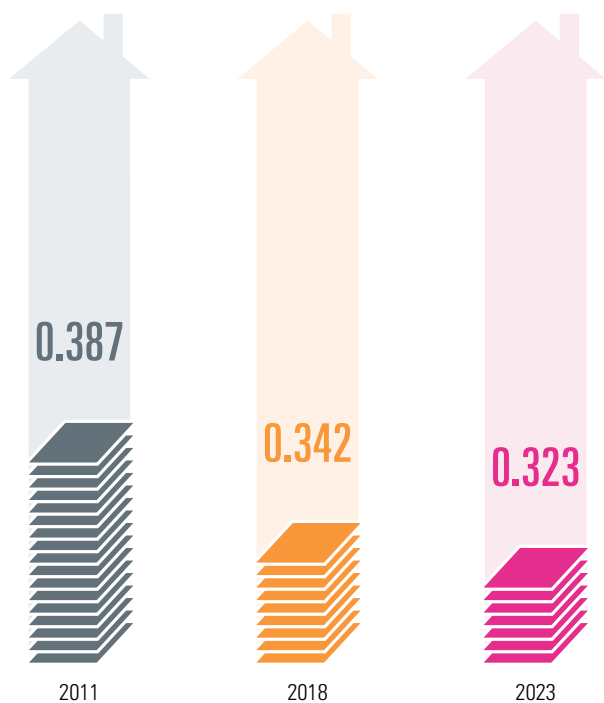
GDP 대비 연구개발비 OECD 국가 중 2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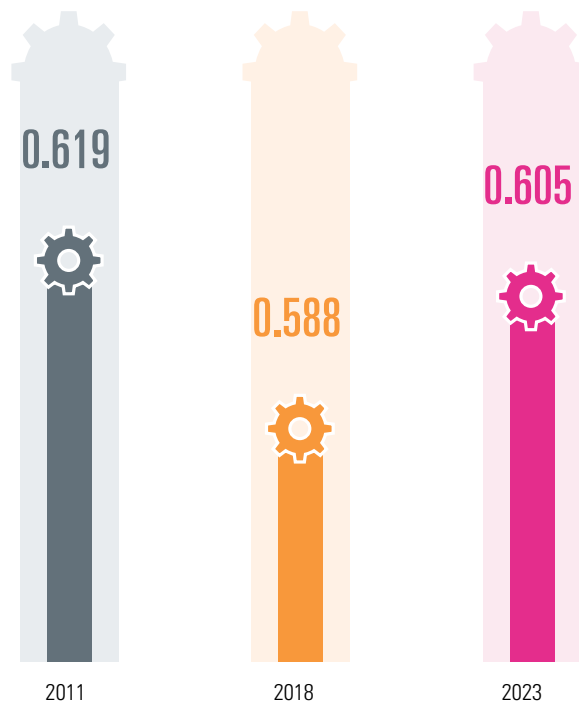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감소하지만 자산불평등은 악화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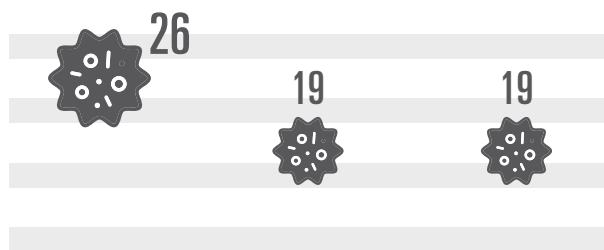


● 순자산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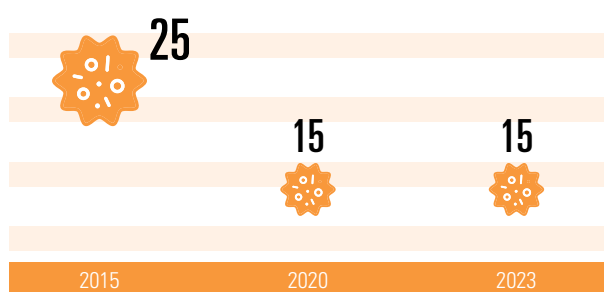


초미세먼지(PM_{2.5}) 개선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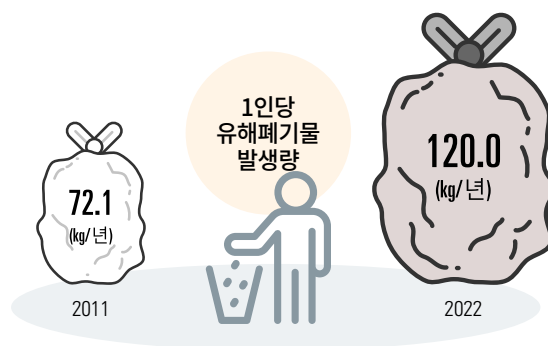
초미세먼지 오염도(μg/m³)



한국 대기환경기준(μg/m³)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재활용률은 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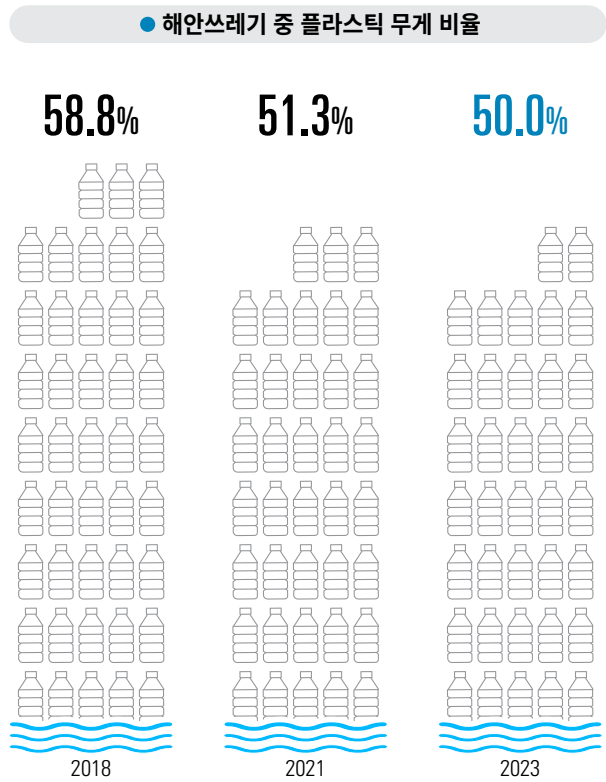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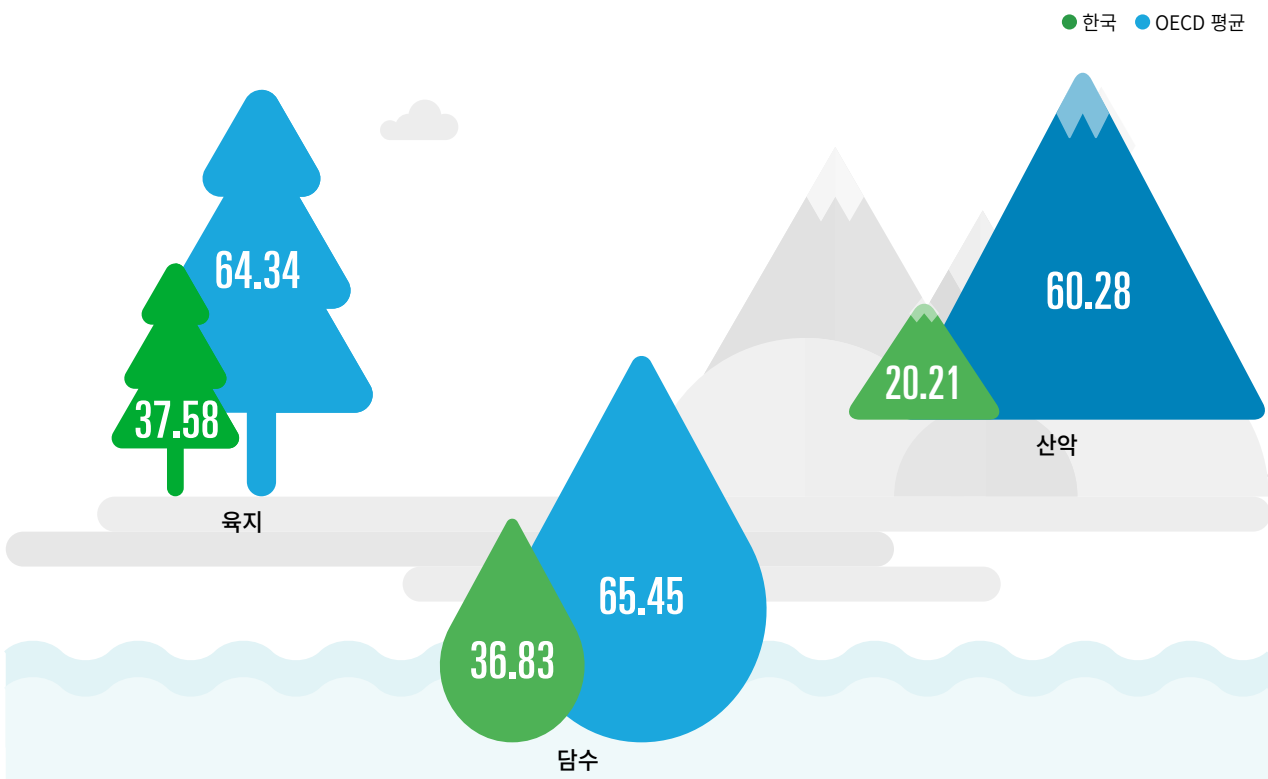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전환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 여전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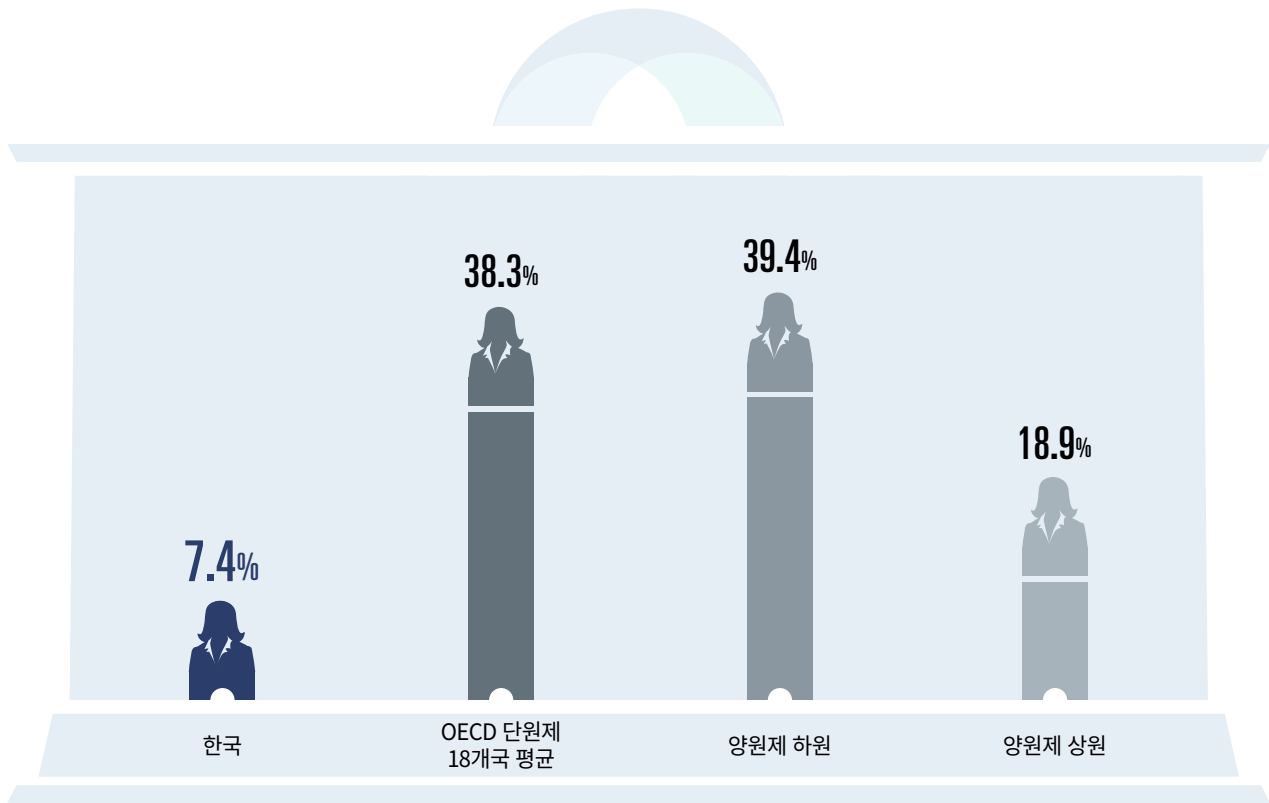


육지, 담수, 산악 지역의 보호지역 비율 확대 필요,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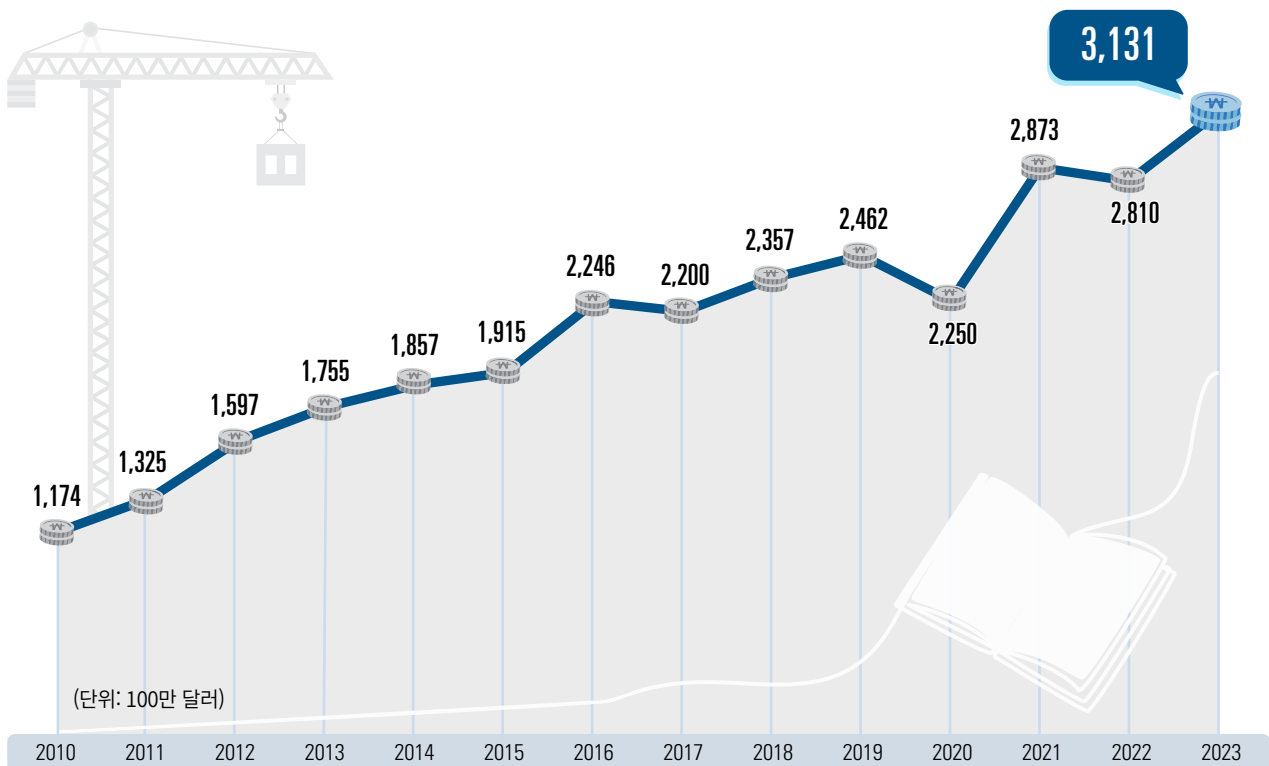
국회의원 당선자 중 45세 이하 의원은 7.4%로 OECD 최하위, 202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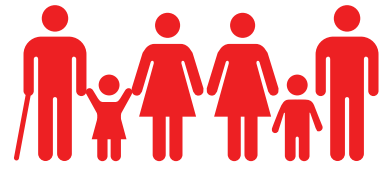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ODA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SDG 1번 목표에서는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빈곤 그 자체뿐만 아니라 빈곤의 원인이 되는 시장경제의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투입에 주목한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연금 가입률 등 빈곤 및 사회보장 관련 지표들의 장기적 개선세가 일부 주춤하고,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과 공적연금 관련 사회지출 등에서 큰 폭의 진전이 필요하다.

»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감소세가 주춤하며 2022년과 2023년에는 0.1%p 증가한 14.9%로 나타남

- 평균 빈곤갭도 2011년 37.0%에서 2020년 30.1%까지 개선되다가 이후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32.6%로 나타남
-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9.3%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 39.7%, 2023년 39.8%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률(2022년 54.0%)은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3년까지 증가한 후 2024년에 88.3%로 소폭 감소

- 8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 소득비례연금 수급률은 34.9%에 그쳐 65~69세 인구의 62.4%와 큰 격차를 보임
-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지역가입자 포함)은 2011년 74.3%에서 2024년 88.3%로 증가하였으나 근로형태별로 정규직 97.3%, 비정규직 70.6%로 큰 차이를 보이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73.4%에 그치고 있음

» GDP 대비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2011년 2.98%에서 2020년 6.74%로 2.3배 증가

- 특히 노령(1.74%→3.25%)과 실업(0.26%→0.78%)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타 사회정책 지출이 2019년 0.59%에서 2020년 1.48%로 단기간에 크게 증가
- 노령·유족 분야 지출은 3.28%(2019년)에 그쳐 OECD 평균인 7.74%의 절반 미만에 불과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

(📌 관련 지표 1.2.1)

저소득 가구는 시장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공적이전소득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며, 상대적 빈곤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의 경제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14.9%로 올랐고(전년 대비 0.1%p 증가) 2023년에도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8~65세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2011년 13.9%에서 2023년 9.8%)과 17세 이하 아동연령인구의 빈곤율(2011년 16.3%에서 2023년 8.5%)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47.9%에서 2021년 39.3%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0.4%p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0.1%p 더 늘어나며 39.8%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은퇴연령인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59.9%, 59.1%, 57.0%로 처분가능소득 빈곤율과 각각 20.6%p, 19.4%p, 17.2%p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시장소득 빈곤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은퇴연령인구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평균 빈곤갭은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과 빈곤선과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 빈곤갭이 줄어든다면, 비록 빈곤은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빈곤층의 경제적 고통이 경감되었다고 해석한다. 전체 인구에 대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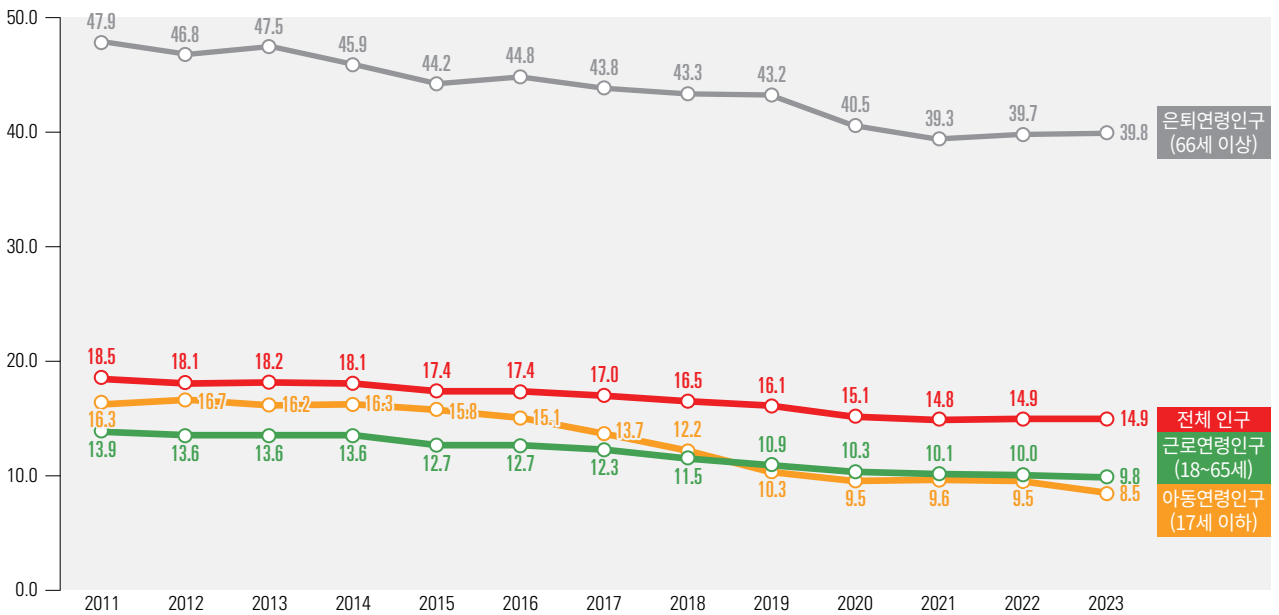


빈곤갭은 2011년 37.0%에서 2020년 30.1%까지 감소하였지만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1.9%와 33.2%로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32.6%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퇴연령인구의 평균 빈곤갭은 2011년 43.2%에서 2020년 32.5%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 34.2%, 2022년 35.4%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 35.1%로 소폭 감소하여 2021년 이후 빈곤 가구의 경제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액이 2021년 3,706만 원, 2022년 3,936만 원, 2023년

4,276만 원으로 연도별로 6.2%, 8.6% 증가하는 동안 공적이전소득은 404만 원, 391만 원, 390만 원으로 연도별로 3.2%, 0.3% 감소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이 주로 저소득 가구에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이전소득의 축소가 빈곤 가구의 경제 상태 악화를 견인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및 경제 상황의 개선, 고금리 기조 등으로 가구의 시장소득이 늘어났지만 긴급히 실시되었던 재정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위기 이후 축소되면서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줄어들었다.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1~2023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4.12.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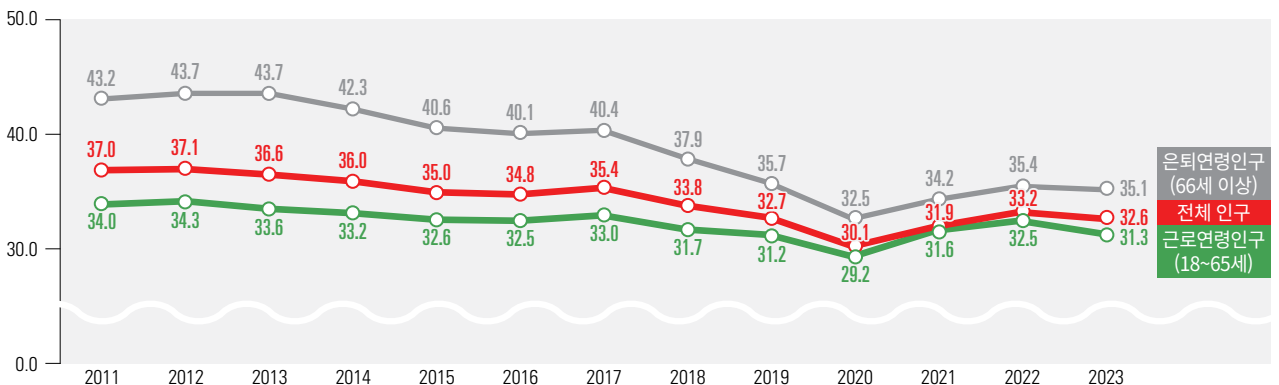
주1: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주2: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

주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자료(2024년 12월 공표)로서 기존 공표 수치와는 다름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평균 빈곤갭,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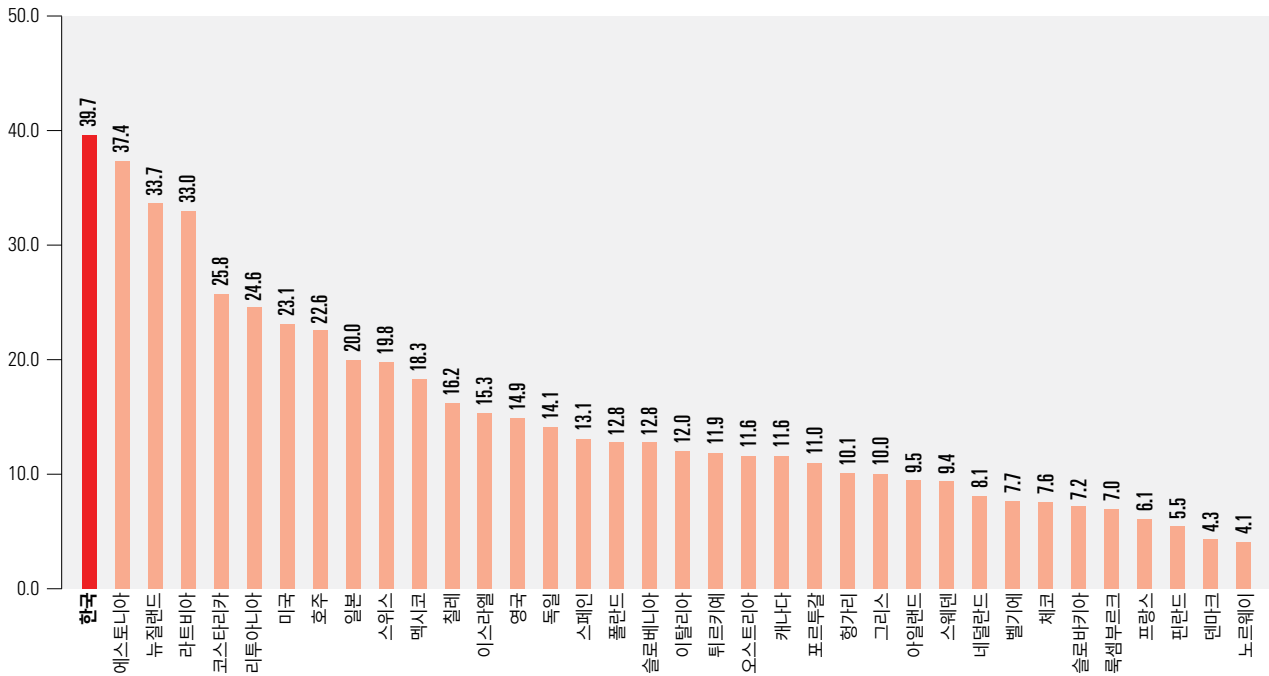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4.12.10. 인출)

주1: 빈곤인구란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보다 낮은 인구

주2: 평균 빈곤갭은 빈곤 인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임



출처: OECD Data Explorer,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data-explorer.oecd.org>, 2025.1.6. 인출)

주: 덴마크는 2019년, 호주·독일은 2020년, 일본·스위스·네덜란드는 2021년 자료이며, 아이슬란드와 콜롬비아는 자료가 없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2022년 39.7%로 수치가 제공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 뒤를 이어 에스토니아(37.4%), 뉴질랜드(33.7%), 라트비아(33.0%), 코스타리카(25.8%), 리투아니아(24.6%)의 순으로 높다. 미국(23.1%), 호주(22.6%), 일본(20.0%) 등도 높은 편이다.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1%), 덴마크(4.3%), 핀란드(5.5%), 프랑스(6.1%) 등이다.

공적 소득비례연금 수급률 및 가입률은 개선 중

☞ 관련 지표 1.3.1)

통계청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488만 3천명으로 해당 인구의 54.0%가 수급하고 있다. 이들 공적 소득비례연금 수급자는 2016년 286만 5천명에서 200만 명 이상 늘어났고, 수급률도 2016년 42.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수급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수급률은 65~69세에서 62.4%에 이르지만 70~74세와 75~79세에서는 58.5%와 58.1%로 낮아지고 80세 이상에서는 34.9%로 급격히 떨어진다. 6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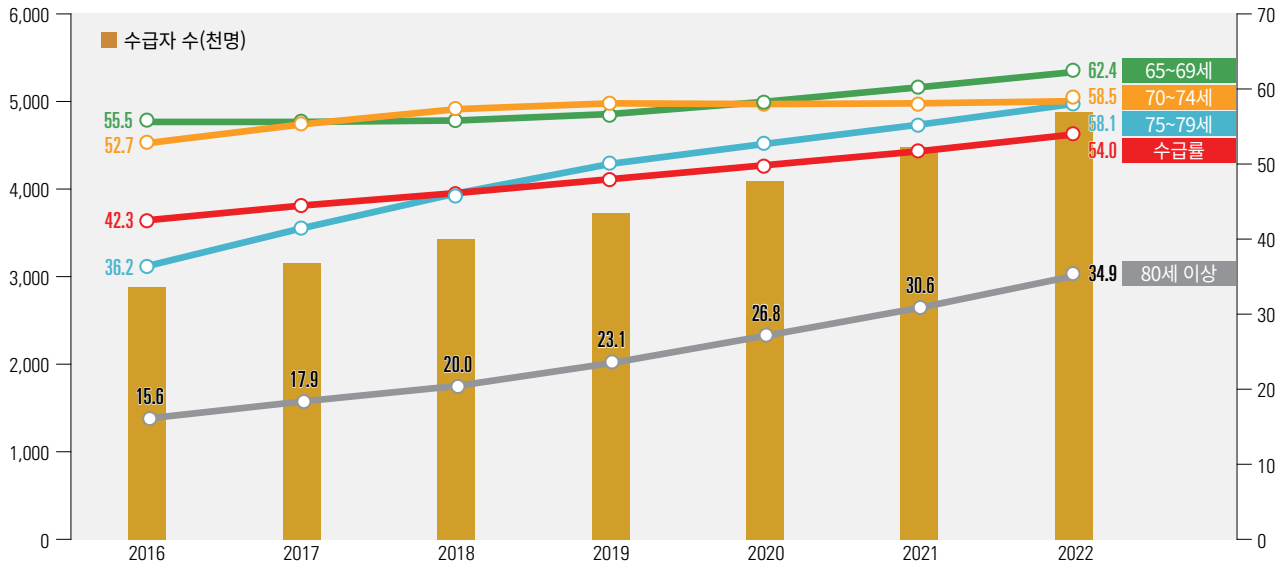
이상 인구의 다수가 수급하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금의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노령기에 진입한 노인의 수급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한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률은 2022년 90.5%로 2016년 87.0% 대비 3.5%p 증가하였고,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2011년 67.9%에서 2023년 82.1%까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81.8%로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률도 2011년 74.3%에서 2023년 88.7%까지 증가한 후 2024년에 88.3%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2024년 95.4%에 이르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수급률, 2016~2022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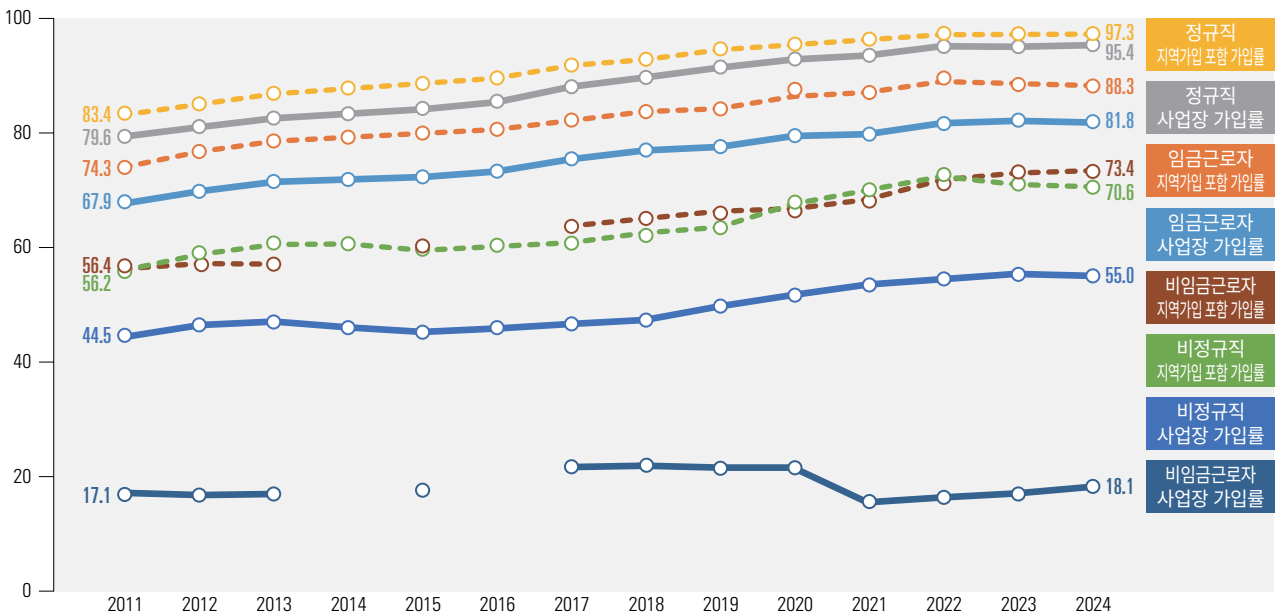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연금통계(<https://kosis.kr>, 2024.12.22. 인출)

주1: 수급자수 전체는 중복수급이 포함되어 있음

주2: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은 세부 종류인 노령(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해)연금 등 모든 연금형태를 포함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2011~2024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

주1: 각 연도 8월 자료임.

주2: 국민연금은 만 59세 이하 취업자가 가입 대상이므로 원자료에서 만 18~59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률 계산에서 제외함.

주3: 2019년 추가로 표적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의 비교는 2018년 이전까지와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주4: 비임금근로자는 2014년, 2016년은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55.0%에 그친다. 지역가입자를 포함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0.6%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정규직(97.3%)에는 크게 못 미친다. 자영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를 포함할 때 2017년 63.8%였던 가입률은 2024년 73.4%까지 증가하였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미납하는 경우가 있어 노후보장에 취약할 수 있다.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GDP 대비 6.74%로 증가하지만
OECD 평균에는 크게 미달 (📊 관련 지표 1.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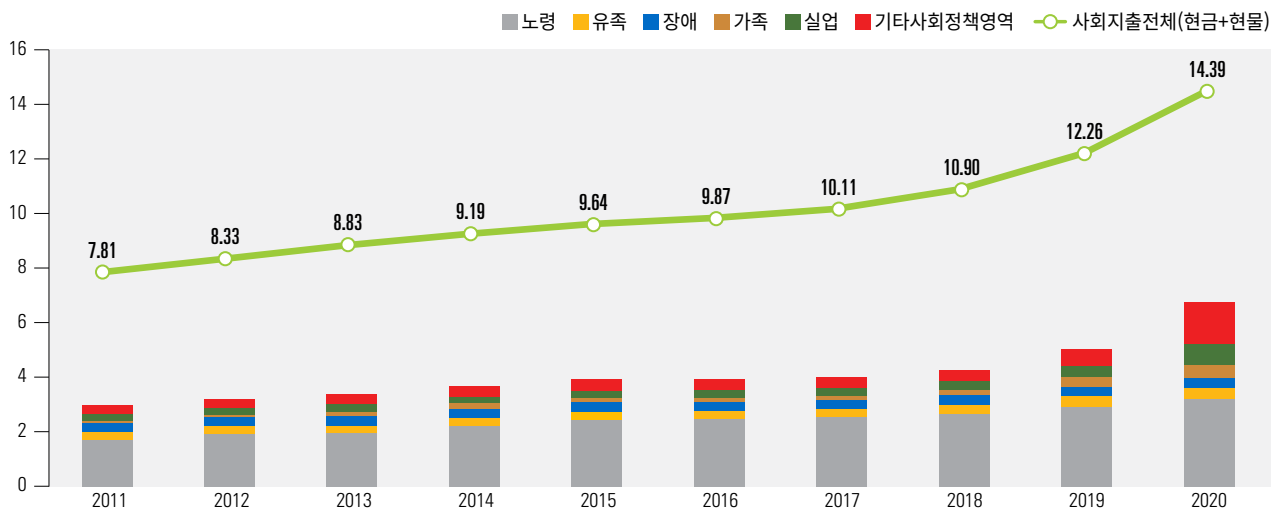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데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SDG 1.b.1 지표를 통해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의 규모를 점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체 사회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적연금 급여가 포함되는 노령, 유족 분야 현금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1~2020년 기간 동안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7.81%에서 14.39%로 1.8배 늘어났다. 이 중 현금급여 성격의 사회지출은 2.98%에서 6.74%로 2.3배 늘어나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현금급여 사회지출 중 노령 영역의 지출이 1.74%에서 3.25%로 늘어났고, 실업 영역의 지출도 0.26%

에서 0.78%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유족 영역과 장애 영역의 지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타 사회정책 영역의 현금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나 2019년 0.59%에서 2020년 1.48%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특히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2019년 기준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 비율은 5.03%로 칠레(4.57%), 멕시코(3.5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1.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의 사회지출에서 현금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정책영역은 노령·유족 영역인데, 이 영역에 OECD 국가의 지출 평균은 7.74%이지만 한국은 3.28%에 그친다.

정책영역별 GDP 대비 현금급여 사회지출 비율,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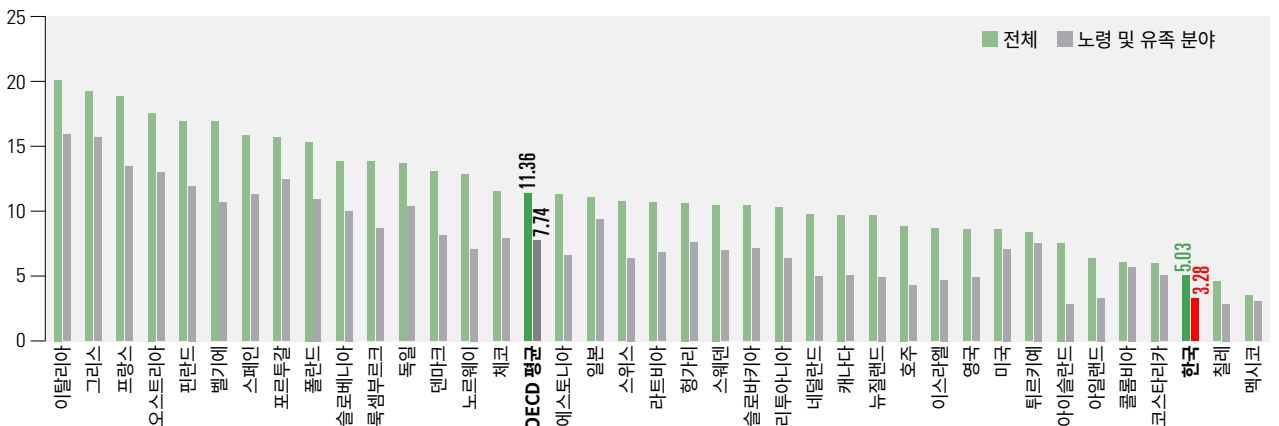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Data Explorer,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https://data-explorer.oecd.org>, 2024.9.23.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현금급여 사회지출 비율, 2019

(단위: %)



출처: OECD Data Explorer,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https://data-explorer.oecd.org>, 2024.9.24. 인출)



2 ZERO HUNGER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DG 2번 목표에서는 기아 종식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 공급과 영양상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구적으로는 아직도 열 명 중 한 명이 기아를 겪고 있고, 식량 공급망에 미치는 전쟁 등의 여파로 2022년 세계 각국 중 거의 60%의 나라에서 식품가격이 다소 혹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던 식품가격은 2022년부터 정상 범위로 복귀하였으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최근 소폭 증가하였고 농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업소득은 2003년 이후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소폭 증가하여 2023년에는 17.9%로 나타남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모두 늘어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소폭 줄어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청소년층(12~18세)과 고령자층(65세 이상)에서 2023년에 전년 대비 높아졌으며, 장년층(50~64세)은 소폭 감소함
- 여성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매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2023년에는 성별 격차는 2.9%p로 나타남

» 농업 수익성의 대표 지표인 농업소득은 200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0.3%에 불과하여 거의 정체 상태에 있음

- 그 결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의존도는 2003년 39.3%에서 2023년 21.9%로 낮아짐

» 종 복원을 위한 충분한 유전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한국의 지역(local) 가축품종 수는 2020년 기준 26종으로 보고됨

» 식품가격이상지표(IFPA)는 2020년 1.08, 2021년 0.61로 각각 '비정상적으로 높음'과 '다소 높음'을 나타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0.32와 0.16으로 '정상' 범위로 복귀

- 식품물가상승률은 2020년부터 4.4%, 5.9%, 5.9%, 5.5%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이어 오고 있음(2015=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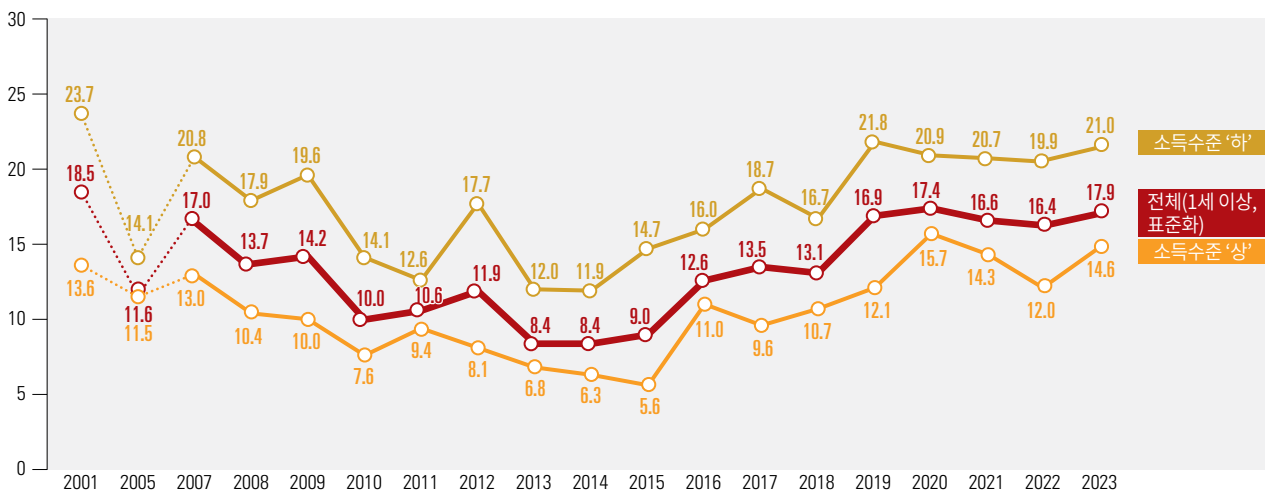
최근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증가 (○ 관련 지표 2.1.1)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식품 교역 확대 및 식품 산업 발전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영양섭취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에서는 영

양섭취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생활 방식 차이에 따른 영양섭취 부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영양섭취 부족자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과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 필요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2001~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4.12.30. 인출)

주1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주2 : 소득수준은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5분위(상/중상/중/중하/하)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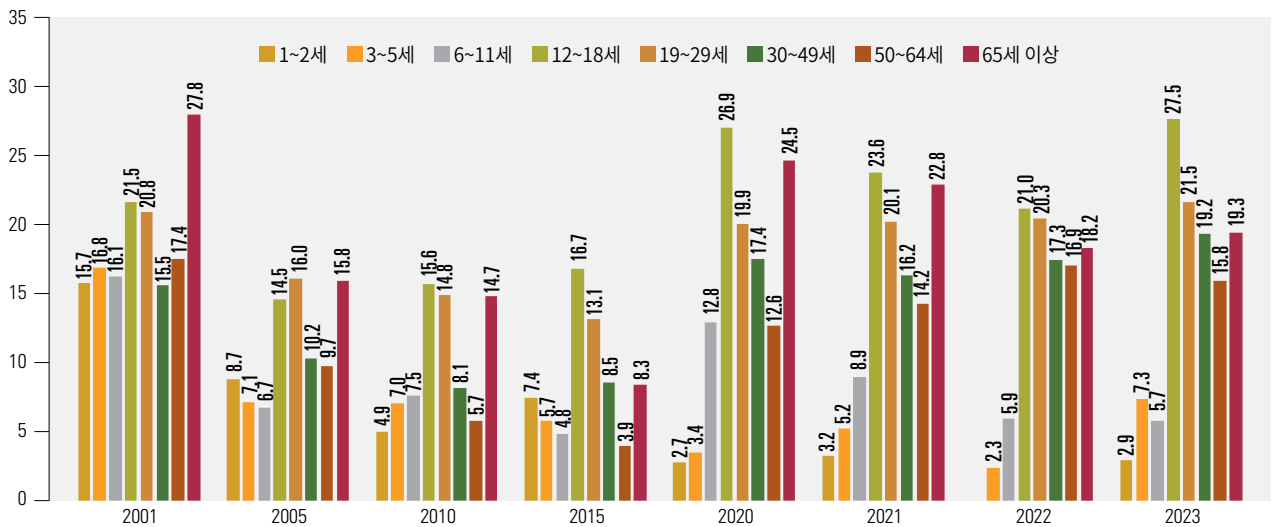
량(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세 이상, 연령표준화)은 2023년 기준 17.9%로 나타난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01년 18.5%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8.4%에 그쳤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17.4%까지 늘어났다. 2021년과 2022년에 16.6%와 16.4%로 낮아지며 2년 연속 감소하였지만 2023년에 17.9%로 증가하여 2014년의 최소치에 비하면 여전히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소득수준, 연령,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3년 21.0%에 이르지만 같은 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14.6%에 그친다. 두 소득계층에서 모두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았으며,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늘어 저소득층과의 차이가 6.4%p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12~18세 청소년층(26.9%)과 65세 이상 고령자층(24.5%)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특히 높았는데, 두 연령대에서 모두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여 각각 27.5%와 19.3%를 나타냈다. 한편 50~64세 장년층의 경우 2021년 14.2%, 2022년 16.9%로 늘다가 2023년에는 15.8%로 소폭 감소하였다. 남녀 사이에는 식생활이나 식습관의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매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는 2007년에 11.3%p로 가장 컸고 전체 기간 평균으로는 6.7%p에 이른다. 2023년에는 여성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200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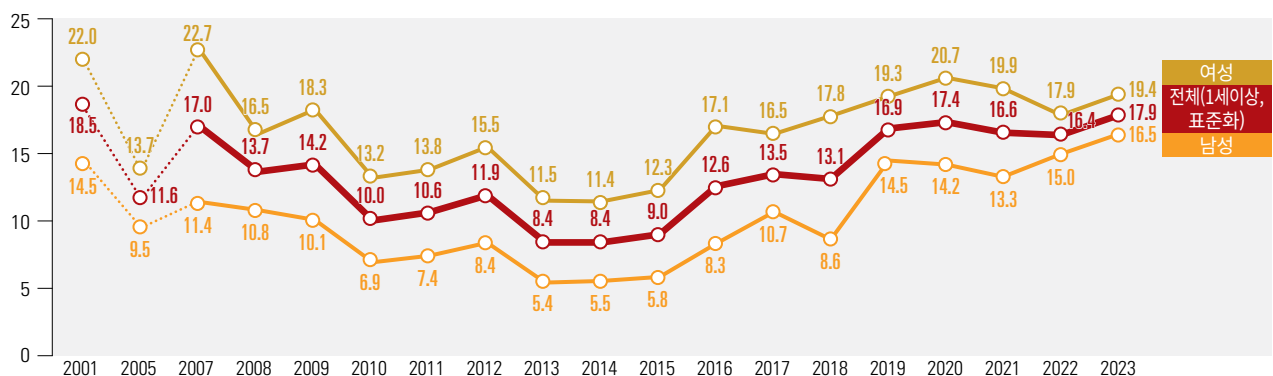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4.12.30. 인출)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성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2001~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4.12.30. 인출)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19.4%, 남성의 경우에는 16.5%로 각각 1.5%p씩 증가하여 둘 간의 차이가 2.9%p로 나타났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였고 2020년 이후 최근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늘었다.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중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최근 고령층에서 영양섭취가 다소 개선되긴 하였지만, 고령자들은 신체활동 감소, 치아 결손에 따른 저작 장애로 영양섭취에 어려움을 겪는다. 1인 가구도 생활 여건상 결식을 자주 경험한다. 영양섭취 부족자의 발생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인구 특성별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특성별 식생활 개선 및 영양 증진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지표 2.3.2)

식량 생산자인 농가의 소득은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활동 성과에 대한 지표이며, 생산의 주체가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농가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경상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이 중 농업소득은 농산물 판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금액이다. 농외소득은 자영 사업소득, 노동력 제공 등 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하고, 이전소득은 공적 또는 사적 보조금을 뜻한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사 수입, 사고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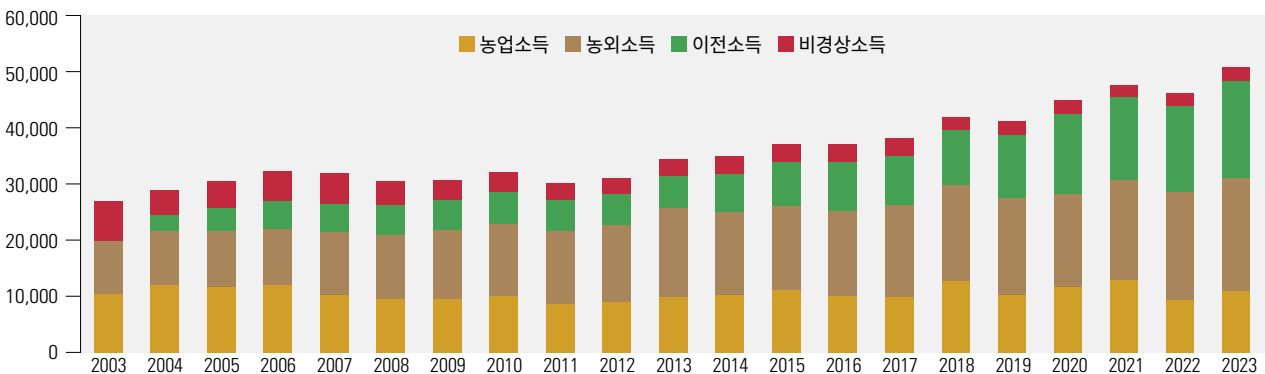
금 등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한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2023년 5,082만 8,000원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1,114만 3,000원이다. 농가 총소득이 2003년 2,687만 8,000원에서 연평균 3.2% 증가한 사이 농업소득은 2003년 1,057만 2,000원 이후 연평균 0.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정체 상태에 있다. 같은 기간 농외소득은 연평균 3.8%, 이전소득은 연평균 11.3% 늘어났다. 그 결과 농가 총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003년 39.3%에서 2023년 21.9%로 낮아진 반면 공적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33.8%로 높아졌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 이외 다른 업종의 겸업, 노동력 제공 등 농업 이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농외소득(39.3%)이다.

농가가 영농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인 농업소득의 이 같은 정체는 식량 생산의 주체인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농업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 수익성이 저하된 데에는 199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하에서 수입농산물로 인한 공급 증가와 함께, 농업 내부적으로는 농업 경영상의 비효율과 농가 인구의 고령화, 농업 외부적으로는 투입재 시장의 불안정성(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 기후변화, 정책 한계 등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 농업 수익성 저하는 농업소득 정체로 이어져 농업 노동력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업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새로운 농업 노동력을

구성요소별 농가소득, 2003~2023

(단위: 천 원)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https://kosis.kr>, 2024.9.4. 인출)

주1 : 농가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주2 : 경상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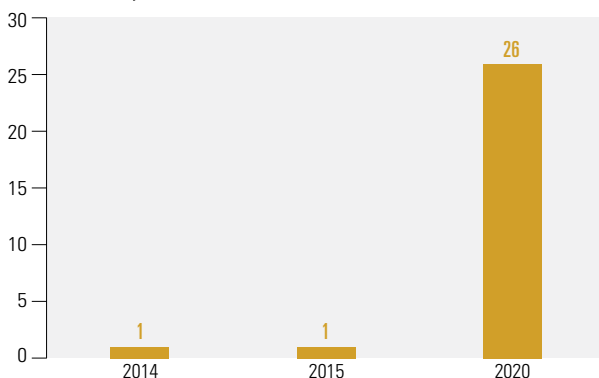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농가의 농업 투자 등 적극적 영농활동을 막아 농업의 식량안보 역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업 수익성을 개선하여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식량 관련 유전자원의 보전과 실용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2.5.1)

기후변화, 인구·산업의 변화 등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품질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동식물의 유전자원 확보는 식량 생산과 생물다양성,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SDG에서는 지표 2.5.1을 통해, 멸종 시 종 복원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유전자원이 중장기 보존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식량 및 농축산물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를 점검하고 있다. 유전자은행과 같은 중장기 보존시설은 ‘식량·농업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GRFA)’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신뢰할 만한 수단이다.

종 복원을 위해 충분한 유전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한국의 지역(local) 가축품종 수는 2020년 기준 26종¹⁾으로 보고된다. 지역(local) 품종은 한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품종을 말한다. 동식물 유전자원은 식량, 축산,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며, 따라서 유전자원

종 복원을 위해 충분한 유전자원이 저장된 지역 가축품종의 수, 2014~2020 (단위: 종)



출처: FAO(<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0. 인출)

1) 26종: 소 3종, 닭 7종, 염소 1종, 말 2종, 돼지 8종, 메추라기 4종, 양 1종

의 보전과 함께 실용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보전된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식량 및 관련 식품 개발, 유용한 유전자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존 농업기술의 한계 극복, 이를 위한 동식물 유전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등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상기상 및 생산여건 변화로

최근 식품가격은 상승 추세 (☉ 관련 지표 2.c.1)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품을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 없이 충분히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인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식품가격의 지나친 변동성을 억제하고 식품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달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재인 농산물은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비탄력적 성격을 갖는다.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기상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다. 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다른 재화에 비해 크고,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면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식품가격이상지표(Indicator of Food Price Anomalies, IFPA)를 통해 식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식품가격이상지표가 -0.5 이상 0.5 미만이면 ‘정상’, 0.5 이상 1.0 미만이면 ‘다소 높음’, 1.0 이상이면 ‘비정상적으로 높음’으로 판단한다.

OECD 국가의 식품가격이상지표 평균값은 2011년 이래 -0.5와 0.5 사이의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시장 불안정, 기상여건 변화 등이 겹치면서 2020년에 0.71로 ‘다소 높음’으로 돌아섰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38과 1.44로 ‘비정상적으로 높음’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국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작된 2020년에 1.08로 ‘비정상적으로 높음’, 2021년에 0.61로 ‘다소 높음’을 경험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0.32와 0.16으로 ‘정상’ 범위로 복귀하였다. 한국과 곡물 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정상 범위에 머물렀으나 2022년 0.91, 2023년 2.36으로 최근 ‘비정상적으로 높음’ 수준에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 국제 곡물시장의 공급 여건 변화와 함께,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지진의 여파로 곡물가격 상승을 우려한 초과수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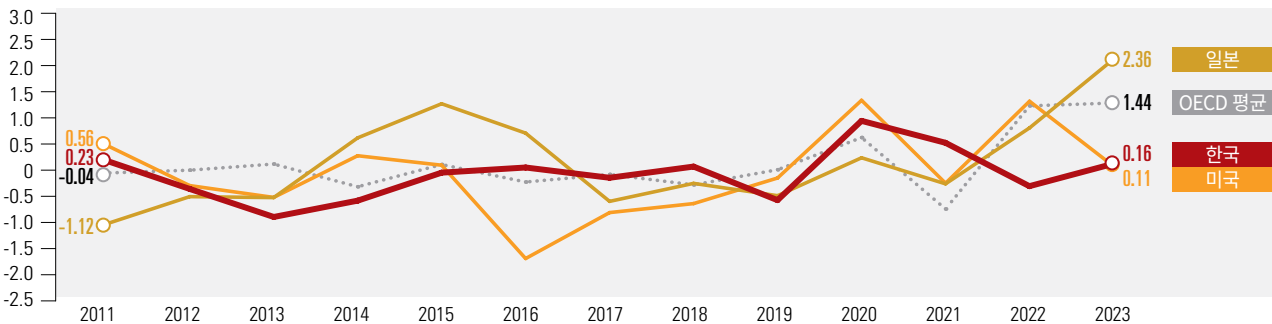
영향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곡물 수출국인 미국도 2022년 1.48로 ‘비정상적으로 높음’ 수준을 보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은 곡물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식품물가상승률(국제비교를 위해 2015=100)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23년 5.5%로 2020년부터 4.4%, 5.9%, 5.9%, 5.5%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이어 오고 있다. 2001~2023년 기간의 평균 상승률은 4.1%로 집계되는데,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식품물가상승률인 3.9%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곡물 수입국인 일본은 1.2%, 그리고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2.6%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다. 식품물가상승률은 나라마다 물가수준, 화폐공급량 등 거시경제 여건이 달라 국가 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식품류 소비자물가지수와 식품물가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2022년 기준 49.3%와 22.3%로 곡물의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농림부, 2023). 최근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기상 빈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주산지 곡물 생산량 감소, 그에 따른 식량보호주의 확대 가능성 등 국제 곡물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 식품과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곡물 공급망 위기는 앞으로 더욱 빈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농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고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국내 곡물 증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의 식량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 농업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 해외 유통터미널 지분 확보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식품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의 식품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크므로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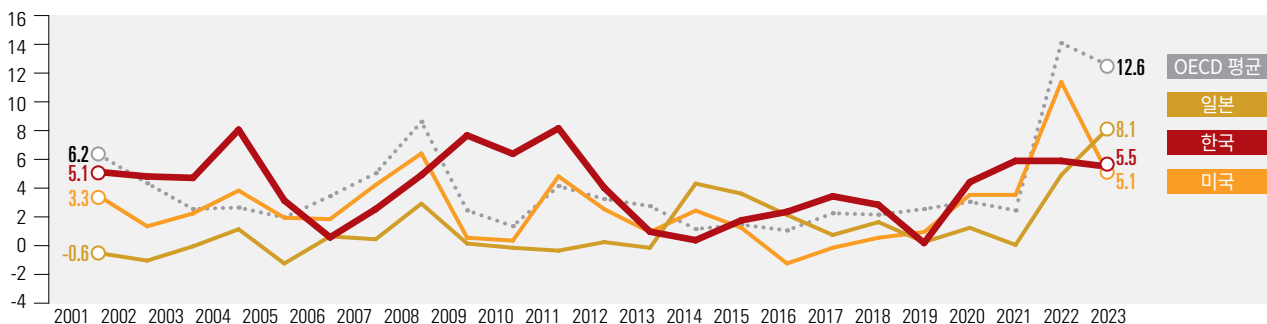
주요국별 식품가격이상지표(IFPA), 2011~2023



출처: FAO,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SDGB>, 2024.9.23. 인출)

주요국별 식품물가상승률, 2001~2023

(단위: %)



출처: FAO, FAOSTAT Consumer prices, Food indices(2015=100),(<https://www.fao.org/faostat/en/#data/CP>, 2024.9.23. 인출)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SDG 3번 목표에서는 전 세계 모두의 건강 보장을 지향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대수명에서 거의 10년간의 진전이 무효화되었고, 대부분의 건강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2030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진한 속도이다.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최근 다시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가 백신 예방접종률은 높은 편이고, 정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도 높게 평가된다.

»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23년 인구 10만 명당 22.7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

- 자살률은 남성에서 31명, 충남과 충북 지역에서 각각 29.4명과 28.6명 등으로 성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편
- 전반적으로 2011년 이래 감소하였지만 2021년 기준 OECD 국가(평균 10.6명) 중 가장 높은 수준

» 국가 정책으로 관리되는 만 1~6세 아동 백신 접종률은 2023년 연령별 89.2~96.4% 수준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폐렴구균 등 주요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

» 보건의료 종사자 수는 2011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2.7명, 간호사 5.2명에 달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적은 편

-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의 4개 직종을 포함하는 주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인구 1,000명당 8.9명(2022년)으로 OECD 평균(13.8명)의 65% 수준

»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IHR) 핵심역량 평가에서 2023년 15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만점을 달성하며 종합 99.1%로 OECD 최고 수준에 오름

- IHR 조정과 국가 연락 체계(93%), 위험소통과 지역사회 참여(93%)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를 드러냄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8.5% 증가 (◎ 관련 지표 3.4.2)

자살은 어느 연령층,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작용하며 확산한다. 자살 사망률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WHO(2022)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살의 77%가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였고 자살의 58%가 50대 미만 연령층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OECD(2023)에서도 자살률이 국가 간에 여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남자의 자살률이 여성의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자살은 상실, 외로움, 질병 등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기후, 금융 위기 등 외부 충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별로 시계열적 변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자살 통계는 등록 방법, 사망 진단서 작성자, 사회적 낙인과 같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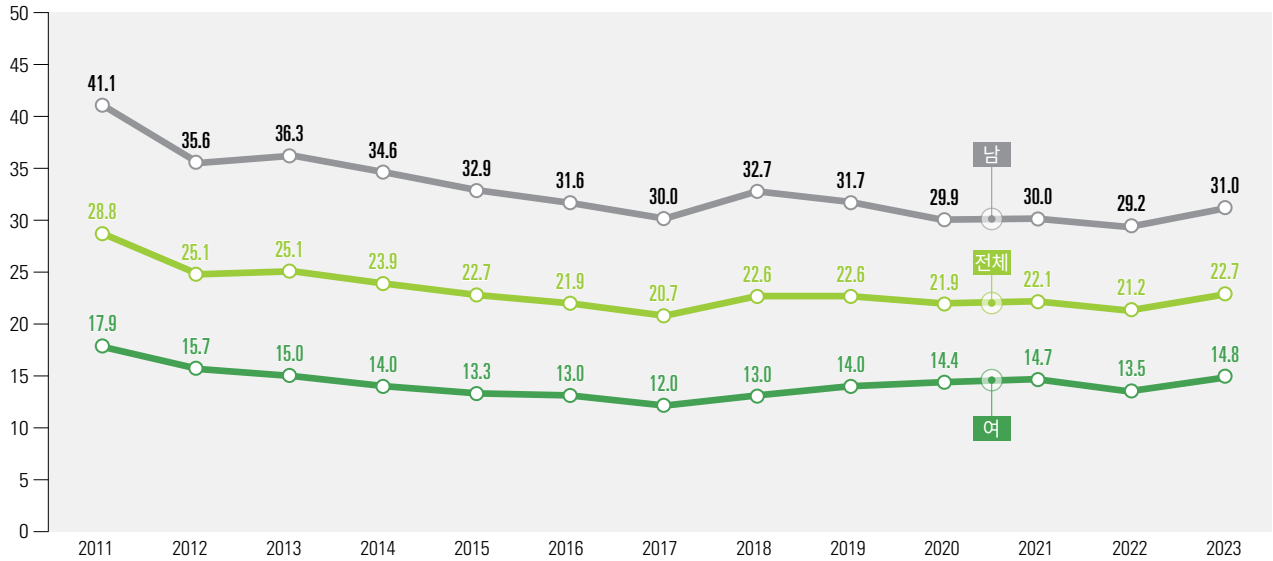
화적 차원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 총 13,978명이며, 같은 해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2.7명으로 집계된다. 2011년 10만 명당 2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 20.7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22명 안팎에서 등락하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7.1% 증가하여 22.7명대로 올라섰다.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데, 성별 변화 추이는 전체와 유사하다. 여성 자살률은 2011년 10만 명당 17.9명에서 2017년 12.0명까지 감소한 뒤 2023년 14.8명으로, 남성 자살률은 같은 기간 41.1명에서 30.0명으로 감소하였다가 31.0명으로 증가하였다. 자살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충남(29.4명)과 충북(28.6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19.0명), 세종(19.2명)에서 비교적 낮다.



연령표준화 자살률, 2011~2023

(단위: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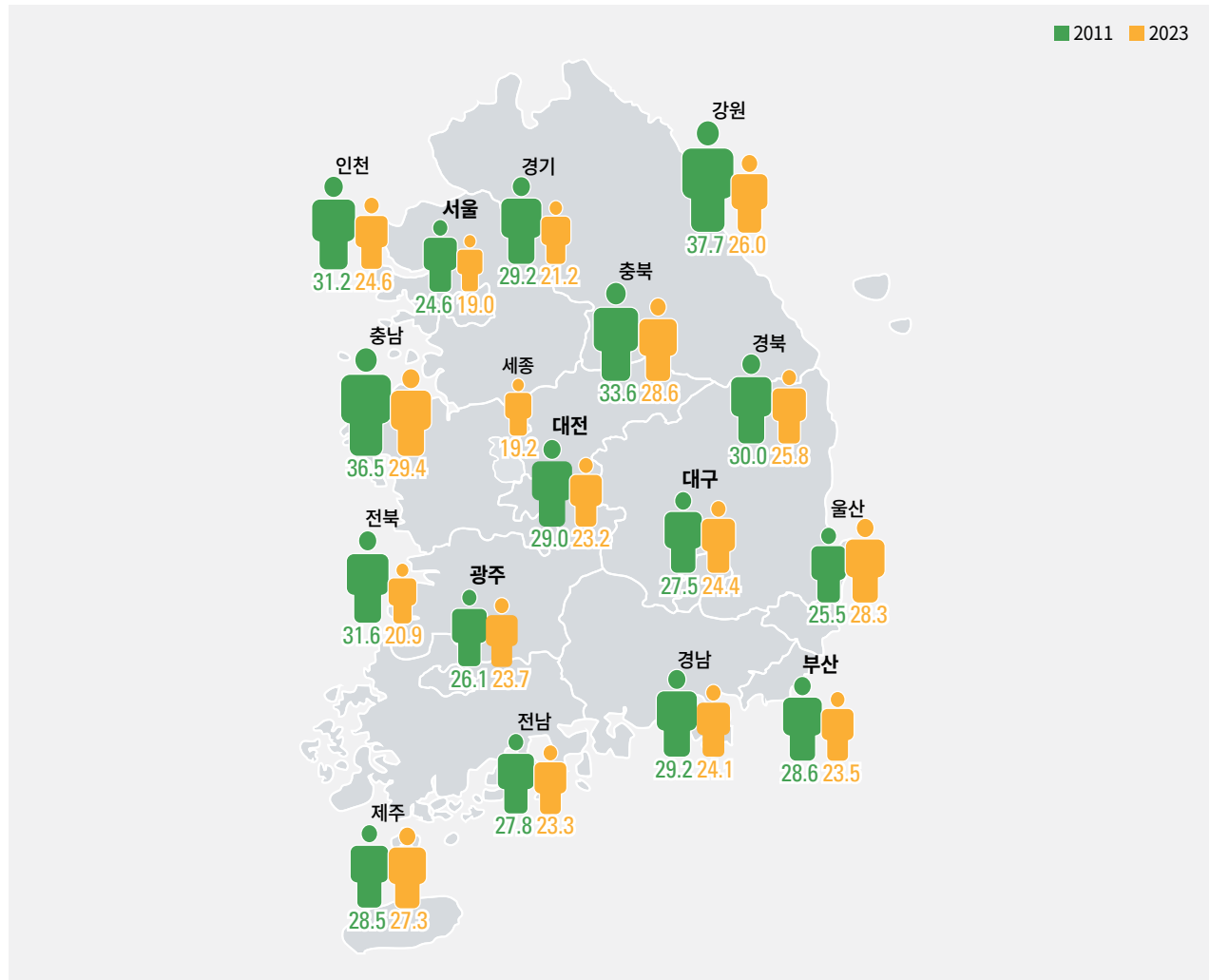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Main.do>, 2025.1.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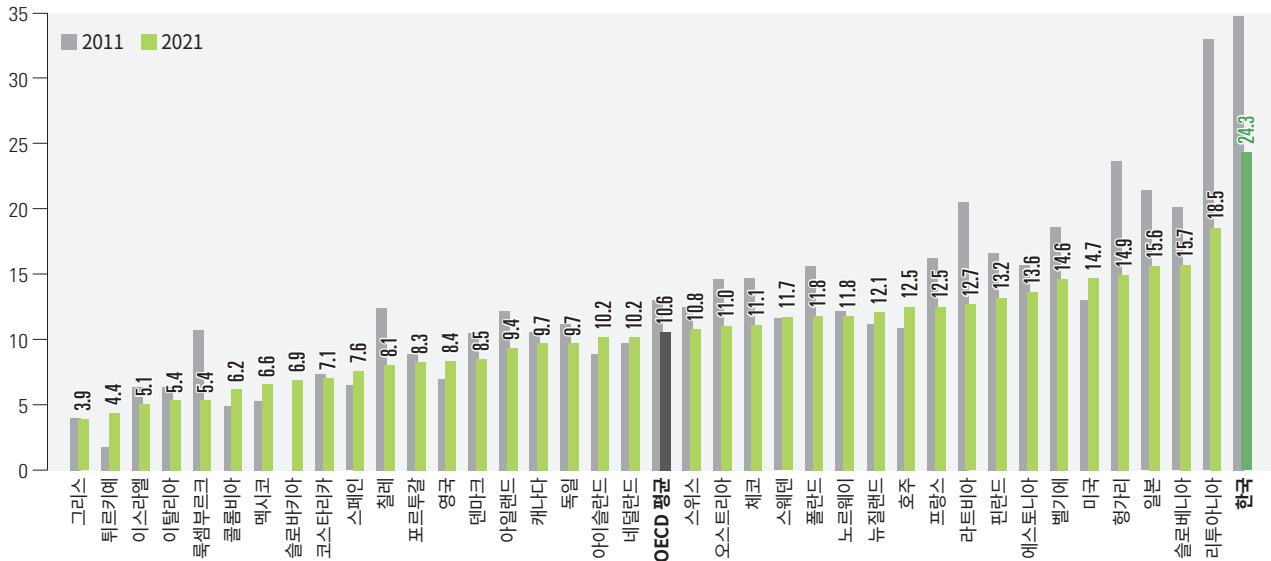
주 :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임

연령표준화 지역별 자살률, 2011~2023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https://kosis.kr>, 2025.1.25. 인출)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Intentional self-harm(<https://data-explorer.oecd.org>, 2024.9.22. 인출)

주 : 벨기에·코스타리카·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슬로베니아·영국은 2020년, 포르투갈·튀르키예는 2019년, 노르웨이·뉴질랜드는 2016년 자료, 슬로바키아는 2011년 자료임

자살률은 울산(2.8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11년 대비 감소하였다.

OECD 인구 구조로 표준화하여 자살률을 국가 간에 비교해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0.6명)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스(3.9명, 2020년), 튀르키예(4.4명, 2019년), 이스라엘(5.1명), 이탈리아(5.4명, 2020년), 룩셈부르크(5.4명)는 자살률이 낮고, 한국을 비롯해 리투아니아(18.5명), 슬로베니아(15.7명, 2020년), 일본(15.6명)은 자살률이 높은 편이다. 자살률 감소 성과로 보자면 한국은 2011년 대비 10.4명 감소하여, 14.4명 감소한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성과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자살 수준과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보건, 교육, 노동, 언론 등 자살 예방 정책에 관련된 제 분야에서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DTP, 홍역, 폐렴구균 등 주요 백신 접종률 높게 유지

(☞ 관련 지표 3.b.1)

예방접종은 신체에 자연적인 방어력을 강화하여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바,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국제 보건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매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인플루엔자,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350~500만 명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 등 예방접종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국제 보건 안보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접종인 국가예방접종에는 만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A형간염(HepA), B형간염(HepB),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JE)이 있다. 2023년 기준 만 1세는 96.4%, 만 2세는 92.9%, 만 3세는 89.2%, 만 6세는 89.8%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완전 접종을 하였다. 지난 6년간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2018년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인데, 만 6세의 경우 2018년 88.3%에서 2020년 83.5%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회복하여 2023년에는 89.8%로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국제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네 가지 백신의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3차(DTP3) 94%, 홍역 2차(MCV2) 88%, 폐렴구균 3차(PCV3) 89%, 인유두종바이러스(HPV) 59%이다. 한국은 각각 98%, 95%, 97%, 65%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인다. DTP3, MCV2, PCV2 접종률은 OECD 국가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지만 HPV 접



OECD 국가별 주요 백신 접종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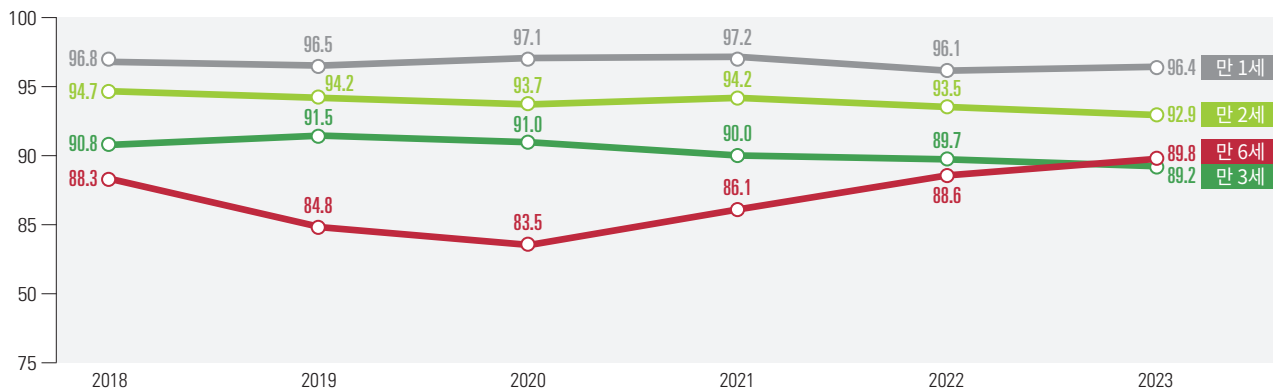
(단위: %)

	DTP3(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MCV2(홍역)	PCV3(폐렴구균)	HPV(인두유종)
OECD	94	88	89	59
한국	98	95	97	65
그리스	99	83	96	N/A
네덜란드	93	85	90	64
노르웨이	97	94	95	91
뉴질랜드	89	83	86	55
덴마크	97	94	96	78
독일	91	93	82	54
라트비아	95	86	87	62
룩셈부르크	99	90	96	14
리투아니아	90	87	81	63
멕시코	83	82	84	80
미국	94	95	84	50
벨기에	98	83	94	69
스웨덴	94	91	94	83
스위스	96	94	89	71
스페인	93	92	92	81
슬로바키아	97	96	96	14
슬로베니아	89	92	61	45
아이슬란드	92	80	84	85
아일랜드	93	N/A	84	79
에스토니아	85	68	N/A	43
영국	92	87	90	56
오스트리아	84	94	N/A	53
이스라엘	98	93	95	57
이탈리아	95	85	92	39
일본	99	95	96	7
체코	94	90	N/A	N/A
칠레	96	53	93	69
캐나다	92	79	85	86
코스타리카	95	75	92	71
콜롬비아	87	84	85	11
튀르키예	99	94	95	N/A
포르투갈	99	96	98	89
폴란드	90	95	61	N/A
프랑스	96	90	95	42
핀란드	91	92	87	61
헝가리	99	99	99	74
호주	94	91	96	58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24. 인출), N/A는 자료없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률, 2018~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https://kosis.kr>, 2025.1.25. 인출)

주 :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해당 연령까지의 백신별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완료한 아동 비율

종률은 그렇지 않다. 일본(7%)·콜롬비아(11%)·슬로바키아(14%)와 노르웨이(91%)·포르투갈(89%) 사이에 HPV 접종률 차이가 매우 크다.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적은 편

(☞ 관련 지표 3.c.1)

보건의료 종사자는 보건의료 제도를 운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WHO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고 국민의 높은 건강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한편 사회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나은 국가에서도 보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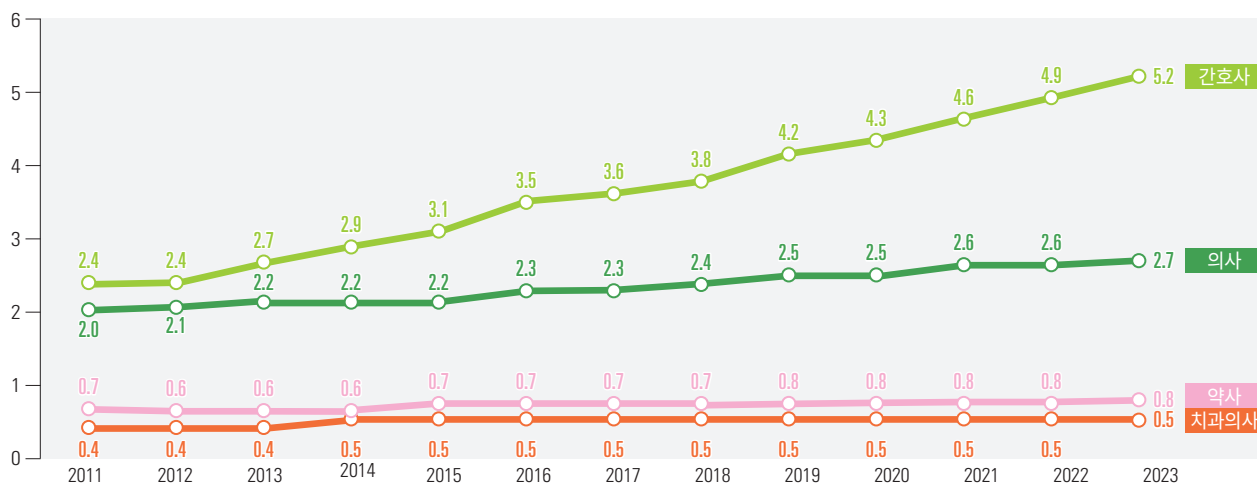
료인력의 교육, 고용,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구 수요와 교육 및 고용 전략의 불일치로 지속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시골이나 외딴 지역 등에 보건의료인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심화한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주요 보건의료인력은 직종 간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의사(한의사 포함)는 2011년 인구 1,000명당 2.0명에서 2023년 2.7명으로 31.3%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2.4명에서 5.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치과 의사와 약사도 같은 기간 각각 28.1%와 18.8% 증가하였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직종별로 모두 꾸준히 증가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2011~2023

(단위: 1,000명당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Main.do>, 2025.1.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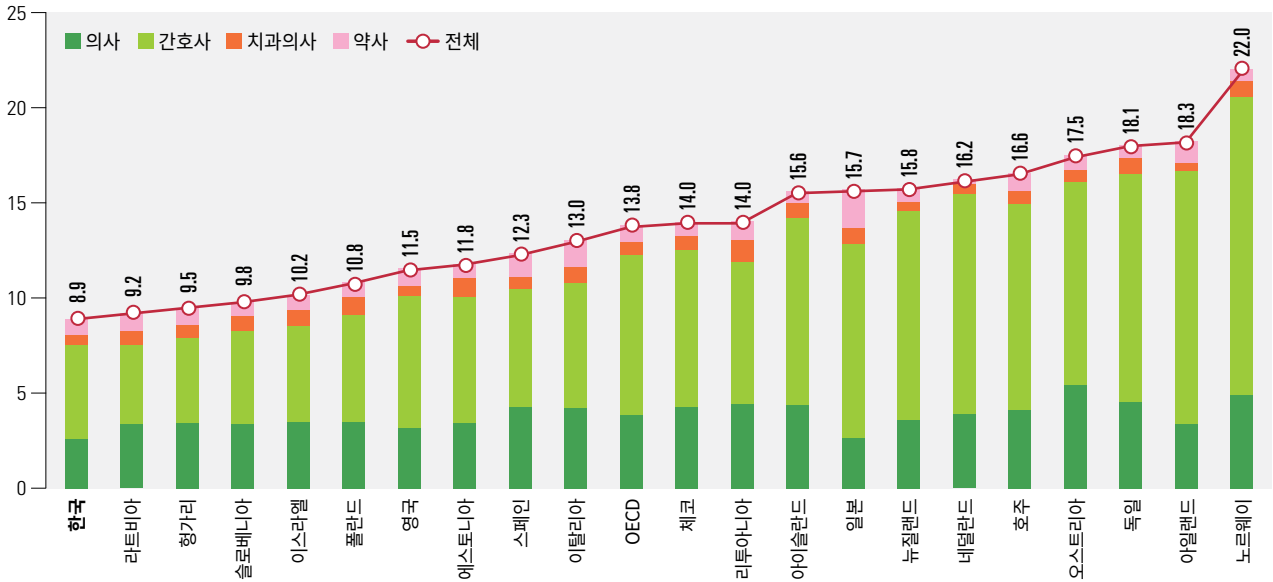
주1 : 주요 보건의료인력은 UN의 비교 대상인 의사(한의사 포함), 치과 의사, 간호사, 약사로 한정함

주2 :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인력 수이며, 장래추계인구(2023.12. 공표)를 사용함



OECD 국가별 주요 보건의료인력, 2022

(단위: 1,000명당 명)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4.9.22. 인출)

주1: 국제 기준에 따라 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됨

주2: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

주3: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중 한 직종이라도 제시되지 않은 국가(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는 제외함

왔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인구 1,000명당 13.8명(의사 3.8명, 간호사 8.4명 등)으로 한국의 1.6배이다. 이러한 가운데 OECD 국가의 의사 수는 2.6명(한국)에서 5.4명(오스트리아)까지, 간호사 수는 4.2명(라트비아)에서 15.6명(노르웨이)까지 분포해 국가 간 격차가 큰 특징을 보인다.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 15개 항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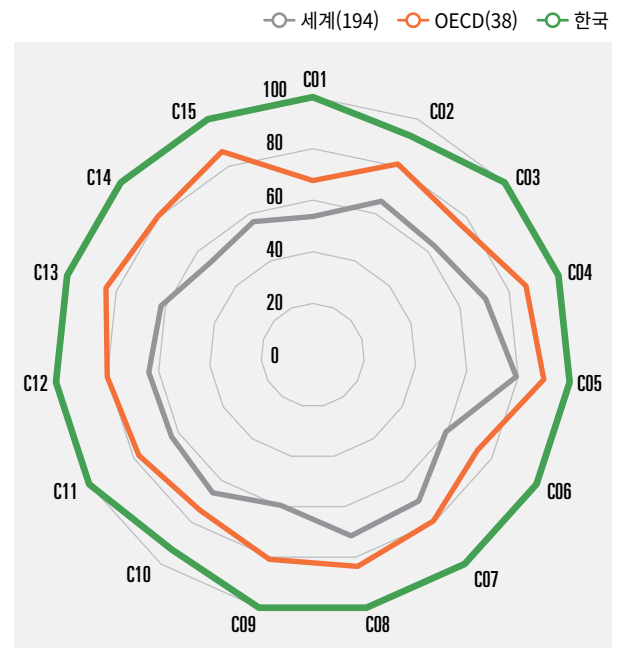
13개 항목에서 100% 달성

(☞ 관련 지표 3.d.1)

국제보건규정(IHR)은 공중보건 위기의 탐지, 평가, 통보, 대응 역량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한 WHO 회원국 간의 법적 규제이다. 각국에는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의 감시와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핵심역량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WHO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2021년 IHR 평가도구(State Parties Self-Assessment, SPAR)를 수정하였다. 개정된 SPAR(2021)은 15개 핵심역량에 대한 3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5개 핵심역량은 ① IHR 이행을 위한 정책적·법적·규범적 수단 ② IHR 조정과 국가 연락 체계 ③ 재정 ④ 실험실 진단 체계 ⑤ 감시 ⑥ 인적 자원 ⑦ 국가 보건 비상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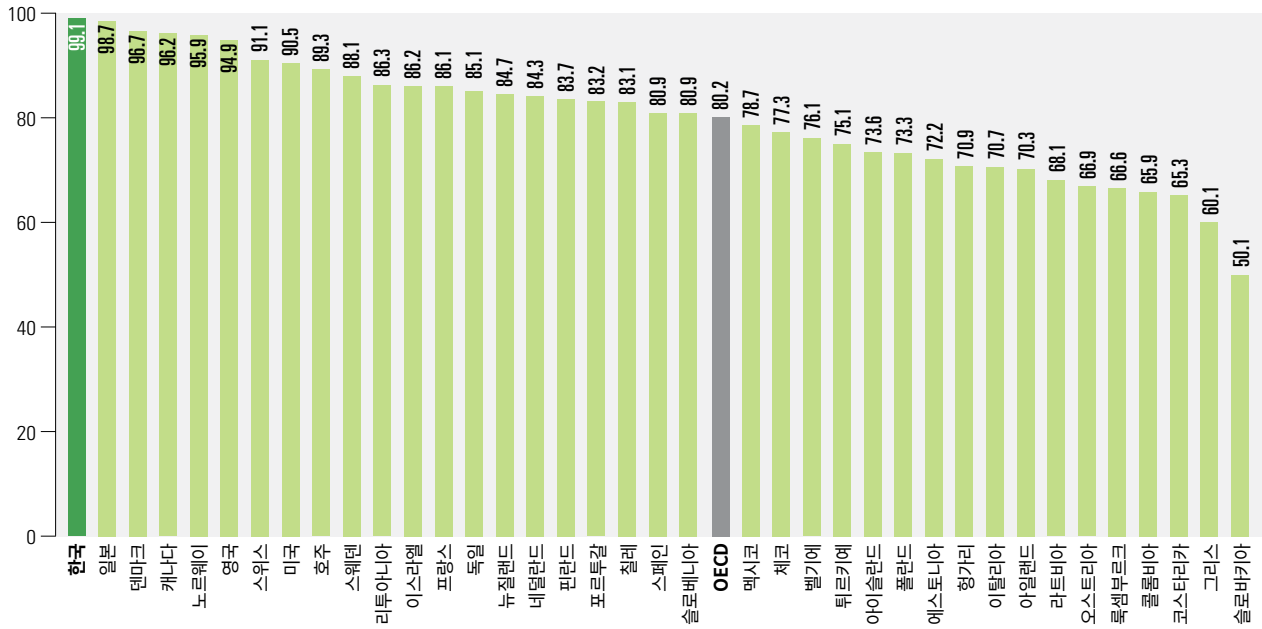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 핵심역량 15대 항목별 달성도, 2023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24. 인출)

주: 핵심역량(총합)은 15개 항목별 달성도(%)의 평균을 나타냄

제 ⑧ 보건서비스 제공 ⑨ 감염 예방 및 관리 ⑩ 위험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⑪ 검역 ⑫ 동물원성 및 인수공통 질환 ⑬ 식품 안전 ⑭ 화학물질 사고 ⑮ 방사능 비상 상황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24. 인출)
 주: 핵심역량(종합)은 15개 항목별 달성도(%)의 평균을 나타냄

으로 구성된다. 2024년 5월에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네 가지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지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한국은 2023년 IHR 핵심역량 평가에서 두 개 항목 (② IHR 조정과 국가 연락 체계 93%, ⑩위험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93%)을 제외한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

하였다. 15개 항목 평균으로는 99.1%인데, 이는 전 세계 194개국 평균(63.8%)과 OECD 38개국 평균(80.2%)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수준이다. 개정된 SPAR(2021)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 시행된 평가에서 각각 95.3%, 98.7%, 99.1%를 받아 보건 대응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지향하는 SDG 4번 목표는 최소학력 수준 달성도, 교육 인프라, 유아교육 등록률 등 여러 지표에서 지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이 미진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더욱 타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업 손실 우려가 PISA의 국제 학업성취 수준 지표에서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 평생학습 참여에서 감소세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유아교육 취원율과 성인 문해율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2022년 기준 읽기에서 85.3%, 수학에서 83.8%이며,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8년)과 유사한 수준

- 다만 2012년 이전까지는 9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80% 중반대 유지 중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읽기와 수학 모두에서 최소숙달 수준 도달 비율이 높음

» 유아교육 취원율(만 3~5세)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19년과 2020년에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94.3%로 최고치에 도달

- 한국의 만 5세 유아교육 취원율은 2021년 기준 93.3%로 프랑스(99.7%), 이탈리아(95.4%) 등 유럽 국가나 일본(97.1%)보다 낮지만 미국(84.2%)보다는 높은 편

»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1년 크게 하락한 뒤 2023년에 32.3%로 반등세를 보임

- 형식교육 참여율은 0.6%,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31.9%로 평생학습 참여자 대부분이 비형식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취약 집단(저학력자, 고령자, 저소득 가구, 비수도권 거주자, 취약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그 상대 집단(고학력자, 비고령자, 고소득 가구, 수도권 거주자, 비취약 계층)에 비해 낮음
- 평생학습 참여율의 지역 간 격차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성인의 비율은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3.4%에 달함

- 문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은 여성(80.1%)보다 남성(86.7%)에서 더 높게 나타남

최소숙달 수준 도달 청소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80% 중반대 유지 (☞ 관련 지표 4.1.1)

SDG 지표 4.1.1은 각국의 교육 체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얼마나 잘 보장하여 “양질의 교육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위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OECD의 PISA(OECD에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약 3년 주기의 읽기, 수학, 과학 분야 학업성취도 평가)와 IEA의 TIMSS(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초4 및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약 4년 주기의 수학, 과학 분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23년 12월에 PISA 2022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PISA 2018년 결과 발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4년 만에 공개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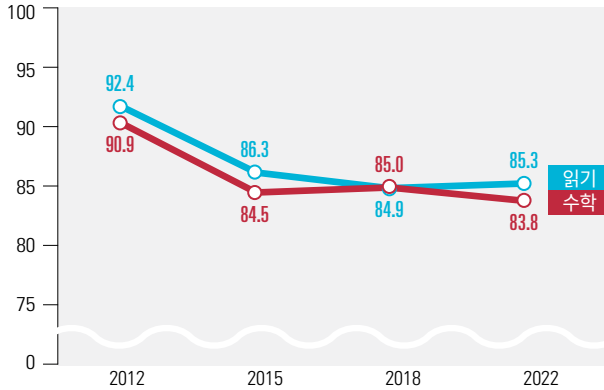
된 PISA 2022년 결과를 살펴본다. PISA 2022년 자료에서는 국가별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 학업성취도를 6수준으로 구분하며, 1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6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나타낸다. SDG에서는 2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를 ‘최소숙달 수준’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만 15세 청소년 중 읽기와 수학 분야에서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까지 모두 90%를 넘었지만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5년부터는 80% 중반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2020~2021년 동안 학교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PISA 2022년 결과를 보면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청소년의 비율이 읽기 85.3%, 수학 83.8%로 PISA 2018년 결



최소숙달 수준 도달 청소년 비율(만 15세, 읽기·수학), 2012~2022

(단위: %)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https://www.index.go.kr/sdg>, 2025.1.6. 인출)

주1: PISA는 참여국의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며, 2022년 기준 한국의 경우 중학생 352명과 고등학생 6,482명이 참여함

주2: 각 분야의 학업성취 수준은 6수준으로 구분되며, 2수준 이상 성취 시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정의함

과(읽기 84.9%, 수학 85.0%)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수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읽기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0.4%p 증가한 특징이 관찰된다.

한국 청소년의 최소숙달 수준 도달 비율은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PISA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읽기와 수학 분야 모두에서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PISA 평균점수 양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여서 흥미로운데, 읽기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점수(533점)가 남학생의 평균점수(499점)보다 높지만 수학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점수(530점)가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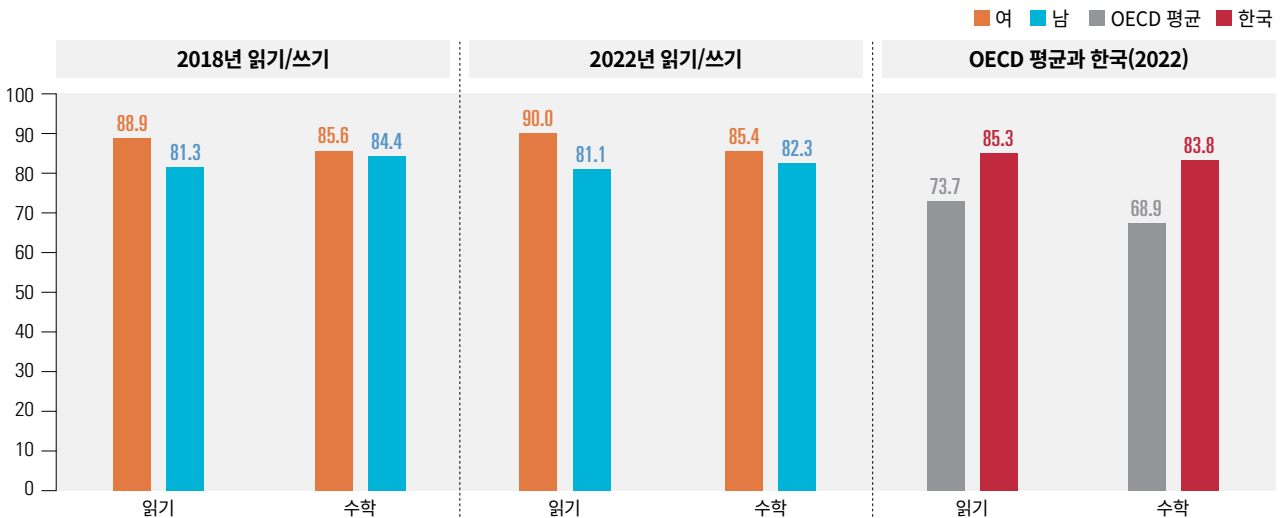
의 평균점수(525점)보다 높다. 즉 수학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는 높지만 최소숙달 수준 도달 비율은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영역에서 남학생의 학업성취 분산이 여학생보다 높은 데 기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PISA 2018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별 격차가 다소 커진 경향도 관찰된다. 2018년에는 최소숙달 수준 도달 비율의 성별 차이가 수학에서 1.2%p, 읽기에서 7.6%p였지만 2022년에는 수학에서 3.1%p, 읽기에서 8.9%p로 나타난다. 수학과 읽기에서 두 해 모두 여학생의 최소숙달 수준 도달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고 이 격차가 4년 사이에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청소년의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두 영역 모두에서 한국(읽기 85.3%, 수학 83.8%)이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PISA 점수가 국제적으로 상위권 수준을 유지해 왔음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시기 학습 결손에 대해 우려하였지만 PISA 2022년 결과에서 최소숙달 수준 도달 청소년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과거 수준을 유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 인재 한 명 한 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지표의 목표치를 과거 수준에 비추어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소숙달 수준 도달 청소년 비율(만 15세, 읽기·수학), 2018, 2022

(단위: %)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https://www.index.go.kr/sdg>, 2025.1.6. 인출)

주1: PISA는 참여국의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며, 2022년 기준 한국의 경우 중학생 352명과 고등학생 6,482명이 참여함

주2: 각 분야의 학업성취 수준은 6수준으로 구분되며, 2수준 이상 성취 시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정의함

유아교육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5%에 육박 (☞ 관련 지표 4.2.2)

아동의 초기 학습 경험은 아동의 발달과 전반적인 웰빙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의 학업성취와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21). 따라서 SDG 목표 4에서는 각국 아동들의 유아교육 경험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만 3~5세 유아 중 유아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비율, 즉 유아교육 취원율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유아교육 취원율은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래 크게 증가해 왔다. 유아교육 취원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17년에는 93.4%까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2019년과 2020년에 91%대로 일시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과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94.3%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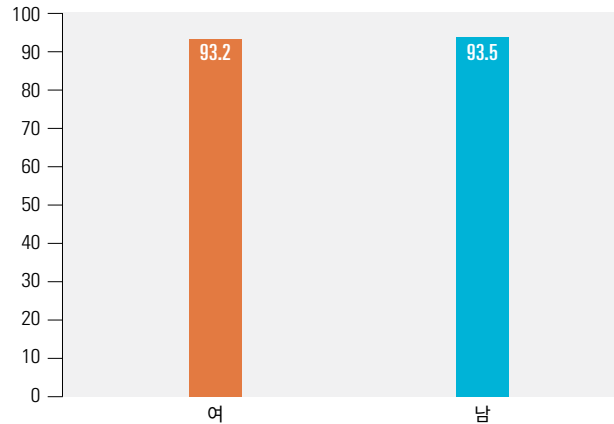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이 지표는 UOE(UNESCO/OECD/Eurostat) 국제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국가별 자료와 UN의 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이 지표의 국제 통계는 국가별 정규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연령 아동의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이며, 한국 통계는 만 5세 아동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한국의 만 5세 아동 취원율은 2021년 기준 남아 93.5%, 여아 93.2%로 남아가 여아보다 소폭(0.3%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아와 여아를 합한 전체

아동의 취원율은 93.3%로, 이는 프랑스(99.7%), 이탈리아(95.4%)와 같은 유럽 국가와 일본(97.1%)보다 낮지만 미국(84.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유아교육 취원율에는 영어유치원 등 유아 사교육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만 5세 아동 취원율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만 5세 아동 취원율, 특히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이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있다.

성별 정규 초등교육 입학 연령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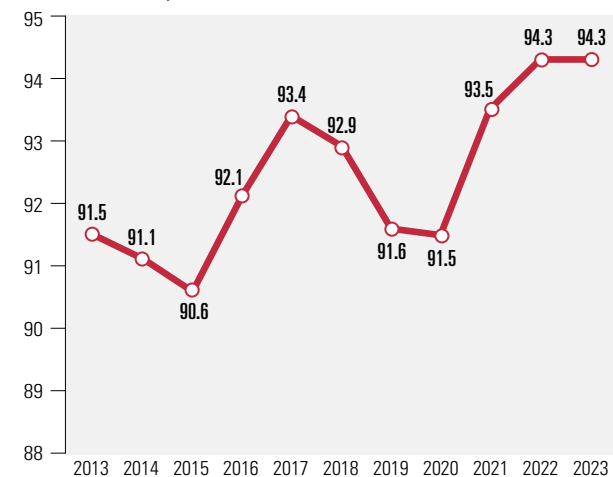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10. 인출)

주1 : 한국은 만 5세 아동 참여 비율임

유아교육 취원율, 2013~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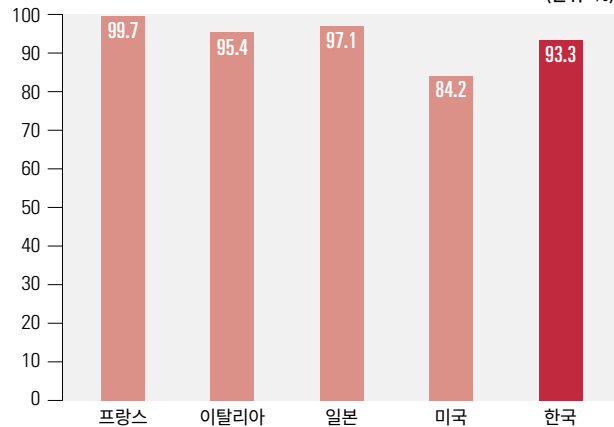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https://www.index.go.kr/sdg>, 2025.1.31. 인출)

주1 : 만 3~5세 유아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원한 유아 비율

주요국별 정규 초등교육 입학 연령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2021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10. 인출)

주1 : 한국은 만 5세 아동 참여 비율임

주2 : 주요국은 가용 자료가 있는 국가 중 한국의 주요 교육 벤치마크 국가를 참고하여 선정함



코로나19 이후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회복세이나 취약 집단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 (📊 관련 지표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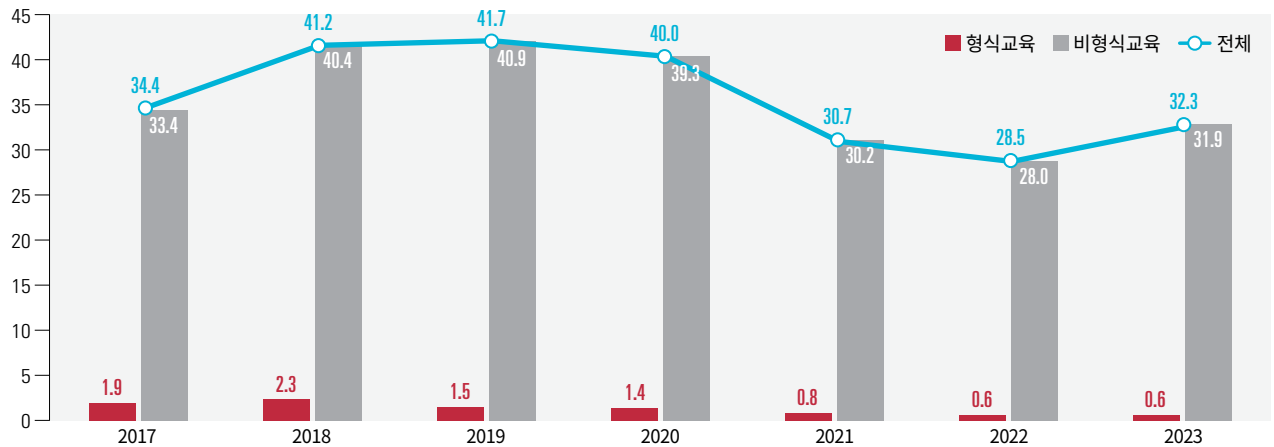
SDG 목표 4에서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표 4.3.1은 형식 및 비형식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노동시장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더욱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업스킬링(upskilling)이나 리스킬링(reskilling)과 같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OECD, 2021).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0년까지 40% 이상에 달하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1년에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2017~2023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념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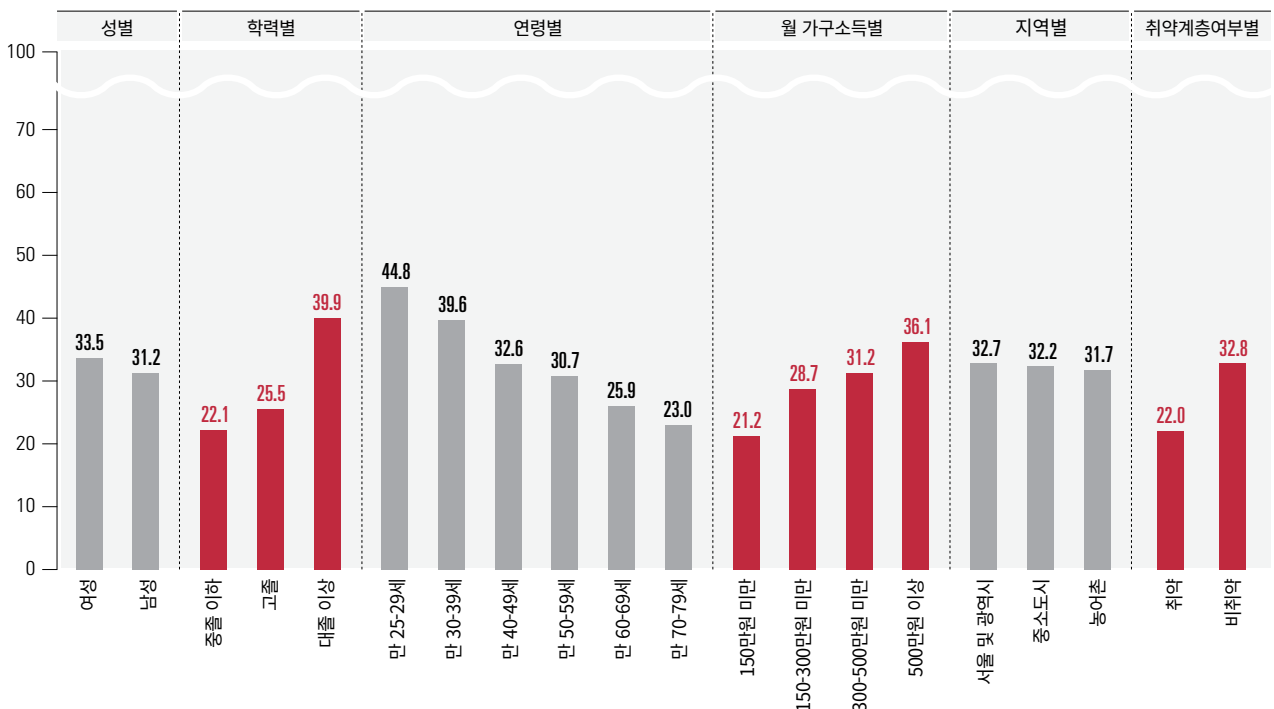
주1: 2017년부터 조사 대상이 25~69세 인구에서 25~79세 인구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이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주2: 2020년까지는 전년도 7월부터 조사 연도 6월까지 1년을 조사하였고, 2021년부터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조사함

주3: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원)과 같이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성인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2023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30.7%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참여율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2023년에는 32.3%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기준 형식교육 참여율은 0.6%, 비형식 교육 참여율을 31.9%로 나타나,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 중 대부분은 비형식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특성별로는 일반적으로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집단(저학력자, 고령자, 저소득 가구, 농어촌 거주자,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취약 계층)의 참여율이 그 상대 집단(고학력자, 비고령자, 고소득 가구,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 비취약 계층)보다 모두 낮게 나타난다. 다만 2023년에는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2022년(서울 및 광역시 29.5%, 농어촌 23.8%)에 비해 2023년(서울 및 광역시 32.7%, 농어촌 31.7%)에 줄어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의 참여율을 고려할 때, 향후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먼 미래에는 성인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거 최고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도입의 본격화, 고령자의 교육수준 상승 등의 현상은 향후 평생학습 참여의 집단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평생학습 참여에 소외되는 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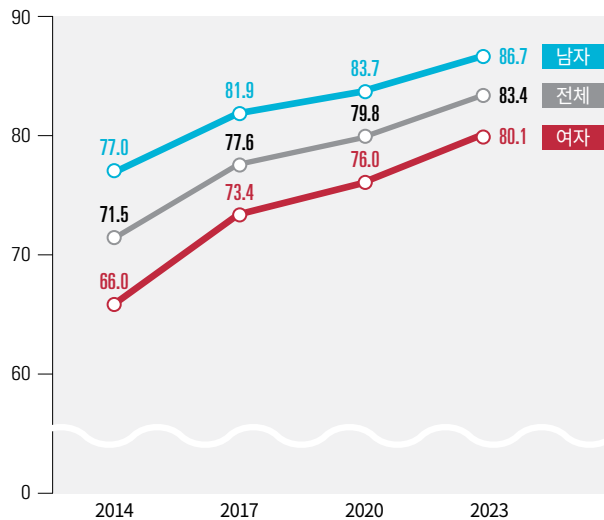
성인 문해율이 높아지면서 성별 격차도 감소

(📌 관련 지표 4.6.1)

지표 4.6.1은 (청소년 및) 성인 중 최소 수준의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을 갖춘 인구의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이다. “최소 수준의 역량”은 국제적으로 OECD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의 2수준으로 정의된다. 국내에서는 「성인문해능력조사」의 4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인문해능력조사」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및 활용에 기반하여 국내 18세 이상 성인의 문해능력을 측정하며, 4수준 이상

성별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인구 비율, 2014~2023

(단위: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주1 :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갖춘 인구 비율로 중학 학력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임

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중학 학력 이상 수준)”으로 정의한다.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4수준 이상의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성인 인구의 비율은 201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비율은 2014년 71.5%에서 2023년 83.4%로 약 10년간 11.9%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의 경향과 일치한다. 즉 성인 인구에 학력이 높은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편입되고 학력이 낮은 고령층은 이탈하면서 문해력을 갖춘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 문해율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인다. 2014년 이래 남성의 문해율이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높다. 2023년에도 남성 86.7%, 여성 80.1%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11.0%p에서 2023년 6.6%p로 감소하였다.

향후 한국 성인의 문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업스킬링** :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
- **리스킬링** : 지금까지 걸어온 것과는 다른 커리어나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SDG 5번 목표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 안전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아직도 여성의 조혼과 성기 절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급에서 성별 격차가 해소되려면 현재 속도로는 17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관리자급 공무원, 기업 임원에서 여성 비율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교제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 여성을 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다.

»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88년 2.0%에서 2024년 20.0%로 늘어났으나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14.2%로 저조

• 여성 의원 중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이 뚜렷이 상승하여 국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3년 23.2%와 30.8%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낮으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더욱 낮은 수준

»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2022년 기준으로 각각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며, 여성 피해자 비율은 59.9%와 81.2%에 달함

»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부상

•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검거율은 2023년 48.2%와 61.4%에 불과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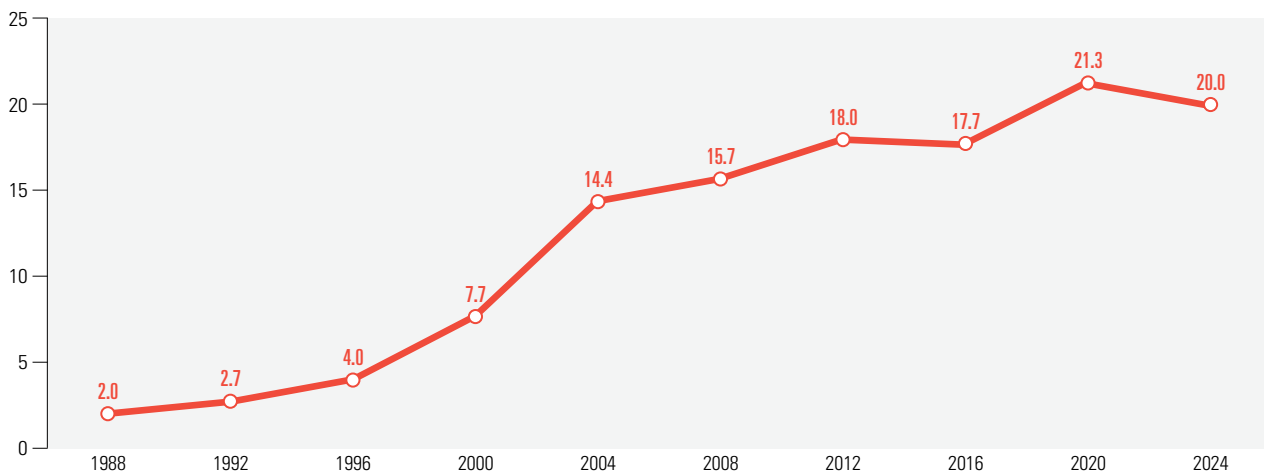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 (📍 관련 지표 5.5.1)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988년 2.0%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늘어나 2024년에는 20.0%에 이른다. 특히 2004

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에 여성 공천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국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88~2024

(단위: %)



출처: 국회사무처,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 2024.8.28.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024.8.2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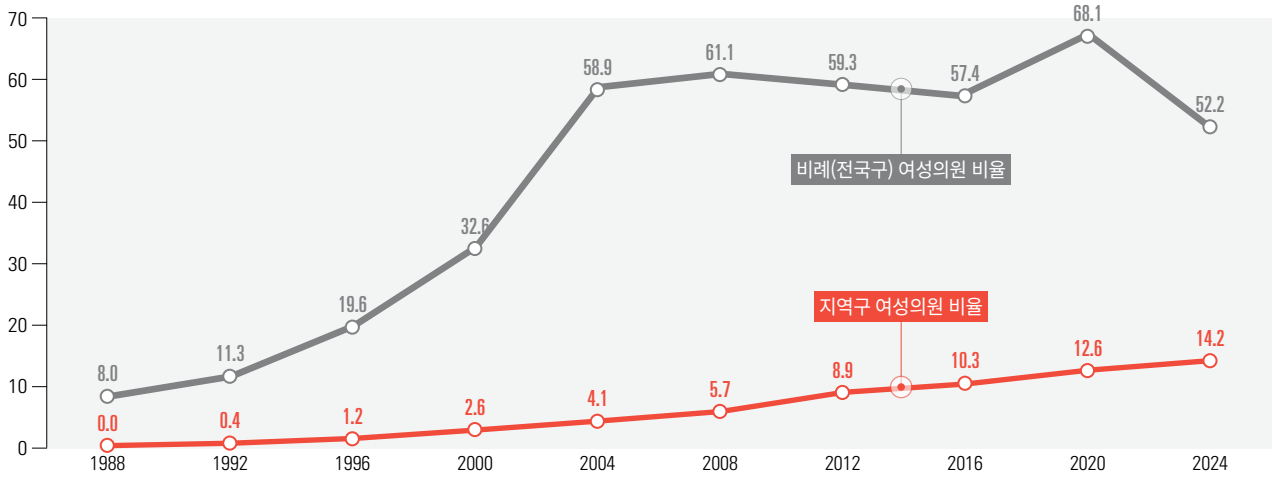
주1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산함

주2 : 2020년까지는 재보궐 선거 결과를 반영한 수치이며, 2024년은 당선인 통계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88~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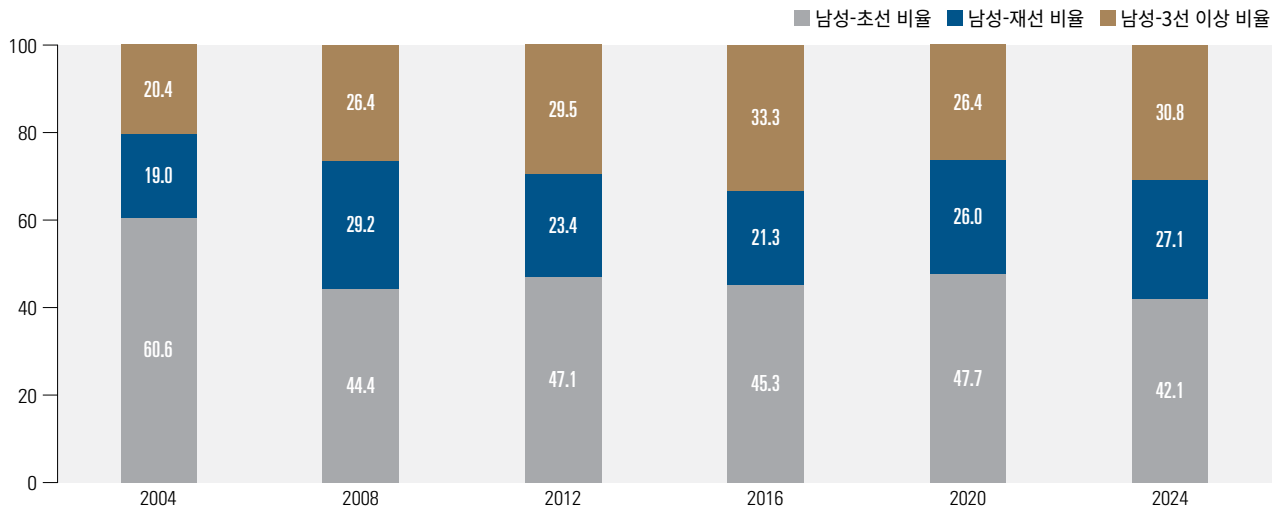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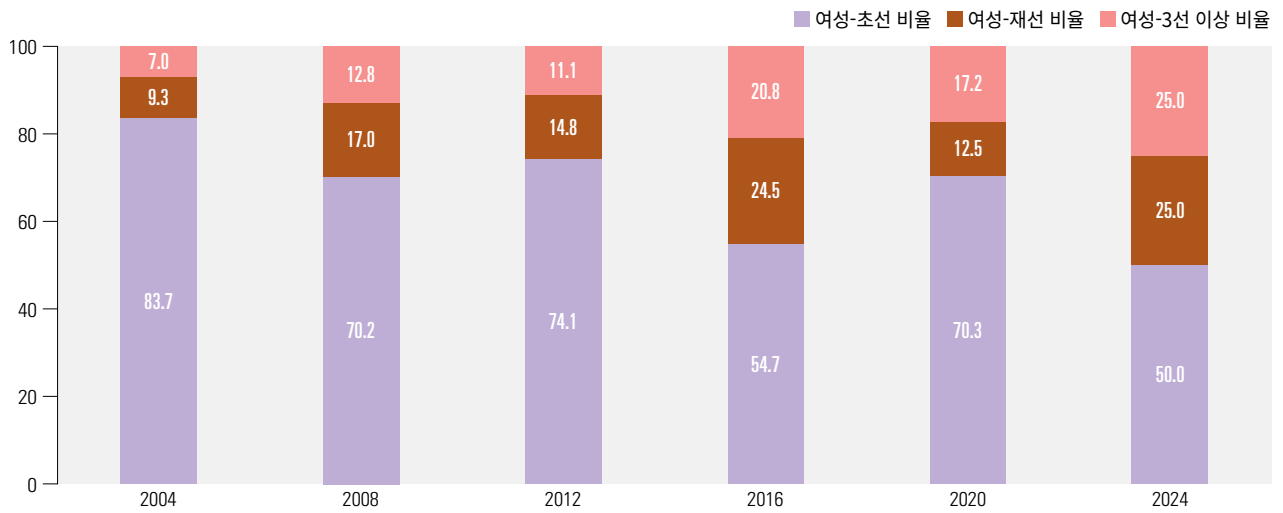


출처: 국회사무처,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 2024.8.28.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024.8.28. 인출)

주 : 2020년까지는 재보궐 선거 결과를 반영한 수치이며, 2024년은 당선인 통계임

성별 국회의원 선수(選數, 당선 횟수) 구성비, 200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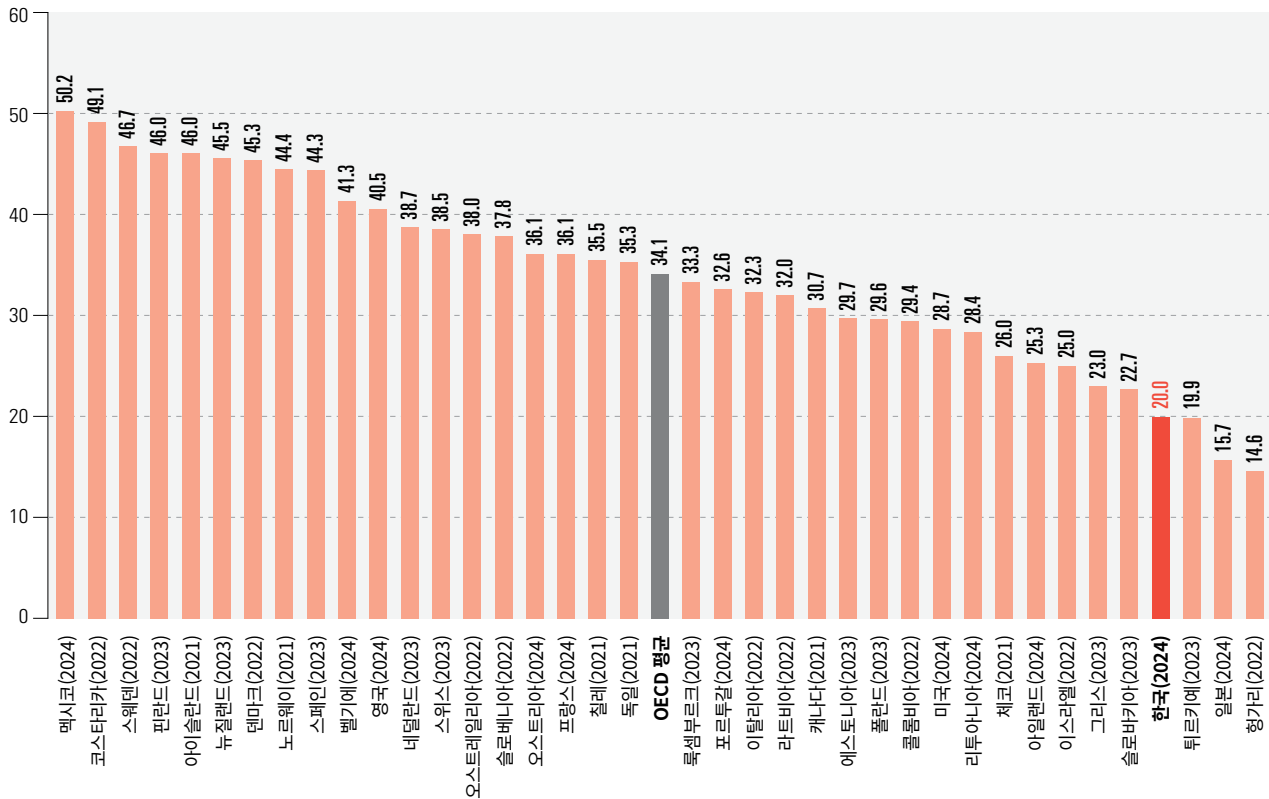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회사무처,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 2024.9.6. 인출)

주1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산함

주2 : 2020년까지는 재보궐 선거 결과를 반영한 수치이며, 2024년은 당선인 통계임



출처: IPU, Parline Data,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https://data.ipu.org/women-ranking>, 2025.1.7. 인출)

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하원 의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또 한 차례 법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지명 시 흡수 순번에 여성을 배정하도록 하여 여성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전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은 2024년 기준 14.2%에 그쳐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역구 의석(254석)이 비례대표 의석(46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당선 비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전체 국회의원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수(당선 횟수)는 의원 개인의 국회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선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 운영 경험, 정책 전문성, 정치적 협상력 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회 운영의 중추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여성 국회의원 수가 매우 적어 여성 의원의 선수별 비율에 통계적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04년 선거에서 여성 의원 중 재선과 3선 이상 비율은 9.3%와 7.0%였고 남성 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19.0%

와 20.4%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 의원의 재선 이상 비율은 이후 20년간 뚜렷이 상승하여 2024년 선거에서는 재선과 3선 이상이 각각 25.0%에 달하였고 남성 의원(재선 27.1%, 3선 이상 30.8%)과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난 30여 년간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비교해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OECD 국가 평균인 34.1%보다 14.1%p나 낮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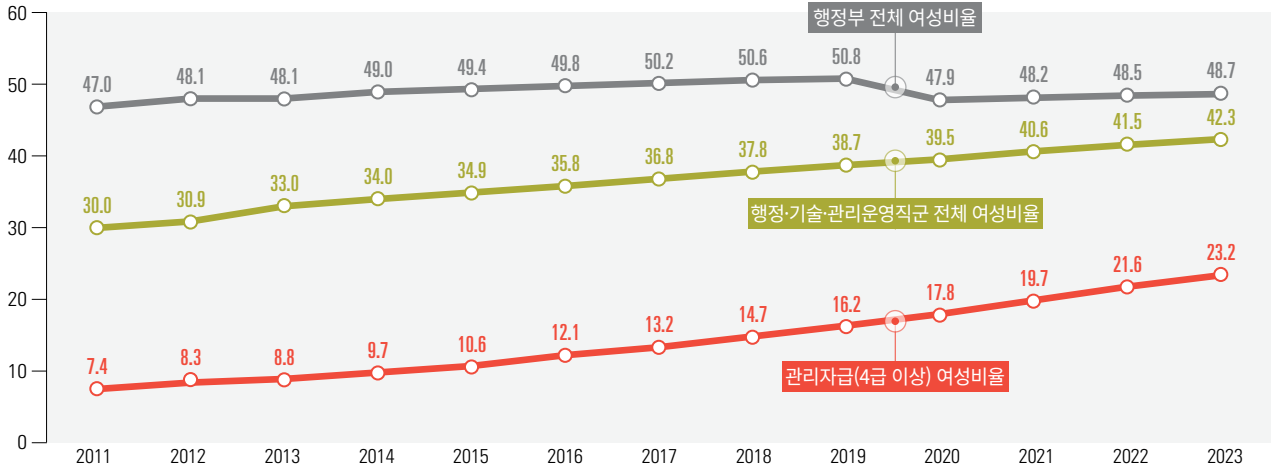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편 (☞ 관련 지표 5.5.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23년 각각 48.7%와 50.4%에 달한다. 그러나 관리자급에서 여



국가공무원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 2011~2023

(단위: %)



출처: 인사혁신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https://gsis.kwdi.re.kr>, 2024.8.2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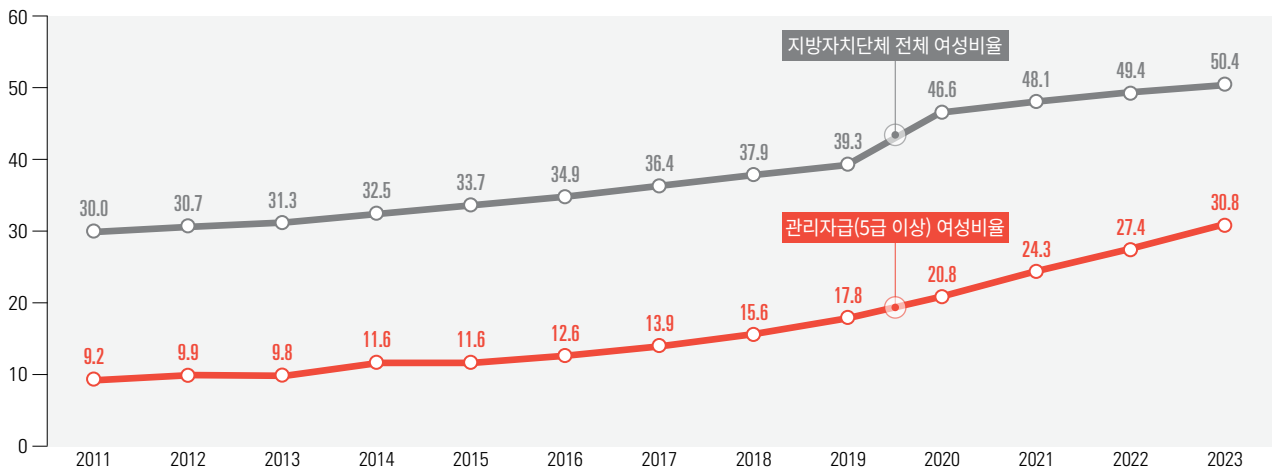
주1: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함

주2: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에는 특정직(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정무직, 별정직이 제외되며,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연구·지도·우정직과 전문경력관, 시간선택제와 일반·전문·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됨

주3: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직급별 여성 비율 수치가 제공되는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기준임

지방공무원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 비율, 2011~2023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통계(2023.12.31. 기준)(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1&nttId=110482, 2024.8.28. 인출)

주1: 지방공무원 중 교육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준임

주2: 지방공무원 5급 이상에는 고위공무원, 일반직(일반임기제 포함) 1~5급, 일반임기제 5급, 연구·지도관, 별정직 1급 상당~5급 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 이상이 포함됨

성 공무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직급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국가 공무원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기준으로 보면, 여성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42.3%에 이르지만 관리자급(4급 이상)에서는 23.2%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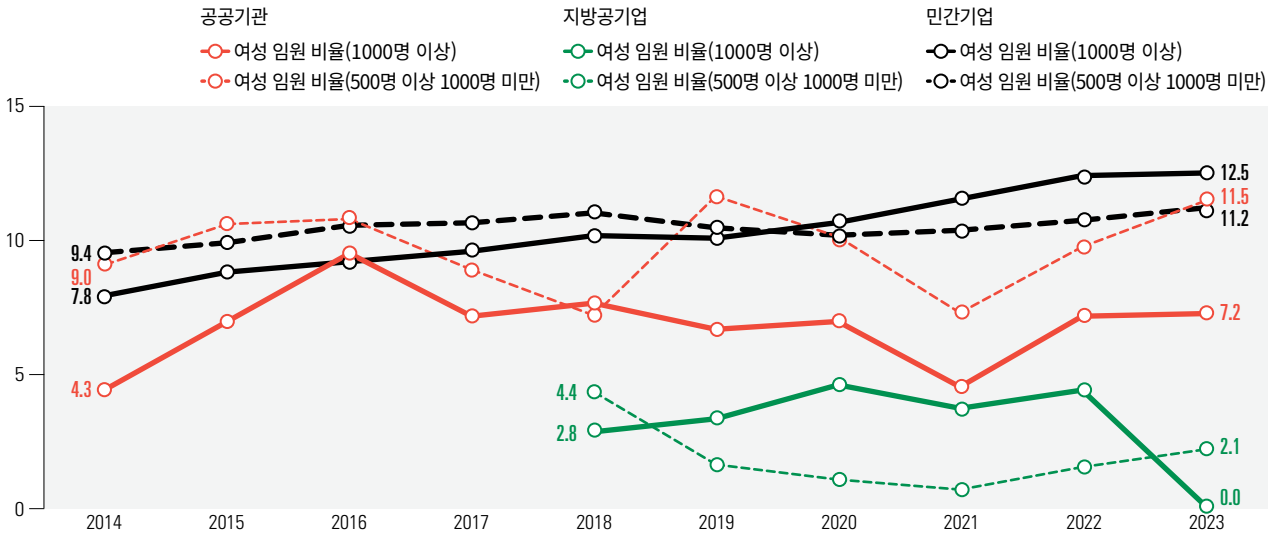
지방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2023년 기준 전체 지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0.4%인데 관리자급에서 여성 비율은 30.8%이다. 이는 관리자급에서 여성 공무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2020년 25.8%p, 2021년 23.8%p, 2022년 22.0%p, 2023년 19.6%p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관리자급 공무원의 성별 격차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편 (🔗 관련 지표 5.5.2)

임원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 대표성은 여성 임원 비율로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및 AA 남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

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시행 대상 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이며, 2018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공단으로 확대됨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임원진에서 여성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2006년에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10년 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근로자 1,0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7.2%에 불과하고 민간기업에서도 12.5%에 그친다.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편인 지방공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5%를 넘긴 적이 없다. 2023년에는 1,000명 이상 규모의 지방공기업 11개사를 통틀어 여성 임원이 전무하였고 1,000명 미만 규모에서도 147개사를 통틀어 여성 임원은 단 4명(2.1%)뿐이었다.

여성을 향한 폭력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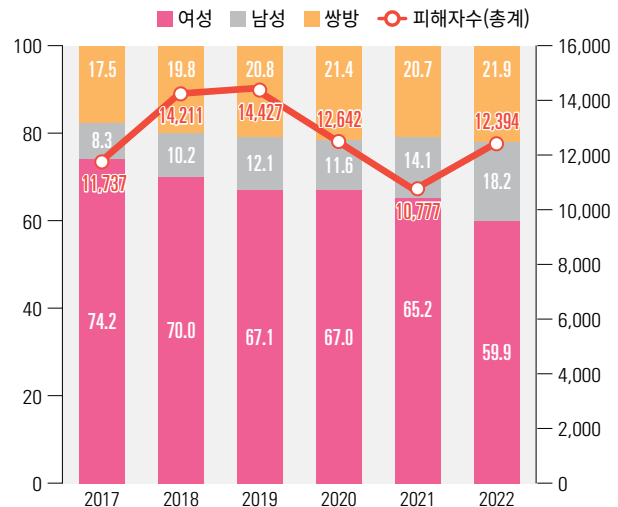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뚜렷이 감소

(☞ 관련 지표 5.2.1 / 5.2.2)

교제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로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또는 경범죄 등 기타 범죄로 구성된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2019년 1만 4,427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2

교제폭력 피해자 수와 비율, 2017~2022

(단위: 명,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효정 외, 2023) pp.76~77(원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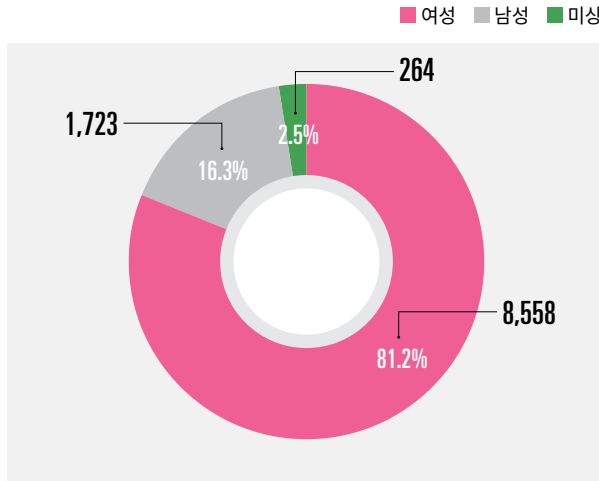
년에도 1만 2,394명으로 여전히 연간 1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74.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59.9%(7,420명)로 여전히 여성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물리적·심리적 괴롭힘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기존에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다가 2021년 10월 스톱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스톱킹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수는 연간 1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와 비율, 2022

(단위: 명,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효정 외, 2023) p.83(원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만 545명에 이르며, 이 중 무려 81.2%가 여성 피해자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사이버 성폭력이 대표적이다. 불법촬영의 경우 2015년에 정점에 이른 후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5,000~6,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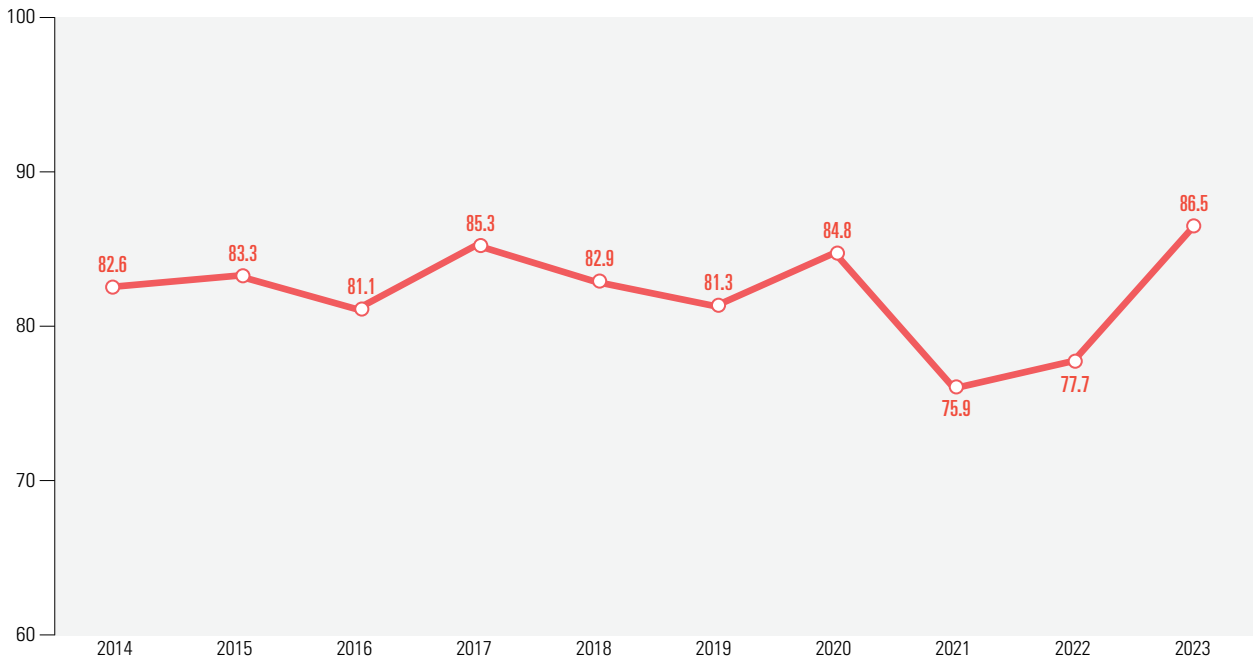
여성이 86.5%에 달하여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앞서 살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외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제작·반포가 포함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발생건수는 2019년까지 연간 1,000건대였으나 2020년부터 급증하여 2022년에는 연간 1만 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8,004건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2019년까지 연간 1,000건 미만이었으나 2020년 2,621건으로 급증하였고 2023년에도 1,674건 발생하였다. 2020년부터 새로운 유형인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통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두 범죄는 2023년에 각각 168건과 970건 발생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이미지 합성이 쉬워지면서 허위영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만 해도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경우 모두 90%대의 높은 검거율을 보이다가 2021

불법촬영 여성 피해자 비율, 2014~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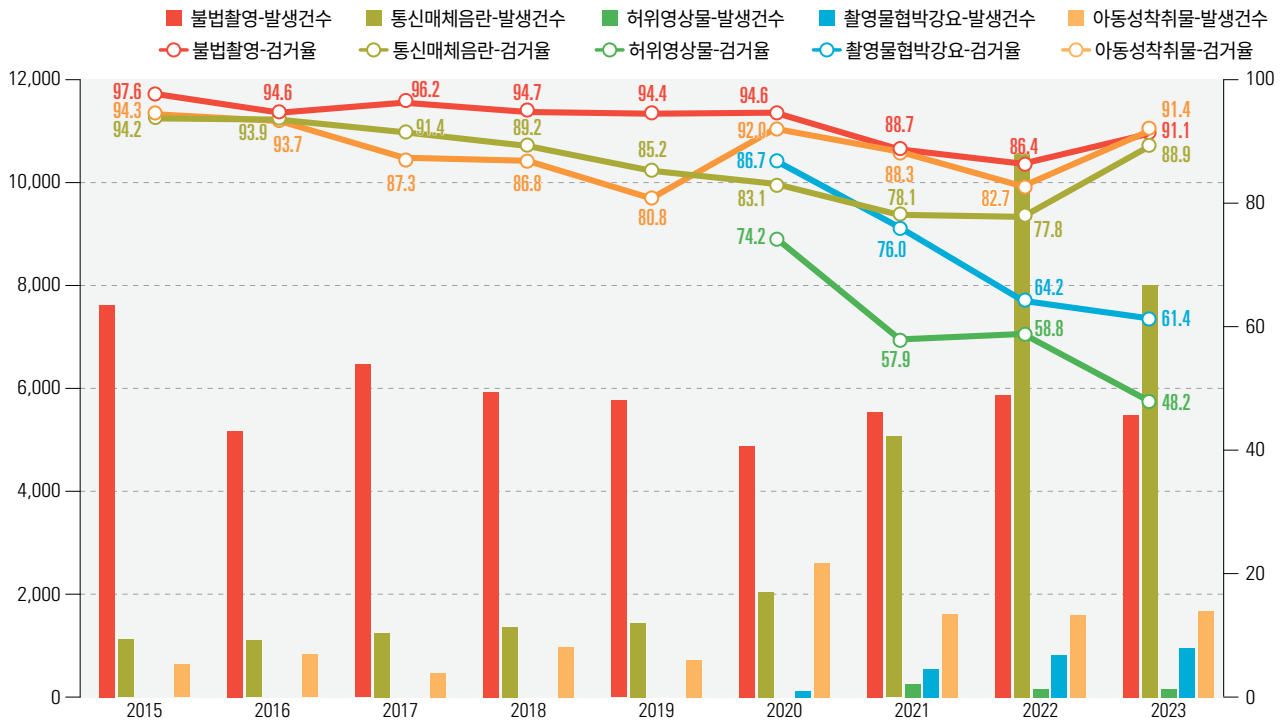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2023 경찰통계연보

주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범죄를 말함(2019년까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2015~2023

(단위: 건, %)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주1: 2020년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으로 변경됨

주2: 2019년부터 '음란물제작·배포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변경됨

주3: 검거율 = (검거 건수/발생 건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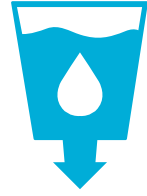
년, 2022년 점차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각각 91.1%, 91.4%, 88.9%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의 검거율은 48.2%와 61.4%에 불과하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

터넷을 통한 빠른 확산과 반복적인 복제로 인해 관련 영상과 이미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특정 성별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2006년에 도입된 고용상 성평등 촉진 제도로서 공공기관, 지방 공사와 공단,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에 미달한 기업에 시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함
- **딥페이크(Deepfake)** :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사진, 영상, 음성을 기반으로 가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함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안전한 물과 위생 서비스, 담수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보호는 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기도 하다. 지구적으로는 아직도 20억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연중 6개월 이상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급수(상수도) 보급의 지역 격차가 뚜렷이 개선되고, 물관리 일원화 이후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물 스트레스 수준과 물 이용 효율성을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농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화 필요성이 드러난다.

» 공공급수(상수도) 보급은 2011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국 기준 99.5%에 도달

- 농어촌 지역에도 보급률이 96.4%에 달해 식수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뚜렷하게 개선됨

» 한국의 물 스트레스 수준은 2021년 기준 85.2%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 2002년 이래 정체 상태에 있음

- 산업별로는 농업 부문(50.2%) 물 스트레스가 가장 크며, 물 이용 효율성도 농업 부문(1.07달러/m³)에서 가장 낮고 개선 속도도 가장 느려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은 2023년에 '높음'(81점)으로 평가되어 2017년(68점) 이래 연속 상승

- 물관리 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2019년),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2021년~) 시행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물관리 추진의 기반 여건이 마련된 가운데 재정 조달 등에서는 아직 개선이 요구됨

지속적인 공공 급수시설 보급으로 식수 서비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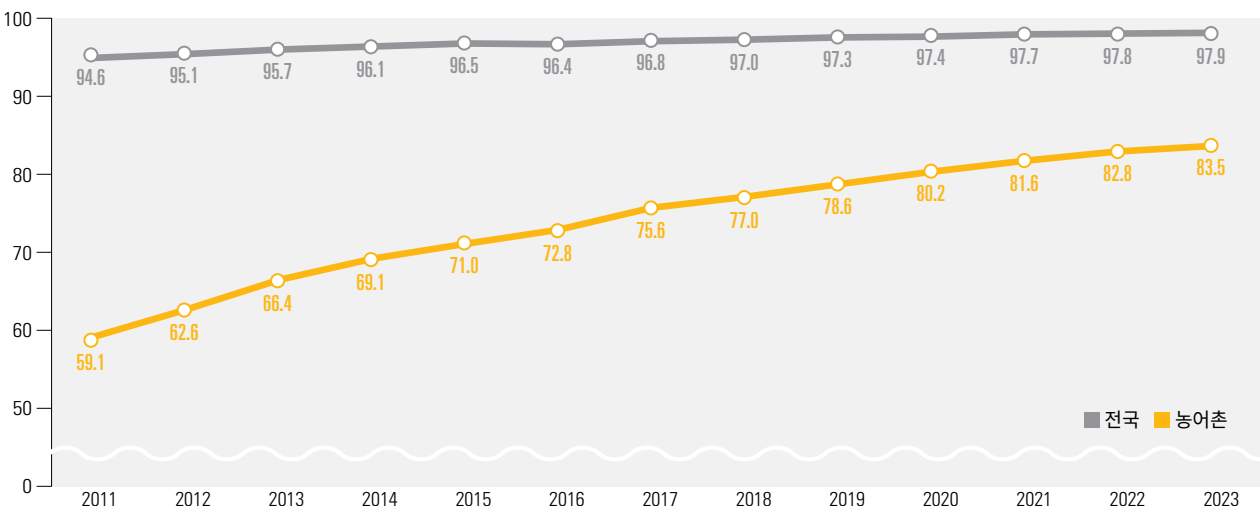
지역 격차 개선 (☞ 관련 지표 6.1.1)

전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97.9%로 완전 보급 상태에 가깝다. 같은 해 농어촌 지역(전국 면 지역)의 보급률은 83.5%인데, 이는 2011년 59.1% 대비 24.4%p나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대비 14.4%p 낮다. 한편 광역

및 지방 상수도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 공공급수(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전국 기준 99.5%이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96.4%로 집계된다. 전국과 농어촌 지역의 보급률 차이가 3.1%p에 불과하다. 이는 광역 및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기 어려운 지역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면서 식수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수도 보급률, 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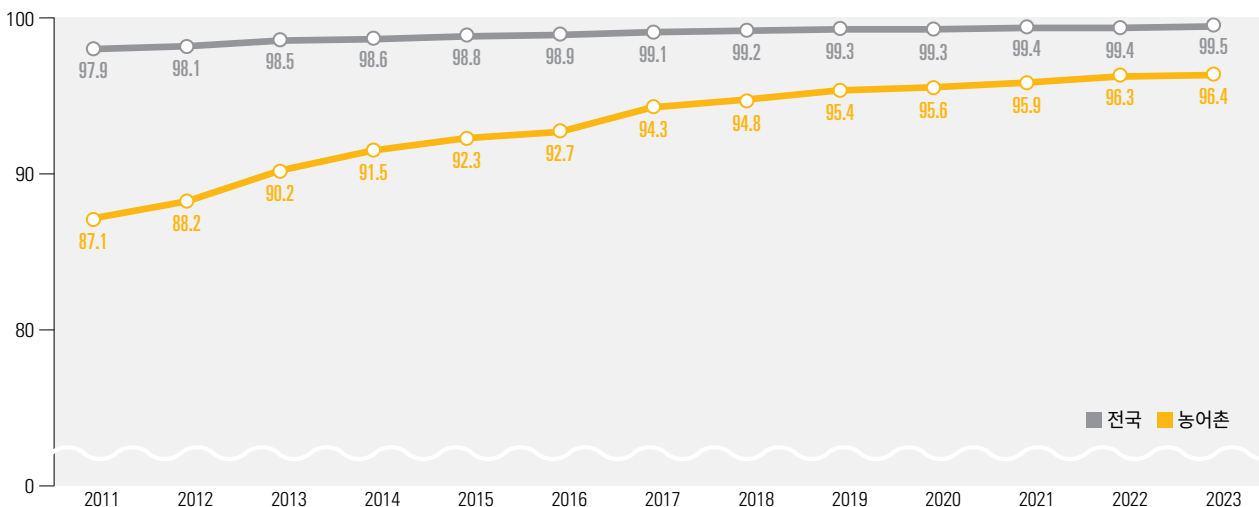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2023 상수도통계

주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제외, 농어촌 보급률은 전국의 면 지역 보급률임



공공급수(상수도) 보급률, 2011~2023

(단위: %)



출처: 환경부, 2023 상수도통계

주: 광역 및 지방 상수도과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보급률

산업 부문별 물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물 스트레스 완화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6.4.1 / 6.4.2)

SDG 세부목표 6.4에서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물 부족을 해소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담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취수와 공급에 관한 환경적 지표와 경제적 지표, 즉 물 스트레스 수준과 물 이용 효율성을 차례로 점검한다. 먼저 담수자원 이용의 환경적 지표인 물 스트레스 수준(SDG 6.4.2)은 이용가능한 담수자원 중 취수되는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수 강도'라고도 한다. 담수생태계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환경유지유량을 제외한 재생가능한 총담수자원량 중 주요 산업 부문으로 취수되는 양의 비율로 나타낸다. 한국의 물 스트레스 수준은 2021년 기준 85.2%로 2002년부터 큰 변화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농업 부문에 따른 물 스트레스가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비스업 부문과 공업 부문은 각각 21.0%와 14.0%에 그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132.0%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물 스트레스가 높은 나라이다.

한편 담수자원 이용의 경제적 지표인 물 이용 효율성(SDG 6.4.1)은 물 사용량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달러/m³)로 측정되며, 한 단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의 양을 나타낸다. 산업 전체의 물 이용 효율성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향상되어 2021년에는 2011년 대비 1.32배 증가하였다. 2021년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은 농업 부문 1.07달러/m³, 공업 부문 116.86달러/m³, 서비스업 부문 149.05달러/m³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물 이용 효율성은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서비스업(63.8%)과 전체 산업의 물 이용 효율성은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총취수량의 58.9%가 농업 부문에서 일어나지만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1.6% 미만에 불과하다. 농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성을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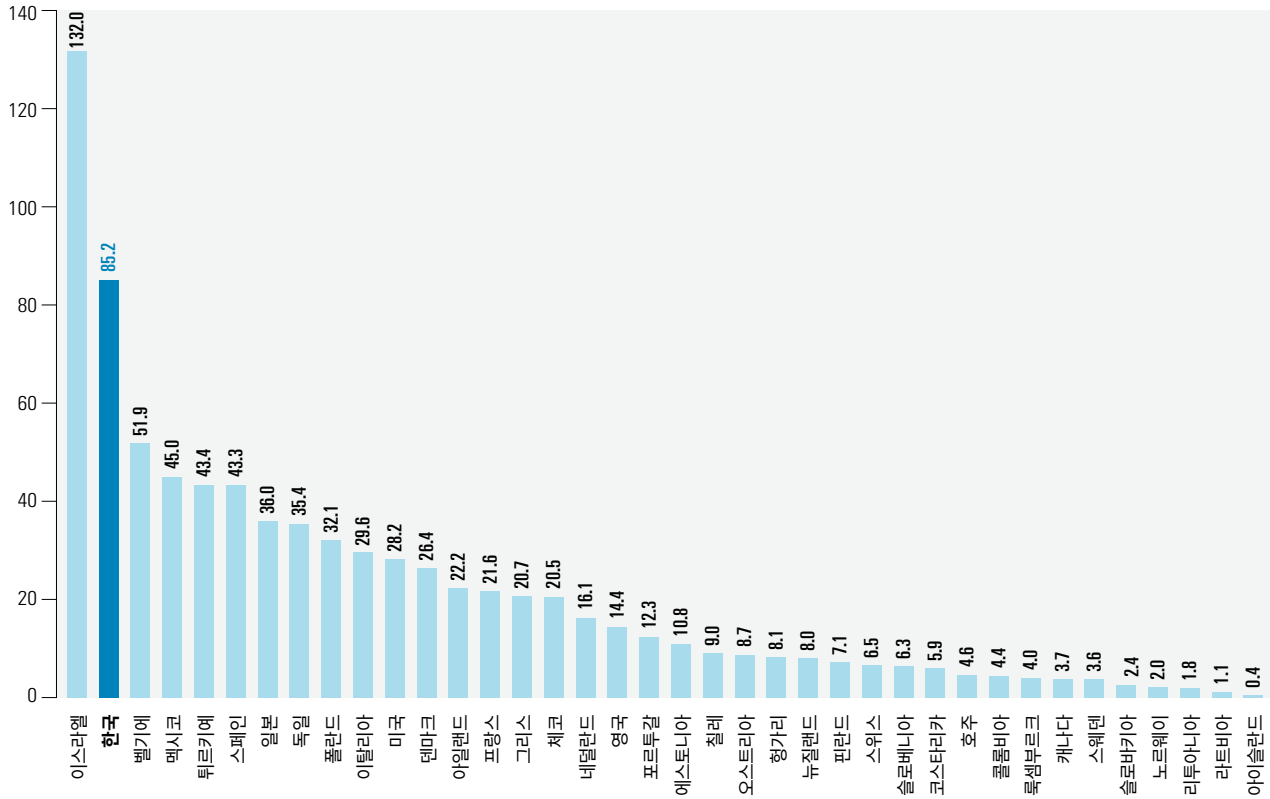
(단위: 달러/m³)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42.83	43.84	45.36	46.77	49.39	50.54	52.11	53.66	54.95	54.37	56.55
농업 부문	1.02	1.04	1.03	1.04	1.04	0.99	1.02	0.99	0.97	1.02	1.07
공업 부문	96.23	97.33	100.87	101.90	104.19	107.67	113.99	115.89	113.27	110.80	116.86
서비스 부문	102.71	105.52	108.81	113.14	129.97	130.96	133.05	138.16	145.19	144.36	149.05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12.23. 인출)

OECD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 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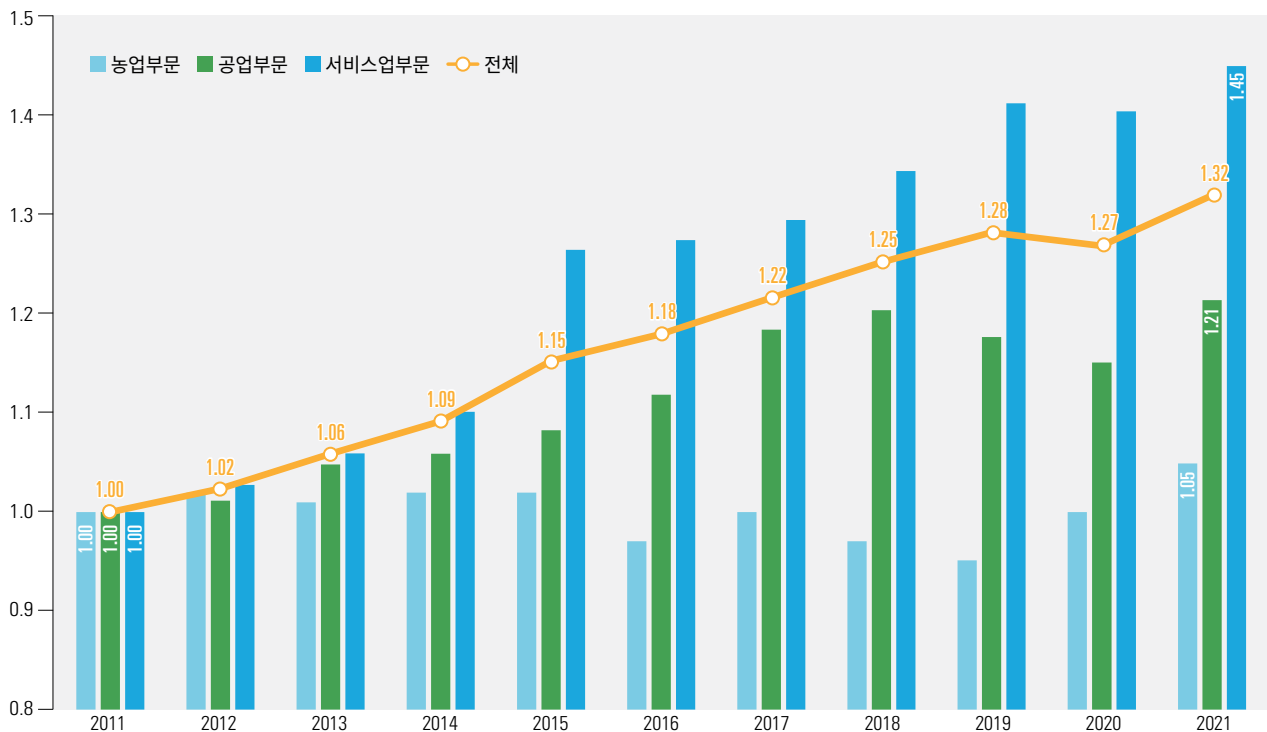
출처: FAO, AQUASTAT(<https://data.apps.fao.org/aquastat>, 2024.9.21. 인출)

주 : 물 스트레스 수준은 이용가능한 수자원 중 환경적 물 요구 사항을 고려한 후 주요 경제 부문에서 사용된 취수량의 비율로서, 연간 총취수량(total freshwater withdrawn, TWW)을 이용가능한 총수자원(total renewable freshwater resources, TRWR)과 환경적 물 요구량(environmental water requirements, EWR)의 차이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됨. 지표에 대한 일관성은 기후 및 국가 물관리 목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 $\text{Water Stress}(\%) = [\text{TWW} / (\text{TRWR} - \text{Env.})] \times 100$

53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 변화(2011년 대비), 2011~2021

(단위: 2011년=1)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12.23. 인출)



증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농업용수 용수관리 자동화, 농업용수 수요량 조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 ‘높음’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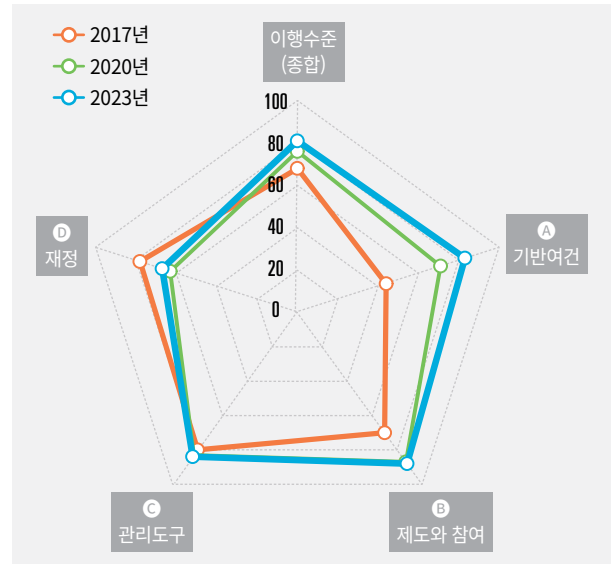
(● 관련 지표 6.5.1)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란 핵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평한 방식으로 경제와 사회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물관리에 연관된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의 다양한 가치를 고루 지향하고 과학 기반의 관리 도구 뿐만 아니라 정책 환경, 제도, 재정 등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1992년 더블린 선언과 리우 정상회의를 거쳐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정립된 이후 SDG 지표(6.5.1)로 도입되어 그 이행 정도가 점검되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SDG 6번 목표에 관련된 여러 부문을 조정하는 관리의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물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압력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6번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통합물관리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기반 여건, 제도와 참여, 관리 도구, 재정 등 4개 부문의 33개 항목에 걸쳐 3년마다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0~100점 사이의 점수로 제공되며, 구간에 따라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의 6등급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통합물관리 이행 수준은 2023년 81점으로 ‘높음’ 등급(71~90점)으로 평가된다. 2017년 68점(약간 높음)에서 시작하여 2020년 76점(높음)을 거쳐 꾸준히 상승해 왔다. 부문별로 보면 기반 여건, 제도와 참여, 관리 도구의 3개 부문은 2020년에 이어 모두 ‘높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반 여건 부문은 2017년 44점(약간 낮음)에서 2020년 71점(높음)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2023년에는 83점으로 더 상승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관련 업무를 통합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 2017~2023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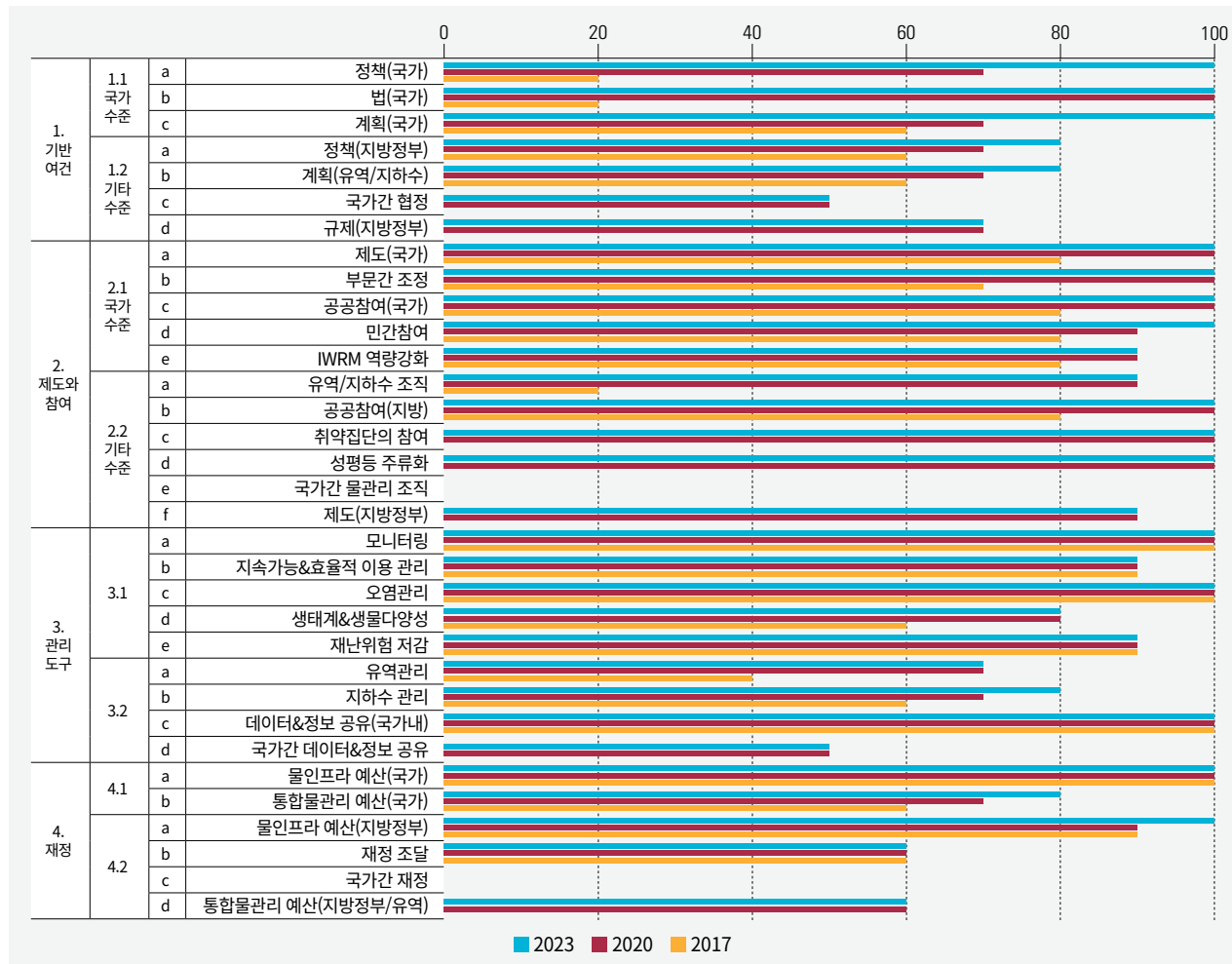


출처: IWRM Data Portal, country reports(<https://iwrmdatportal.unepdhi.org>, 2024.12.23. 인출)

주 : 2017년은 일부 평가 항목에 차이가 있어 비교 시 주의를 요함

하여 규율하는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에 시행되었다. 이어 2021년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되고 이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유역 단위의 물관리종합계획(2021~2030)이 수립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법·정책적 기반 여건이 마련되었다. 재정 부문의 경우 국가 및 유역 단위에서 위원회를 비롯한 물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관련 예산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재정 조달과 지방·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예산 항목에서는 여전히 67점에 그친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통합물관리 평가 체계에는 국경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에 관한 평가 항목(1.2.c, 2.2.e, 3.2.d, 4.2.c)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유일한 접경국인 북한과 협력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 항목에서는 더욱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OECD 국가의 통합물관리 이행 수준은 평균 76.5점이다. 한국(81점)의 이행 수준은 이보다 약간 높으며 OECD 38개국 중 18번째로 평가된다. 프랑스, 덴마크, 일본,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91점 이상의 ‘매우 높음’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한국과 함께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칠레(26점), 멕시코(41점), 콜롬비아(41점) 등은 통합물관리 이행 수준이 낮은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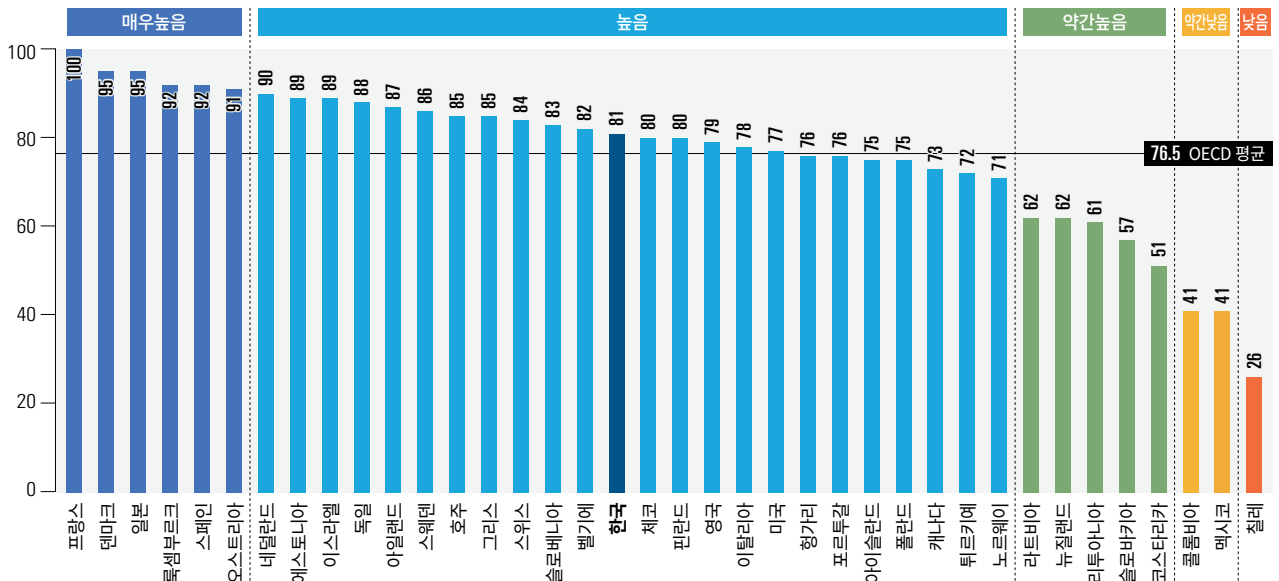


출처: IWRM Data Portal, country reports(<https://iwrmdataportal.unepdhi.org>, 2024.12.23. 인출)

주 : 2017년 1.2.c, 1.2.d, 2.2.c, 2.2.d, 2.2.e, 2.2.f, 3.2.d, 4.2.c, 4.2.d는 점수 없음(n/a). 2020년과 2023년 2.2.e, 4.2.c는 0점

OECD 국가별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 2023

(단위: 점)



출처: IWRM Data Portal, country reports(<https://iwrmdataportal.unepdhi.org>, 2024.12.23. 인출)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 7번 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적정가격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는 전기서비스와 요리를 위한 청정연료에 접근하지 못하던 인구도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19와 전쟁의 여파로 개선 속도가 더뎠다. 한국에서는 탄소중립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과 비중,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효율의 개선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등의 정책에 따라 증가 추세가 지속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1년과 2023년 사이 연평균 1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1차 에너지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2011년 1.3% → 2023년 5.7%),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2011년 1.4% → 2021년 3.7%) 모두 뚜렷이 증가
- 특히 태양광의 비중이 2011년 5.6%에서 2023년 41.9%로 급속하게 증가
-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소비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나 생산량은 21위로 중위권에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원단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개선 속도가 둔화

- 한국은 에너지 효율(2022년 0.122TOE/1,000USD) 지표에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속함
-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해 개선에 제약이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관련 지표 7.2.1)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등의 정부 정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1년 357만 TOE에서 2023년 1,705만 8천 TOE로 4.8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3.9%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연평균 증가율도 10.4%를 나타내며 과거로부터의 증가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7.0%에서 12.5%로 늘리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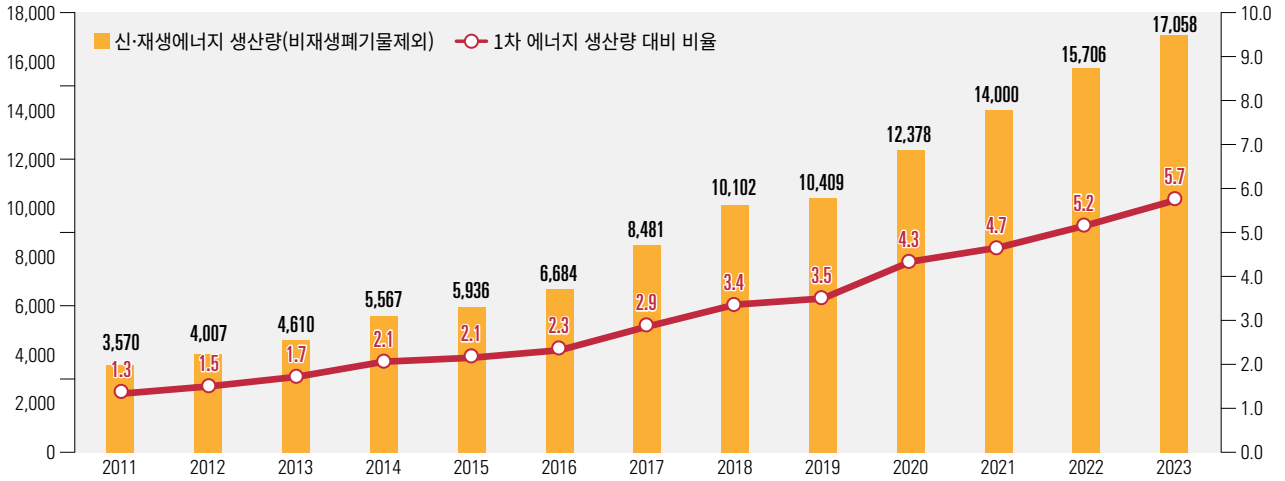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화석연료 등을 포함하는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차 에너지는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1차 에너지에 속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2011년 1.3%에 그쳤으나 이후 2014년 2.1%, 2018년 3.4%, 2020년 4.3%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5.7%에 이른다.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최종 소비 부문에서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에서 비재생폐기물은 제외되며,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되는 열과 전기를 추정하여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2011년 1.4%에서 2014년 2.9%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3.2%를 기록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율, 2011~2023

(단위: 1,000TO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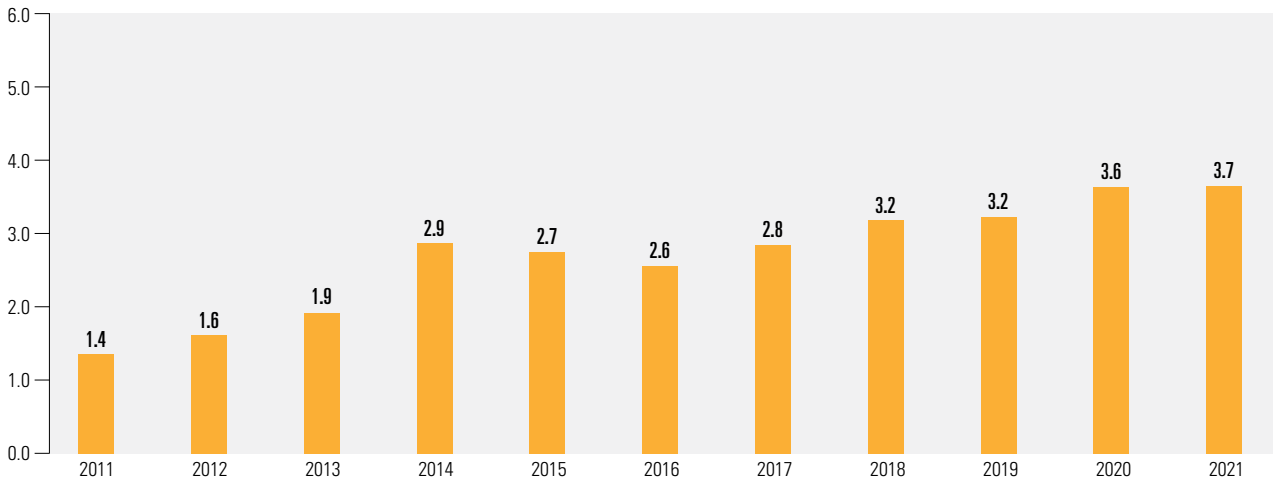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에너지통계연보

주1 :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을 포함함

주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19.10.01 시행)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은 제외로 '19년 이전자료는 재생/비재생폐기물 분리 산정 비중(19년기준)을 일괄 소급 적용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11~2021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11.5. 인출)

며 3%대에 진입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더 늘어나 3.7%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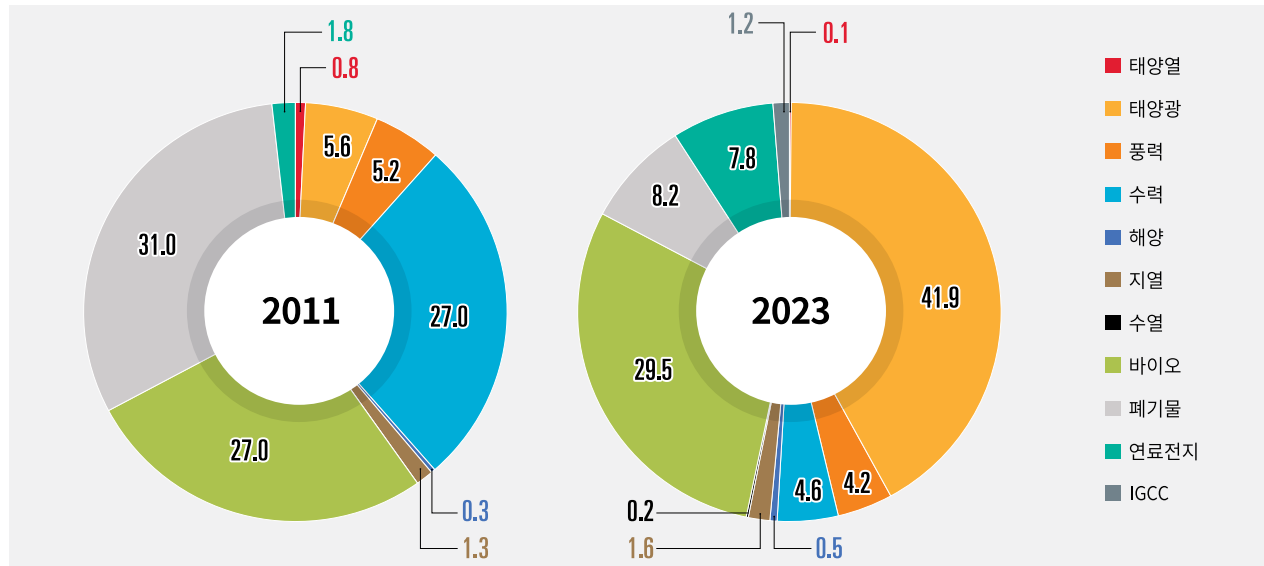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생산량 비중에도 변화가 관찰된다. 2011년에는 폐기물(비재생폐기물 제외)이 31.0%, 수력과 바이오가 각각 27.0%였고 태양광은 5.6%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23년에 와서는 태양광 41.9%, 바이오 29.5%, 폐기물 8.2%의 순으로 비중이 확연히 달라졌다. 태양광 발전이 급속하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ECD 38개국의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2021년)과 재생에너지 생산량 규모(2022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생산량에서는 21위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 규모를 늘려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튀르키예 등이다. 하지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비율, 2011, 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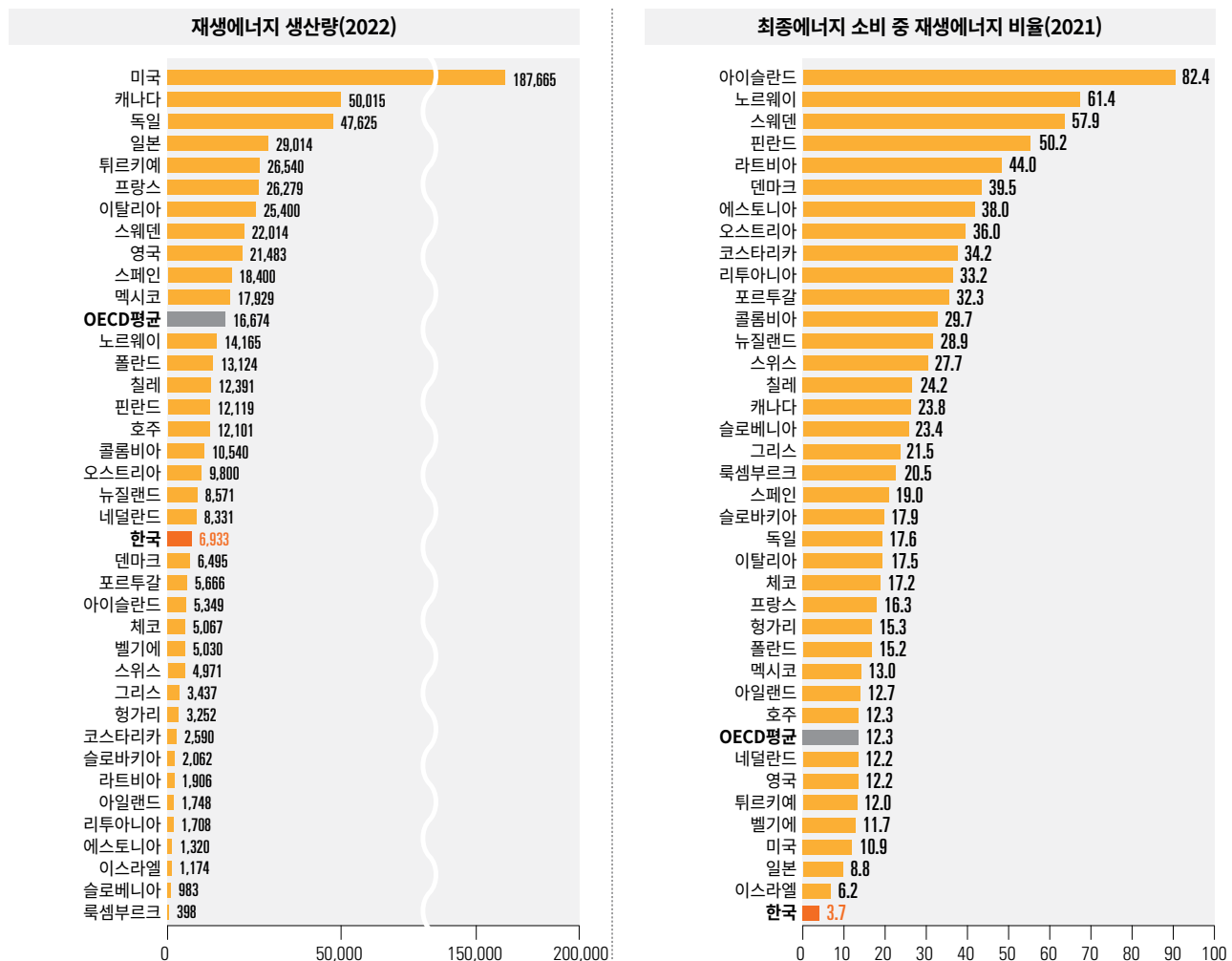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에너지통계연보

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19.10.01 시행)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은 제외로 '19년 이전자료는 재생/비재생폐기물 분리 산정 비중(19년기준)을 일괄 소급 적용, IGCC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임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최종에너지 소비 중 비율

(단위: 천 TOE, %)



출처: IEA, World Energy Balances(<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product/world-energy-balances#indicators>, 2024.9.24. 인출); World Bank Group,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FEC.RNEW.ZS?most_recent_year_desc=false&view=chart, 2024.11.5. 인출)



만 이들 국가의 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미국 10.9%(35위), 캐나다 23.8%(16위), 독일 17.6%(22위), 일본 8.8%(36위), 튀르키예 12.0%(33위)로 높지 않다.

국가 에너지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율은 둔화 추세 (☉ 관련 지표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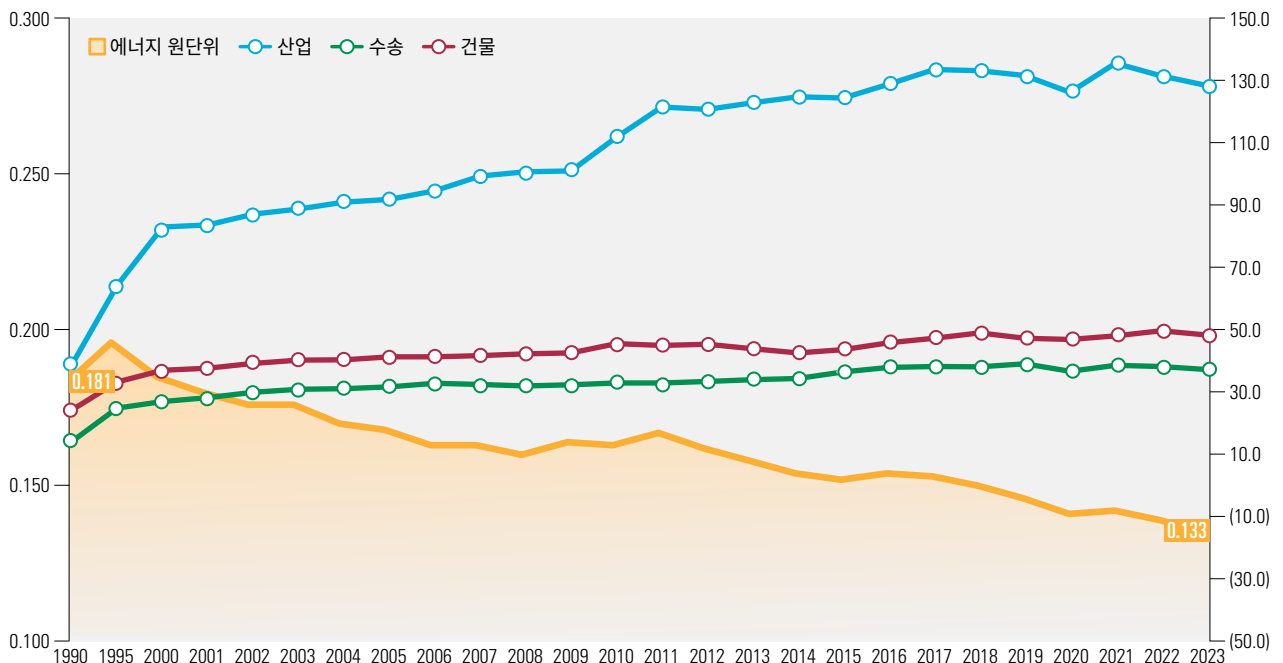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보통 국내총생산(GDP) 같은 경제적 산출량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에너지원단위가 높다는 것은 단위 경제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에너지원단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1%(2023년 기준 1억 2,640만 톤)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단위는 1990년 0.181(TOE/100만 원)에서 1993년 0.20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133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원단위의 연평균 개선율은 0.93%로 나타나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연평균 1.38%로 더욱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 이후,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및 장려책과 더불어 서비스업, IT산업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얻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원단위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면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2022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의 평균 에너지원단위(TOE/1,000USD)는 0.084에 그치는 데 비해 한국은 0.122로 아이슬란드(0.295), 캐나다(0.165), 핀란드(0.123)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기간별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에서도 한국은 OECD 주요국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의 연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1.4%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2.4%로 더 가파르게 개선되었다. 영국(2.4% → 3.9%), 독일(1.0% → 3.0%), 일본(0.9% → 2.6%), 미국(2.0% → 2.4%)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은 2000~2010년 연평균 1.8%에서 201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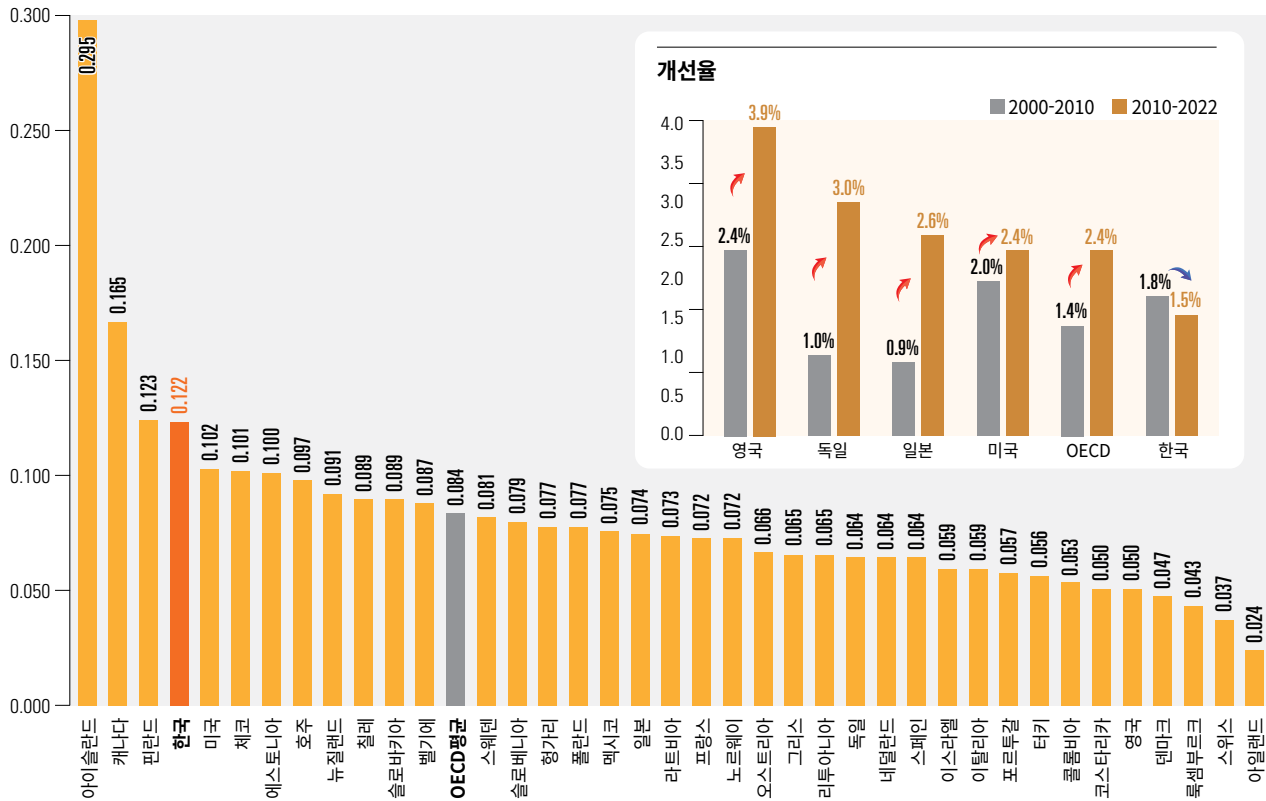
에너지원단위 및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1990~2023

(단위: TOE/100만 원, 100만 TO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에너지통계연보

주: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비율로 정의되며,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2020년 기준)를 적용함.



출처: IEA, World Energy Balances(<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product/world-energy-balances#indicators>, 2024.9.24. 인출)

1.5%로 오히려 개선 속도가 둔화되었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고 개선 속도가 더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같은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산업 전 부문의 약 96%를 차지한다.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6%에 달한다. 이는 영국(8.1%), 미국(10.5%, 2021년 기준), 독일(18.3%),

일본(19.2%)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국내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연간 20만 TOE 이상)과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 협약을 체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협약에 따라 대형 다소비 기업에서는 향후 5년간 매년 에너지원단위 1% 이상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이행 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세제, 인프라 구축의 패키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1차 에너지** :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
- **최종에너지** :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최종 소비 부문에서 실제 사용한 모든 에너지
- **신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 :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
- **에너지원단위** : 국내총생산(GDP) 같은 경제적 산출량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량의 비율
- **KEEP30** :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다소비 사업자(연간 20만 TOE 이상)와 체결한 협약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 8번 목표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무역 분쟁, 개도국의 부채 증가, 전쟁 등이 8번 목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반등한 뒤 이듬해 주춤하였고, 2023년에는 전 세계 실업률이 5%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일자리의 질과 포용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2023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실업률과 고용률로 확인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치명적 재해인 사고성 사망은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1.3%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하지만 생활물가상승률이 3.9%에 달해 삶의 수준 체감 개선 속도는 더 낮음

»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2%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저효과 시기까지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취업자 근로시간당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실업률은 2024년 2.8%로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까지 고려해도 고용 상황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

» 근로자 재해율은 0.66%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사망만인율은 0.98‰로 정체를 벗어나 감소하였고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39‰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 2011년 이후 업종 구성의 변화와 최근의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 동향을 지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치명적 재해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평균적인 삶의 수준 개선 속도를 나타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악화 (☞ 관련 지표 8.1.1)

1인당 실질 GDP는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연 성장률은 그 개선 정도를 나타낸다. 1인당 실질 GDP는 2011년 이후부터 2%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9년 2.0%로 성장률이 떨어졌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에는 -0.8%로 급격한 하락을 겪었지만 2021년에 4.7%로 즉시 반등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에 다시 2.9% 성장하였지만 투자와 순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2023년에는 1.3%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2023년 삶의 수준 개선은 이보다 더 좋지 않다. 같은 해 생활물가상승률이 3.9%에 달하면서 GDP 디플레이터보다 훨씬 높아졌고, 삶에서 물가 인상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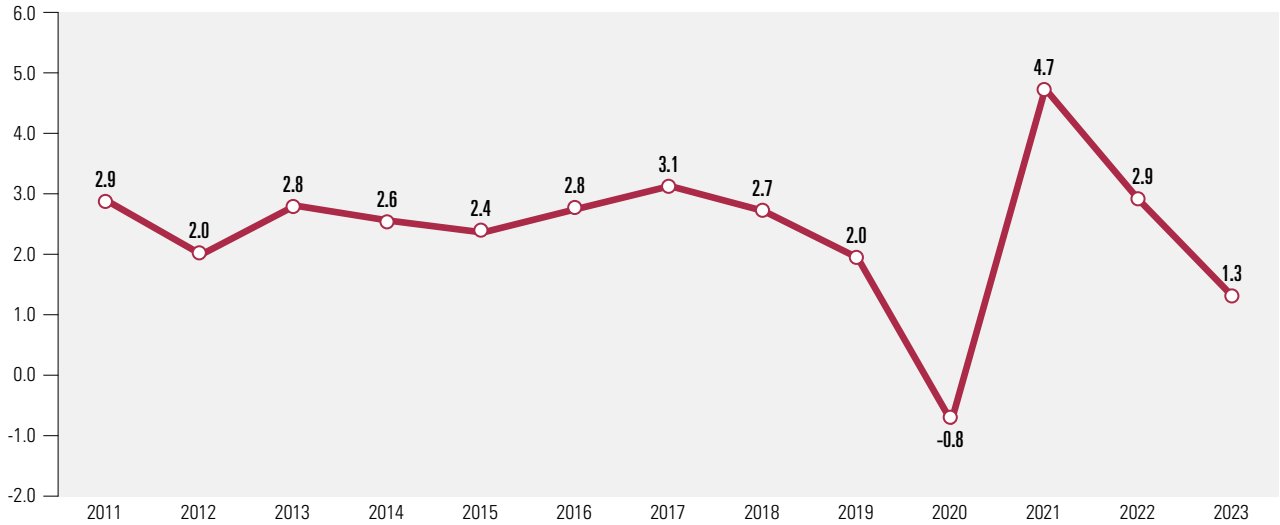
은 더 크게 체감되었다.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양호한 상황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였고, 2023년의 성장률 하락 또한 다른 주요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성장률이 높아진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5개 주요국 중 '나 홀로 성장' 중인 미국과 최근 경기 반등에 성공한 일본뿐이다. 나머지 국가의 성장률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독일과 영국은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2020년에 성장률 하락 폭이 주요국 대비 가장 적었고 2021년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반등하였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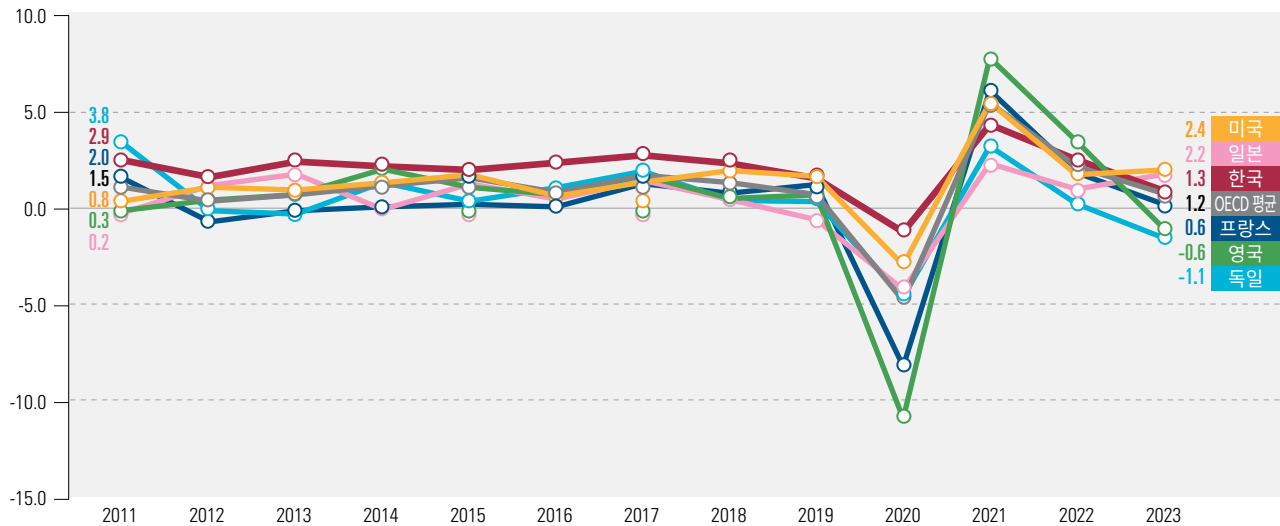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s://kosis.kr>, 2024.7.31. 인출)

주 : 1인당 명목 GDP(원화 기준)를 GDP 디플레이터(2020=100)로 나눈 1인당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임

OECD 주요국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11~2023

(단위: %)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2.5. 인출)

주1 : PPP 환율 기준(2020년 미국 달러 고정가)

주2 : 1인당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임

평균적인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나타내는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저하

(☞ 관련 지표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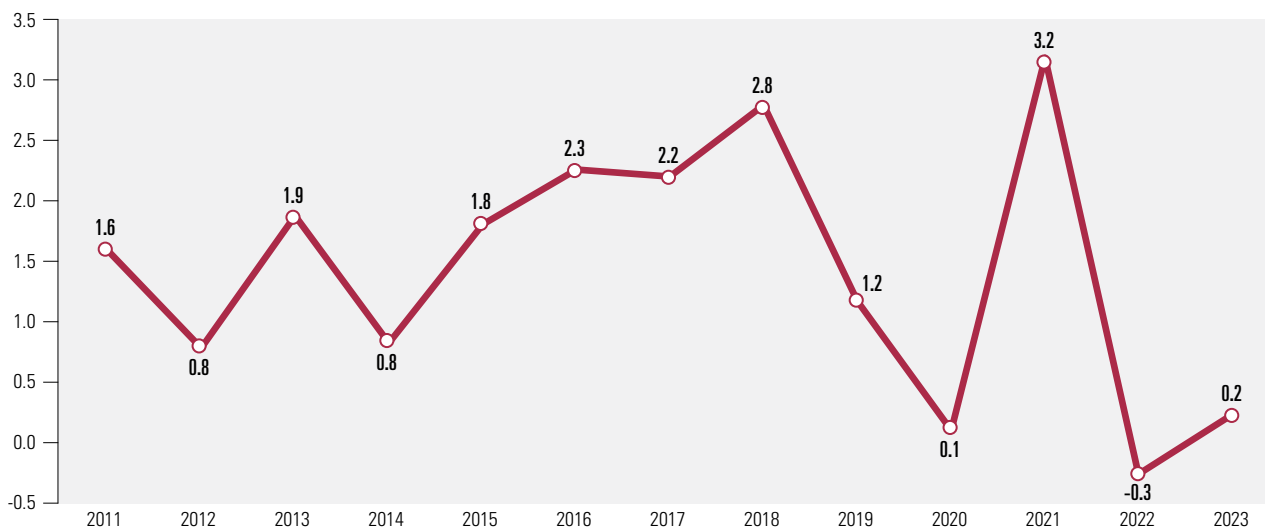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지표로 활용되며, 그 성장률은 인적자본의 향상 정도를 나타낸다. 다만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물적자본의 투자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국가의 장기적 인적자본 향상을 살피거나 한 시점에 국가 간 인적자본을 비교하는 데

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추세를 살피거나 국가 간 추세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2%에 그쳤다. 2010년대에 대체로 1%대 중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의 3.2% 성장 직후에 나타난 2022년의 -0.3% 성장은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2022년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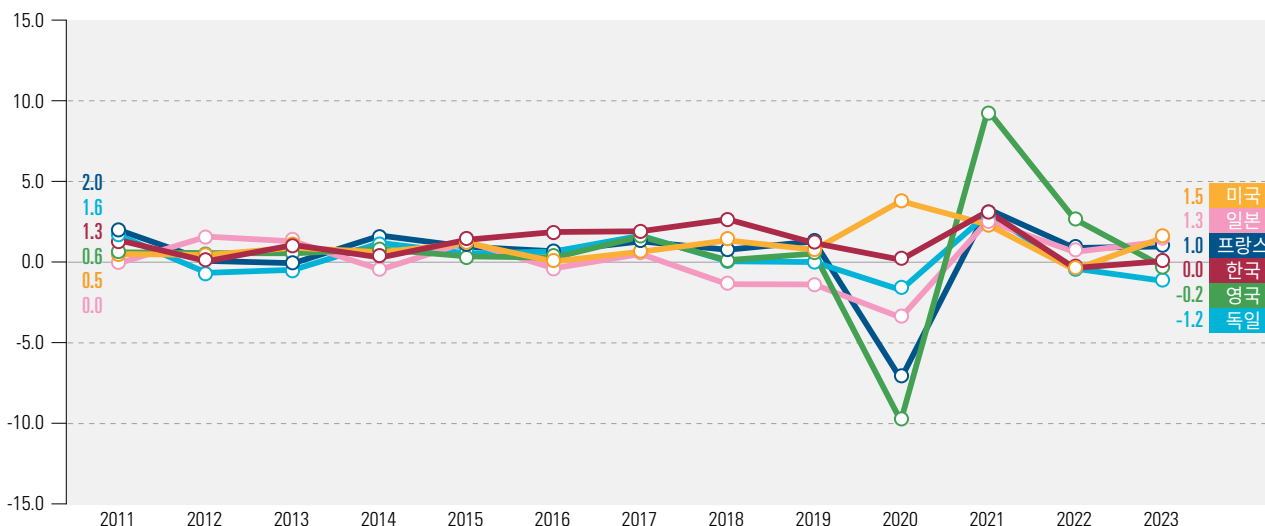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4.7.31. 인출)

주 : 명목 GDP(원화 기준)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고 이를 취업자 수로 나눈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임

OECD 주요국별 취업자 1인당 GDP 성장률, 2011~2023

(단위: %)



출처: ILO, ILOSTAT(<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5.2.5. 인출)

주1 : PPP 환율 기준(2021년 미국 달러 고정가)

주2 :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임

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2022년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당해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취업자 수가 아닌 근로시간당 실질 GDP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이전 10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지는 않다. 그럼에도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적인 근로시간당 GDP 성장률은 2% 전후에 그쳐, 이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부정적인 상황은 OECD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기저효과의 영향을 고려할 때 2022년과 2023년의 최근 2년간 성장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2년에 미국,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을 한 것과 비교되며,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5개 주요국 중 2023년에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낮아진 영국과 최근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독일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실업률은 전년 대비 증가 (☞ 관련 지표 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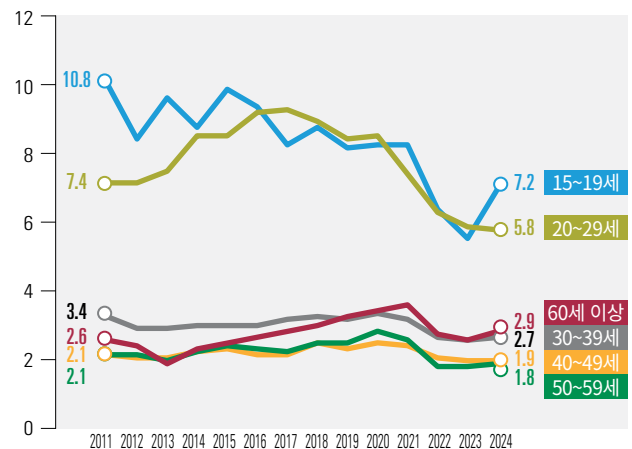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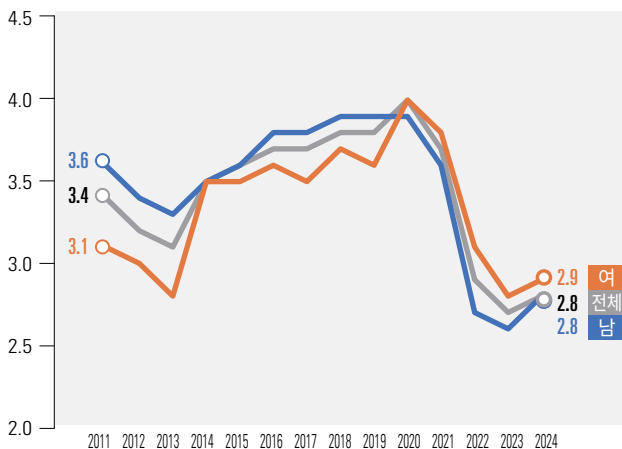
실업률은 공급된 노동력의 저활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의 실업률은 2024년 2.8%로 전년 대비 0.1%p 늘어나는데 그치며 최근 3년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이 고점이었던 2020년과 비교하면 실업률 하락은 모든 연령대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실업률도 2020년 대비 0.7%p 감소하였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3%p 증가하여, 15~19세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큰 증

가 폭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실업률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 하락은 대체로 노동시장의 호황을 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바로 노동시장 이탈자의 증가에 의한 실업률 하락이다. 따라서 실업률 하락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최근 빠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의 상승이 가파르다. 2024년에 남성 고용률이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음에도 여성 고용률은 0.6%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이 0.1%p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0.2%p 감소)와 15~19세

성별 및 연령별 실업률,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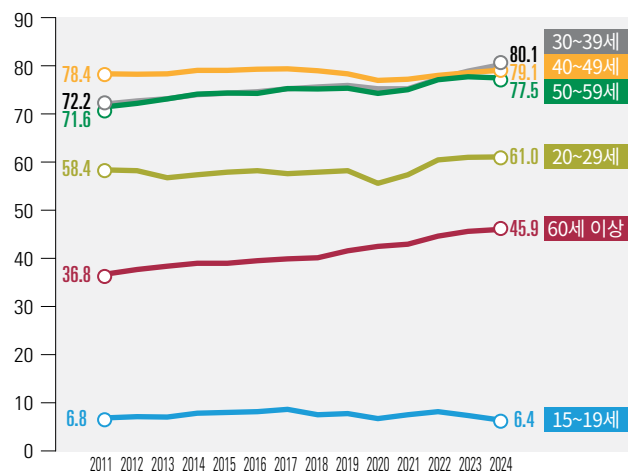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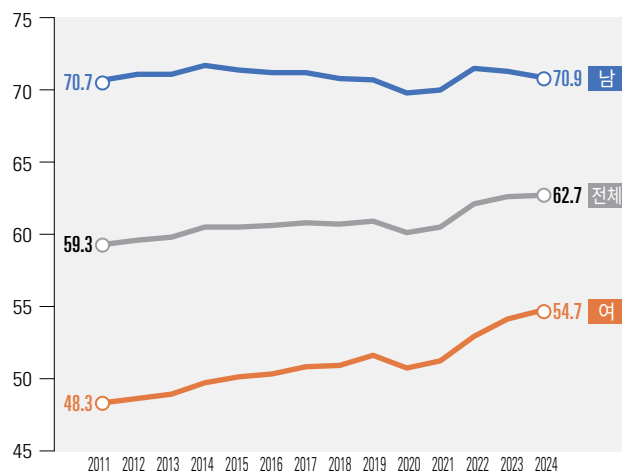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5.1.17. 인출)

성별 및 연령별 고용률,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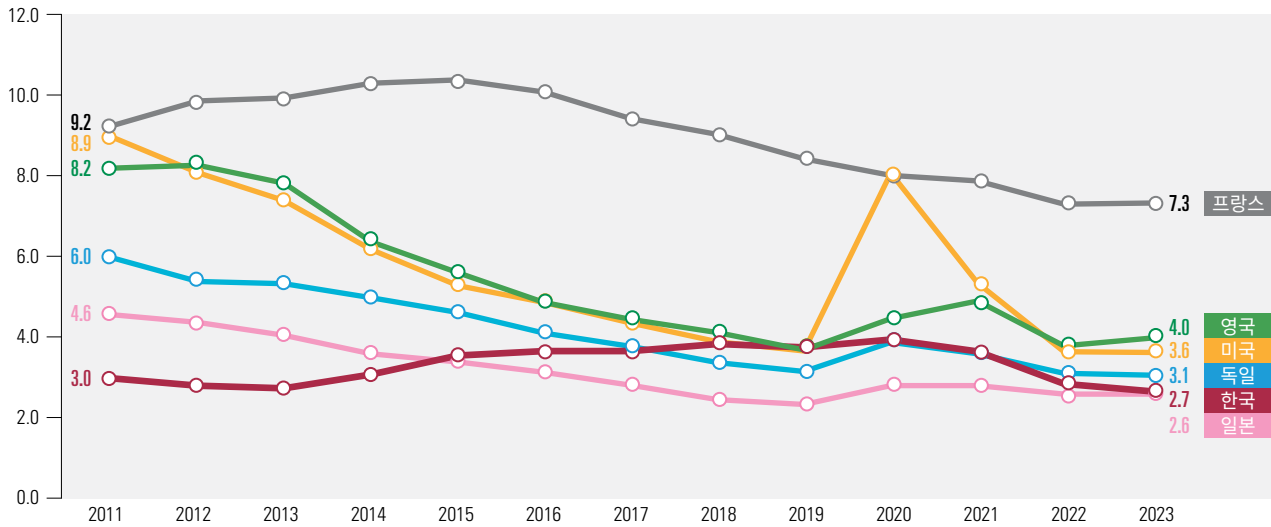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5.1.17. 인출)

OECD 주요국별 실업률, 2011~2023

(단위: %)



출처: ILO, ILOSTAT(<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5.1.17. 인출)

(0.8%p 감소)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30~39세에서는 1.2%p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완전고용 지표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고용보조지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취업시간에 불만이 있는 불완전 취업자를 고려한 고용보조지표1은 최근에도 5%를 넘고 있으며, 취업할 여건은 되는데 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당장 일할 여건은 아닌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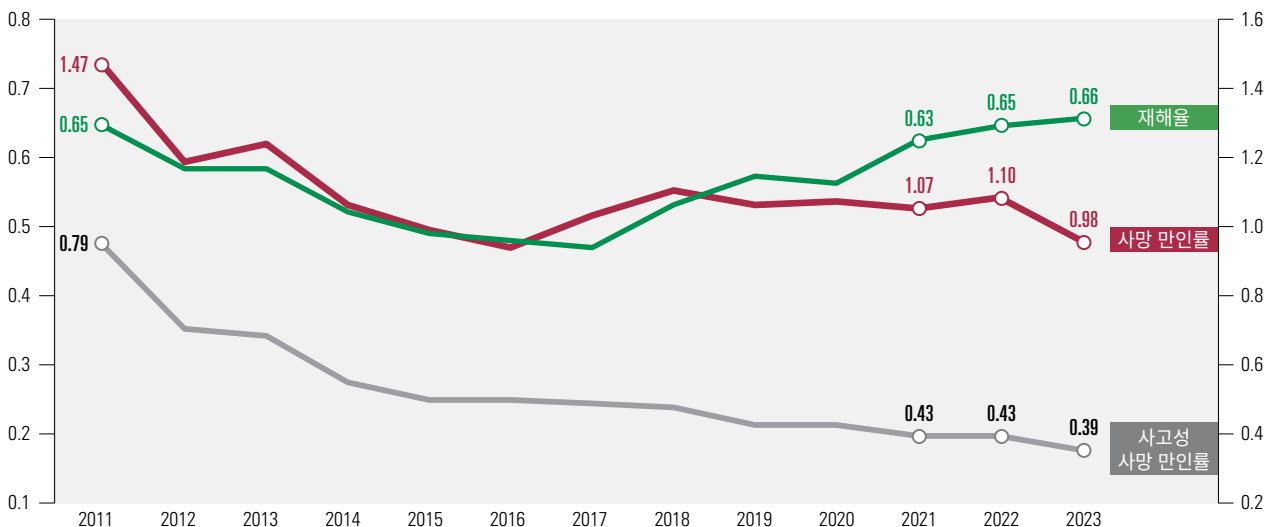
용보조지표3은 2024년 8.8%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표들이 최근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실업률 하락이 보여주고 있는 노동시장 개선 상황을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 (📈 관련 지표 8.8.1)

산업재해의 발생 정도는 산업환경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재해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백분비를 나타내고, 치명적 산업재해의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사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2011~2023

(단위: %,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 2024.8.1. 인출)

주 : 2012년부터 사고 사망자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 사망자는 제외됨. 다만 운수업과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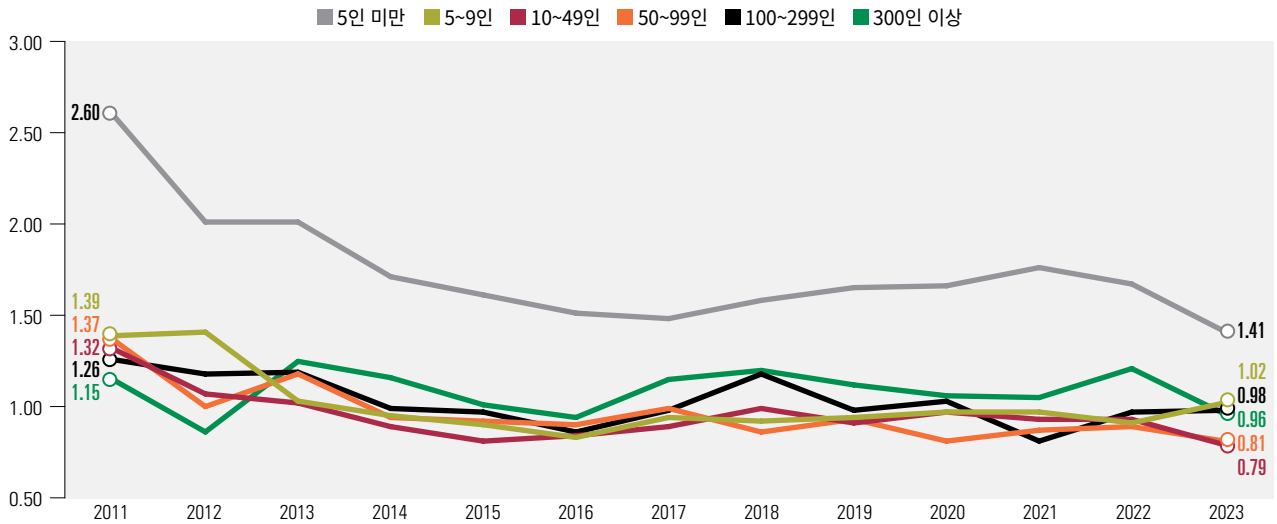
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재해율은 2018년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201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망만인율은 2016년까지 대체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일시 늘어난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과 달리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1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즉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재

율은 0.65%에서 0.66%로 0.01%p 증가한 반면 사망만인율은 1.10‰에서 0.98‰로 0.12‰p 감소하였다. 한국의 치명적 산업재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감소하여 다른 주요국과 근접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아직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2년에는 광업 분야에서 (이전에 걸렸던)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일시적으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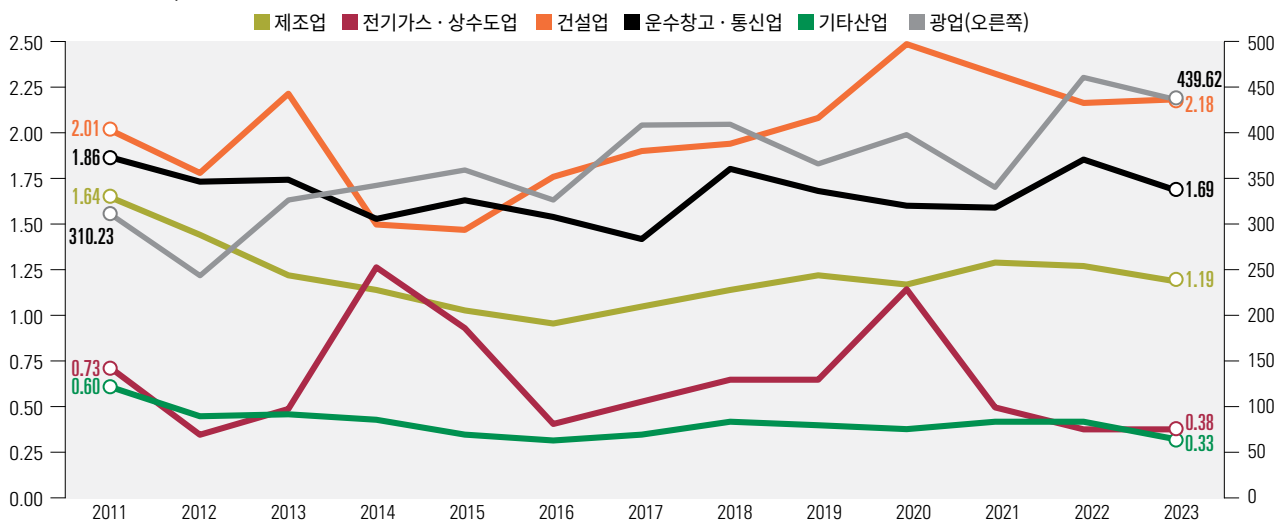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 2024.8.1. 인출)

주 : 2012년부터 사고 사망자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 사망자는 제외됨. 다만 운수업과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업종별 사망만인율, 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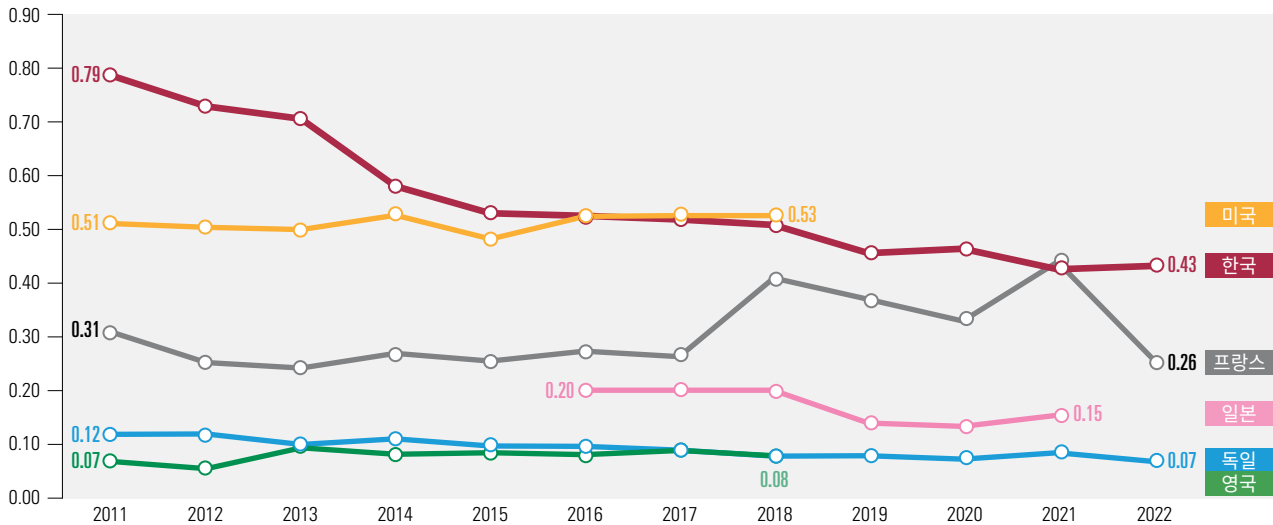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 2024.8.1. 인출)

주 : 2012년부터 사고 사망자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 사망자는 제외됨. 다만 운수업과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OECD 주요국의 치명적 재해 만인율, 2011~2022

(단위: %₁₀₀₀)



출처: ILO, ILOSTAT(<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4.7.31. 인출)

주 : 국가별로 자료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움. 한국·프랑스·독일은 산재보상 기록, 영국과 2020년 이후 일본은 감독 기록, 미국과 2019년 이전 일본은 조사 결과

로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해 7월 1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면서 재해율이 높은 배달 관련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급증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감소하던 추세가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고 2022년에 다시 빠른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5~9인

과 100~299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사망만인율과 달리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1년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만인율은 건설업과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2011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2020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 100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근로자 수) × 10,000
- 사고성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 수 ÷ 근로자 수) × 10,000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SDG 9번 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한 국가별 자립 성장을 추구하며, 세계 경제발전과 고용 및 사회 안정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온 제조업에 관심을 둔다. 전 세계 제조업 부문은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 낮은 성장을 이어 오고 있으며, 9번 목표에서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을 늘리고 녹색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편인 한국은 제조업의 부가가치나 고용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한편 혁신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예산 및 인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3년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2011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감소 추세(2011년 29.0% → 2023년 25.6%)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도 2015년 17.6%에서 2024년 15.6%로 지속적으로 감소

- 남성의 제조업 고용 비율이 여성의 두 배에 가까우며, 같은 기간 여성의 제조업 고용 비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여 성별 차이가 더욱 커짐
- 2022년 기준 제조업 고용 비율(16.0%)은 OECD 평균(13.4%)을 약간 넘는 수준

»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와 GDP 대비 상대적 비중, 연구개발 인력 규모 모두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증대 경향을 보임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03년 2.3%에서 2022년 5.2%로 2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 중 이스라엘(6.0%)에 이어 2위 수준 유지
- 상근상당 연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인구 1,000명당 2003년 3.3명 → 2022년 9.4명)하여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여성 연구원 비율도 크게 증가(2003년 11.4% → 2022년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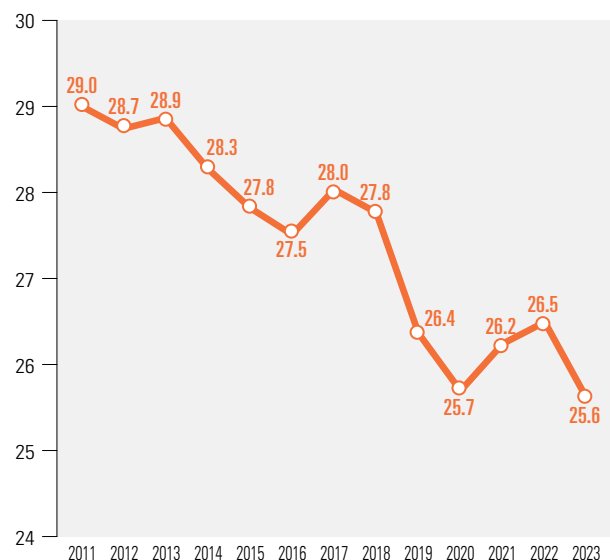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9.2.1)

제조업은 국가 성장의 근간으로서 사회 안정을 위한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11년 29.0%에서 매년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6년 27.5%까지 하락하였던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17년 28.0%로 반등하였는데, 이는 2010년대 중반에 시행된 리쇼어링 정책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2020년 25.7%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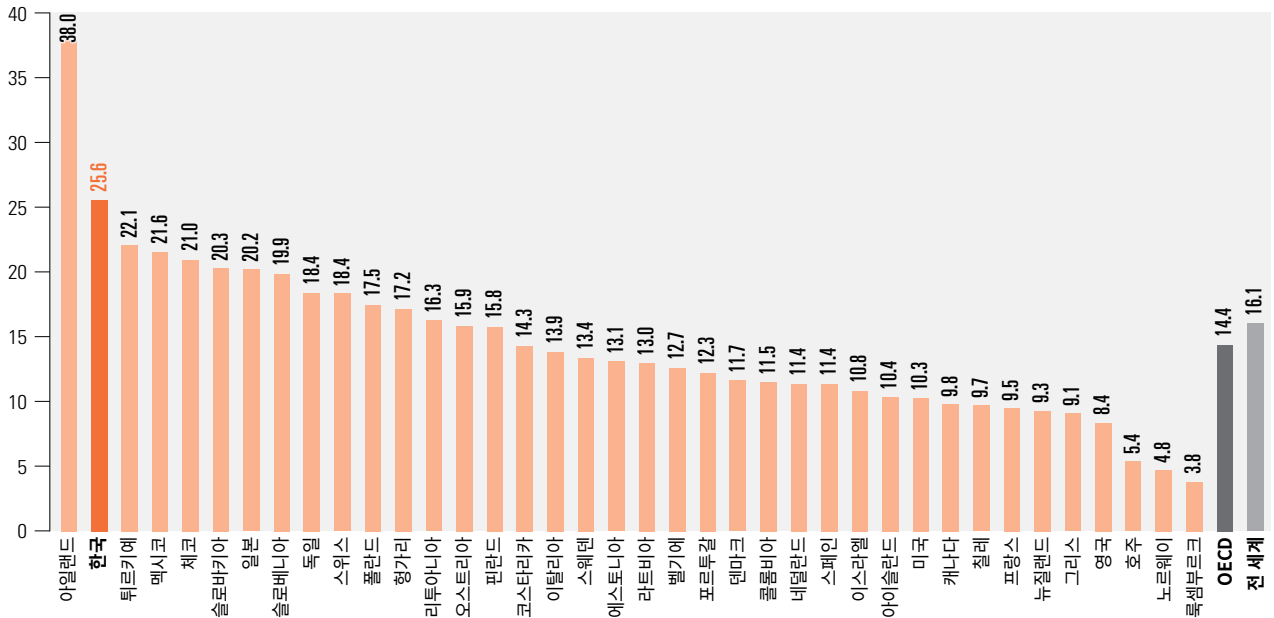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SearchStat>, 2024.9.19. 인출)
주: 2020년 기준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14. 인출)
주 : 국제비교를 위해 경제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

나 2023년에 다시 25.6%로 하락하며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의 적정선 유지가 요구된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평균 16.1%와 OECD 평균 14.4%를 상회하는 25.6%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튀르키예(22.1%), 멕시코(21.6%), 체코(21.0%)가 높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각각 20.2%와 18.4%이다.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우에도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2011년 3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27.1%에 그친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 비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중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제조업 고용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남성 대비 절반 수준 (○관련 지표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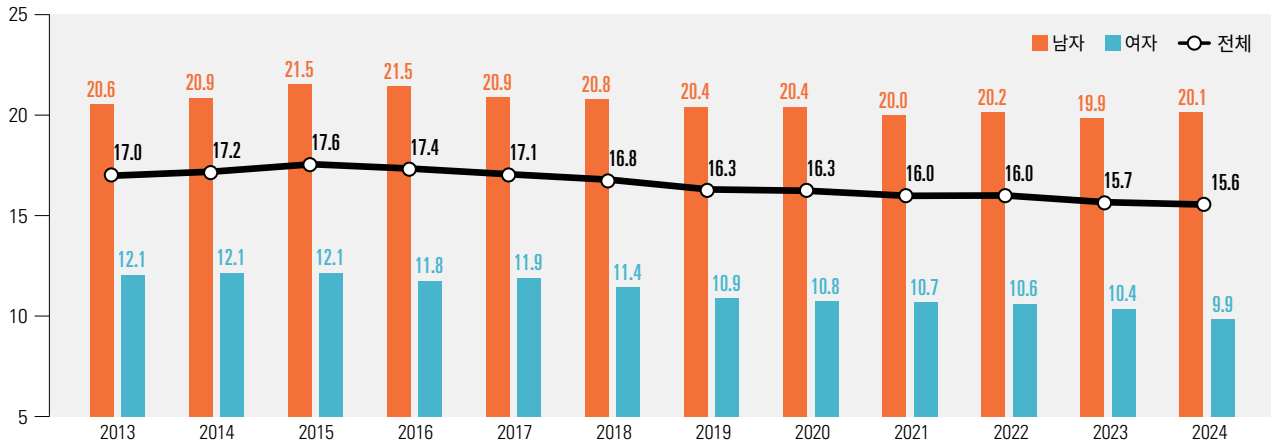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산업 고도화를 거치면서 제조업 고용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선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도 제조업 고용 비율이 2015년 17.6%에서 2024년 15.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 비율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여성의 두 배에 가깝다. 제조업 고용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는 가운데 감소 폭은 여성에서 더 크다. 2013년 기준으로 남성 20.6%, 여성 12.1%였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24년에 남성 20.1%, 여성 9.9%로 감소하였다. 고임금 제조업 부문에서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제조업 현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제조업 고용 비율은 동유럽 국가에서 높다. 2022년 자료가 공개된 OECD 34개국 중 체코(26.3%), 슬로바키아(23.9%), 슬로베니아(21.9%), 헝가리(21.0%), 폴란드(19.5%)가 제조업 고용 비율 상위 5개국을 차지한다.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OECD 평균인 13.4%보다 높은 16.0%로 나타난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고용은 총 고용의 18.9%와 15.5%이다.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부

제조업 고용 비율,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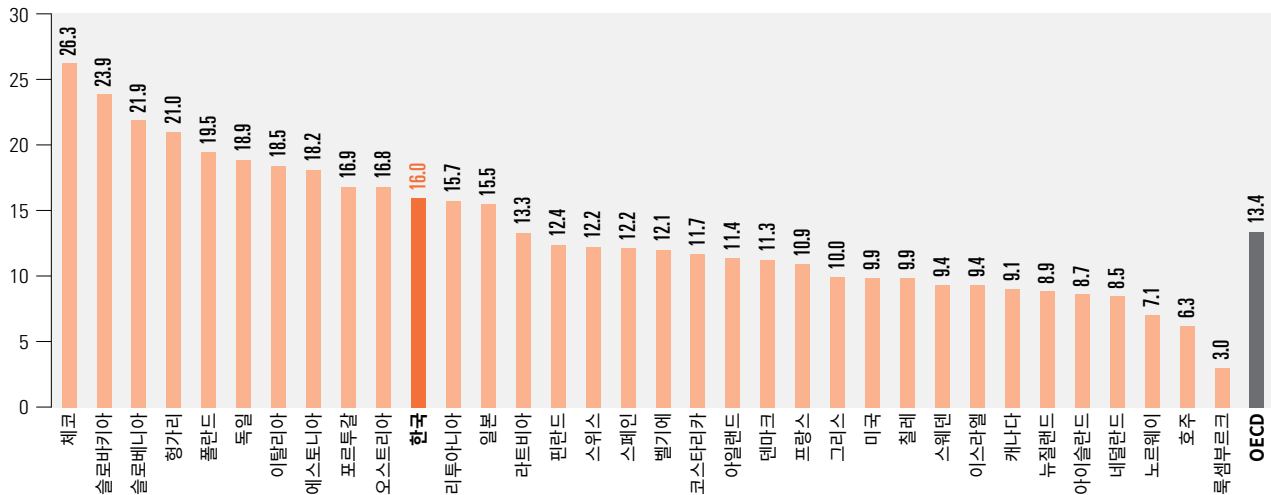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4.1.31. 인출)

OECD 국가별 제조업 고용 비율,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14. 인출)

가가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반면 제조업 고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제조업 공정의 자동화와 혁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등 긍정적인 요인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를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개발 자본과 인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체 연구개발 수행 비중과 여성 인력 비율의 증가 추세 뚜렷 (☞ 관련 지표 9.5.1 / 9.5.2)

국가의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규모이다. 2003년 19.1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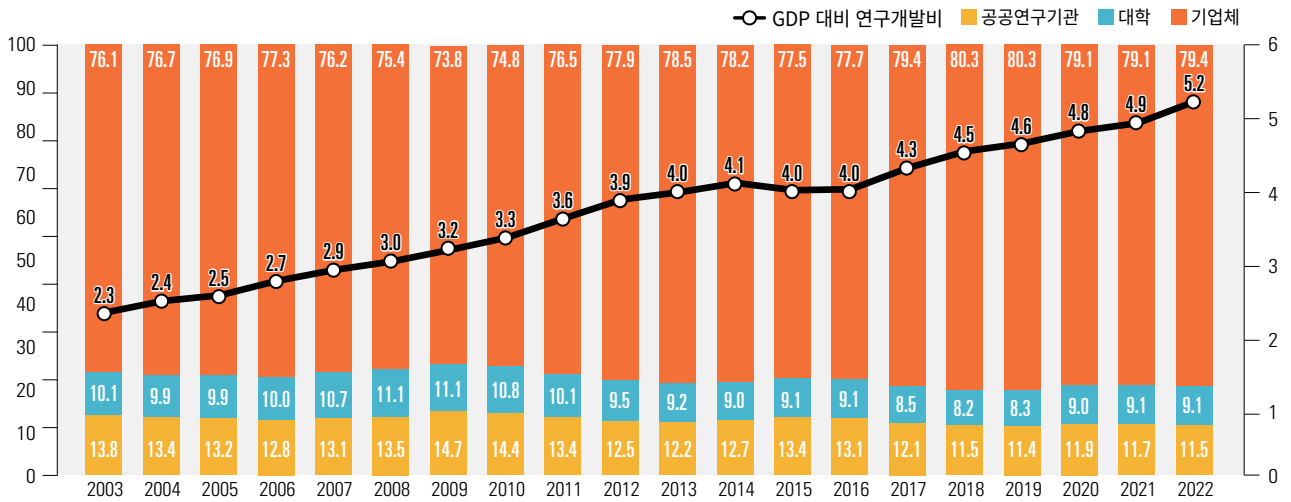
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12.6조 원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 각국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한 GDP 대비 비율은 2.3%에서 5.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정부 부문 전체에서 한 해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 총액을 당해 연도 GDP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구개발비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공공연구기관의 수행 비율은 2003년 13.8%에서 2022년 11.5%로 감소한 반면 기업체의 수행 비율은 같은 기간 76.1%에서 79.4%로 증가하였다. 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세계적 수준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비중, 200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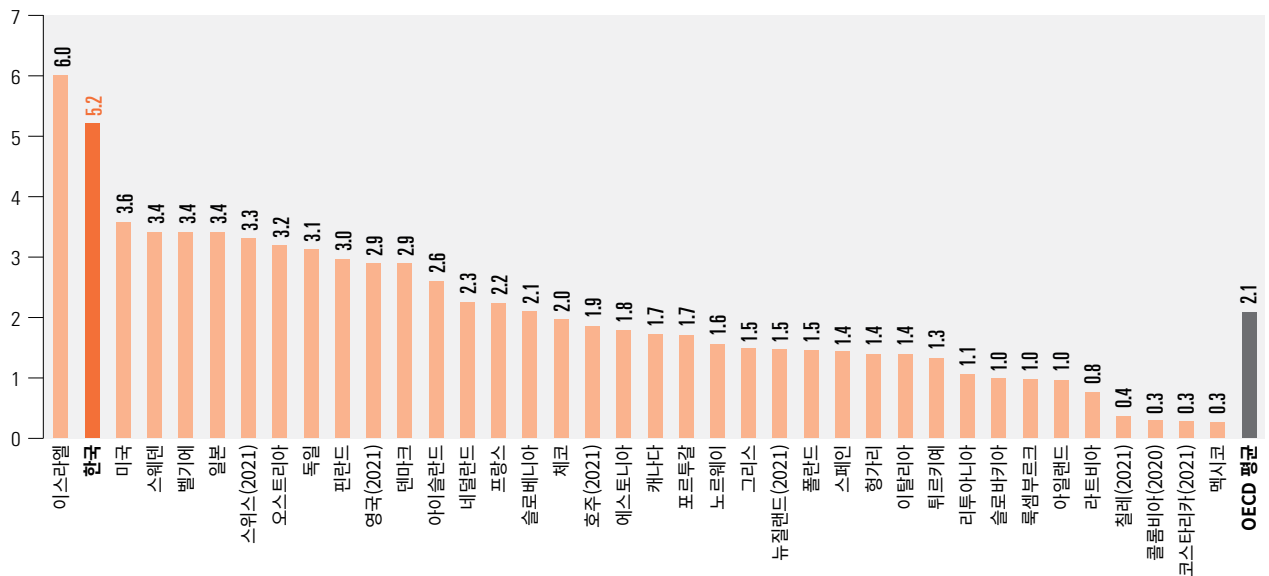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https://kosis.kr>, 2025.2.7.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26. 인출)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한국(5.2%)은 OECD 국가 중 이스라엘(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2.1%)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3위인 미국(3.6%)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연구개발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상근상당(Full-Time Equivalent, FTE) 연구원 수를 통해 연구개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2003년 인구 1,000명당 3.3명에서 2022년 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같은 기간 11.4%에서 23.0%로 늘어나면서 연구인력 성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연구원의 비중이 남성 연구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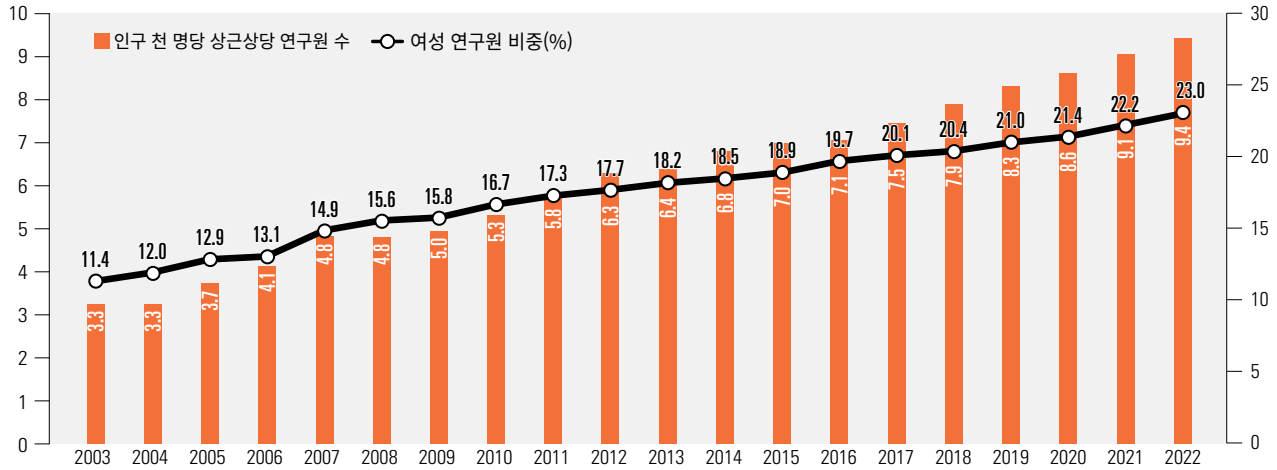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연구개발의 인력 밀도 또한 높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9.4명)는 2021년 이후 자료가 공개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도 연구인력 확보에 성과를 보이면서 덴마크(8.7명), 스웨덴(8.6명), 핀란드(8.1명), 노르웨이(7.4명)가 한국에 이어 상위국을 차지한다. 한국은 자본과 인력 양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

프라를 보유한 국가이다. 하지만 2024년에 연구개발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국가 혁신의 위축과 연구인력 규모의 변화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인력 밀도와 여성 비중, 2003~2022

(단위: 1,000명당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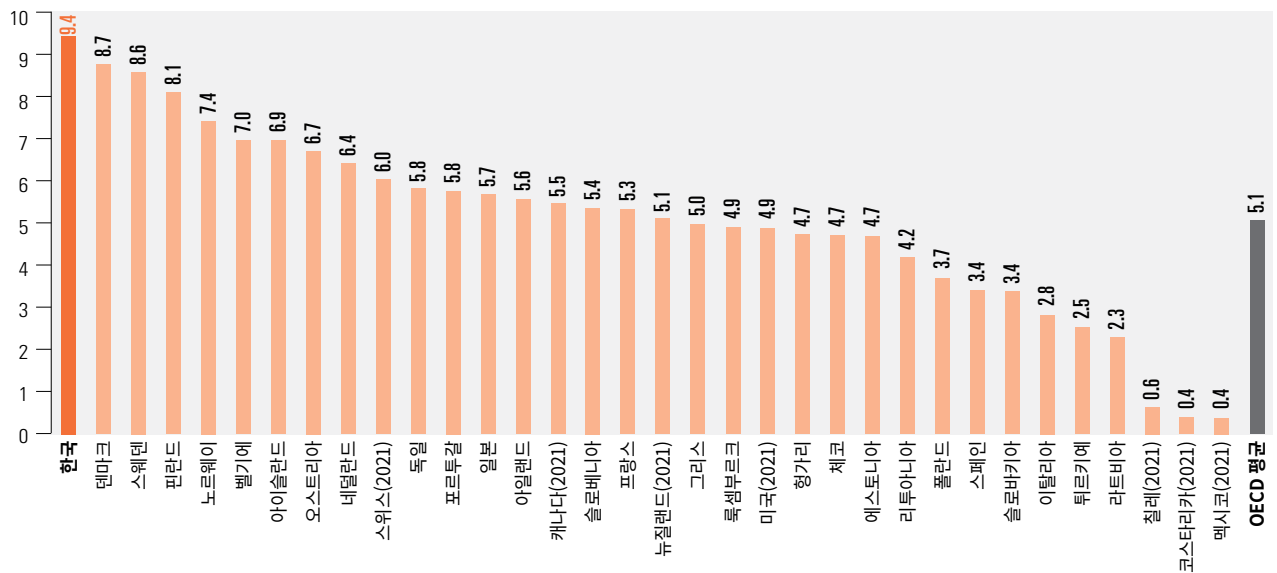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https://kosis.kr>, 2024.9.15. 인출)

주 : 인구 1,000명당 상근상당(FTE) 연구원 수

OECD 국가별 연구개발 인력 밀도, 2022

(단위: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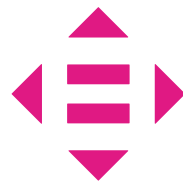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26. 인출)

주 : 인구 1,000명당 상근상당(FTE) 연구원 수

- 리쇼어링 : 특정 생산활동이 해외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회귀하는 현상
- 상근상당 연구원 : 자신의 전체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실질 연구 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인력



10 REDUCED INEQUALIT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 10번 목표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 간 노동 이동을 통해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하위 40% 소득수준의 빠른 성장세가 코로나19로 주춤하고 국가 간 불평등도 심화되었으며, 2022년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소득 1분위의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진 한편 순자산 지니계수의 상승세는 자산 불평등의 악화를 드러내고 있다.

»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2023년 6,439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1.9% 상승

- 2016~2023년 사이 가구소득의 증가 속도는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 2023년 남성 가구주의 평균 가구소득(명목)은 여성 가구주의 1.9배 수준
-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편이며, 노인가구의 경우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전국 가구의 2023년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2019년 대비 1.3% 증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감소분을 회복

- 소득 1분위의 실질소비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감소하지 않고 2019년 대비 10.6%로 가장 크게 증가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으로 2011년 이래 꾸준한 하락 추세

-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상승하고 있어 자산 불평등 악화를 나타냄

» 사회적 이동성 지수는 71.4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에 해당

- 기술 접근성, 교육, 건강 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편
- 공정한 임금, 사회적 보호, 근로조건 부문에서는 점수가 낮아 개선 필요

가구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가운데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낮은 수준

(☞ 관련 지표 10.1.1)

한국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2023년 6,439만 원으로 2016년 5,753만 원 대비 11.9% 상승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의 가구소득은 2023년 1,349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7.3% 증가하였다. 이 기간 가구소득의 증가 속도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나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가구소득은 2023년 1억 4,878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0.0%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2023년 평균 가구소득(명목)이 8,185만 원인 반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4,299만 원에 불과하여 1.9배의 차이를 보인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4,513만 원, 고졸 6,524만 원, 대졸 9,342만 원으로 나타난다. 2023년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명목)이 7,18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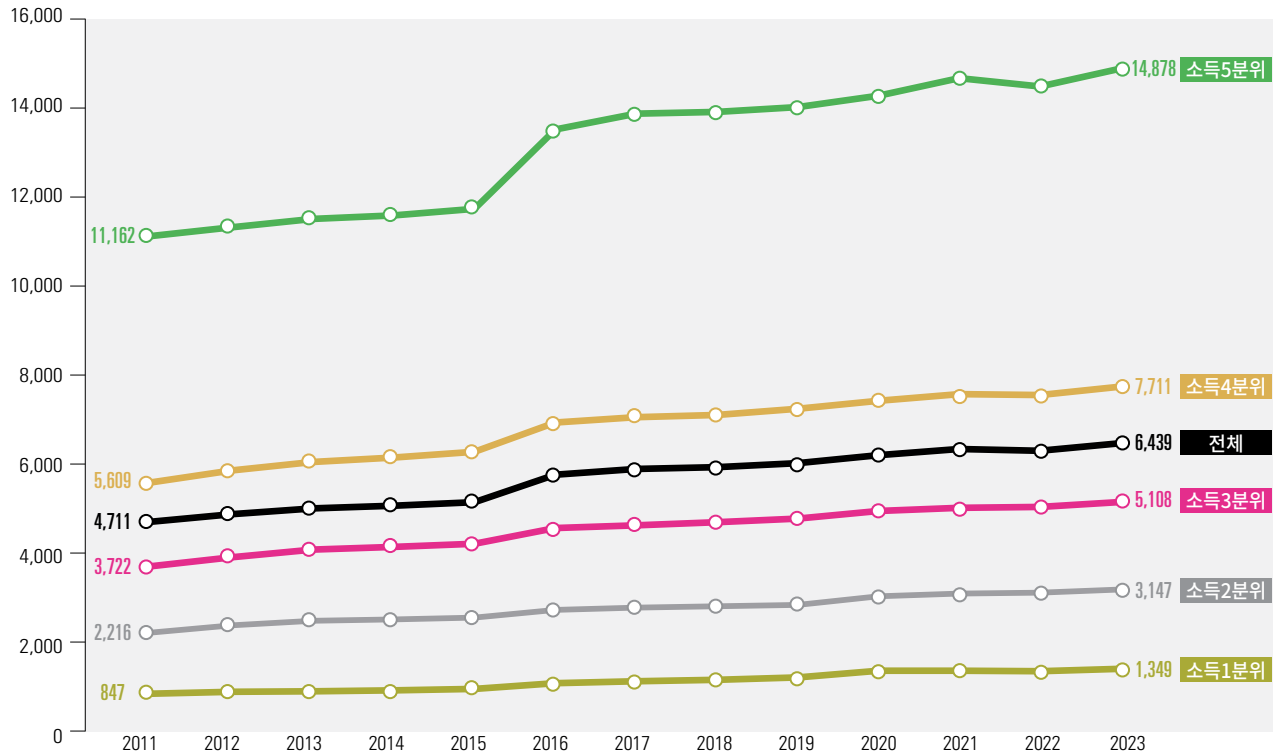
문화가구(7,515만 원)만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노인가구(3,088만 원), 장애인가구(4,888만 원, 2022년), 한부모가구(6,071만 원)는 전체 평균에 뒤처진다. 특히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2020년 기준 가격)은 2023년 250만 원으로 2019년 247만 원 대비 1.3%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면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4%, 0.7%, 2.1% 증가하였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은 2020년에도 감소하지 않고 전년 대비 2.8% 늘어나면서 2019년과 2023년 사이 10.6% 증가하였다.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경우 2023년에도 2020년의 감소분을 회복하지 못해 2019년 대비 각각 1.8%와 4.5% 줄어든 상태에 있다. 소득 4분위와 5분위의 경우 같은 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소득분위별 가구 실질소득, 2011~2023

(단위: 만 원)



출처: 통계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1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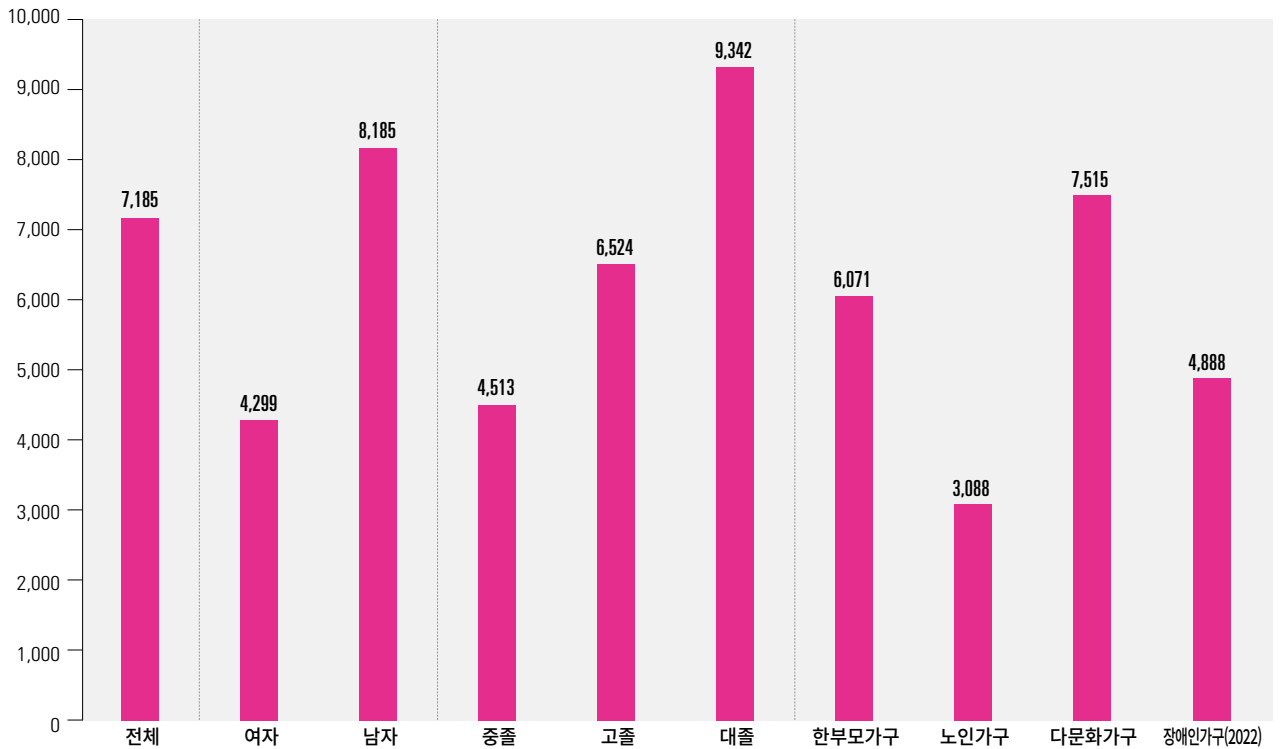
주1: 명목소득에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적용한 실질소득(2020년 기준 가격)임

주2: 2016년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되었으므로 2015년 이전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78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2023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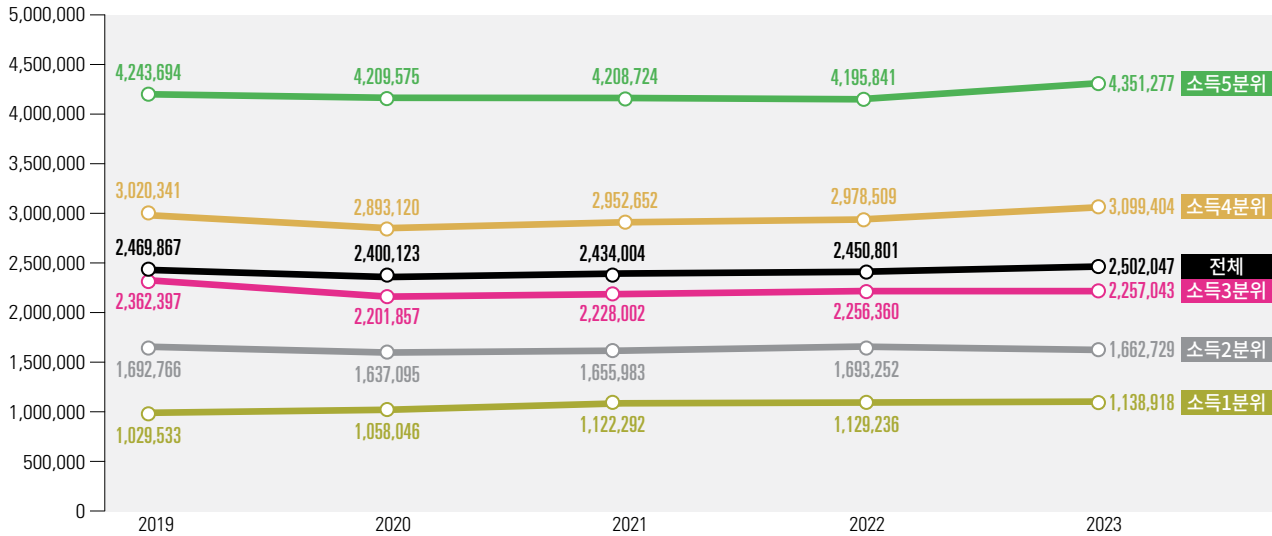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19. 인출)

주1: 명목소득임

주2: 장애인가구는 2022년 자료임

소득분위별 월평균 실질소비지출, 2019~2023

(단위: 원)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https://kosis.kr>, 2025.1.19. 인출)

주 : 실질소비지출은 2020년 기준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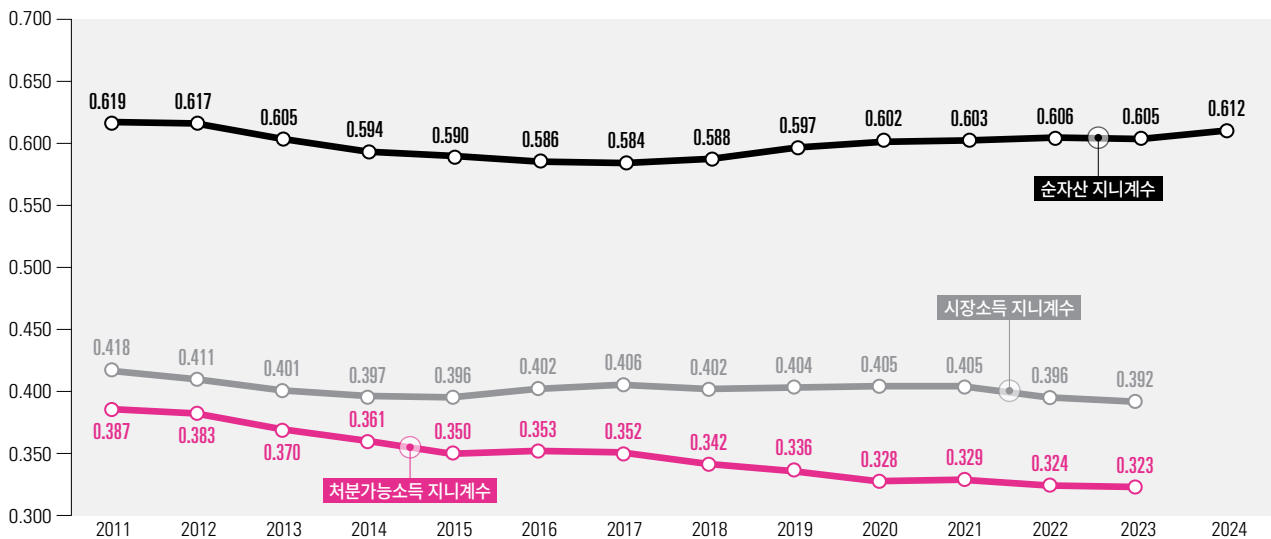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산 불평등은 악화(○ 관련 지표 10.4.2)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이 계층 간에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0에서 1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0.418에서 0.392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정부의 개입이 적용되지 않은 순수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소득 불평등 지수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여 개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계산한 불평등 지수이다. 따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2011~2024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24. 인출)

주1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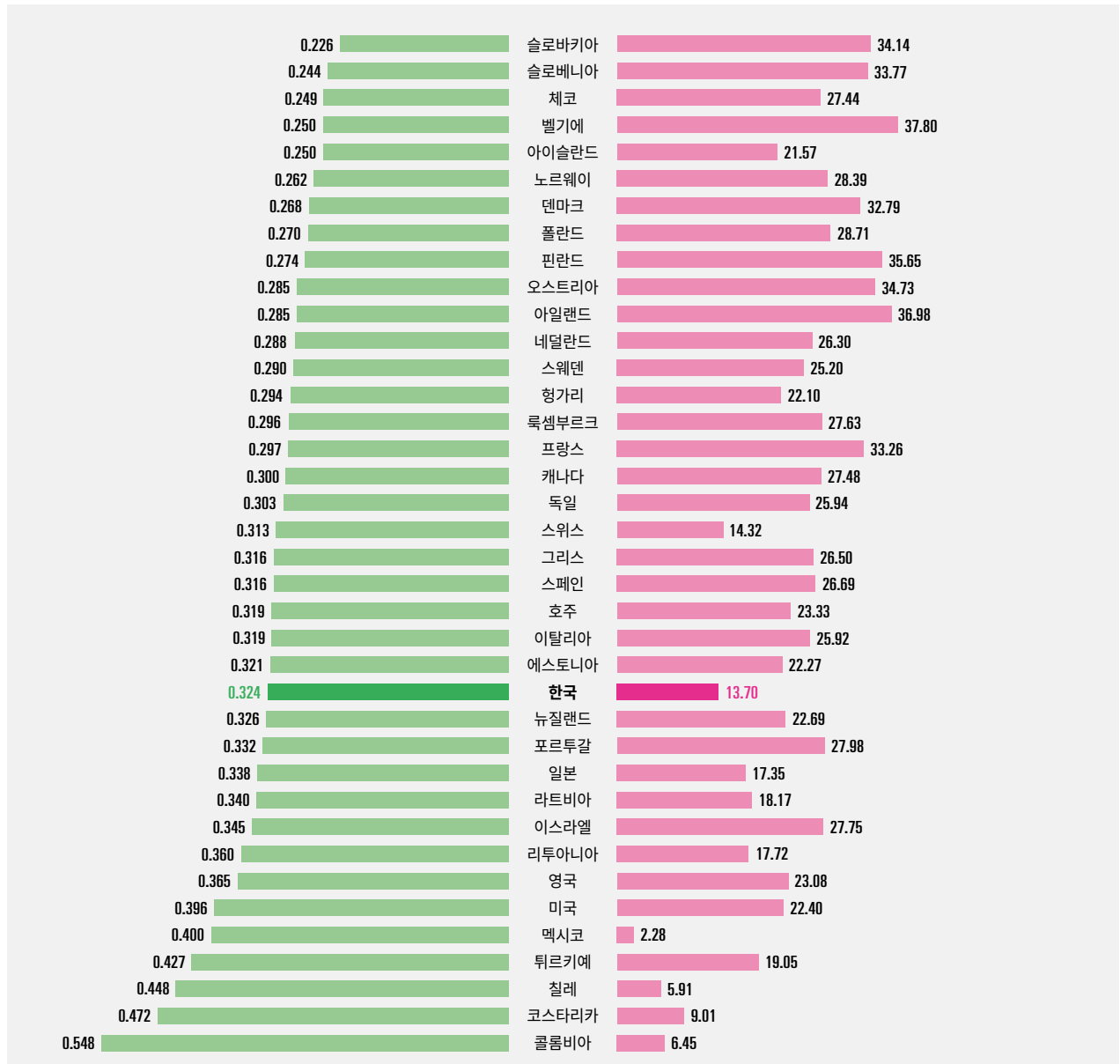
주2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주3 : 2011년 이후 소득분배지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 계열(2011~2014년)은 통계적 추정 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함



OECD 국가별 지니계수 및 재정정책의 재분배효과, 2022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p)



출처: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2025.2.10.인출)

주 : 2022년 자료가 없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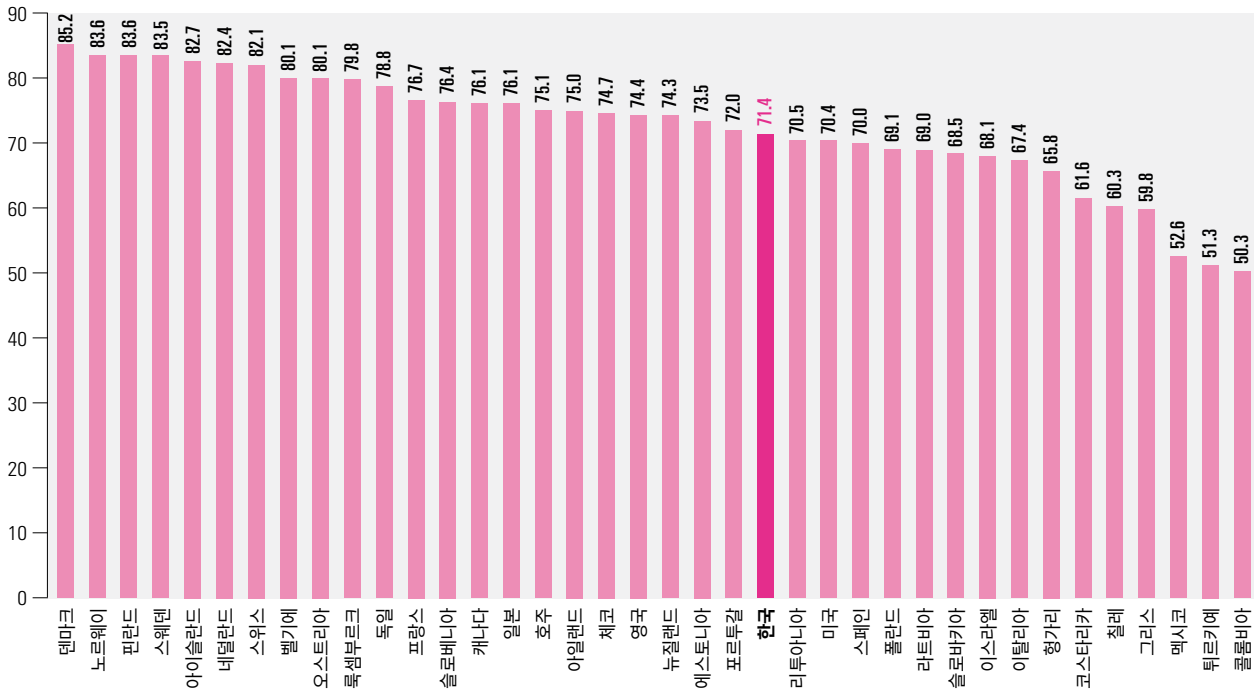
라서 이 두 지니계수의 차이가 클수록 사회복지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지니계수의 차이로 살펴본 정부의 분배정책 효과는 2011년 0.03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0.077로 최고치에 달하였다. 이후 매년 감소하며 2023년에는 0.069로 낮아졌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가리킨다. 순자산 지니계수를 통해 부의 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른 자산의 불평등 수준을 알 수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

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거의 매년 상승을 거듭하여 2024년에는 0.612에 이른다. 최근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2022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4로 OECD 38개국 중 14번째로 높다. 미국(0.396), 일본(0.338) 등이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높다.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0.548), 코스타리카(0.472), 칠레(0.448) 등 중남미 국가에서 지니계수가 특히 높다. 반면 슬로바키아(0.226), 슬로베니아(0.244), 체코(0.249), 벨기에·아이슬란드(0.250) 등

OECD 국가별 사회적 이동성 지표, 2020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Global Social Mobility Report 2020: Equality, Opportunity and a New Economic Imperative

은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소득이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가 재정정책 이전과 이후의 지니지수를 활용하여 계산한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벨기에(37.80%p), 아일랜드(36.98%p), 핀란드(35.65%p), 오스트리아(34.73%p) 등의 순으로 크다. 한국(13.70%p)의 재분배 개선 효과는 OECD 38개국 중 34번째로, 한국보다 재분배 개선 효과가 작은 나라는 코스타리카(9.01%p), 콜롬비아(6.45%p), 칠레(5.91%p), 멕시코(2.28%p) 등 4개국뿐이다.

사회적 이동성은 OECD 중위권이며 임금 분배, 사회적 보호, 근로조건 등에서 개선 필요

(● 관련 지표 10.4.2)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2020년에 사회적 이동성 지표(Social Mobility Index)를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이동성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계층 또는 계급적 위치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서원주, 2013). 즉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절대적 또는 상대적 사회경제 계층 간 이동 과정을 의미한다. 2024년 7월 3일,

정부에서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중시축으로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사회적 이동성 지표에서는 건강,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교육의 질과 형평성, 평생학습, 기술에 대한 접근성, 공정한 임금, 근로조건, 고용기회, 사회적 보호, 포용적 제도 등 10개 부문(pillar)에 걸쳐 사회적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 점수는 71.4점으로 82개국 중 25위로 평가되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중위권에 해당한다. 한국은 기술 접근성(92.4점)과 건강(91.1점) 부문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치원 입학률(94.9%)과 학업 성취도(최소소득 수준 미달아동 비율 0.3%)가 높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낮은 편이다. 실업률이 낮은 편이지만 취약 노동자 비율(23.4%)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임금(41.7점), 사회적 보호(55.4점), 근로조건(61.3점) 부문에서 점수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World Economic Forum, 2020).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DG 11번 목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주거지의 포용성, 안전성, 회복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지만, 도시지역은 아직도 주거환경의 질, 대중교통의 공평한 접근,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공간인프라의 접근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거환경의 질과 공원 조성면적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최근 정체 중이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의 소득계층 간 격차도 줄어든 편이나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3년 77.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며,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각각 2.7%와 2.3% 수준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15.8%이며, 소득 하위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2020년 이래 20% 미만을 유지하면서 소득계층 간 격차는 줄어든 편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지원 정책 소외 해소 필요

»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의 인구 가중 평균은 2023년 19 $\mu\text{g}/\text{m}^3$ 로 2020년 이래 거의 정체 중이며, 국내 대기환경기준(15 $\mu\text{g}/\text{m}^3$)과 WHO 권고기준(AQG level, 5 $\mu\text{g}/\text{m}^3$)에 못 미치는 수준

-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10만 명당 42.7명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함

» 공원, 광장, 녹지 등 공간시설로 조성된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전국 평균의 절반 미만 에 그쳐 도시민의 녹색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 녹지 등의 지속적 확보 필요

- 도시·군계획에 따라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로 결정된 면적은 2023년 1,202 km^2 이며, 이 중 87.7%가 실제 조성됨
- 전국의 공원 조성면적은 2014~2023년 사이 46.9%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1인당 공원 조성면적도 7.9 m^2 에서 11.6 m^2 로 증가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의 절반 미만인 1인당 4.6 m^2 에 불과

» 7개 특·광역시 중 인천, 울산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2010년 대비 2020년 도시 인구가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시가화 면적은 7개 지역 모두에서 증가함

- 따라서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는 울산, 인천에서 높게 나타나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시사함
- 또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 면적이 크게 늘어난 지역에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점검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 필요

적절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임대료 부담 완화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11.1.1)

주택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부엌·화장실·목욕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방수에 대한 침실기준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된다.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3년 총 77.7만 가구로 조사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3.6% 수준으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한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16.6%에서 2014년 5.4%에 이르기까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리적 주거환경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달 유형별로 보면,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미달가구는 2023년 각각 2.7%와 2.3%이고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0.2%로 나타난다. 이 중 시설기준 미달가구는 전년 대비 0.3%p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크다. 한편 최근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개정 이래 바뀌지 않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주거생활의 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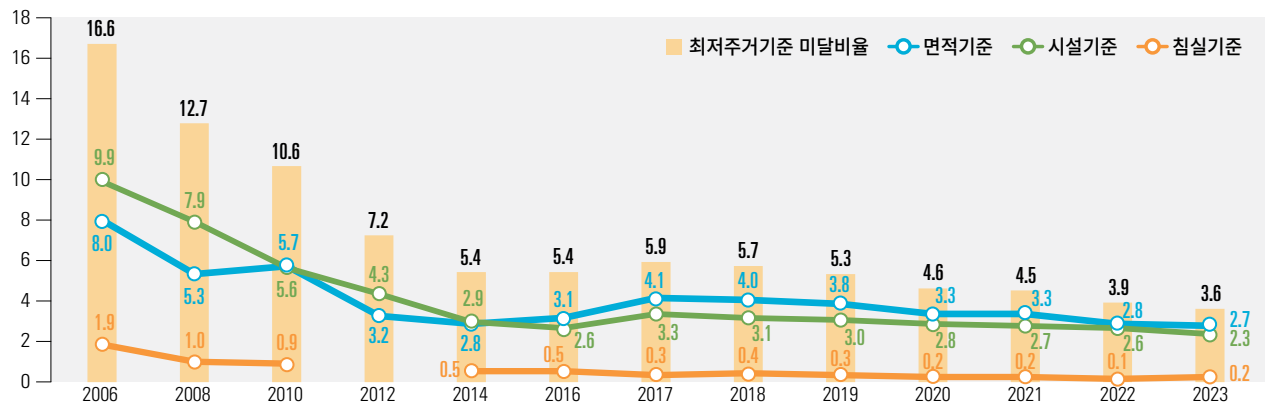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of renting households, RIR)은 임차 가구의 총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2023년 주택임대료 비율은 중위수 기준 15.8%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평균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2.7%로 집계된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지가에 영향을 받으므로 수도권(중위수 기준 20.3%)에서 가장 높고 광역시(15.3%)와 도지역(13.0%)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하위가구의 주택

임대료 비율(중위수 기준)이 19.8%로 가장 높고 상위가구가 18.7%로 그다음이다. 소득 상위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은 데는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 하위가구 중위수 기준으로 2014년까지 20% 후반대를 넘나들다가 2020년 이후에는 20% 미만으로 그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수준이 낮아진 편이고,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격차도 줄어든 편이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18.8%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전세 가구에서 ‘매우’ 또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6~2023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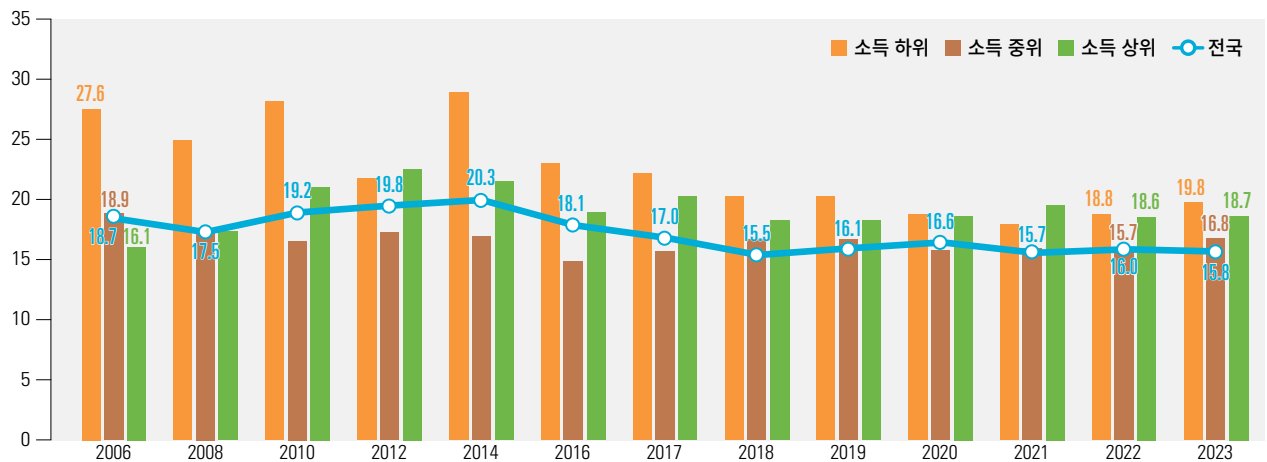
주1: 2016년까지 격년 조사, 2017년부터 매년 조사

주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란 주택법에 따른 면적기준(가구원 수에 따라 사용면적이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미만인 경우), 시설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기준(가구원 수에 따라 방수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3개, 5인 3개, 6인 4개 미만인 경우)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를 말함

주3: 2017년 주거면적 조사방식이 변경되면서 면적기준 미달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23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연구보고서

주1: 소득계층별 중위수 기준

주2: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가구소득)×100

주3: 2016년까지 격년 조사, 2017년부터 매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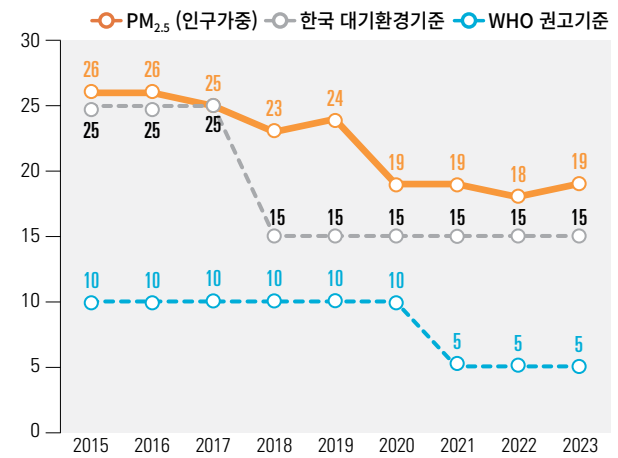
각 78.2%, 75.1%, 74.2%에 이른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강미나 외, 2020)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비 과부담(주택임대료 비율이 월 소득의 30% 이상) 가구, 비주택 거주가구로 정의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2019년 기준 292만 5,000가구에 이르며, 이 중 주거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는 가구는 21.0%에 불과하다.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정책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각 부처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초미세먼지(PM_{2.5}) 개선은 정체 (🔗 관련 지표 11.6.2)

직경이 2.5 μ m 이하인 초미세먼지(PM_{2.5})는 매우 작아서 호흡 시 폐로 유입되어 각종 폐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초미세먼지(PM_{2.5})는 산업활동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대기 중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을 통해 이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중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빈발하면서 강화된 정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2016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8년)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2019년),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 수립(2022년)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오염도, 2015~2023 (단위: μ g/m³)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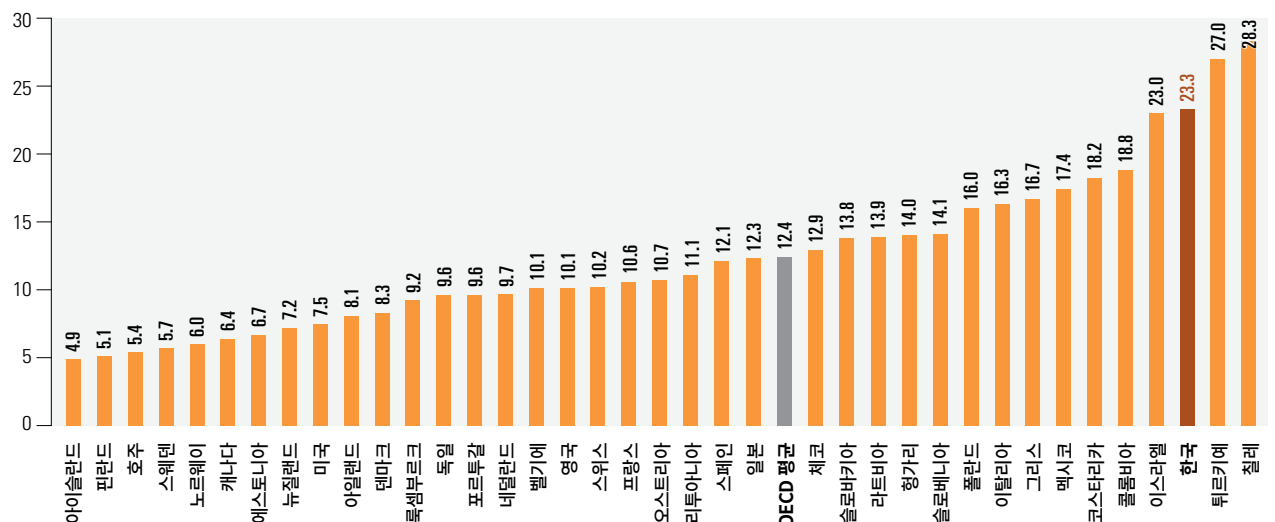
주1 :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농도(μ g/m³)의 인구 가중 평균값임

주2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이며, 2018년 3월부터 25 μ g/m³에서 15 μ g/m³로 강화됨

주3 :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이며, 2021년 9월부터 10 μ g/m³에서 5 μ g/m³로 강화됨

전국의 초미세먼지(PM_{2.5}) 인구 가중 평균 오염도는 2023년 19 μ g/m³로 집계된다. 2015년 26 μ g/m³에서 완만하게 감소해 오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산업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19 μ g/m³로 떨어졌고 이후 큰 변화 없이 정체 중이다. 이는 여전히 현행 국내 대기환경기준(15 μ g/m³)과 WHO 권고기준(AQG level, 5 μ g/m³)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초미세먼지(PM_{2.5}) 오염도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OECD 국가별 초미세먼지(PM_{2.5}) 오염도, 2022 (단위: μ g/m³)



출처: Sachs, J. D. et al., 2024,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주 : 위성영상 등에 기반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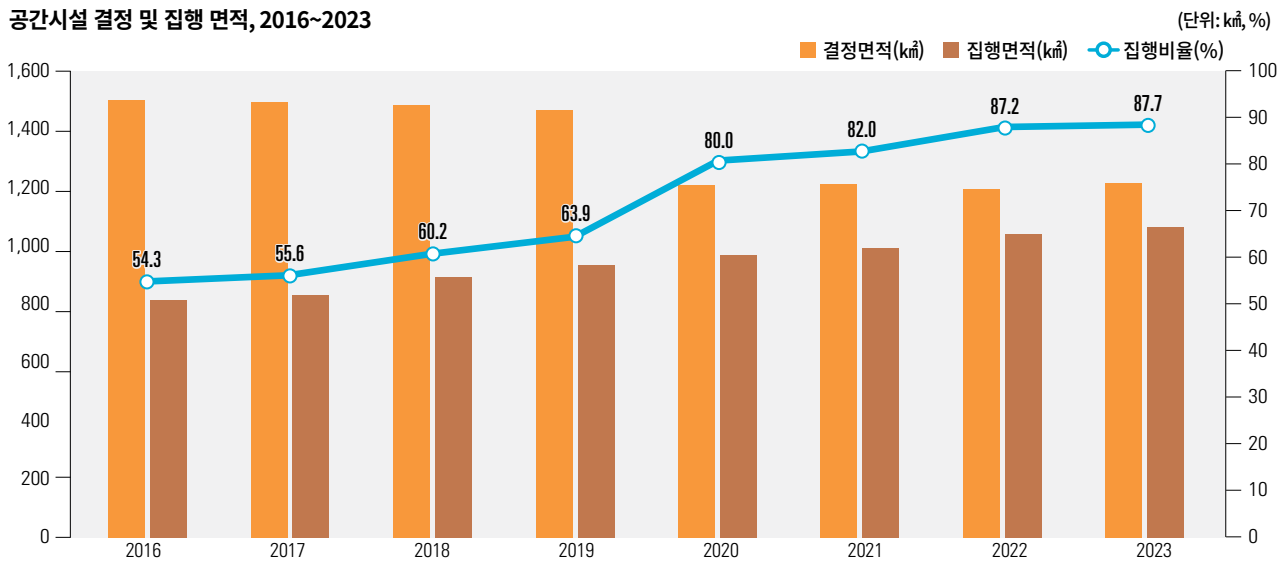
OECD(2023)에 따르면 2019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42.7명으로 OECD 평균(28.9명)의 1.48배, 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4.6명)의 9.28배에 이른다. 2022년 말 수립된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023~2032)에서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2027년까지 $13\mu\text{g}/\text{m}^3$, 2032년까지 $12\mu\text{g}/\text{m}^3$ 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 및 수송 분야 등의 배출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국민 건강 중심의 관리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장거리 이동오염 대응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주환경 만족도 증대를 위한 공원 등 공간시설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11.7.1)

SDG에서는 도시와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녹색 공공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 계획법상 공간시설이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및 공공공지를 의미하며, 주민의 여가 및 복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군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된다. 2023년 전국의 공간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1,202 km^2 이며, 이 중 87.7%에 해당하는 1,054 km^2 의 면적에 대해 실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공간시설 결정면적은 20년간 장기 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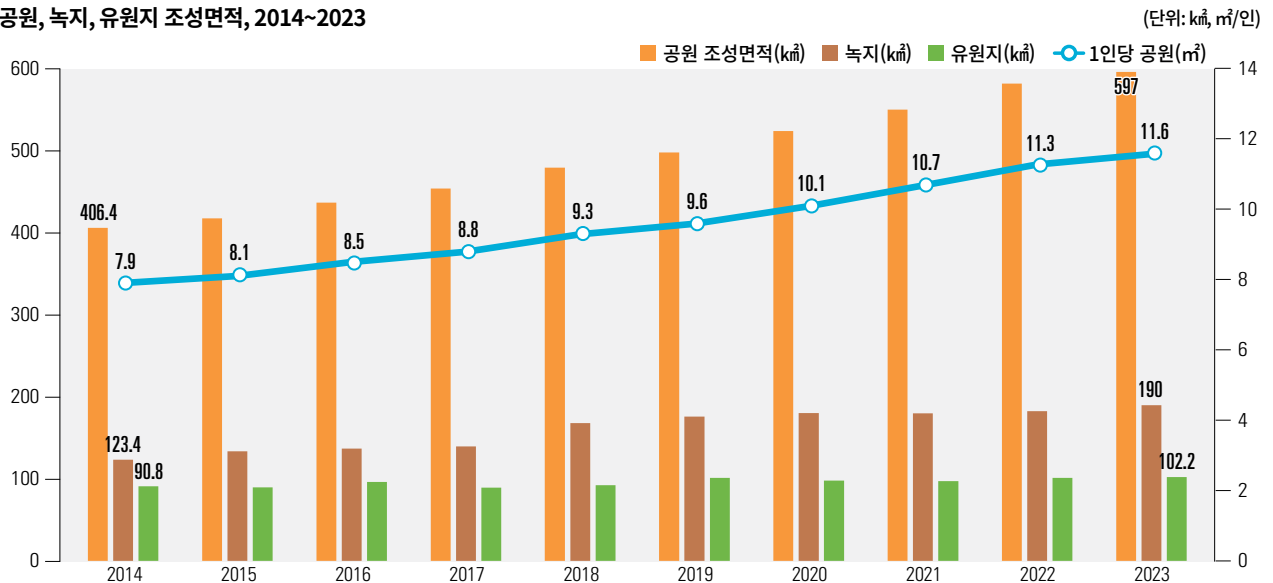
공간시설 결정 및 집행 면적, 2016~2023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https://kosis.kr>, 2025.1.5. 인출)

주: 도시·군계획에 따라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로 결정 또는 집행된 면적을 말함

공원, 녹지, 유원지 조성면적, 2014~2023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2024, 2023 도시계획현황

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결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
물체가 시행되면서 2020년에 전년 대비 17.3% 급감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원 조성면적이 2023년 총 597km²로 2014년
대비 46.9%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인당 공원 조성면적
도 7.9m²에서 11.6m²로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의 공원 조
성면적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인당 4.6m²에
그친다.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도시민의 녹색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공원과 녹지 공간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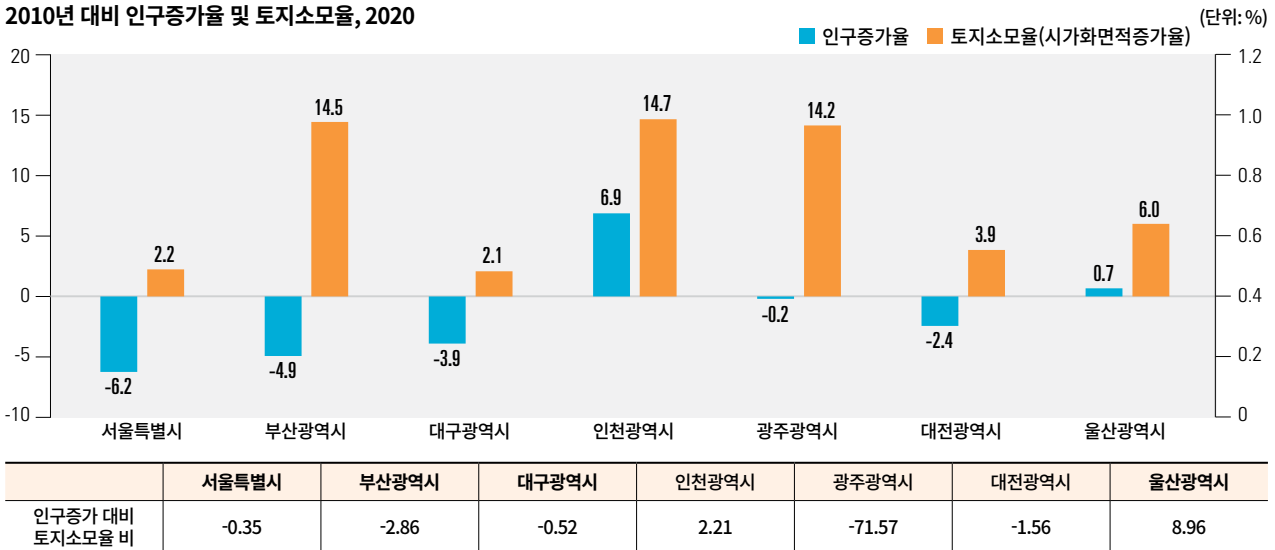
(☉ 관련 지표 11.3.1)

SDG 11.3.1 지표인 인구증가율(Population Growth
Rate, PGR) 대비 토지소모율(Land Consumption Rate,
LCR) 비는 인구 증감 속도에 따라 도시 면적이 증감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해 도시의 성장이
인구 증가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

다. 이 지표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확장(urban sprawl)
을 전제하고 있어 한국과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과 2020년 사이 특·광역시와 인구와 시가
화 면적 변동을 보면, 도시 인구는 7개 특·광역시 중 인천
(6.9%)과 울산(0.7%)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감소한 반
면 시가화 면적은 7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인천, 부
산, 광주 세 지역의 경우 이 기간 중 시가화 면적 증가율이
14%대에 달하였으며, 그 외 4개 지역은 2.1~6.0% 수준이
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는 인구가
증가한 2개 지역, 즉 울산과 인천에서 각각 8.96과 2.21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시가화 면
적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인구 증가에 비추어 토
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산,
광주에서는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지만 시가화 면
적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도 토지이용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0년 대비 인구증가율 및 토지소모율, 2020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https://kosis.kr>, 2025.1.17. 인출)

주1 : 도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중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에 거주하는 인구

주2 : 시가화 면적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중 녹지 등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면적의 합으로 산출함

주3 : 인구증가율과 토지소모율은 각각 도시 인구와 시가화 면적의 % 증가율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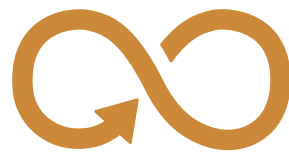
주4 :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 산출에는 자연로그식으로 계산한 인구증가율을 사용함

주5 : UN에서 추정된 수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

- 용어해설**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정한 기준으로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나라마다 기준이 다름
 - **공간시설** :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 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 5개 시설을 의미함
 - **토지소모율** : 비도시 지역이 도시화되는 정도, 즉 시가화 면적의 증가율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SDG 12번 목표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 배출을 저감하며 경제를 순환적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식품의 생산·가공·도매 단계에서의 손실률이 13.2%, 소매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폐기율이 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급증하는 전자폐기물 문제도 해결이 요원하다. 한국에서도 공급망 전 과정에 걸쳐 식품의 손실 및 폐기량을 관리, 저감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폐기물, 특히 폐합성수지류 등의 재활용률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간 조금씩 줄여 오던 화석연료 보조금은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 가정, 식당 등 소비 단계에서의 식품 폐기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인당 연간 108.0kg으로,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감량 대책 필요

- 생산·제조 단계에서 버려지는 식품 손실(동식물성 잔재물)도 증가하고 있어(2011년 대비 40.6% 증가) 식품 공급망 전 과정에서 폐기 감소 노력 필요

»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인당 연간 120kg으로 2011년 72.1kg에서 계속 증가세

- 유해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65.0%로 2011년부터 상승해 왔으나 최근 답보 상태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합한 전체 재활용률은 2022년 77.9%로 2011년 대비 9.1%p 상승하였으며, 그중 생활폐기물이 56.9%로 가장 낮음

- 생활폐기물을 품목별로 보면 특히 폐합성수지류와 폐지류는 발생 비중이 높고 재활용률이 낮아 개선이 요구됨

» GDP 단위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2022년 0.43%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인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 추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2년 말 제정됨에 따라 생산-유통-사용-폐기-순환원료로의 재투입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시행될 예정임

식품 폐기량 다시 증가, 감량 노력 가속화 필요

(☞ 관련 지표 12.3.1)

식품의 손실과 폐기(Food Loss and Waste, FLW)는 수확부터 소비까지 식품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폐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식품 손실은 식품의 생산·가공·도매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나타내며, 식품 폐기는 소매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폐기량을 가리킨다. 한국의 폐기물 통계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식품 폐기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300kg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과 소매업 사업장의 폐기물이 포함된다.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음식점과 소매업 사업장의 폐기물은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보고된다. UN SDG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식품 폐기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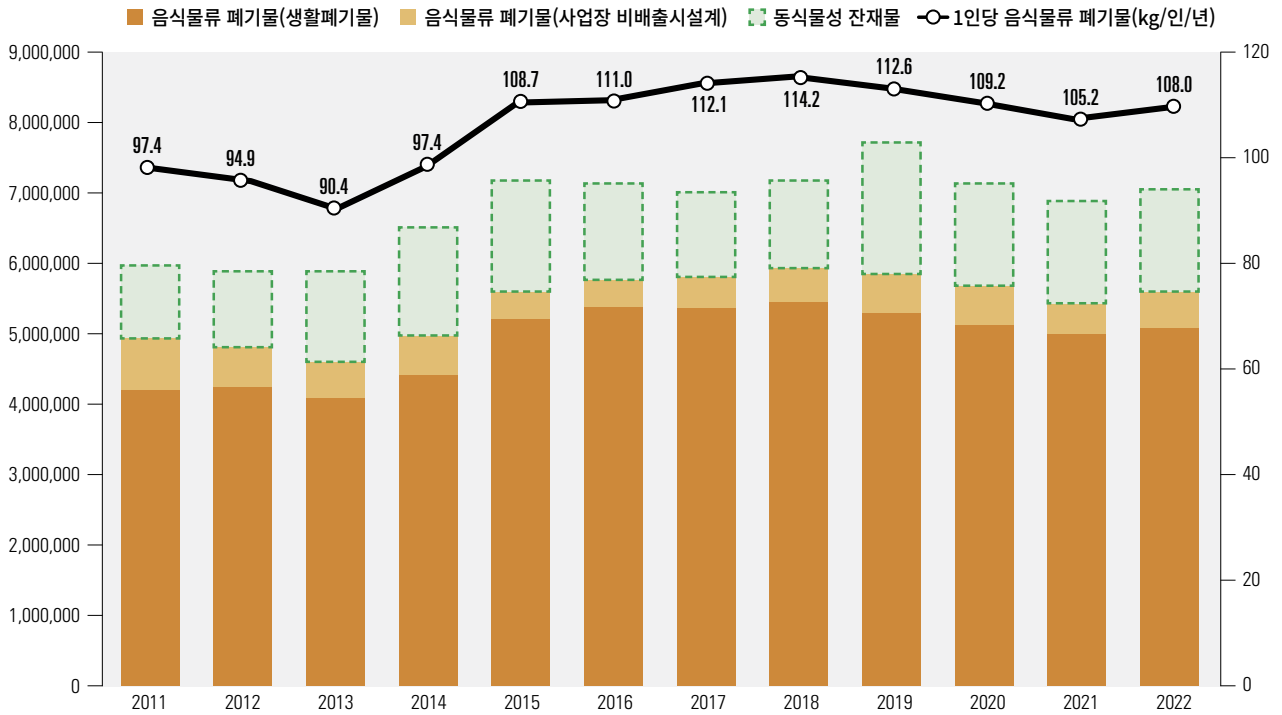
생원을 가정, 외식업, 소매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내 통계로는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의 식품 폐기량, 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기준 연간 총 555만 톤이며, 1인당으로는 연간 108.0kg으로 집계된다. 1인당 식품 폐기량은 2013년 90.4kg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8년 114.2kg에 이른 뒤에야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증가하여 108.0kg을 기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양도 29%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홍연아 외, 2021) 이를 고려해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가장 많다. SDG 12.3의 목표는 소비와 소매유통 단계에서 식품 폐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지만 한국의 식품 폐기량은 최근 다시 증가하였다. 소비 단계, 특히 가정에서 감량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보급되고 있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식물성 잔재물 발생량, 2011~2022

(단위: 톤/년, kg/인/년)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1.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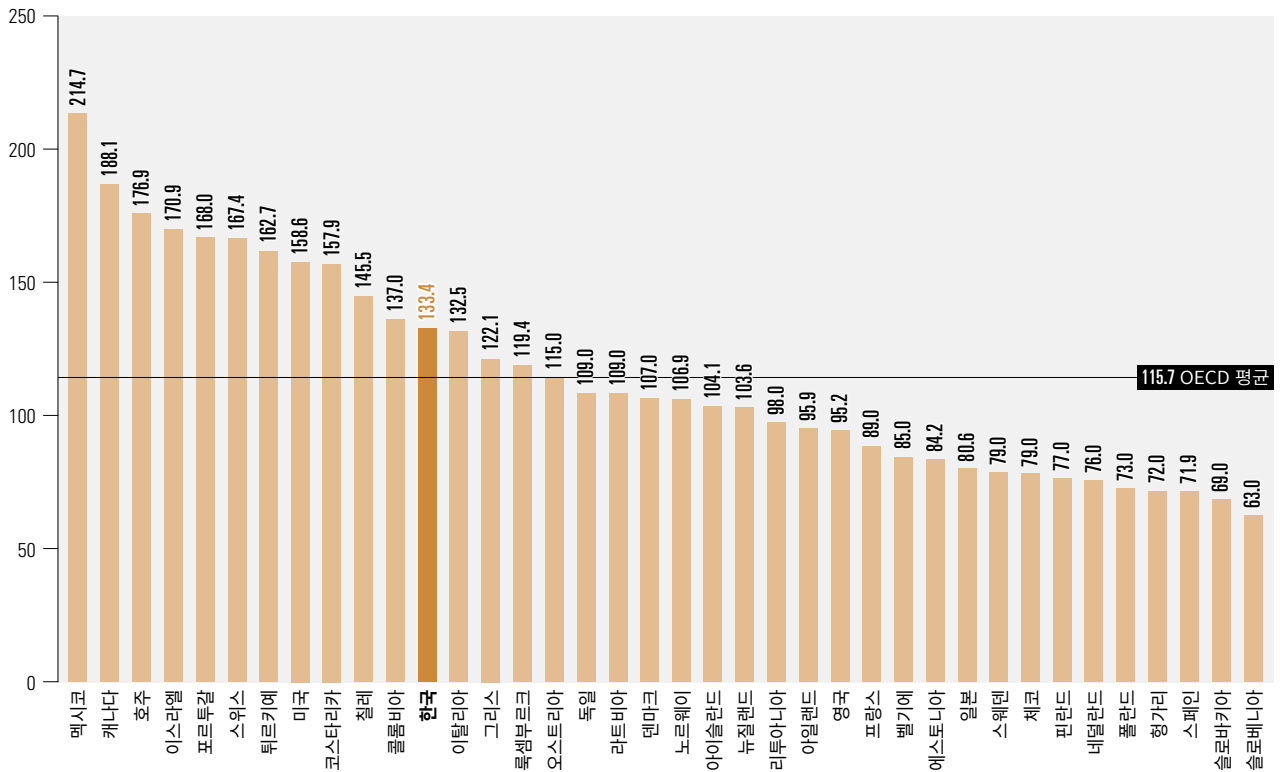
주1 : 음식물류 폐기물은 분리배출과 종량제 방식 등 혼합배출에 의한 발생량을 합한 것임

주2 :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합한 총량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주3 : 동식물성 잔재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속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발생량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음식물류 폐기물로 보고되기 때문에 생활 및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만을 식품 폐기량의 범위로 활용함

OECD 국가별 1인당 식품 폐기량, 2022

(단위: kg/인/년)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11.2. 인출)

주 : 한국 자료는 UN SDG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 것으로,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공식 통계와는 다름

전자태그)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와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제도 등 감량을 위한 정책이 있지만 이들 제도가 감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의 식품 손실량은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지만, 사업장 폐기물 중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지칭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이 식품 손실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식물성 잔재물 발생량도 2011년과 비교하면 2022년에 40.6%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던 식품가공 부산물을 식품이나 산업원료로 활용하는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10대 푸드테크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가 UN SDG 점검 노력에 연계될 수 있도록 식품 손실 통계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UN SDG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OECD 국가들의 1인당 연간 식품 폐기량은 2022년 38개 회원국 평균 115.7kg

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식품 폐기량은 가정에서 95.0kg, 외식업에서 24.7kg, 소매업에서 13.7kg 발생하여 총 133.4kg으로 집계된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추정한 값으로, 한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식 통계로 산출한 108.0kg과 차이를 보인다. 국내 통계로 분석한 108.0kg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간 적게 발생하고 덴마크(107.0kg), 독일(109.0kg)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네덜란드(76.0kg), 일본(80.6kg) 등 한국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는 나라를 보면 국내 폐기량도 더욱 감량해야 할 여지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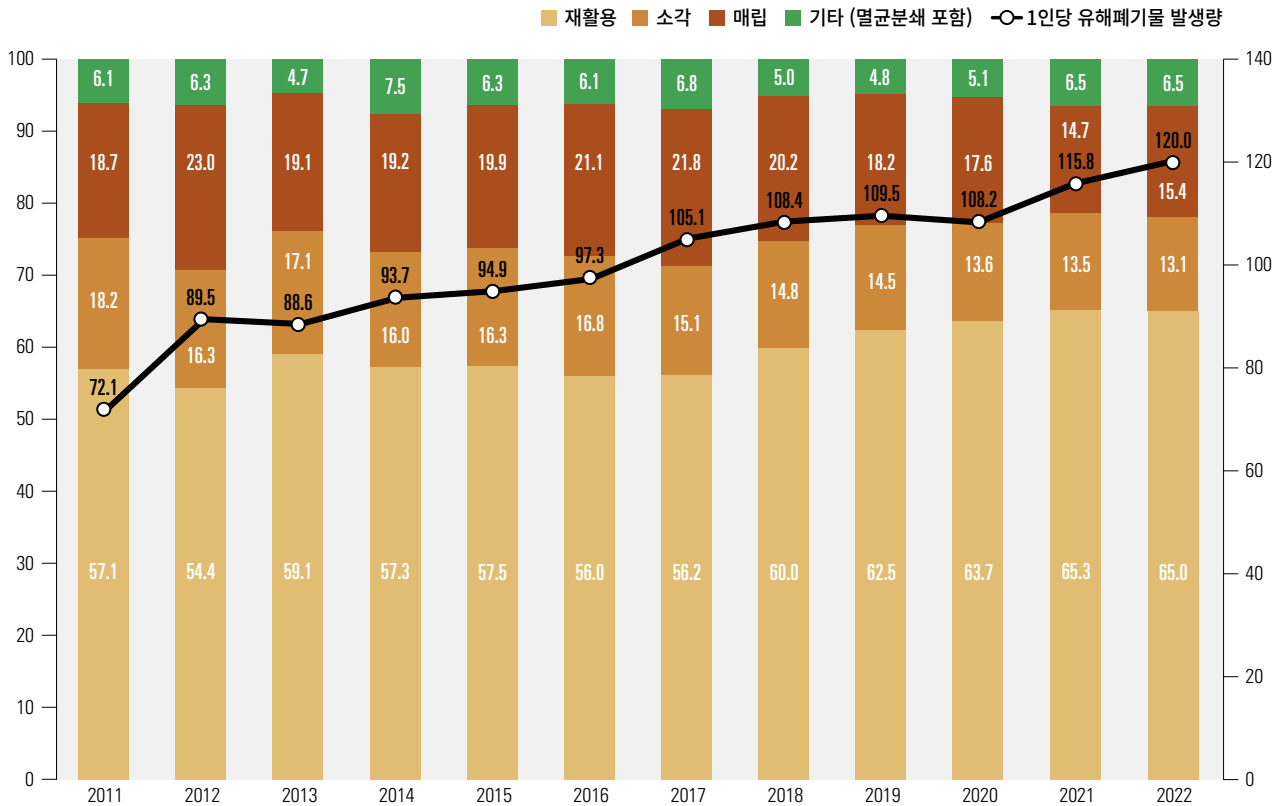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인 반면

재활용률은 답보 상태 (○ 관련 지표 12.4.2)

유해폐기물은 국내법상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며, 사업장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속한다.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20.0kg으로 2011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비중, 2011~2022

(단위: kg/인/년, %)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1.18. 인출)

주1: 유해폐기물에는 사업장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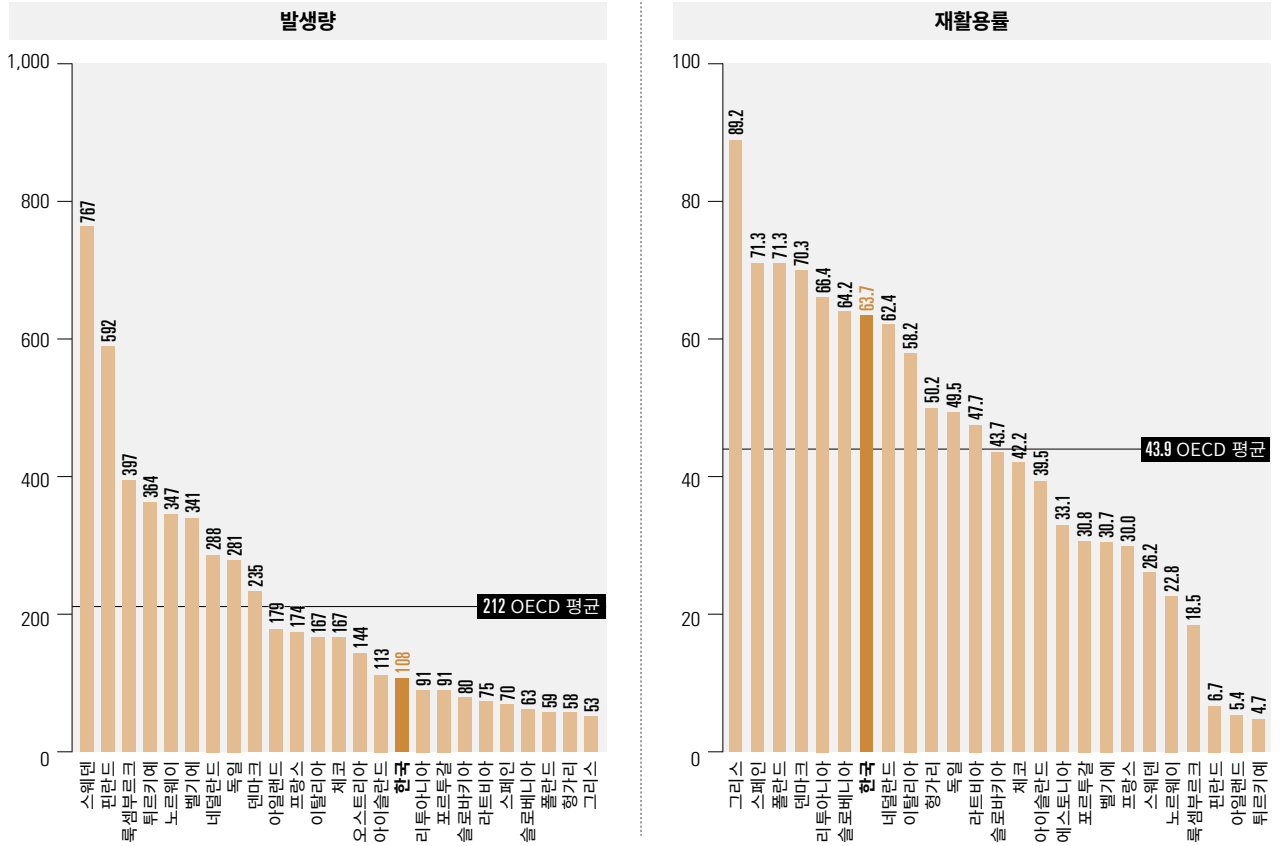
주2: 1인당 발생량은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주3: 2018년까지는 통계구분이 달라, '기타 처리량'에 '최종 보관량'을 더하고 '전년도 이월량'을 뺀 수치로 '기타' 발생량을 산출함



OECD 국가별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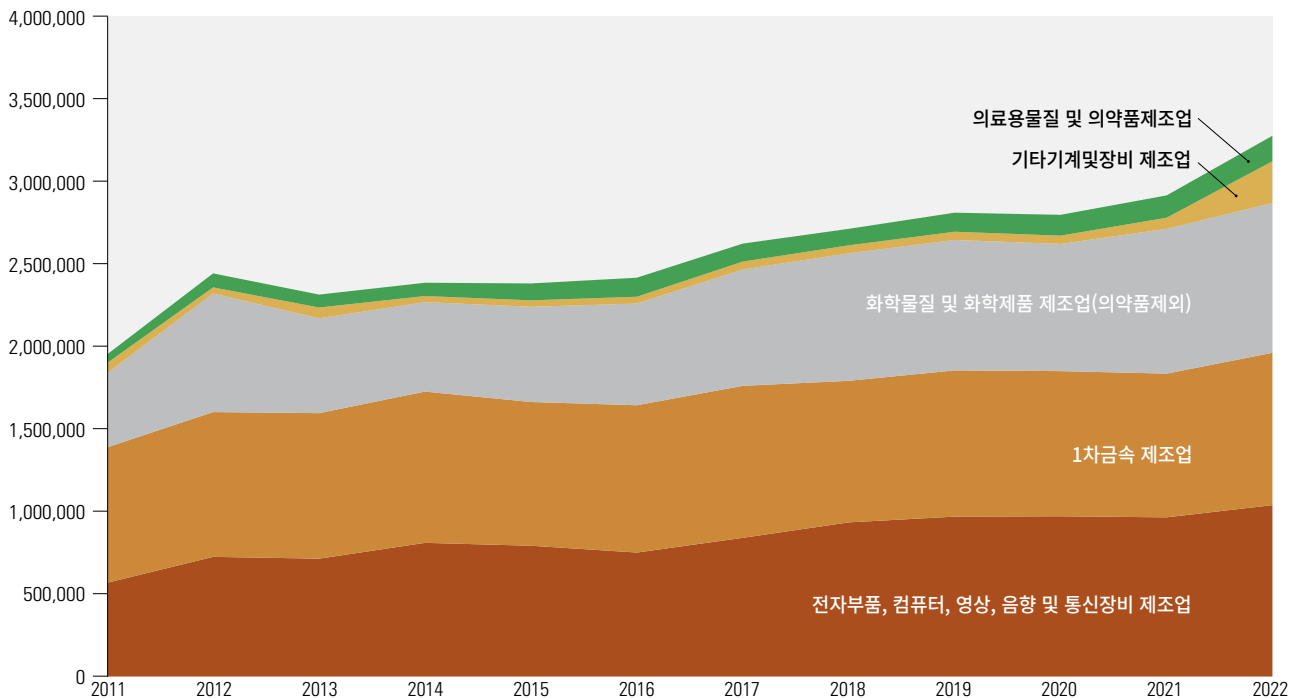
(단위: kg/인/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11.2. 인출)
주 : 한국 자료는 국내 통계(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임, OECD 평균은 한국수치 포함 산출

사업장 지정폐기물 상위 업종별 발생량, 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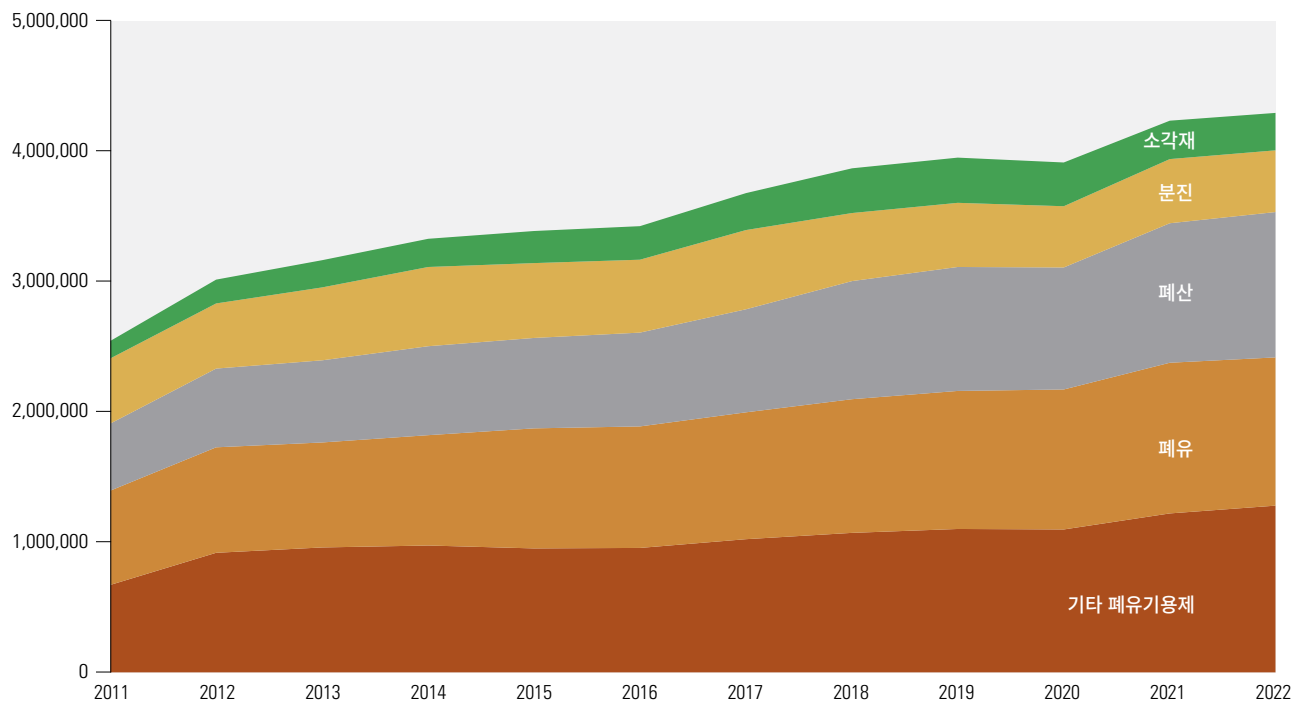
(단위: 톤/년)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4.11.2. 인출)
주 : 2022년 기준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 상위 5개 업종임

사업장 지정폐기물 상위 종류별 발생량, 2011~2022

(단위: 톤/년)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4.11.2. 인출)

주 : 2022년 기준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 상위 5종임

72.1kg 대비 66.5% 증가하였다. 유해폐기물이 처리되는 방법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순으로 각각 65.0%, 15.4%, 13.1%, 6.5%를 차지한다. 재활용률이 2011년 이래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소각과 매립 비율은 감소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재활용률이 65.3%로 정점에 달한 뒤 소폭 감소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다. 한국의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축적되는 매립량과 유해폐기물의 재활용 및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유해폐기물 재활용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이다.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업종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3개 업종이 사업장 지정폐기물 총발생량의 각각 15% 이상씩을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발생량은 2011년 대비 82.2% 증가해 당시 2위에서 2022년 현재 1위로 올라섰고, 현재 4.3%로 4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도

최근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기타 폐유기용제, 폐유, 폐산의 3종이 총발생량의 각각 20% 이상씩을 차지한다. 3종 모두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1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90.5%, 57.0%, 116.3%에 달한다.

재활용률은 상위 수준이나 정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필요 (☞ 관련 지표 1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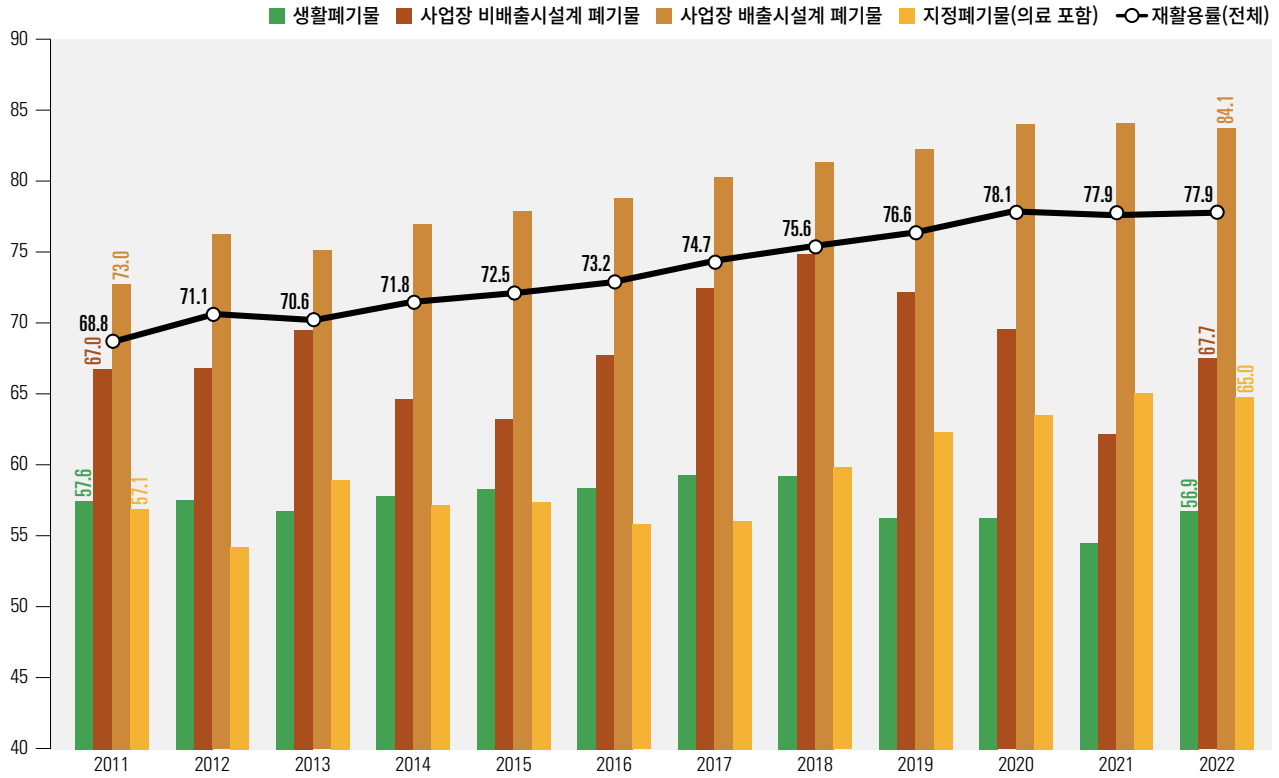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을 합하여 산출한 한국의 재활용률은 2011년 68.8%에서 2022년 77.9%로 대체로 증가해 왔다. 주요 배출원별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생활폐기물 56.9%,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67.7%,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84.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65.0%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0년대 이래 계속 50%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다. 2017년 59.5%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낮아진 상태이다.

재활용률이 낮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주요 품목별



주요 배출원별 재활용률, 2011~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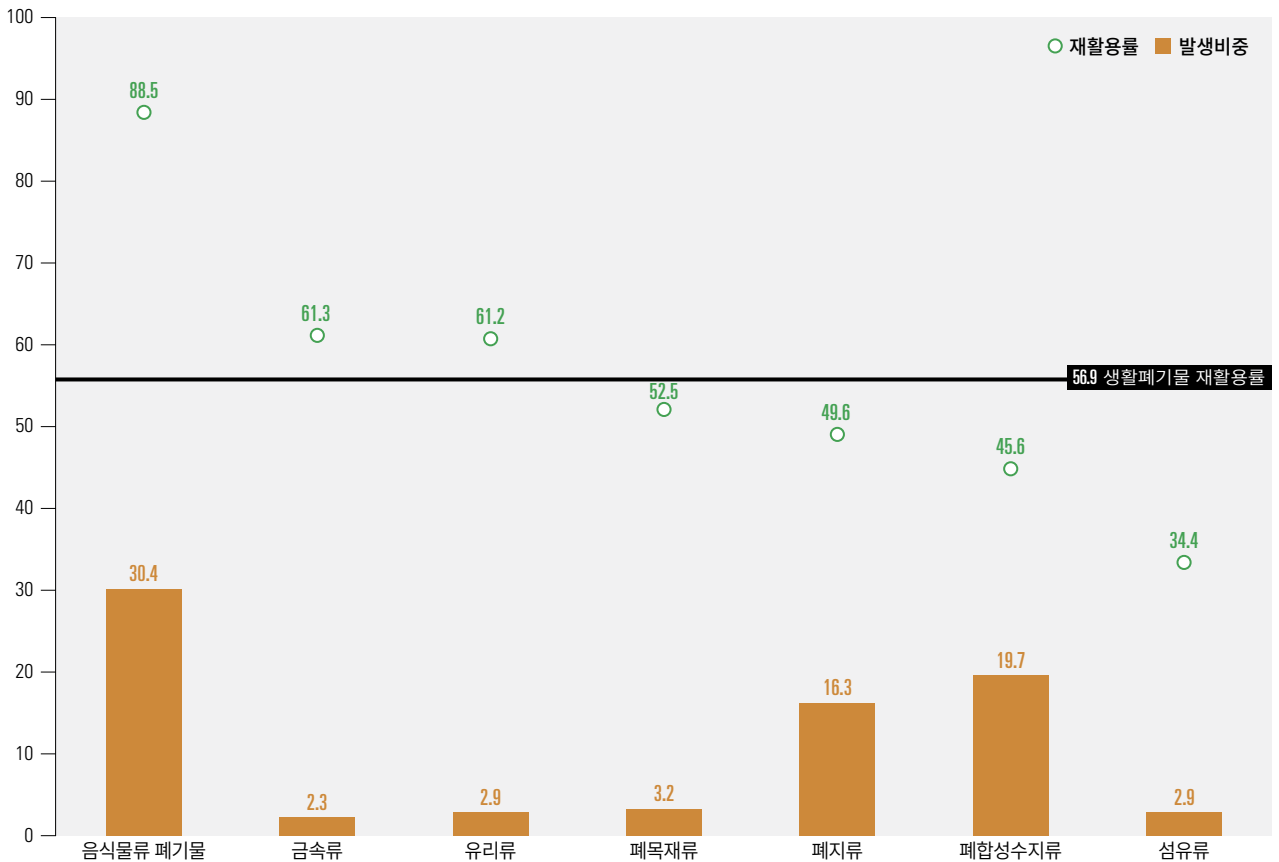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4.11.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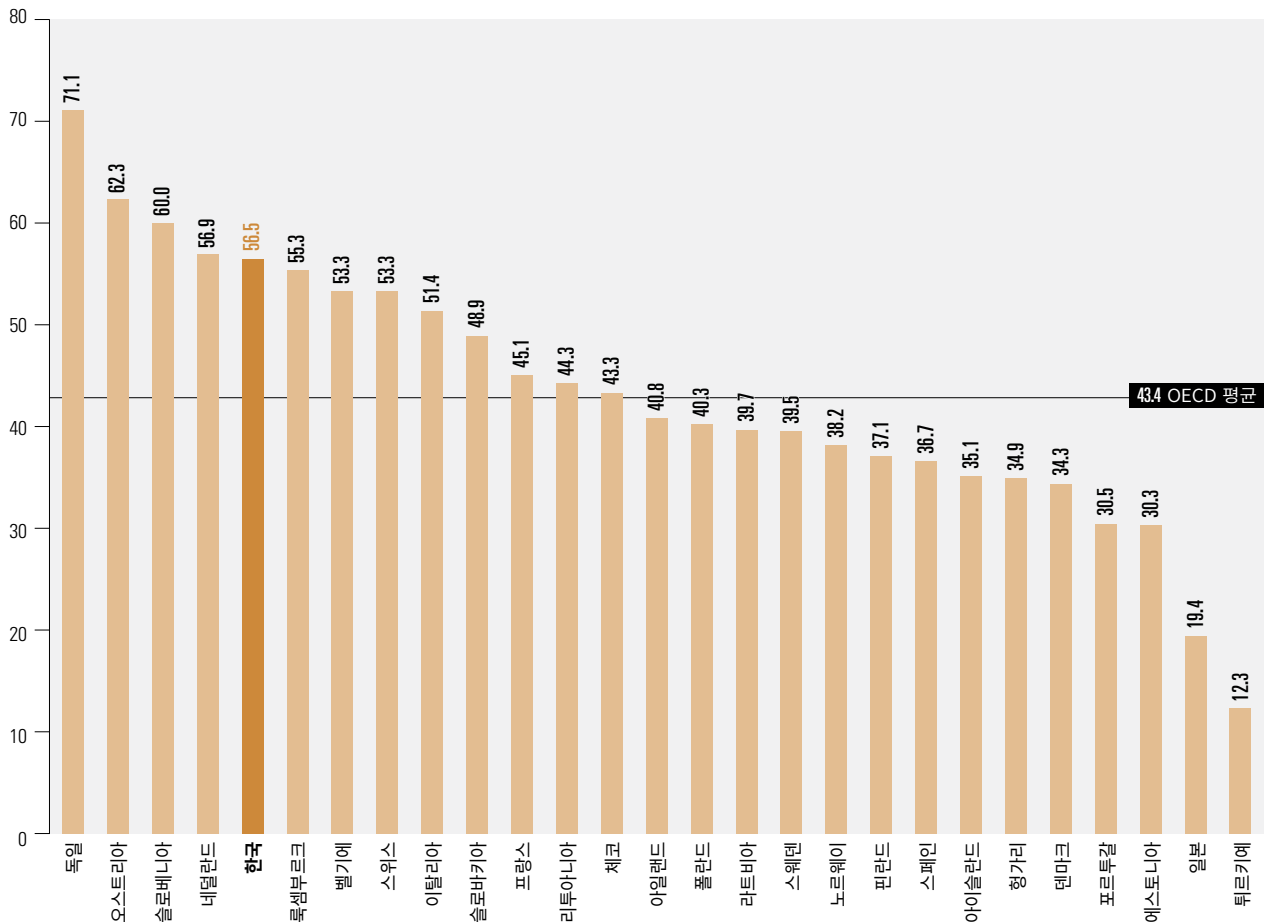
94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재활용률 및 발생 비중, 2022

(단위: %)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4.11.2. 인출)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8.1. 인출)

주1: 도시고형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포함됨

주2: 한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일본, 튀르키예는 2020년 자료임

로 재활용률을 나누어 보면, 섬유류(34.4%), 폐합성수지류(45.6%), 폐지류(49.6%), 폐목재류(52.5%)의 재활용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 중 폐합성수지류와 폐지류는 발생 비중으로도 각각 19.7%와 16.3%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UN SDG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OECD 국가들의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재활용률을 비교하면, 한국의 재활용률은 56.5%로 OECD 평균 43.4%를 훨씬 웃도는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활용 시설 반입량으로 재활용률을 집계하기 때문에,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 재활용률로 본다면 더 낮아질 수 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늘어

(☞ 관련 지표 12.c.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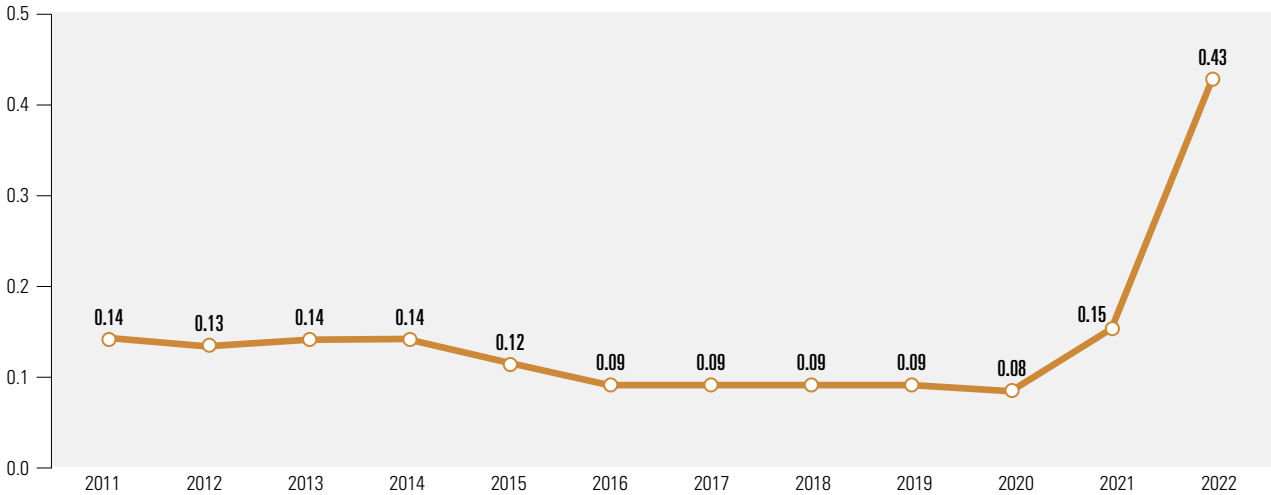
SDG 12.c 세부목표에서는 에너지의 낭비를 유도하는 비

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한다. 한국의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2022년 0.43%로 집계된다. 2011년 이래 0.10% 전후를 유지하며 조금씩 줄여 오고 있었으나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전 세계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사상 최고치인 1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2020년 대비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UN SDG 데이터베이스에 2020~2022년 자료가 수집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2022년)은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최근의 증가 속도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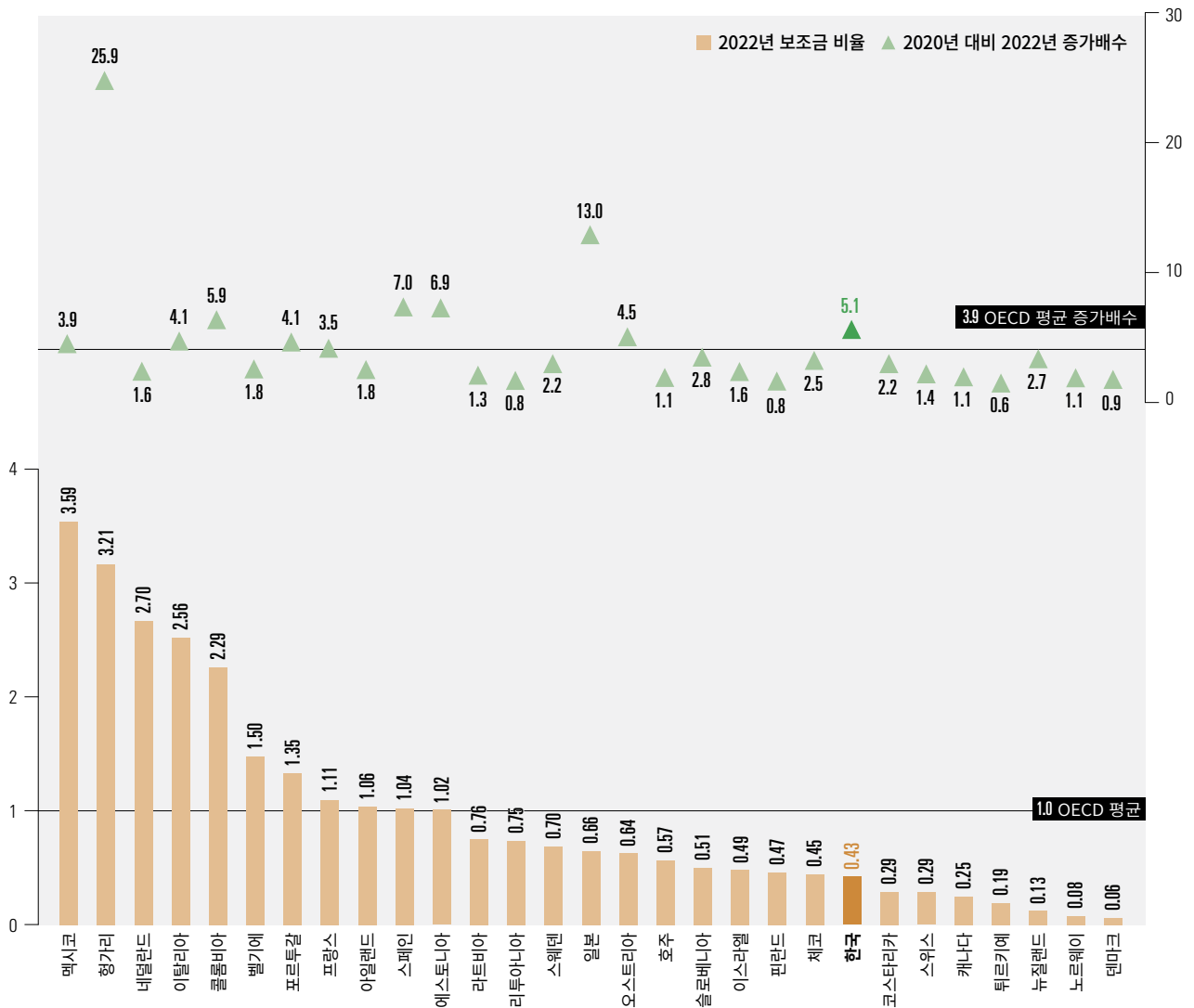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7.29.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7.29. 인출)

주 : 2020~2022년 자료가 공개된 29개국을 비교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원

(☞ 관련 지표 12.1.1)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2년 12월에 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순환 원료의 투입, 제품의 순환이용성 향상,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순환자원의 인정, 순환자원 사용 제품 표시 제도 등 자원, 원료,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 걸쳐 순환이용을 하고 다시 원료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순환자원 제도는 기존에 폐기물로 관리되던 품목 중 유해성이 낮고 순환이용이 효과적인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또한 순환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널리 보급되도록 순환 경제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재활용률과 최종처분율(매립률)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의 감량률도 국가지표로 관리하게 되어, 자원의 순환성과 더불어 SDG 12번 목표에 다루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발생량 지표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가정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 **사업장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지구 온도의 상승이 멈추지 않고 곳곳에서 각종 극한기상과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 수준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감한 노력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야 할 때이다. 한국에서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해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으며, 폭염과 호우 등 극한기상에 따른 자연재난의 인명피해에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2년 7억 2,429만 톤(CO₂eq.)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

- 배출 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8.7% 증가하는 동안 배출량은 7.6% 감소
- 1인당 배출량도 2022년 14.0톤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
- GDP당 배출량은 10억 원당 367.9톤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는 2023년 총 14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0.27명 수준

- 2018~2023년 실종·사망자의 62.8%와 28.7%가 폭염과 호우로 발생해 기후변화와 극한기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 강화 필요

» 샌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재난위험경감전략 마련 및 이행 중

- 국가 차원의 재난위험경감전략 이행 점수는 2019년 이래 전 항목에서 만점을 유지
-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도 재난위험경감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2.3% 감소

(📊 관련 지표 13.2.2)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2년 7억 2,429만 톤(CO₂eq.)으로 2021년 7억 4,098만 톤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배출 정점을 기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 전년 대비 각각 3.1%와 6.1%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기저효과로 2021년 한때 3.9% 증가한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2022년 총배출량은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의 7억 8,387만 톤에 비하면 7.6%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한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실질 GDP가 8.7% 증가하는 동안 총배출량은 7.6%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2년 에너지 분야에서 전년 대비 2.6% 감소한 5억 5,189만 톤을 배출하여 국가 총배출량의 7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공정 분야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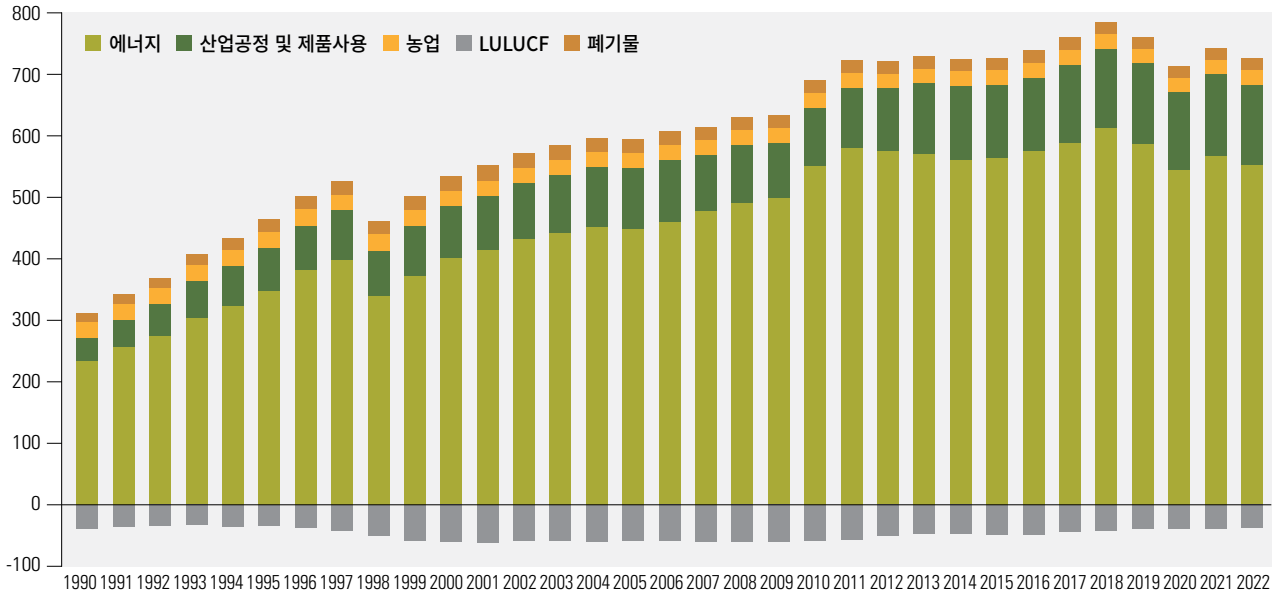
출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1억 3,126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18.1%를 차지하였다. 이 외 농업과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이 각각 3.2%와 2.5%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1% 미만의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의 배출·흡수량도 전년 대비 3.0% 줄어들어 2022년 -3,783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흡수량을 포함한 2022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6억 8,646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배출량의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가동 중단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철강산업의 배출량이 전년 대비 860만 톤 감소하였으며, 화학산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생산설비의 증가 및 국내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가동을 하락으로 배출량이 270만 톤 감소하였다. 발전·열생산 부문에서는 석탄·가스 발전이 줄어 들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전년대비 260만 톤 감소하였다. 산업공정 분야 중 전자산업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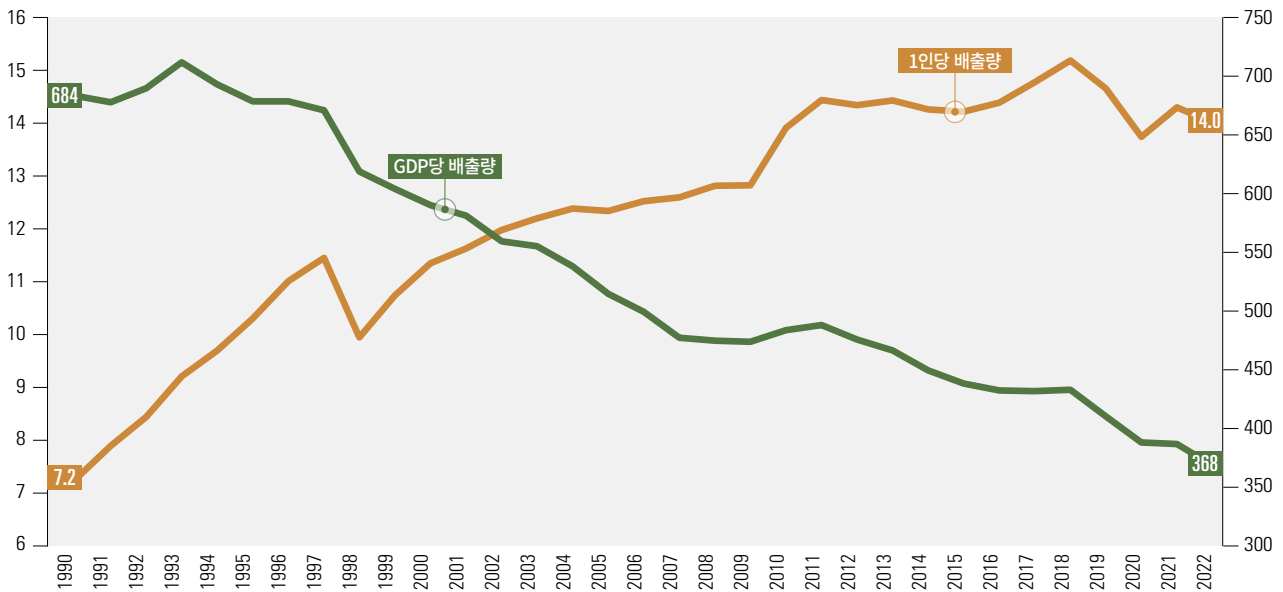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22

(단위: 100만 톤CO₂eq.)



1인당 및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2

(단위: 톤CO₂eq./인, 톤CO₂eq./10억 원)



문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효율 개선으로 190만 톤 감소하였다. 한편 냉장 및 냉방에서 HFCs의 순소비량 증가 등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이 늘면서 이 부문의 배출량이 280만 톤 증가하였고, 울진의 대형 산불 등으로 산림지 부문의 배출량이 110만 톤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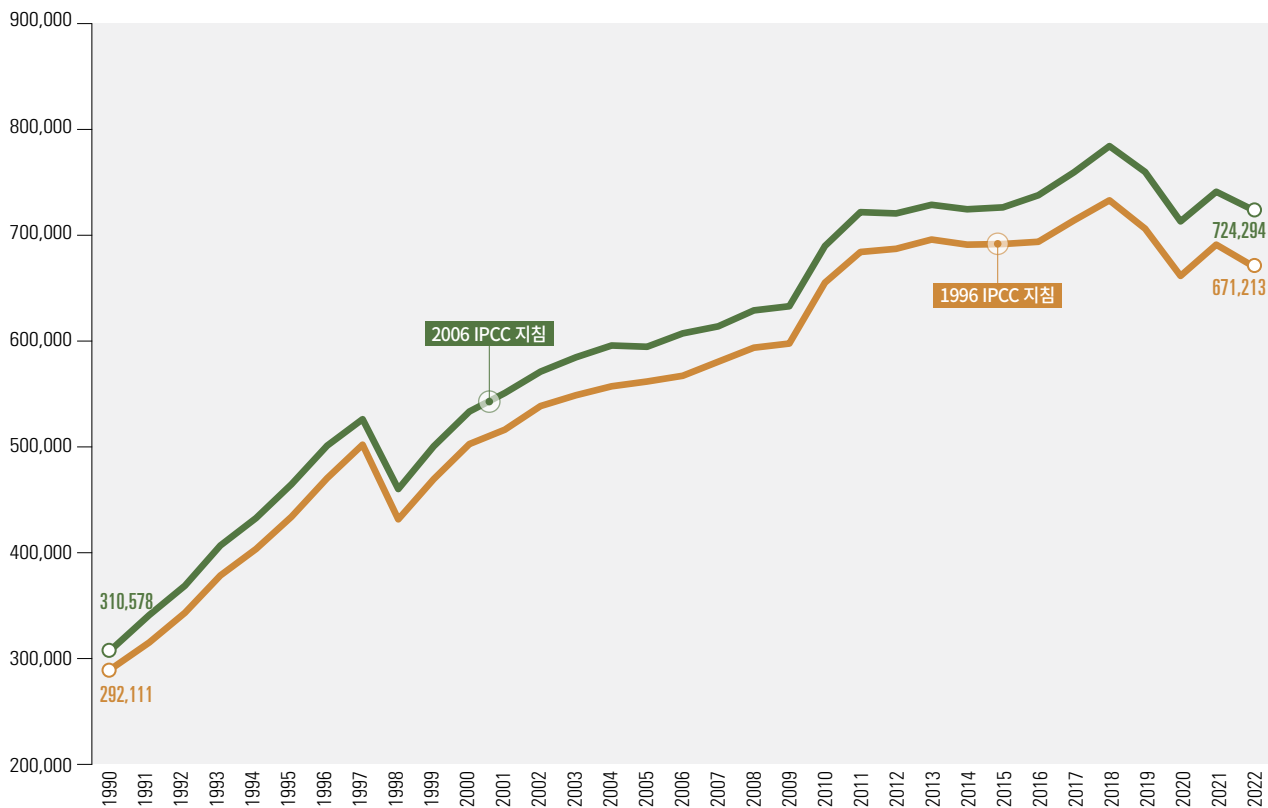
총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1인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4.0톤으로 집계된다. 2022년 인구가 전년 대비 0.2%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총배출량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1인당 배출량도 감소한 것이다.

GDP당 배출량은 경기회복과 기저효과에 따라 총배출량이 늘어난 2021년에도 전년 대비 0.4% 줄어들며 감소

온실가스 산정지침에 따른 배출량 차이, 199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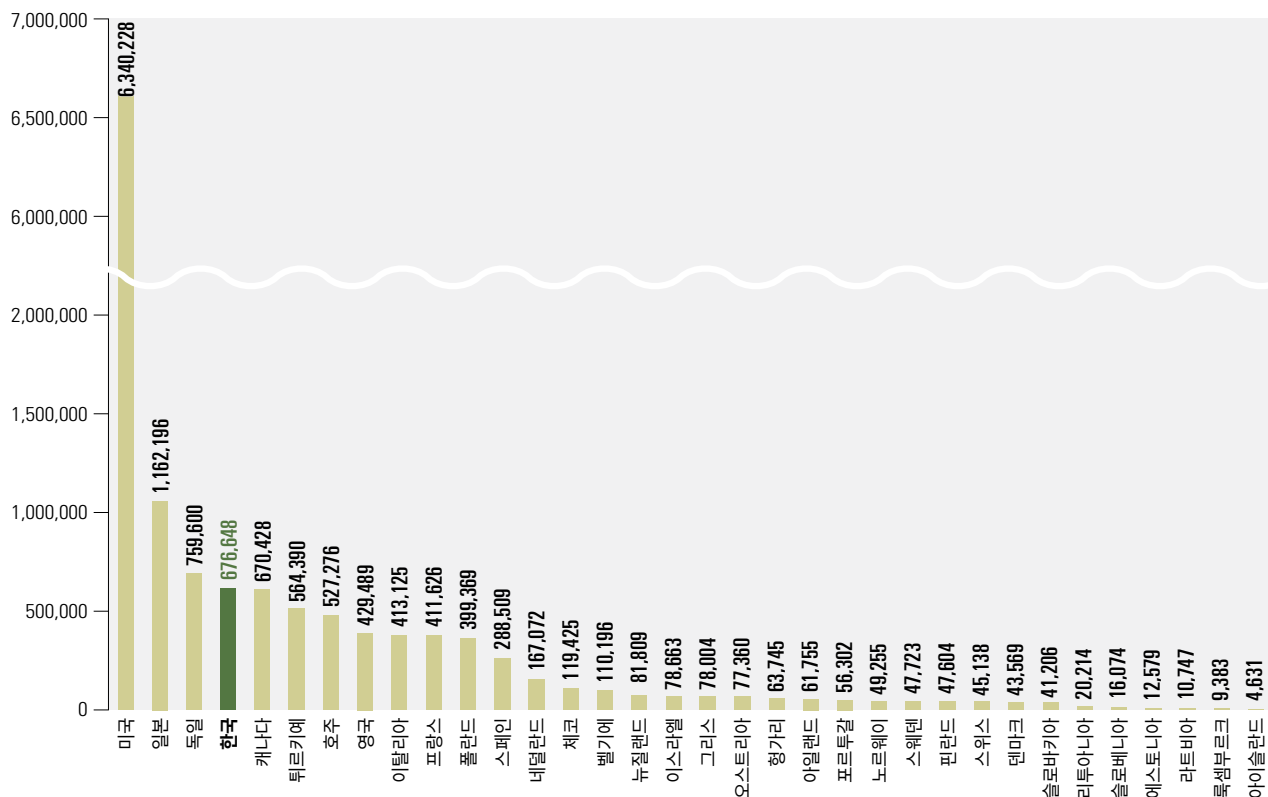
(단위: 천톤CO₂eq.)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https://www.gir.go.kr>, 2025.1.6. 인출)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1

(단위: 천톤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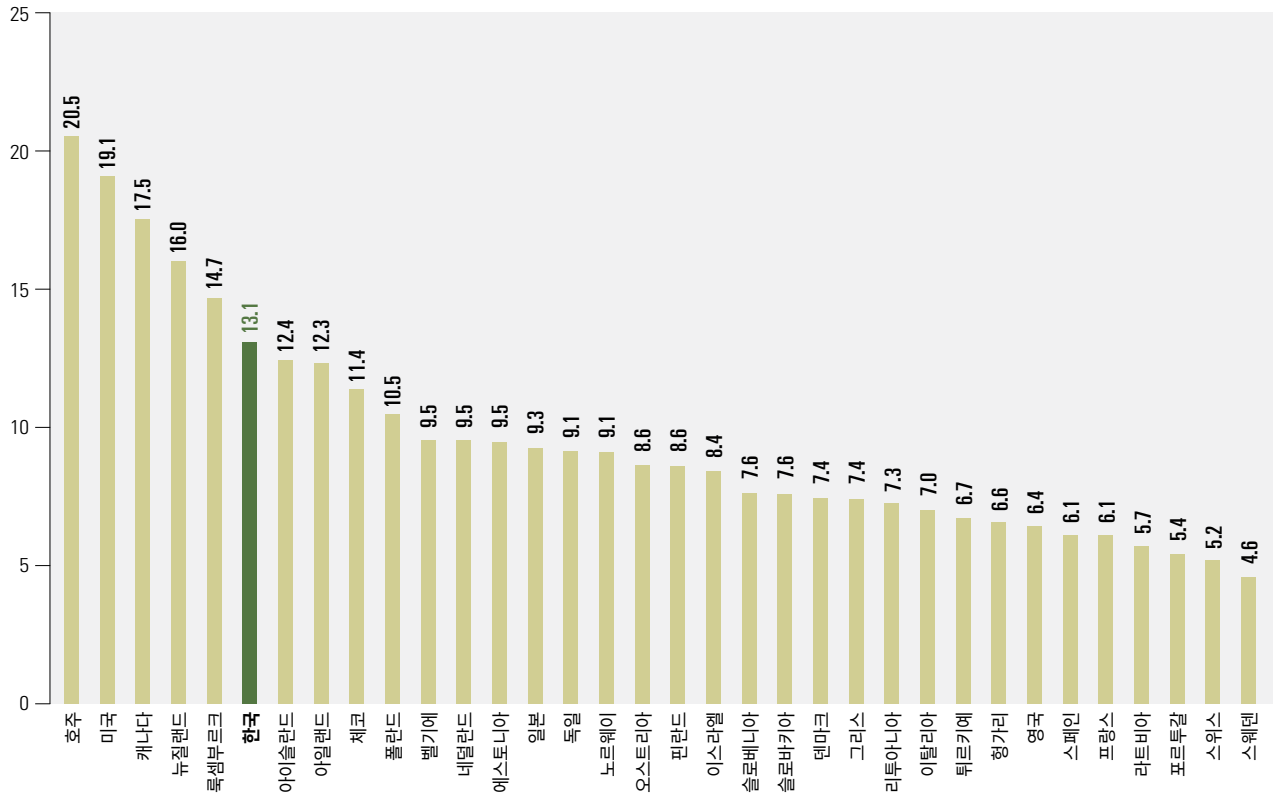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0.27. 인출)



OECD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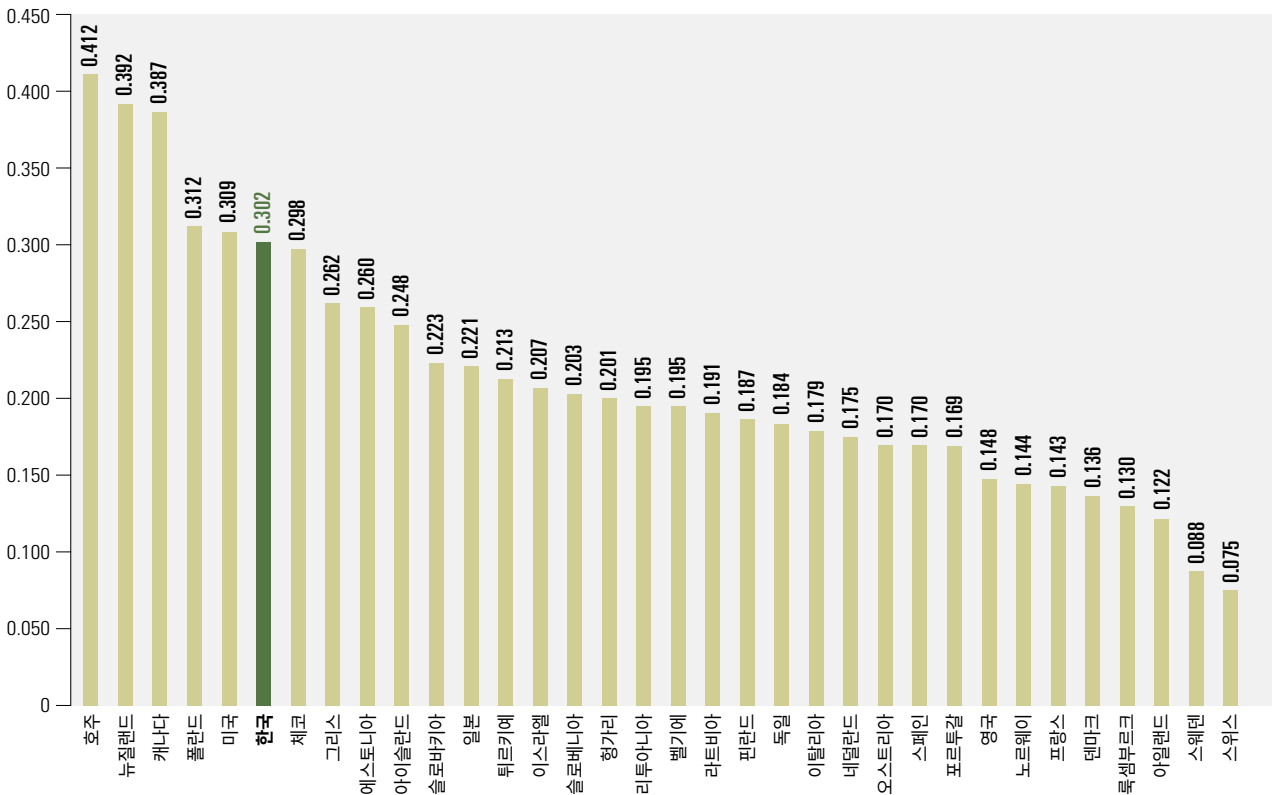
(단위: 톤CO₂eq./인)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0.27. 인출)

OECD 국가별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1

(단위: 톤CO₂eq./1,000USD)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0.27. 인출)

추세를 이어 갔는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7%로 더욱 크게 감소하여 10억 원당 367.9톤으로 집계된다. GDP가 증가한 데도 불구하고 총배출량은 줄어들며 원단위가 개선되고 배출 효율성이 좋아진 것이다.

2025년 초에 발표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2)’에는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996 IPCC 지침’을 따라 산출되었던 배출량 대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배출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2006 지침에는 NF3(삼불화질소)가 새로운 온실가스로 추가되었고 지구온난화지수 변경, 폐광, 요소수 등 신규 배출원 추가, 산화물 등 산정 방법 및 계수의 고도화, 기초통계 자료 개선 등이 적용되었다.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1년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과 기저효과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전년 대비 배출량이 늘어났었다. 한국(6억 7,665만 톤)은 자료가 제공된 OECD 34개 회원국 중 미국(63억 4,023만 톤), 일본(11억 6,220만 톤), 독일(7억 5,960만 톤)

에 이어 4위의 배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인 2020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과 캐나다에 이어 5위였으나 2021년에는 캐나다(6억 7,043만 톤)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배출량 순위가 한 단계 더 상승하였다.

한국의 2021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13.1톤CO₂eq)은 호주(20.5톤CO₂eq), 미국(19.1톤CO₂eq), 캐나다(17.5톤CO₂eq), 뉴질랜드(16.0톤CO₂eq), 룩셈부르크(14.7톤CO₂eq)에 이어 6위로 나타난다. 이는 2020년과 같은 순위이다. GDP 1,000달러당 온실가스 총배출량(0.302톤CO₂eq)도 호주(0.412톤CO₂eq), 뉴질랜드(0.392톤CO₂eq), 캐나다(0.387톤CO₂eq), 폴란드(0.312톤CO₂eq), 미국(0.309톤CO₂eq)에 이은 6위이며, 이 또한 2020년과 같은 순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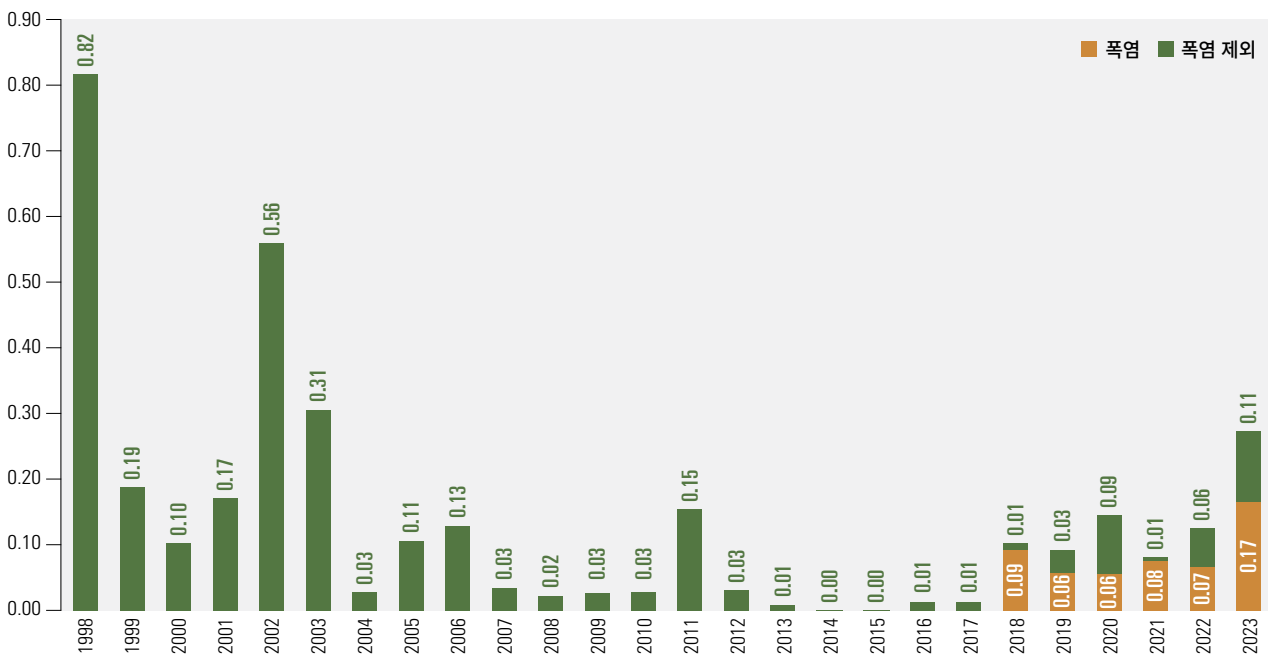
폭염, 호우 등 극한기상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대응 필요 지표 (🔗 관련 지표 13.1.1)

SDG 세부목표 13.1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각종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적응 및 회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도별로 편차가 큰데, 지난 20여 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

인구 10만 명당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 1998~2023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25.2.10. 인출)

주1 : 연도별 자연재해 실종·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주2 : 2018년부터 폭염, 2023년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됨



자연재난 유형별 실종·사망자 수,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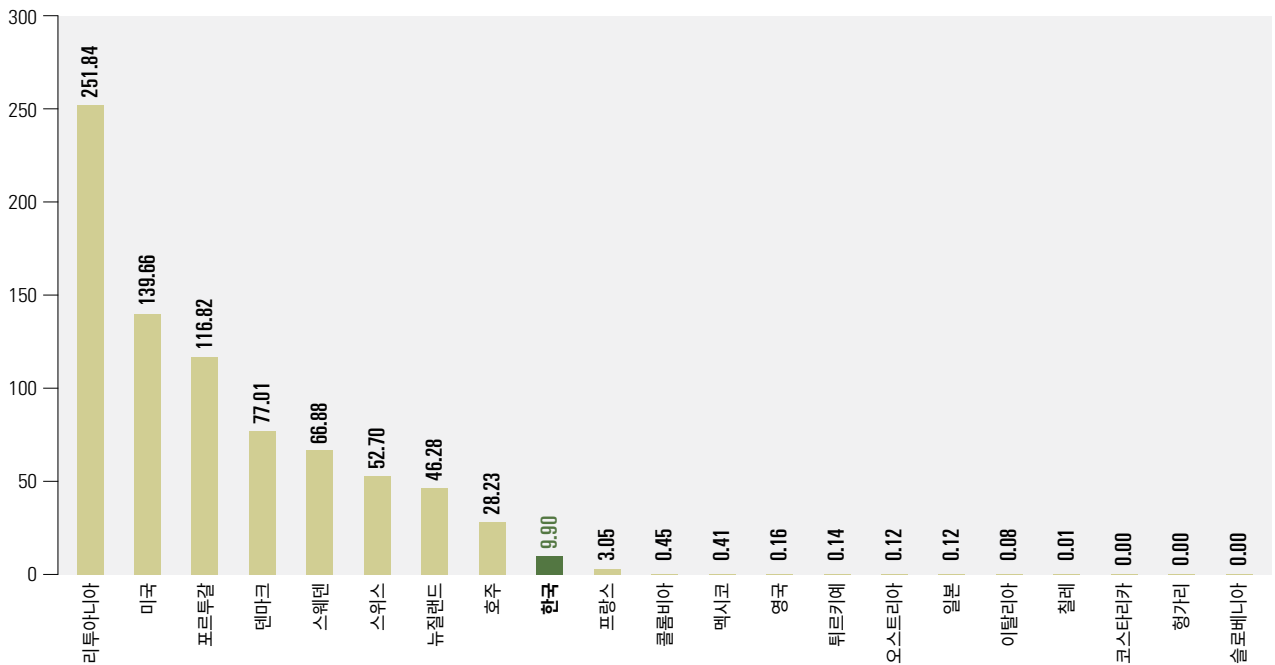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우	2	-	1	7	2	-	44	3	19	53
태풍	-	-	6	-	2	18	2	-	11	-
태풍·호우	-	-	-	-	1	-	-	-	-	-
대설	-	-	-	-	-	-	-	-	-	-
한파	미산정 (통계없음)									2
폭염	미산정 (통계없음)				48	30	29	39	34	85
합계	2	0	7	7	53	48	75	42	64	140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25.2.10. 인출)

OECD 국가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2022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21. 인출)

주1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며, 사망과 실종 외에 부상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포함함

주2 : 한국, 리투아니아, 미국, 포르투갈, 스위스, 튀르키예, 일본은 2021년 자료이고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는 2020년 자료임

사망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해 온 경향을 나타낸다. 과거에 비해 예·경보 시스템 등이 잘 구축되어 있고 구조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종·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폭염이 자연재해 인명피해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수가 늘어났지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는 2012년 이래 10만 명당 0.15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가 총 140명으로 집계되며 인구 10만 명당 0.2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연재난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집계기 시작된 첫해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48명, 30명, 29명, 39명, 34명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85명으로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된 이후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전체 실종·사망자 중 폭염에 의한 발생 비중이 60.7%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8~2023년 사이 발생한 전체 422명의 실종·사망자 중에서는 62.8%에 달해 폭염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편 2023년에는 총 140명 중 53명(37.9%)의 실종·사망자가 호

우로 인해 발생하였고, 2018~2023년 실종·사망자 중에서는 호우에 의한 발생 비중이 28.7%로 폭염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폭염, 집중호우를 비롯한 극한기상과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강도와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극한 기상과 자연재난은 지역별로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지역 차원의 기후적응 능력을 향상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2020~2022년 자료가 가용한 21개국의 자연재난 인명피해(실종, 사망, 직접 피해)를 살펴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9.9명으로 21개국 중 9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리투아니아(251.84명, 2021년), 미국(139.66명, 2021년), 포르투갈(116.82명, 2021년)을 포함한 3개국은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 국가 다음으로는 덴마크(77.01명, 2022년), 스웨덴(66.88명, 2022년), 스위스(52.70명, 2021년), 뉴질랜드(46.28명, 2022년), 호주(28.23명, 2022년)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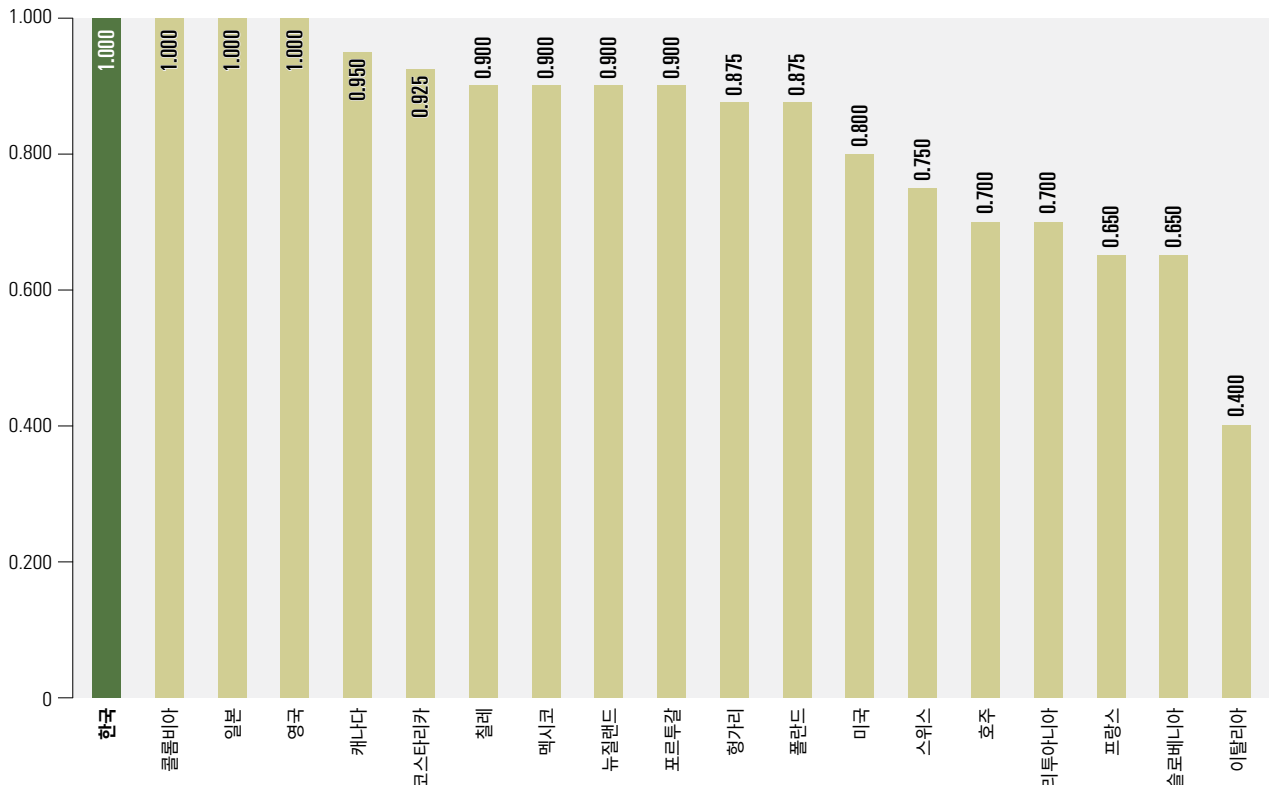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단위 제도

시행 중 (○ 관련 지표 13.1.2 / 13.1.3)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에서는 10년 주기로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WCDRR)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 제3차 WCDRR에서 재난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를 발표하였다.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2030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 생계, 건강의 손실과 개인, 기업, 지역사회, 국가의 경제·물리·사회·문화·환경적 자산 손실의 실질적 감소를 기대 성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DG 13.1.2 지표에서는 각국에서 이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수준의 재난위험경감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며, 13.1.3 지표에서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위험경감전략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국가재난위험경감전략의 이행 점수는 10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10개 항목에는 이 전략이 ① 목표, 지표, 기간 관련 다양한 시간 척도를 가지고 있는지 ② 새로운 위험 발생

OECD 국가별 국가 재난위험경감전략 이행 점수, 2021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12. 인출)



OECD 국가별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갖춘 지자체 비율, 2021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12. 인출)

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지 ③ 기존 위험의 경감을 목표로 하는지 ④ 경제·사회·건강·환경적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지 ⑤ 재난위험의 이해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는지 ⑥ 재난위험관리 거버넌스 강화 권고를 이행하는지 ⑦ 회복력 구축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투자 권고를 이행하는지 ⑧ 효과적 대응과 복원·재활·재건축에 있어 ‘더 나은 재건(Built Back Better)’을 위한 재난 대비 강화 권고를 이행하는지 ⑨ SDG, 파리협정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과 재난위험경감정책 간의 일관성을 증진하는지 ⑩ 진행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 정기 평가, 공개 보고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포함된다. 각 항목에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의 다섯 단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평균하여 국가재난위험경감전략 이행 점수를 산출한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95점을 받았고, 2019년 이후 10개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아 1점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9번 항목인 정책 일관성에서 0.5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여러 법에 의거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UN SDG 데이터베이스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19개 국가의 재난위험경감전략 이행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영국, 콜롬비아와 함께 전 항목 만점인 1점으로 평가되었다. 캐나다(0.950점), 코스타리카(0.925점), 칠레·멕시코·뉴질랜드·포르투갈(각 0.900점)이 0.9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탈리아(0.400점), 프랑스·슬로베니아(각 0.65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 붕괴, 폭발, 항공·해상 및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 등은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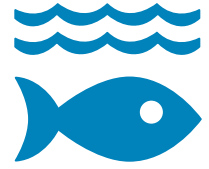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기구 운영,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재난 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활용 등 다양한 재난위험경감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별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수립,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재난위험경감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SDG 13.1.3 지표에서는 국가 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위험경감전략을 갖춘 지자체의 비율을 점검한다. 위와 같은 법·제도적 체계에 따라 한국의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재난위험경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 비율은 2015년 이래 100%를 유지하고 있다. UN SDG 데이터베이스에 2021년 기준 OECD 19개 회원국 자료가 있는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지자체 단위에서 100%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SDG 14번 목표에서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업활동과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자 한다. 지구의 바다는 산성화, 수온 상승, 부영양화, 오염, 어업자원 고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해역에서도 수온 상승, 어업생산량 감소, 해양산성화 등 부정적인 징후가 엿보이는 한편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 수산자원회복사업, 원양어업 국제규범 이행 강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 해양환경측정망에 따른 해양산도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pH 8.10~8.17 수준을 유지

- 해양산성화 장기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국 해역 표층수의 pH는 매 10년마다 약 0.019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 지구 대양이나 일본의 해양산성화와 비슷한 속도
- OECD 21개국의 해양산도는 국가별 평균 pH 7.71~8.24 수준

»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은 2011년 이래 뚜렷이 증가하여 2023년에 9,152억 원으로 최대 규모에 달한 후 2024년에는 7,518억 원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변동 추세와 대체로 일치

-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은 2020~2024년 사이 2.84~2.9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2013~2019년 기간의 3%대에 비해 줄어든 수준
- 민간과 공공 부문의 총연구개발비 중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0.7~0.8%대를 유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사업으로 집계되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0여 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도 13만 1,931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 증가

- 2023년 국가 해안쓰레기 중 무게 기준으로 50.1%를 플라스틱이 차지

»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0년대 연평균 151만 톤에서 2020년대 93만 톤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남획되는 어업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2024년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고 2027년 전 세계 최초로 모든 어선에 적용 예정

» 원양어업에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고 국제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준수정보 제공, 모니터링 강화, 인력 확충 등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원양어선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발생건수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없음’으로 유지

해양산도는 연평균 pH 8.10~8.17 수준을 유지

(🔗 관련 지표 14.3.1)

해양산도(pH)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다가 얼마나 산성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산도(pH)란 수소 이온 농도의 값으로 0에서 14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다. 7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으면 산성, 크면 알칼리성이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평균 pH는 약 8.1이지만 해양산성화로 인해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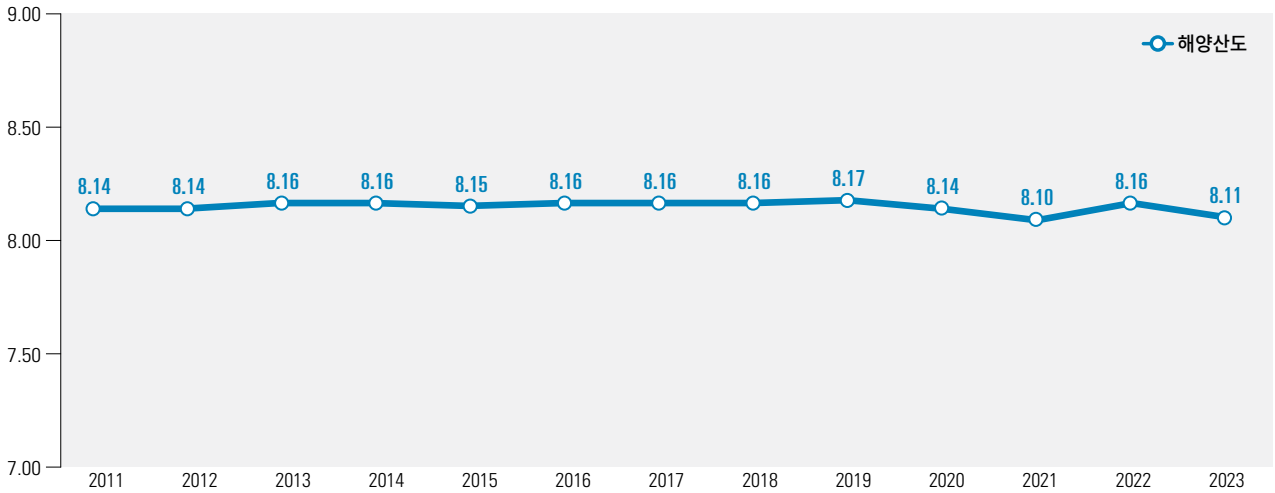
닷물의 pH가 낮아지면 많은 해양생물의 껍데기를 이루는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 녹으면서 생물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지표는 해양산성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UN에서는 해양산도를 측정할 때 ‘합의된 대표 추출 지점’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는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평균 해양산도(표층 pH), 2011~2023

(단위: 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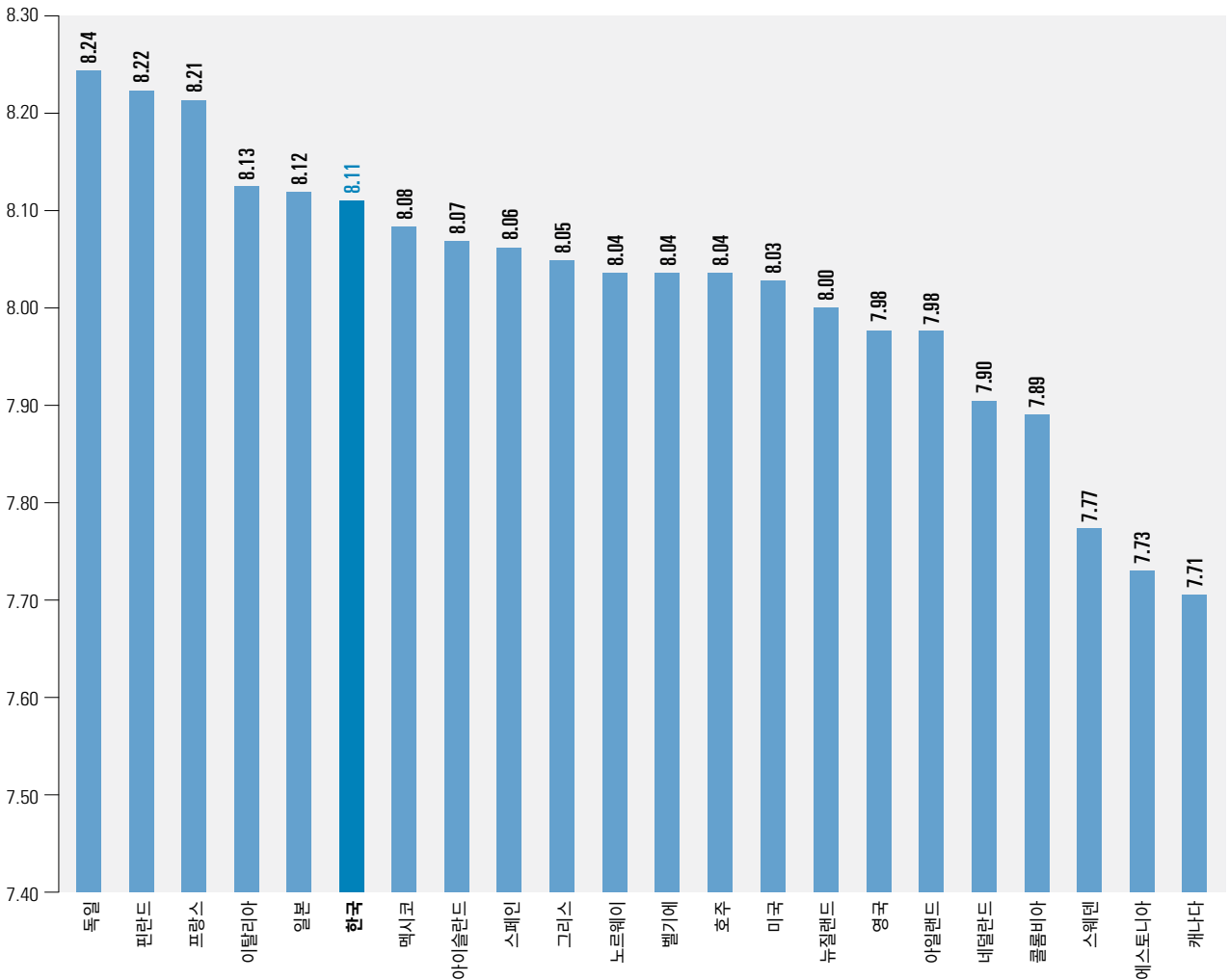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해양환경정보포털 <https://www.meis.go.kr/portal/main.do>, 2024.9.23. 인출)

주 : 이상치 제외

OECD 국가별 평균 해양산도, 2023

(단위: pH)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8.17. 인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해양환경정보포털 <https://www.meis.go.kr/portal/main.do>, 2024.9.23. 인출)

주 : 핀란드·일본·영국·네덜란드는 2019년,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호주·아일랜드·스웨덴은 2021년, 독일·그리스·노르웨이·벨기에·캐나다는 2022년, 한국·멕시코·아이슬란드·미국·콜롬비아·뉴질랜드·에스토니아는 2023년 자료임

Oceanographic Commission, IOC)에서 관리하는 부이(Buoy)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는 아직 공식적인 대표 측정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해양환경측정망에서 매년 4회에 걸쳐 전국 연안의 약 425개 정점에서 표층 pH를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pH는 뚜렷한 추세 없이 8.10에서 8.17 사이의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8.11을 기록하였다. 한편, 2022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한국 전 해역의 83개 정점에서 관측한 8년간의 해양산성화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관측에 따르면 해역 표층수의 pH는 매 10년마다 약 0.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지구 대양이나 인접국인 일본의 해양산성화와 비슷한 속도로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해양 pH 변화에 대한 이러한 측정 결과는 향후 해양 산성화 연구와 대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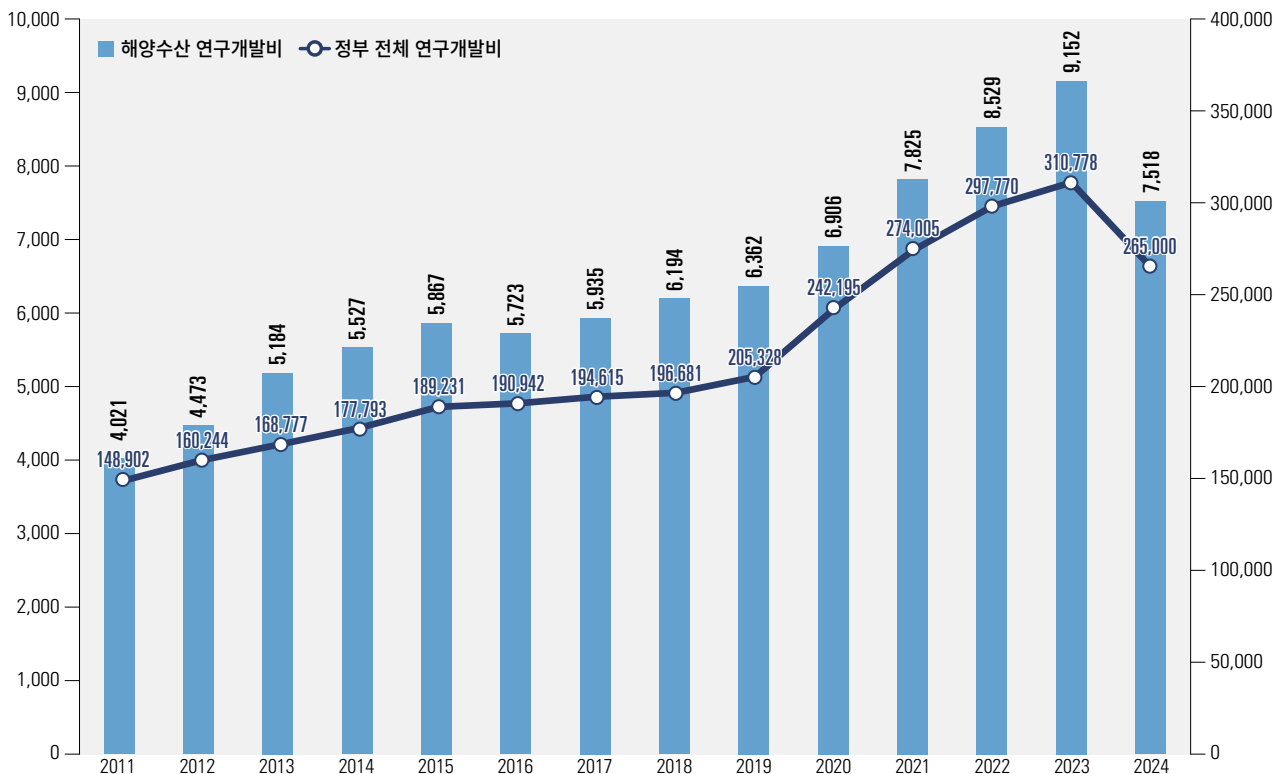
UN SDG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제출된 OECD 21개국의 ‘합의된 측정 지점’ 평균 해양산도와 한국의 해양환

경측정망 자료를 비교해 보자. 2016~2023년 사이에 측정된 국가별 최신 자료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의 평균 해양산도는 pH 7.71~8.24 수준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기준 연도가 다른 등 국가 간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역의 평균 pH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캐나다(7.71), 에스토니아(7.73), 스웨덴(7.77)으로 나타난다. 콜롬비아(7.89), 네덜란드(7.90), 아일랜드·영국(각 7.98)도 pH 7.8~8.0 사이에 그친다. 이 외에 미국·멕시코·호주·뉴질랜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벨기에·스페인·그리스 등 9개국은 pH 8.0 이상 8.1 미만, 한국·일본·이탈리아 등 3개국은 pH 8.1 이상 8.2 미만, 프랑스·독일·핀란드 등 3개국은 pH 8.2 이상 8.3 미만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해양산성화 정도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지적으로 산성화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해수 내 이산화탄소 분압에 대한 연구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전체 및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예산, 2011~2024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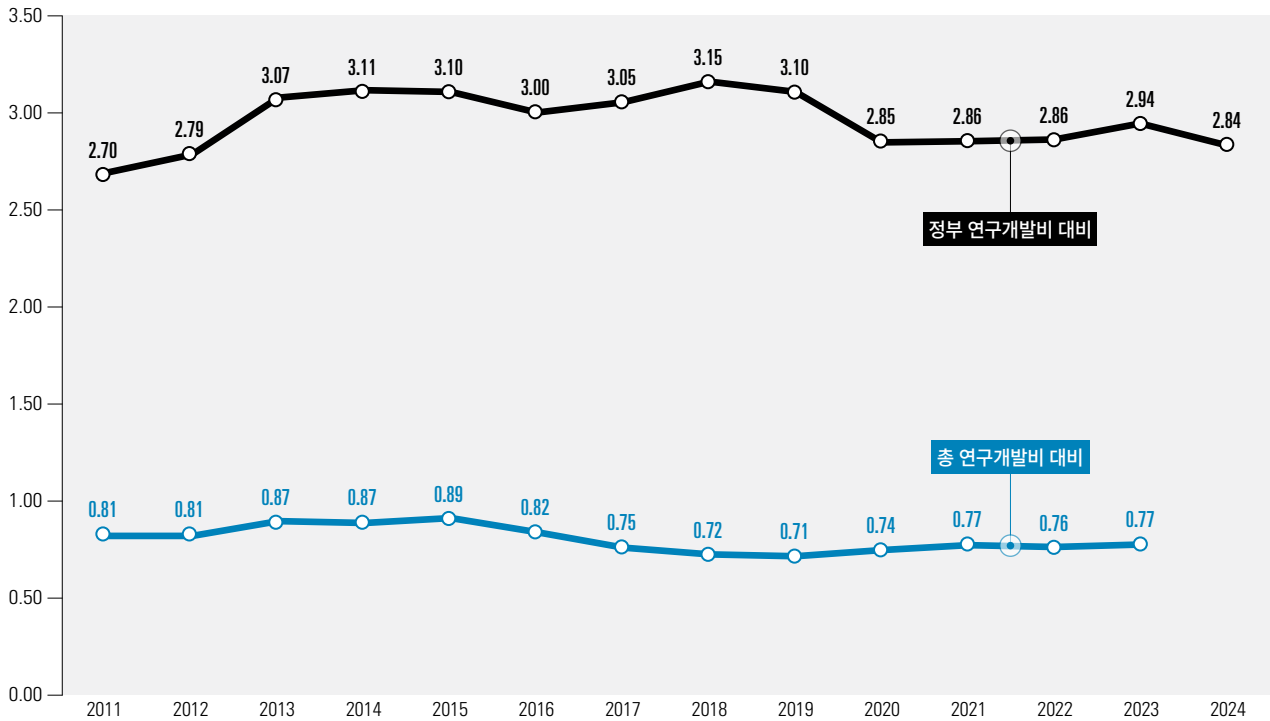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https://kosis.kr>, 2024.9.25. 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SDG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 2024.7.23. 인출)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비율, 2011~2024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https://kosis.kr>, 2024.9.25. 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2025.2.13. 인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SDG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 2024.7.23. 인출)

주 : 총연구개발비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가 사용한 총합임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24년에 감소 (📊 관련 지표 14.a.1)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예산은 지난 10여 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 왔다. 2011년 4,021억 원이었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두 배가 넘는 9,152억 원에 달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7~13%대에 이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세는 2024년에 크게 꺾였다.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예산은 전년 대비 17.9% 감소한 7,518억 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1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 최근까지 늘어난 예산이 수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셈이다.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연구개발 총예산에서 나타나는 변동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연구개발 총예산도 2011년 14.9조 원에서 2023년 31.1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전년 대비 매년 18.0%, 13.1%, 8.7%, 4.4% 늘어나며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 총예산에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예산이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보인 2020년과 2024년 사이에도 크게 변동하지 않고 2.84~2.94%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3년에는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7.3% 늘어나면서 정부 전체의 4.4%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전년 대비 0.08%p 상승한 2.94%에 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4년에 2.84%로 낮아지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연구개발비 내 해양수산 분야의 우선순위 변화를 시사한다.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은 2013~2019년 사이 3%대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그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모두 포함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총연구개발비는 2022년까지 집계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연구개발비 중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0.8%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0.7%대에서 안정적으로 등락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라스틱 비중은 여전히 높아

(☞ 관련 지표 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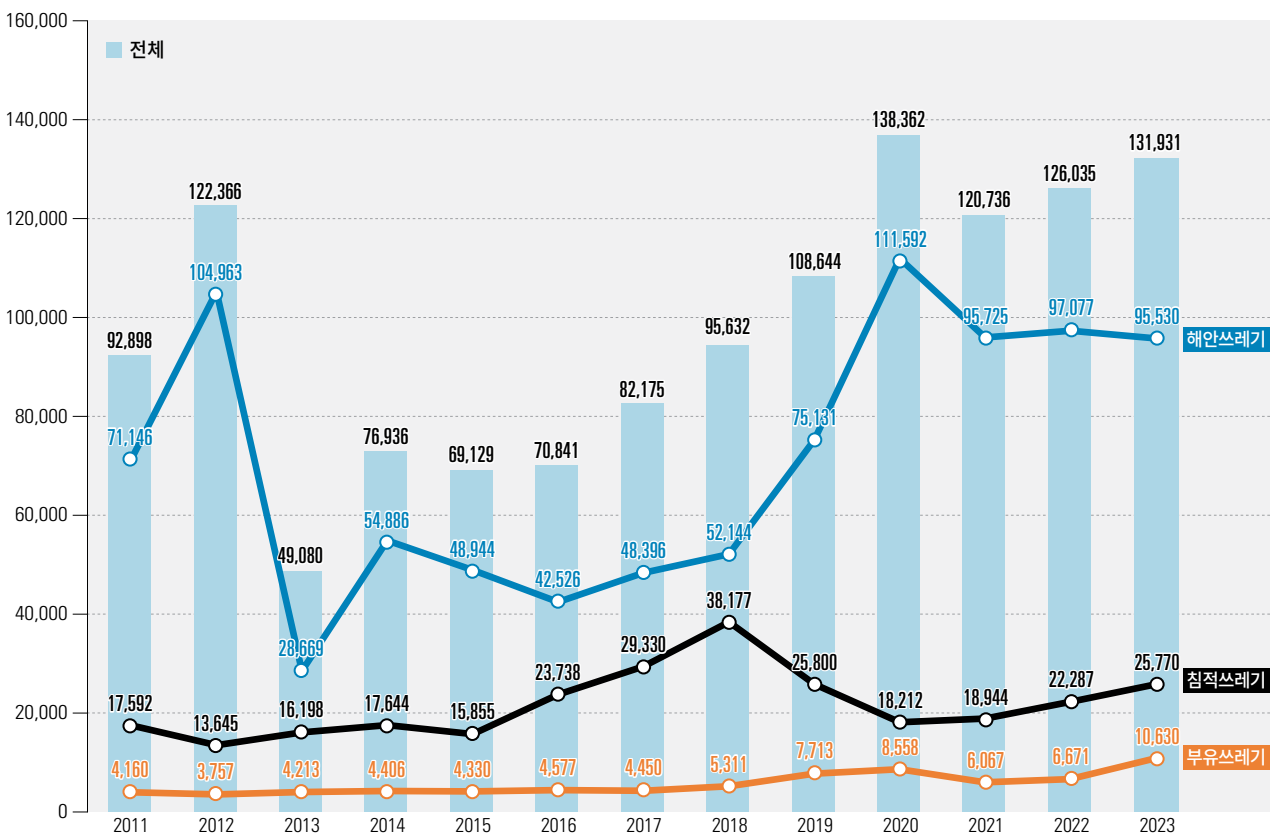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계된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이래 10여 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 오고 있으며, 2023년 총수거량은 13만 1,931톤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해양쓰레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안쓰레기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유쓰레기

와 침적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7% 늘어났다. 수거량의 전반적인 증가는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책적 노력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

전국 60개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2021~2023년 기간 동안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무게 기준으로 절반 가량인 49.2~51.3%에 이른다. 해안쓰레기 중에서는 플라스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바다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량, 2011~2023

(단위: 톤)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수거조사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portal/main.do>, 2024.9.26. 인출)

국가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 2018~2023

(단위: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플라스틱 무게(kg)	2,585.1	1,698.6	1,014.9	2,899.4	2,136.7	2,078.9
전체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무게 비율(%)	58.8	62.9	46.0	51.3	49.2	50.0

출처: 해양수산부,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portal/main.do>, 2024.8.17. 인출)

주 : 조사방법 일관성이 확보된 2018년 이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자료이며, 2018~2020년에는 전국 40개소, 2021~2023년에는 전국 60개소를 대상으로 함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영향 확대 중

(📊 관련 지표 14.4.1)

SDG 14.4.1은 해양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자원 중 어획 활동 대상이 되는 어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전체 어업자원 중 지속가능한 수준 안에 있는 어업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난 1980년대(1980~1989년) 연평균 151만 톤 수준에서 2000년대(2000~2009년) 116만 톤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최근 2020년대(2020~2023년) 들어서는 93만 톤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살오징어, 멸치는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부터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멸치와 고등어도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있다. 반면 주요 난류성 어종인 방어류, 전갱이류, 삼치류는 지난 40년간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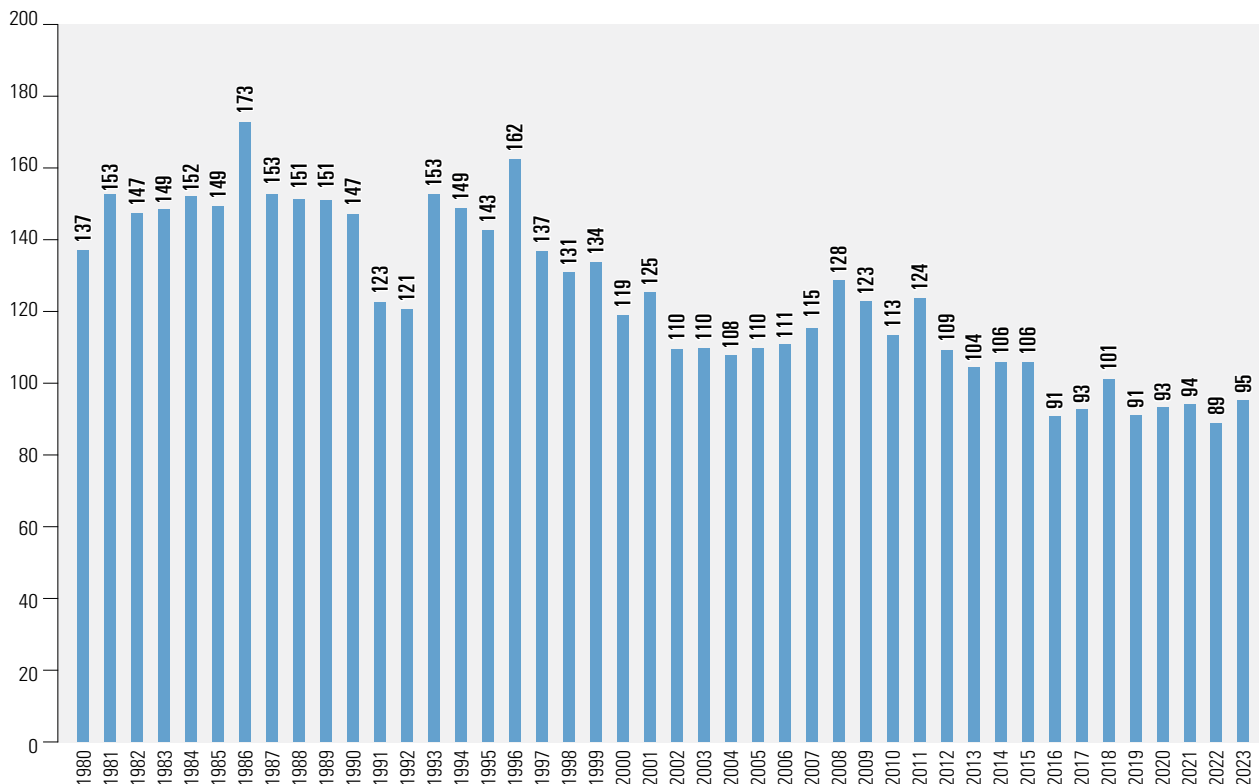
어업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기후변화, 과도한 어획활동, 미성어와 소형어 어획, 서식지 환경 악화 등 다

양하다. 이 중 기후변화에 관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44도 상승한 반면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은 0.70도 상승하는 데 그친다. 우리 바다의 수온이 전 지구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해의 표층 수온 변화는 1.90도로 서해 1.27도, 남해 1.15도에 비해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 수온 1도의 변화가 수산생물(변온동물)에게는 10도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수온 변화에 따라 생물의 산란과 서식 환경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연근해 어업자원량은 기후변화, 과도한 어획 등 자연·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획되고 있는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4개 어종(도루묵, 꽃게, 낙지, 오본자기)을 선정하였고, 그 후 대상 어종을 확대하여 2024년에는 수산자원회복 대상 어종으로 25종이 선정되었다. 수산자원회복계획 아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 자원 조성 사업(인공어초,

연근해어업 생산량, 1980~2023

(단위: 만톤)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 2025.2.6.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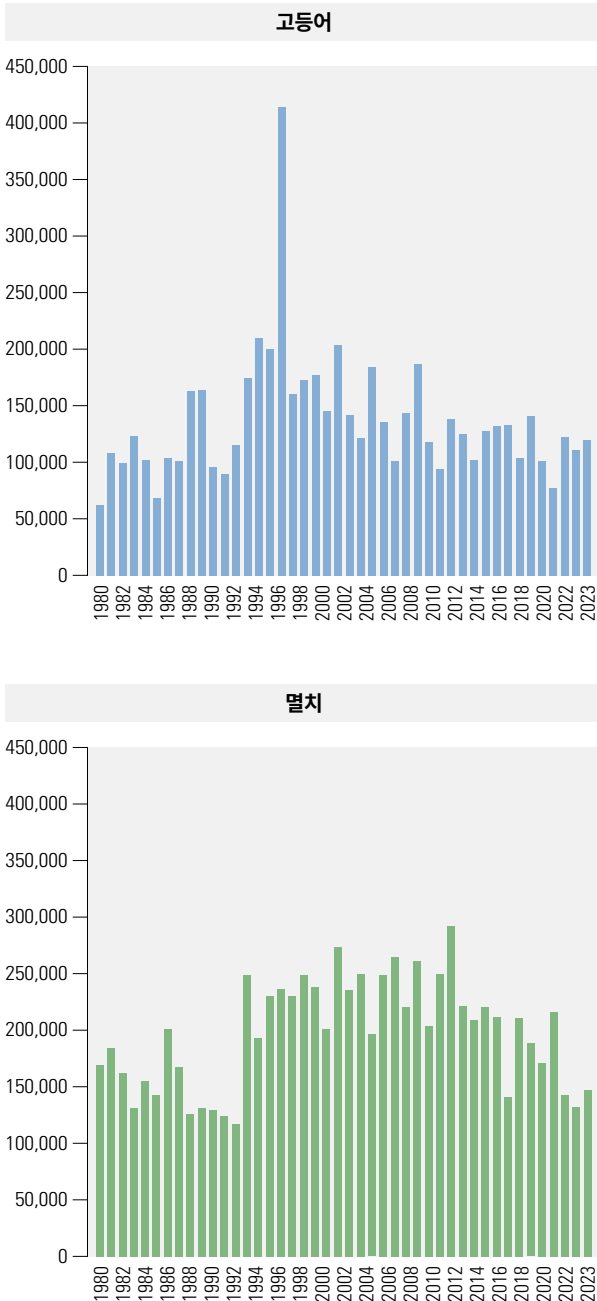
종묘 방류, 바다목장 사업), 서식지 개선 사업(바다숲 사업, 폐어구 수거 사업), 어선 감척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국내 대표적인 자원 관리 수단으로, 어종별로 연간 허용가능 어획량을 설정함으로써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TAC 제도는 1999년에 4개 어종, 2개 업종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2027년에는 모든 어선에 TAC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10톤 이상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TAC가 10톤 미만 연안어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적용 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의 3단계로 나누고, 제도의 이행 수준과 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어선에 적용될 TAC 제도는 대상 어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우리 바다의 모든 어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고등어, 살오징어, 멸치, 방어류 어획량, 1980~2023

(단위: 톤)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 2025.2.6.인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및 업종(2024)

시행 연도	어종	적용 업종
1999	고등어	대형선망
1999	전갱이	대형선망
1999	붉은대게	근해통발
2001	제주소라	마을어업
2001	키조개	잠수기
2001	개조개	잠수기(부산, 경남, 전남)
2002	대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2003	꽃게	연안자망(인천), 근해자망, 연안통발(인천)
2006	오징어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 근해자망
2009	도루묵	동해구외끌이저인망, 동해구트롤
2009	참홍어	근해연승(인천, 전남), 연안복합(인천, 전남)
2019	바지락	잠수기(경남 거제)
2022	갈치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저인망
2022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2022	삼치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자료: 한국수산물원공단, TAC 소개(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 2024.10.1. 인출)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수단 충실히 이행 중

(🔗 관련 지표 14.6.1)

SDG 지표 14.6.1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 다양한 국제규범의 이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양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은 2022년 기준 총 40만 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61만 톤의 11% 수준이다. 하지만 원양수산물은 한국의 수산물 10대 수출 품

목 중 72%를 차지하고 수산물 총수출액의 34.3%를 차지한다. 원양어업은 공해상 혹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내에서 어획활동을 하므로 조업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 규정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IUU 어업 예방과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존관리 규정 등 국제규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양어업자에게 국내외 조업 관련 규정과 국제수산물기구 보존관리 규정 변경사항을 조업 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사전예고제’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에서는 2022년부터 IUU 어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원양어업에서 국제규범을 충실히 따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IUU) 어업 발생건수, 2015~2023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 건수	15	없음	2	없음	3	1	1	없음	없음

출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실태조사;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에는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라는 전략하에 ‘IUU 어업 대상체계 고도화’를 위한 계획이 제도, 인력, 기술 측면에서 수립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조업감시센터(Fisheries Monitoring Center, FMC),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비정

부기구(NGO) 등과 공조하여 IUU 어업 감시 능력을 확장하고, IUU 어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옵서버 의무 승선 상황에 대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옵서버 미승선 선박의 IUU 어업을 예방하는 등 인력과 기술 측면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5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SDG 15번 목표에서는 육상 생태계에서 생물종과 유전적 다양성을 보전·증진하고 산림 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산림면적의 감소,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보호의 정체, 야생생물 불법거래의 증가 등 여러 요소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도 응집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산림면적과 적색목록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대비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보호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을 준비 중이다.

»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은 2023년 62.59%로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지만 토지전용 등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전국 산림면적은 2010~2020년간 1.1% 감소하였는데, 죽림과 무임목지를 제외하고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만 본다면 감소율은 2.7%에 달함
- 2019~2023년간 연평균 6,887ha의 산림이 택지(20.4%), 공장(13.6%) 등 타 용도로 전용
- 산림비율은 2010~2023년간 1.08%p 감소하였으며, 모든 광역시도에서 산림비율 감소 발생

» 육지, 담수, 산악 지역의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대비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2023년 각각 37.58%, 36.83%, 20.21%로 OECD 평균인 64.34%, 65.45%, 60.28%에 못 미침

-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전체 면적 대비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목표 수립
- 한국의 육상(육지+담수) 보호지역은 2022년 총 27,887.89km²(중복 포함)로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17.3%이며, OECM 포함 및 30%로 확대를 위한 준비 중

» 멸종 위험을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는 2024년 0.68로 평가되며 2000년(0.79)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중

-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00~2024년 기간 동안 0.11 떨어져 OECD 국가 중 프랑스(-0.12)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큼
- 2024년 OECD 38개국 중 21개국의 적색목록지수가 0.90 이상에 달해 한국과 격차를 보임
- 국제적으로 서식지 기반의 종 보호를 위한 지표로 생태계 적색목록(Red List of Ecosystems, RLE)이 제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자료 구축 및 개발 진행 중

토지전용 등에 따라 모든 광역시도에서 산림비율 감소 (📍 관련 지표 15.1.1)

한국의 산림면적은 2023년 기준 총 628만 7,3254ha로 집계된다. 국토면적의 62.59%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 평균(36.17%, 2020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1990년에는 총 647만 6,030ha로 국토면적의 65.23%를 차지하였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산림면

적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토지전용이다. 즉 산림이 농경지, 주택용지, 공장용지, 도로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6,887ha의 산림이 타 용도로 전용되었다. 이 중 택지(20.4%), 공장(13.6%), 도로(9.0%), 농지(6.6%), 골프장(3.5%), 묘지(0.9%) 등의 순으로 전용이 많았다.

전국의 산림면적은 2010년 636만 8,843ha에서 2020년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199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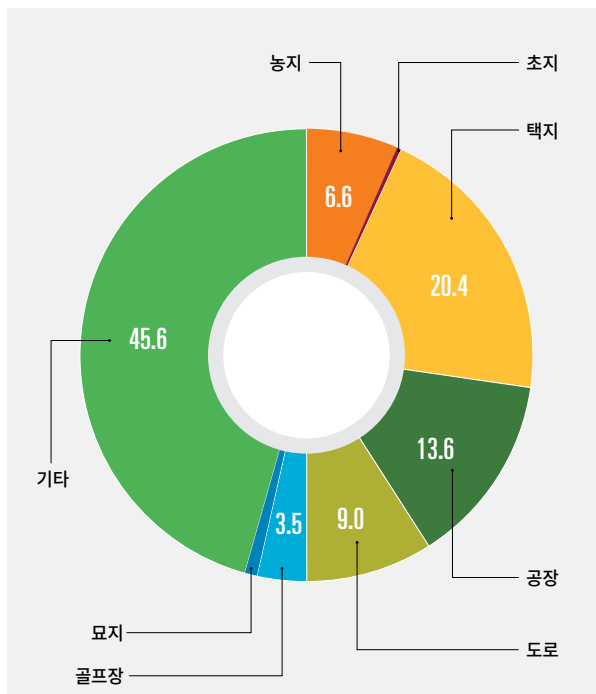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2025.2.12.인출)

용도별 산지전용 허가 면적 비중, 2019~2023

(단위: %)



출처: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2025.2.12.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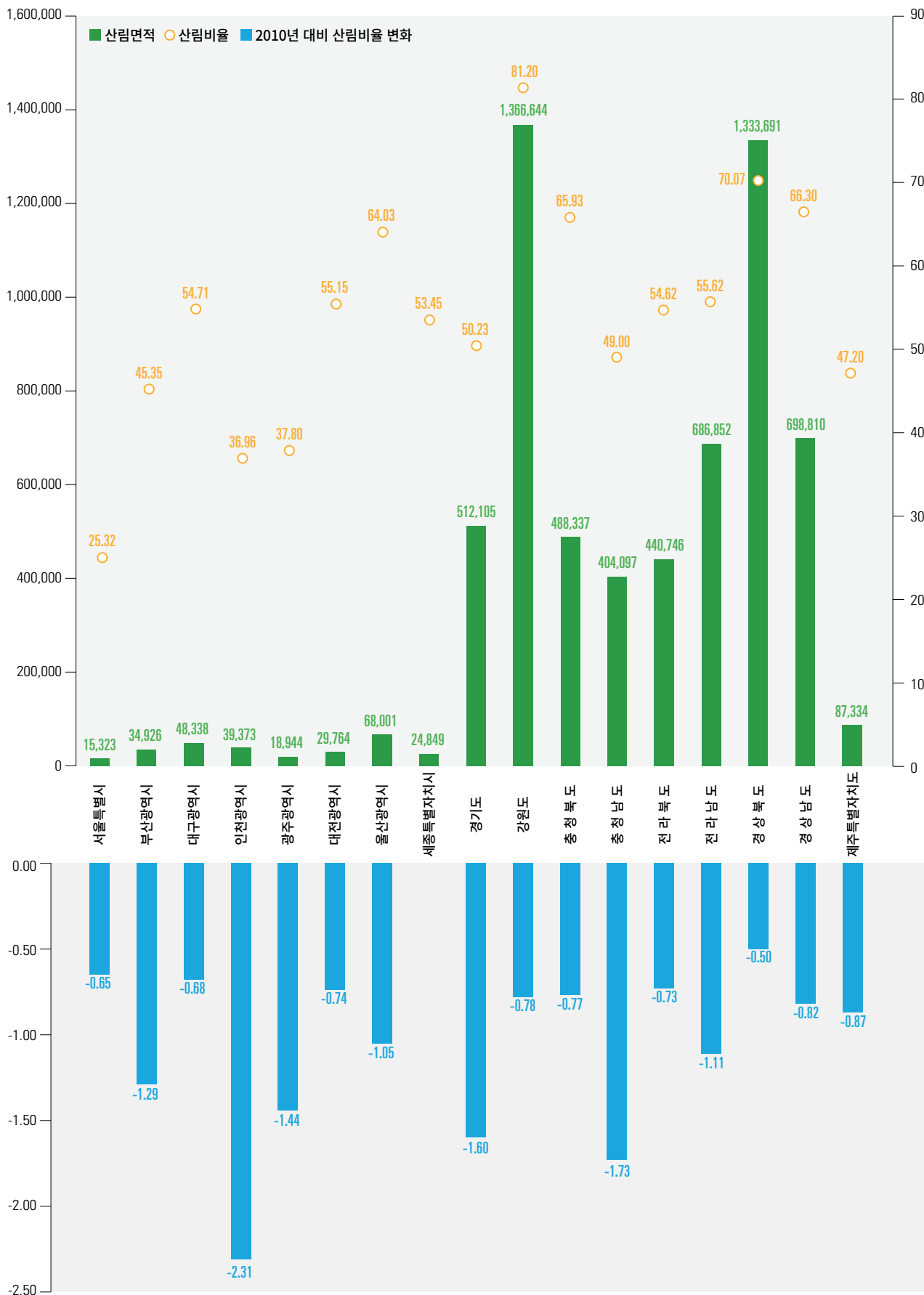
주 : 최근 5년(2019~2023) 평균값에 대한 비중

629만 8,134ha로 1.1% 감소하였다. 하지만 산림 구성 비율이 낮은 죽림과 무입목지를 제외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만 본다면 2020년 이들 세 유형의 산림면적은 총 599만 6,219ha로 2010년 대비 감소율은 2.7%에 이른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2020년 기준 산림면적은 강원(136만 6,644ha), 경북(133만 3,691ha), 경남(69만 8,810ha), 전남(68만 6,852ha) 등의 순으로 크다. 전체 면적 대비 산림비율로는 강원(81.20%), 경북(70.07%), 경남(66.30%), 충북(65.93%), 울산(64.03%) 등의 순으로 높다. 반면 산림면적이 작은 지역은 서울(1만 5,323ha)과 광주(1만 8,944ha) 등이고, 산림비율이 낮은 곳도 서울(25.32%), 인천(36.96%), 광주(37.80%) 등이다. 2010~2023년 사이 산림비율은 전국적으로 63.67%에서 62.59%로 1.08%p 감소하였다. 2010~2020년 사이 모든 지역에서 산림비율이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2.31%p), 충남(1.73%p), 경기(1.60%p), 광주(1.44%p), 부산(1.29%p) 등이다.

지역별 산림면적과 산림비율 및 2010년 대비 산림비율 변화, 2020

(단위: ha, %, %p)



출처: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2025.2.12.인출)



육지, 담수 및 산악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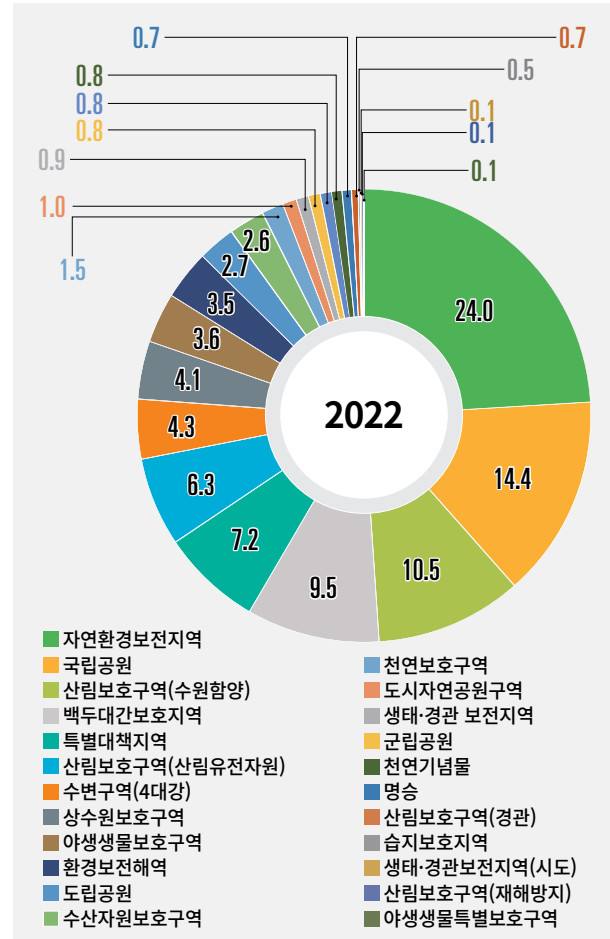
면적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15.1.2 / 15.4.1)

SDG 15.1.2에서는 육지와 담수의 핵심생물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 KBA) 중 보호지역(Protected Area, PA)으로 지정된 면적을 지표로 삼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보호지역 비율은 육지 37.58%, 담수 36.83%로 나타난다. 이는 OECD 평균치인 육지 64.34%, 담수 65.45%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SDG 15.4.1에서는 산악 지역에서의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대비 보호지역 면적 비율도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산악 보호지역 비율은 20.21%에 그친다. OECD 국가 중 자료가 공개된 32개국의 평균은 60.28%에 이른다.

한편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전체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을 지표로 삼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내륙과 해양의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을 각각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보호지역(PA, Protected Areas)과 함께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비율, 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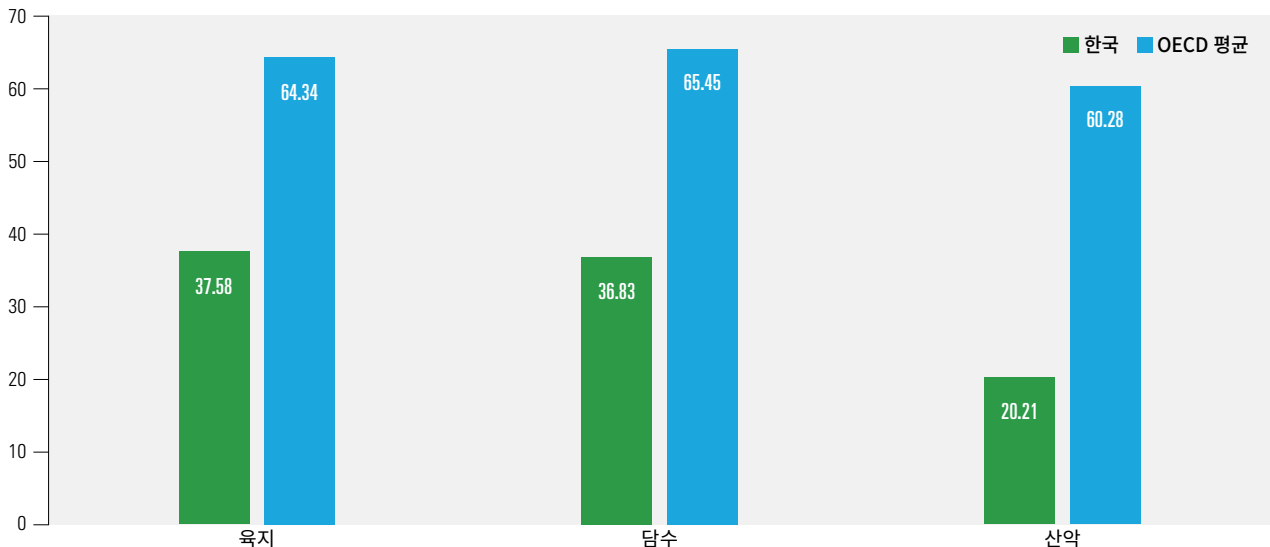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3,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주 : 육상(육지+담수) 보호지역이며, 해양은 제외됨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비율, 2023

(단위: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kosis.kr>, 2024.10.3. 인출);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2.3. 인출)

주1 : IUCN에서 정의하는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주2 : 산악의 경우 OECD 평균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제외한 32개국 평균

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보전 수단을 확장하였다.

한국에서도 2023년 말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제권고인 2030년까지 30%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에는 16개 법률에 따라 29개 유형의 보호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총면적(육상, 중복 포함) 27,887.89㎢ 중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24.0%),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14.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10.5%) 등이 있다. 한국의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2022년 기준 육지 17.1%, 담수 21.6%이고, 육상 전체로 보면 17.3%로 집계된다. 향후 OECM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 마련과 등재·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보호지역과 그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미흡, 보호지역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부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 미흡 등 다양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7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서는 보호지역과 OECM의 양적 확대와 함께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강화, 보호지역 관리의 효과성 제고와 거버넌스 구축, 보호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같은 주민지원과 상생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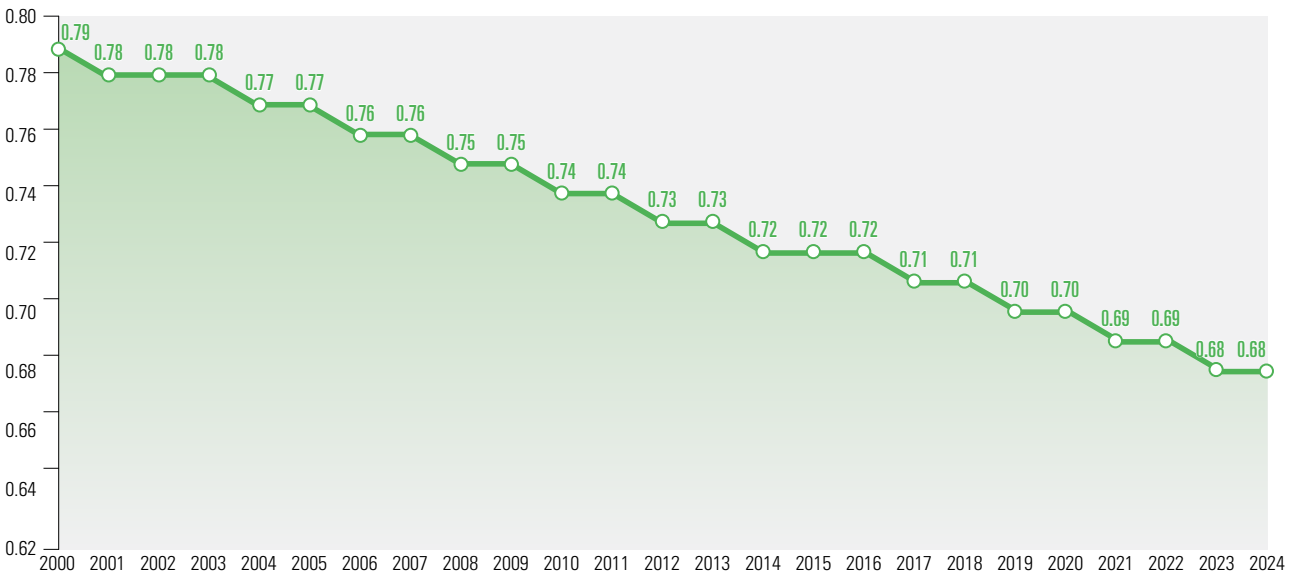
적색목록지수 악화 추세 지속되는 가운데

생태계 적색목록지수 개발 중 (📌 관련 지표 15.5.1)

국제사회에서는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야생생물의 현황과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서식지 기반의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을 위해 생태계 적색목록(Red List of Ecosystems, RLE)을 개발하여 기존의 적색목록지수와 함께 종 보호를 위한 주요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적색목록지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멸종 단계를 0(모든 종이 절멸)과 1(모든 종이 관심 대상)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2024년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전년도에 이어 0.68로 평

한국의 적색목록지수, 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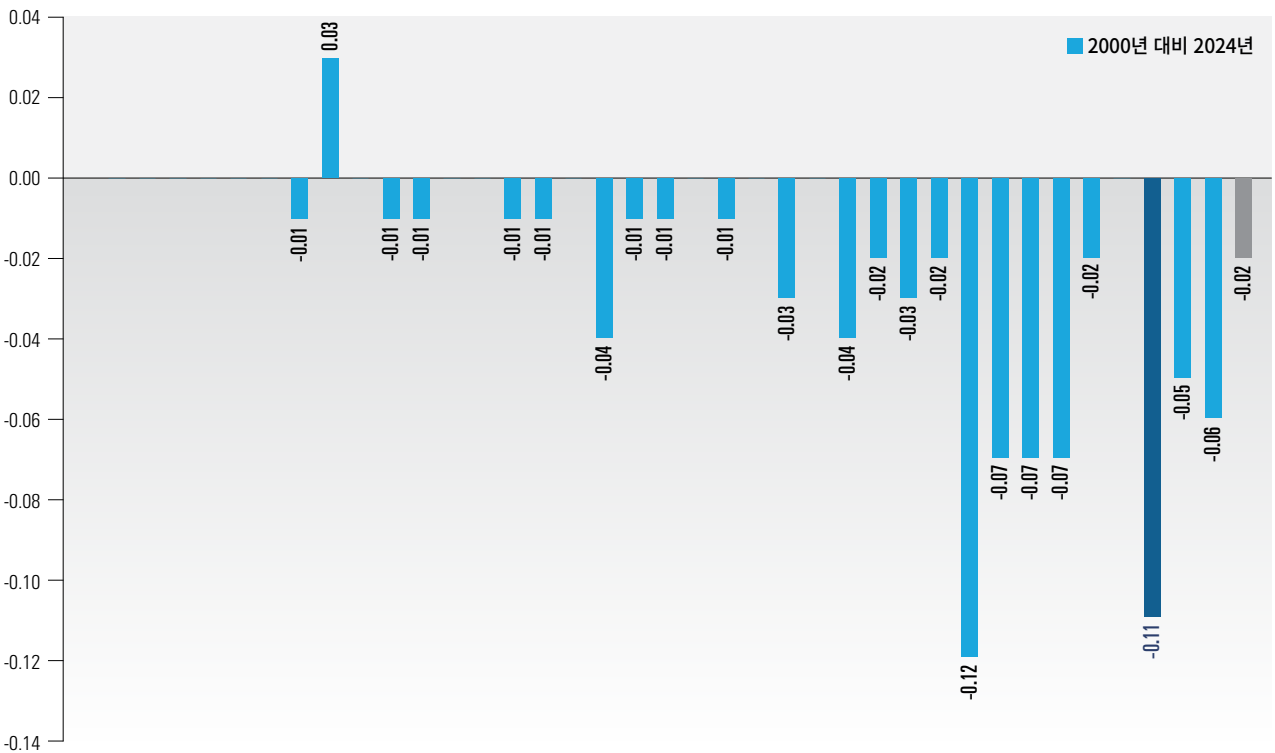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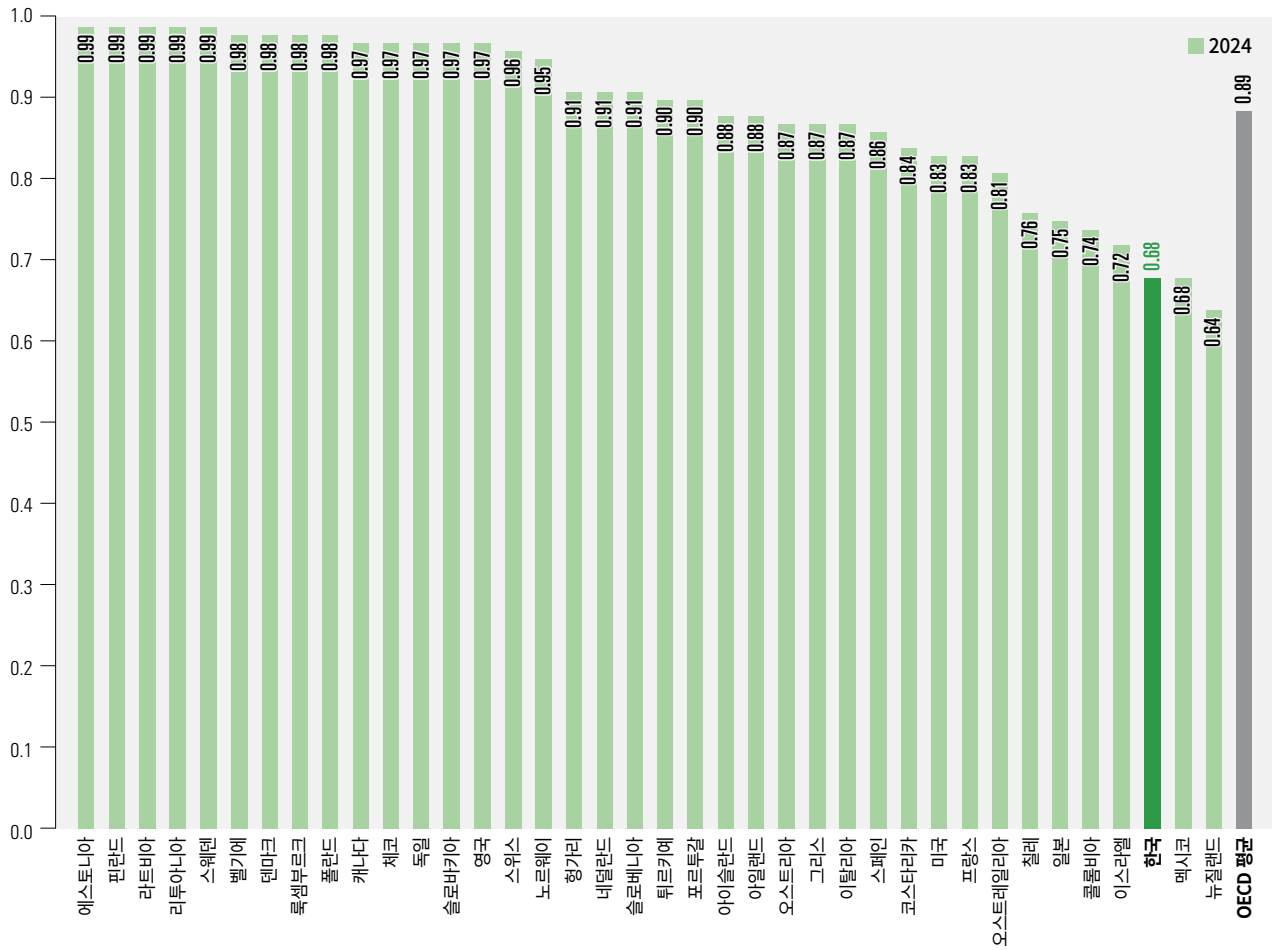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kosis.kr>, 2025.2.4. 인출)

주 : 0~1 사이의 지수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OECD 국가별 적색목록지수 및 2000년 대비 변화, 2024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kosis.kr>, 2024.10.3. 인출)

주 : 0-1 사이의 지수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가된다. 이는 2000년 0.7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2024년 OECD 38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평균 0.89이고 이 중 21개국의 경우 0.90 이상에 이른다. 한국과 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000년 대비 2024년에 적색목록지수가 상승한 국가로는 폴란드(+0.03)가 유일하며, 15개국에서 2000년 수준을 유지,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하락하였다. 2000~2024년 기간 동안 OECD 국가 평균은 0.02 하락하는데 그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0.11 하락하여 프랑스(-0.12)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큰 국가로 나타난다.

째로 하락 폭이 큰 국가로 나타난다.

한편 생태계 적색목록은 특정 생태계 유형의 상대적인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계 집단의 평균적인 붕괴 위험성을 측정하고 각 생태계 위험 범주의 실제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위험성을 추적하는 지수이다. 한국에서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생태계 적색목록지수를 핵심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2024년부터 관련 자료 구축 및 지표 산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6 PEACE AND JUSTIC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 16번 목표에서는 폭력과 범죄의 퇴치, 공정성과 포용성의 증진, 공공정책과 민간경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지향한다. 지구적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유혈 충돌이 지속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언론인과 인권운동가의 안전, 수감자의 인권,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 정부 예산의 안정성 등도 여전히 개선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공공서비스의 질 등에서 긍정적 징후를 보이는 한편 청년 세대의 정치 대표성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드러낸다.

- » 공직에서 장애인 대표성을 보면, 2023년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중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3.54%와 3.70%로 법상 고용의무에 따라 늘어나고 있음
 - 단 의무고용률(3.6%)과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5.1%)을 감안하면 개선 여지가 있음
- » 청년 세대의 정치 대표성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의원의 비율은 4.7%에 불과하며, 45세 이하 의원의 비율은 7.4%로 OECD 최하위권
- »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보건서비스(82.3%)부터 경찰서비스(55.2%), 공청회·청문회(42.9%, 2022)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인허가 서비스와 공청회·청문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뚜렷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과 정책 참여의 향상을 시사
- »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1996년 42.4%에서 2023년 18.2%로 떨어지며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
- » 살인 발생비는 2010년대 이래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2021년 10만 명당 0.53명을 기록한 후 감소세 주춤
- »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SDG의 세부목표 중 하나
 - 출생등록이 누락되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됨

공직에서 장애인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OECD 최하위권 (📍 관련 지표 16.7.1)

지속가능발전의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는 공공의 의사결정이 시민의 의사를 고르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SDG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있는 공직자 집단이 성,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표하는지 점검하고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청년의원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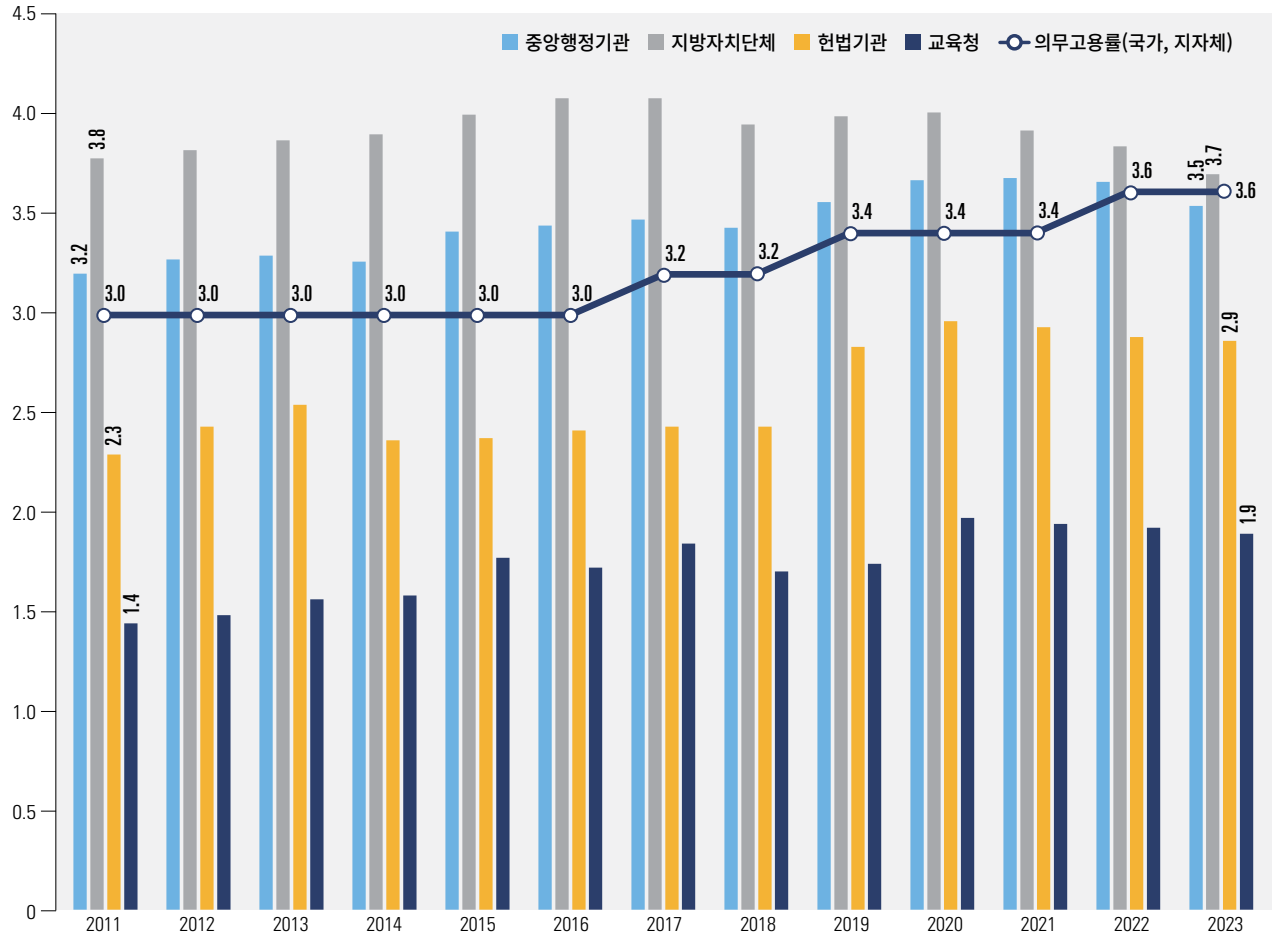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청이나 헌법기관 등에서

는 법상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매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과 실시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은 법이 처음 시행된 1991년에 2%의 권고 수치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는 2% 의무고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08~2016년 3%, 2017~2018년 3.2%, 2019~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부터는 3.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현재 국가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중 장애인은 각각 3.54%와 3.70%에 이른다. 다만 국가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021년 3.68%, 지자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016년과 2017년 4.08%로 각각 최고치를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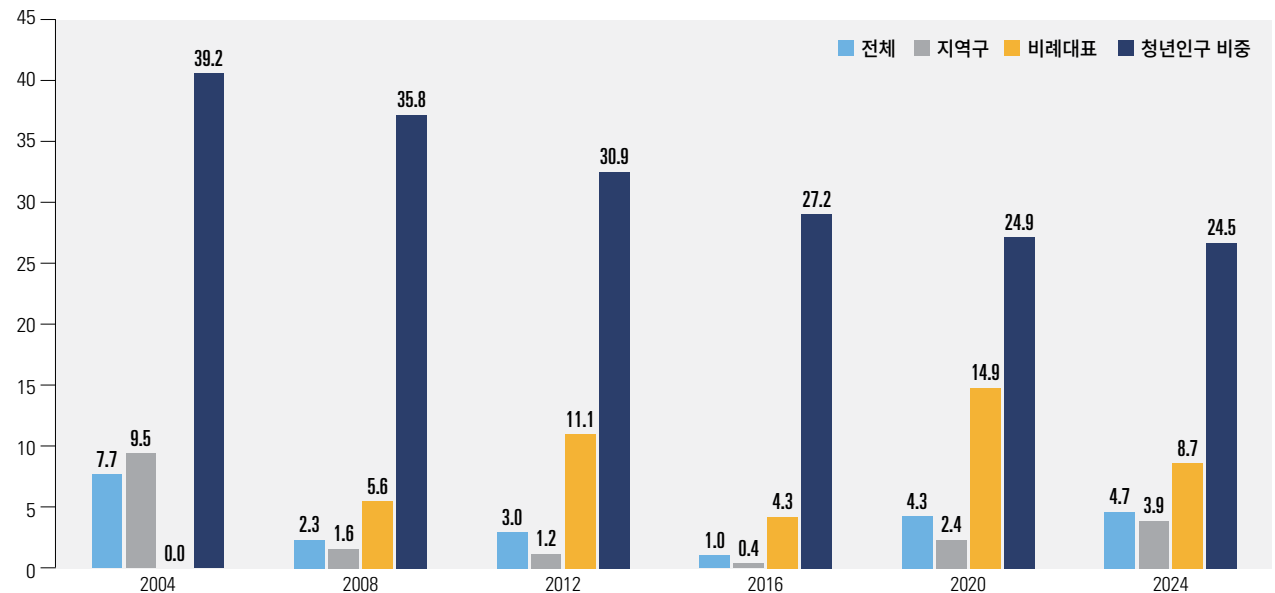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https://kosis.kr>, 2024.10.2. 인출)

주 : 2010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기준에 따라 중증 장애인은 2배수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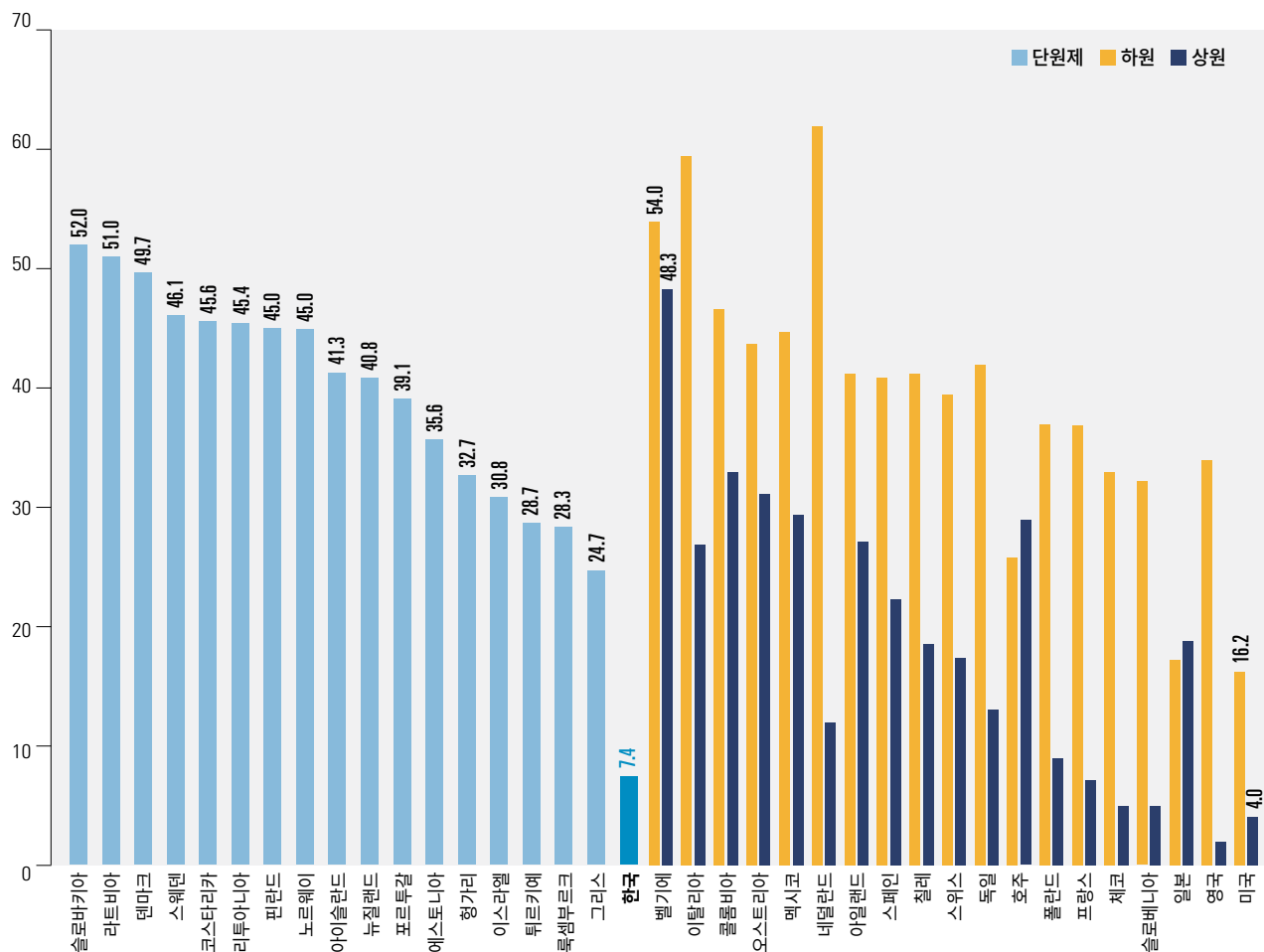
청년(40세 미만) 국회의원 비중, 2004~2024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통계(<http://info.nec.go.kr>, 2025.2.1. 인출)

주1 : 청년은 40세 미만 기준

주2 : 청년인구 비중은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갖는 25세 이상 인구 중 40세 미만 인구의 비중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10.2. 인출)

주1: 청년은 45세 이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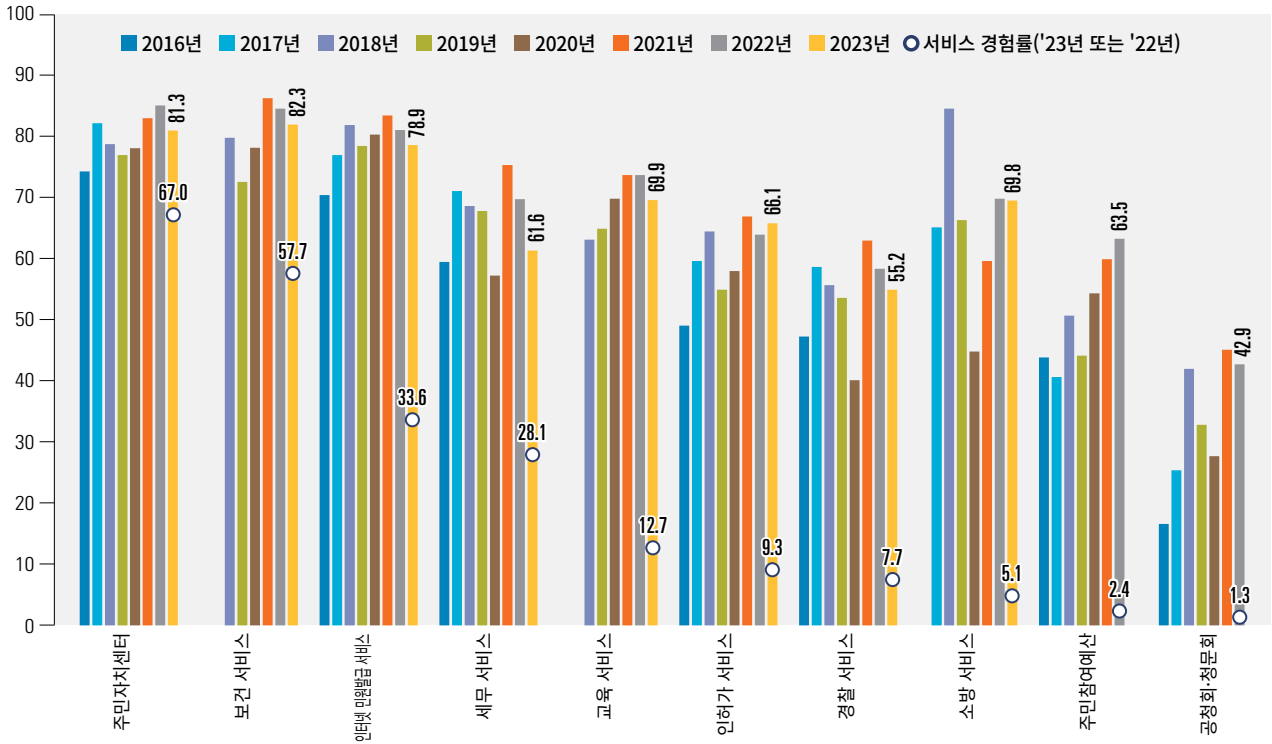
주2: 칠레 하원은 2021년 수치이며, OECD 38개국 중 캐나다는 수치 없음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2023년 국가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3.54%)은 의무고용률(3.6%)에도 미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의 등록장애인은 2023년 기준 264만 2,000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5.1%로 집계된다.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청년 세대가 얼마나 대표성을 갖는지는 미래 세대의 몫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0세 미만 당선자 비중은 4.7%에 불과하였다. 2004년 제17대 선거에서 7.7%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당선자 중 40세 미만의 비중은 2024년 기준 3.9%로 더욱 적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년인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피선거권

을 갖는 25세 이상 인구 중 40세 미만의 비중이 2023년 기준 24.9%인 데 비해 40세 미만 국회의원의 비중은 그 1/5 수준에 불과하다.

UN의 SDG 데이터베이스에서 청년의원 비율은 45세 이하 기준으로 집계된다. OECD 38개국 가운데 단원제 의회를 가진 18개국의 청년의원 비율은 평균 38.3%로 집계되며, 이 중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은 7.4%로 가장 낮다. 양원제 국가들에서는 하원의 청년의원 비율(평균 39.4%)이 상원(평균 18.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하원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미국(16.2%)도 한국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청년의원이 적은 상원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보다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19개국 가운데 영국, 미국, 체코, 슬로베니아, 프랑스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https://kosis.kr>, 2024.9.29. 인출)

주1: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주2: 소방서비스는 2016년, 교육서비스와 보건서비스는 2016~2017년, 공청회·청문회와 주민참여예산은 2023년에 조사되지 않음

주3: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보건, 주민자치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인허가에 서비스 만족도 상승

(☞ 관련 지표 16.6.2)

SDG 16번 목표에서 지향하는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제도에는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공서비스는 보건서비스(82.3%)이며, 그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81.3%),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78.9%)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공청회·청문회(42.9%, 2022년), 경찰서비스(55.2%)와 세무서비스(61.6%), 주민참여예산(63.5%, 2022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인허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6.1%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16년 49.3%에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용자 비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2023년 조사에서 제외된 공청회·청문회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만족도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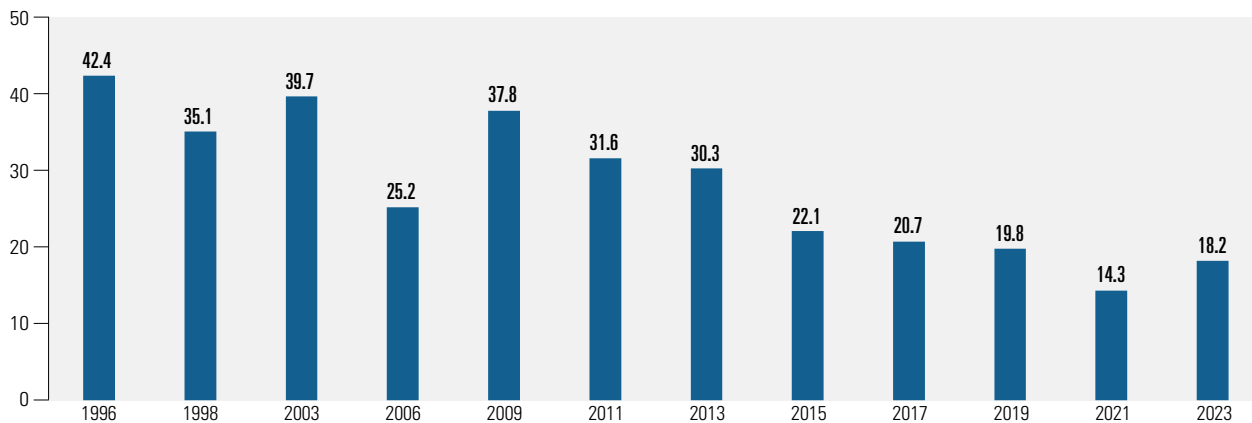
범죄 두려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16.1.4)

SDG 16.1 세부목표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이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한다. 이 목표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그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18.2%로 나타난다. 이 조사가 시작된 1996년에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 42.4%에 달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37.8%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범죄 가능성이 줄었던 2021년에는 14.3%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행의 순으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다. 다만 성폭행 피해가 여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1996~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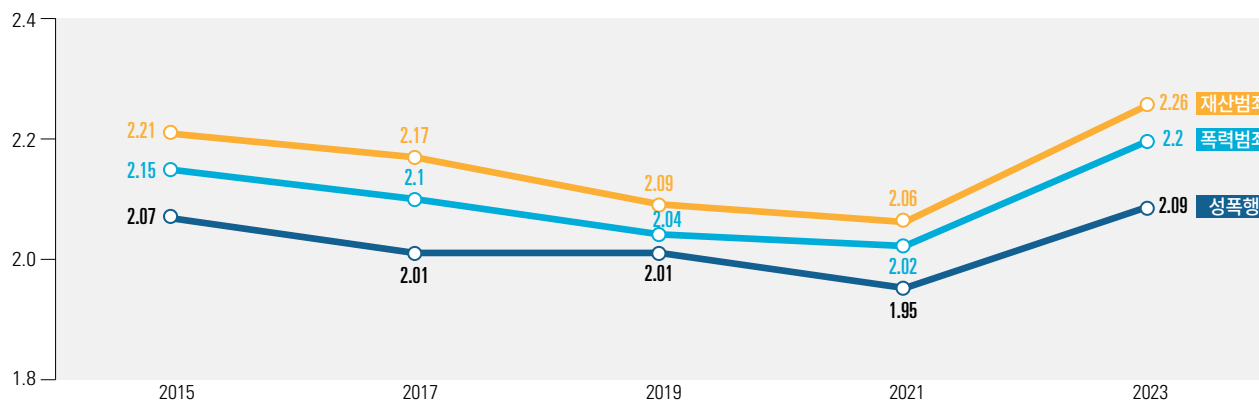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2013~2021년은 KOSIS에서 2024.9.25. 인출, 그 외 연도는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에서 인용)

주1: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

주2: 2013년부터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이전 수치와 비교 시 유의

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5~2023

(단위: 점)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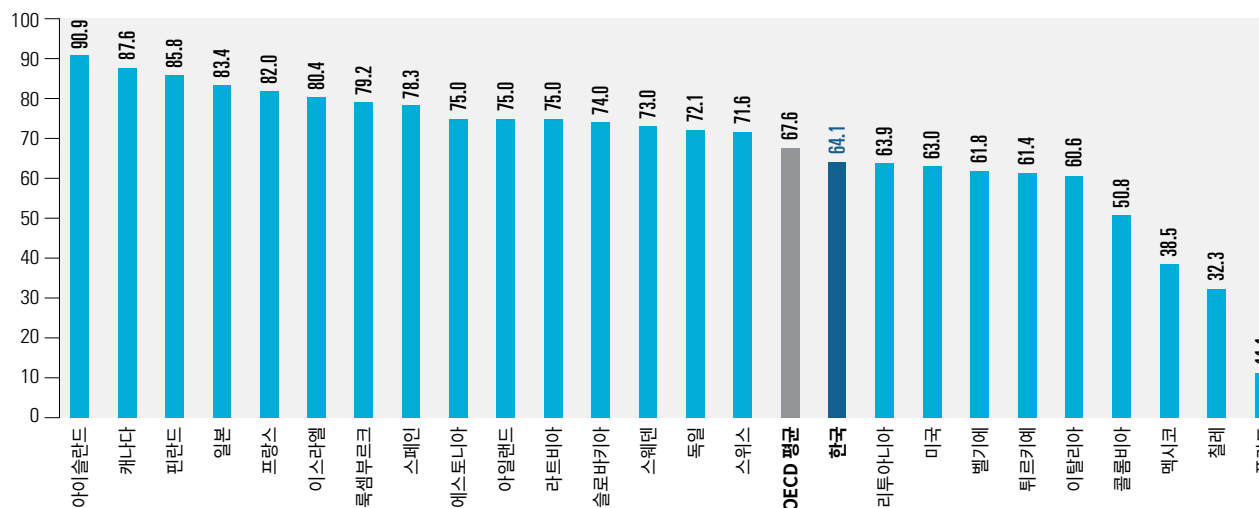
주1: 5점 척도(1=전혀 두렵지 않다, 5=매우 두려움)의 평균 점수

주2: 성폭행 두려움의 경우 2023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불법촬영 두려움 문항을 제외한 수치

131

OECD 국가별 밤에 혼자 길을 때 안전하게 느끼는 비율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4.9.25. 인출)

주1: 밤에 자신이 사는 동네를 혼자 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주2: 수치가 제공된 가장 최근 연도(2013~2022년) 기준



성에서 집중되는 점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황정임 외, 2022).

범죄 두려움의 상대적 수준은 UN에서 집계하는 통계로 알아볼 수 있다. UN의 SDG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동네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다. 주관적 인식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2021년 기준 64.1%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OECD 비교 대상 25개국 중 16위로 나타난다. 이 비율이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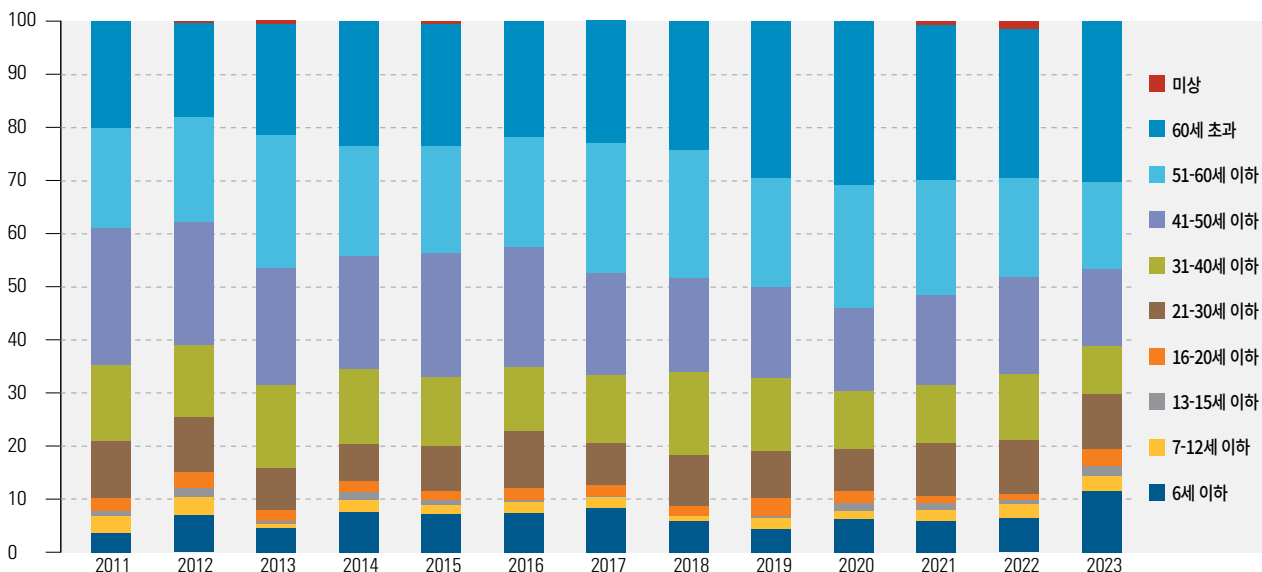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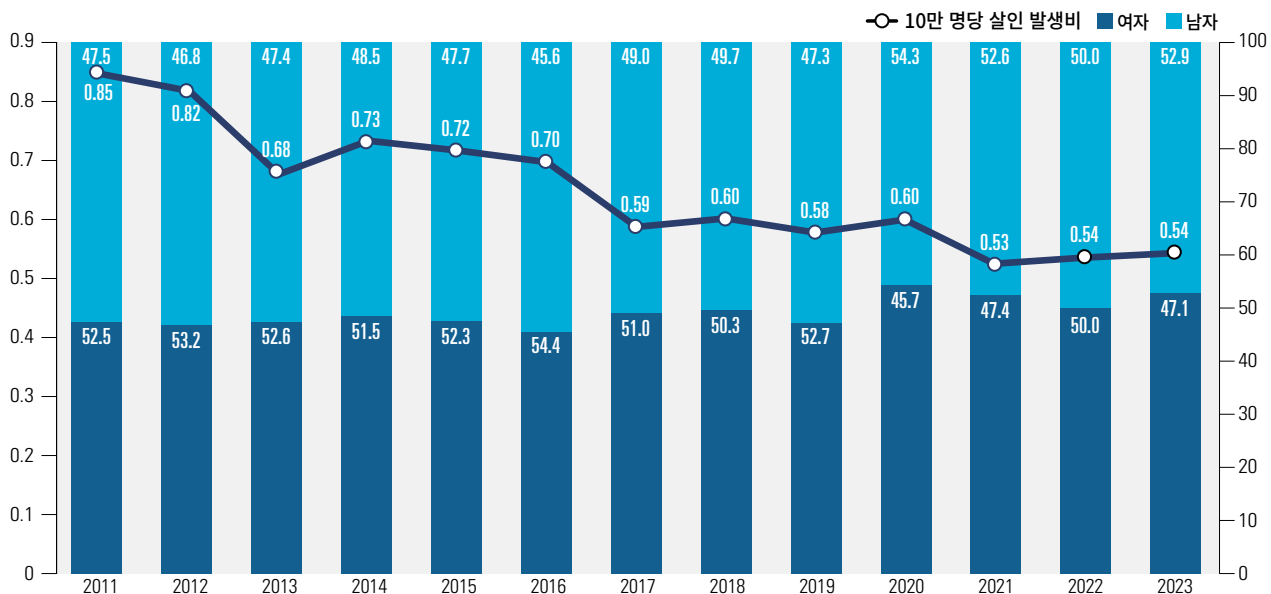
은 아이슬란드는 90.9%에 달하며, 캐나다, 핀란드,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등 5개국도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는다.

살인 발생 감소세 주춤 (○ 관련 지표 16.1.1)

한국의 살인범죄는 2010년대 이래 꾸준히 줄어들어 2021년에는 살인 발생비가 인구 10만 명당 0.53명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두 해 모두 0.54명으로 집계되며 감소세가 주춤한 상태에 있다. 2023년 살인 피해자

성별 살인범죄 발생비 및 피해자 연령, 2011~2023

(단위: 10만 명당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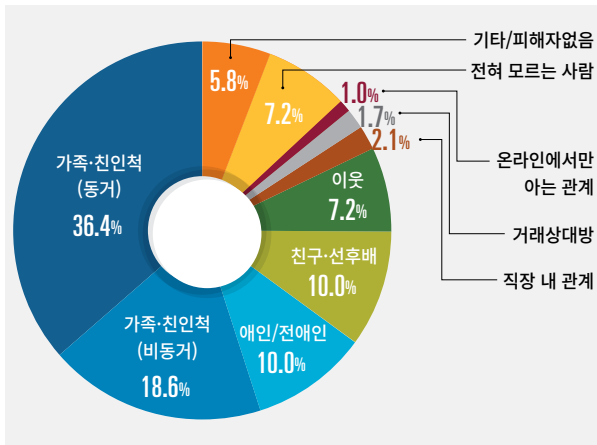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https://kosis.kr>, 2024.9.25. 인출)

주1 :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기수) 피해자 수로 산정하며, 각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적용

주2 : 피해자 성비에서 성별 미상 사건은 제외

살인범죄 피해자 유형, 2023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https://kosis.kr>, 2024.9.25. 인출)
주 : 살인기수 기준

의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4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60세 초과 피해자가 전체의 30.2%, 6세이하가 11.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살인 범죄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와 같은 취약한 피해자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가 36.4%로 가장 많다. 이 밖에 비동거 가족·친인척(18.6%), 애인/전애인(10.0%), 친구·선후배(10.0%), 이웃(7.2%), 직장 내 관계(2.1%), 거래 상대방(1.7%) 등의 순으로 살인 발생이 많다.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에서 살인이 발생한 경우도 1.0%로 집계되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경우도 7.2%에 달한다.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 관련 지표 16.9.1)

출생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SDG 16.9 세부목표에서는 모두에게 출생등록을 비롯한 법적 신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생등록이 누락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였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즉각 통보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출생등록이 가능하였고, 혼외 출산 등의 이유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에는 출생등록 누락으로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혼외 임신 등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임신부들이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도 받고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등록 누락이 줄어 더 많은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134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 17번 목표에서는 SDG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통계 구축 등의 이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투자 필요액과 투자액 간의 격차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더욱 늘어나 4조 달러에 이르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ODA 규모를 더욱 늘려 가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은 높은 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2023년 ODA 규모(증여등가액, 잠정치)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1.3억 달러

- GNI 대비 ODA 비율은 0.18%로 전년 대비 0.01%p 늘어났으나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
- 2024년 ODA 예산이 역대 최대 폭인 31.1% 확대되었으며, 2025년은 전년대비 3.8% 증가하여 GNI 대비 비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양자원조는 2022년 총지출액 기준 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증가

- 최저개발국 ODA 규모(총지출액 기준)는 2022년 8억 4,341만 달러로 전체 양자 ODA의 34.1%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이 중 내륙 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도국에 각각 양자 ODA의 21.8%와 4.1%를 지원

»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23년 224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4.4%를 차지하지만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는 8.7억 달러로 1.3%에 불과

- 개도국과의 교역액은 6,979억 달러로 총교역액의 54.7%를 차지하나 최저개발국과는 141.9억 달러로 1.1%에 불과
- 최저개발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촉진이 시급

» 2023년 기준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46.6명, 인터넷 이용률은 97.4%로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이지만 취약계층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가 존재

- 16~74세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97.4%인 데 비해 75세 이상 인구는 50.8%에 불과
- 소득 1분위 계층과 저학력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84.8%와 86.2%로 전체 인구와 10%p 이상의 차이를 보임

135

ODA 규모 확대 지속

(📌 관련 지표 17.2.1)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ODA 규모는 증여등가액 기준 2018년 23.6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31.3억 달러로 지난 5년간 약 8억 달러 증가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당시 11.7억 달러(순지출 기준)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확정된 2025년 ODA 규모는 6조 5천10억원으로 2030년까지 목표인 6.4조원을 5년 앞당겨 달성하고 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ODA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달러(11.4%) 늘어났다. 이 중 양자원조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3억 달러이며, 여기에는 무상원조(15.7억 달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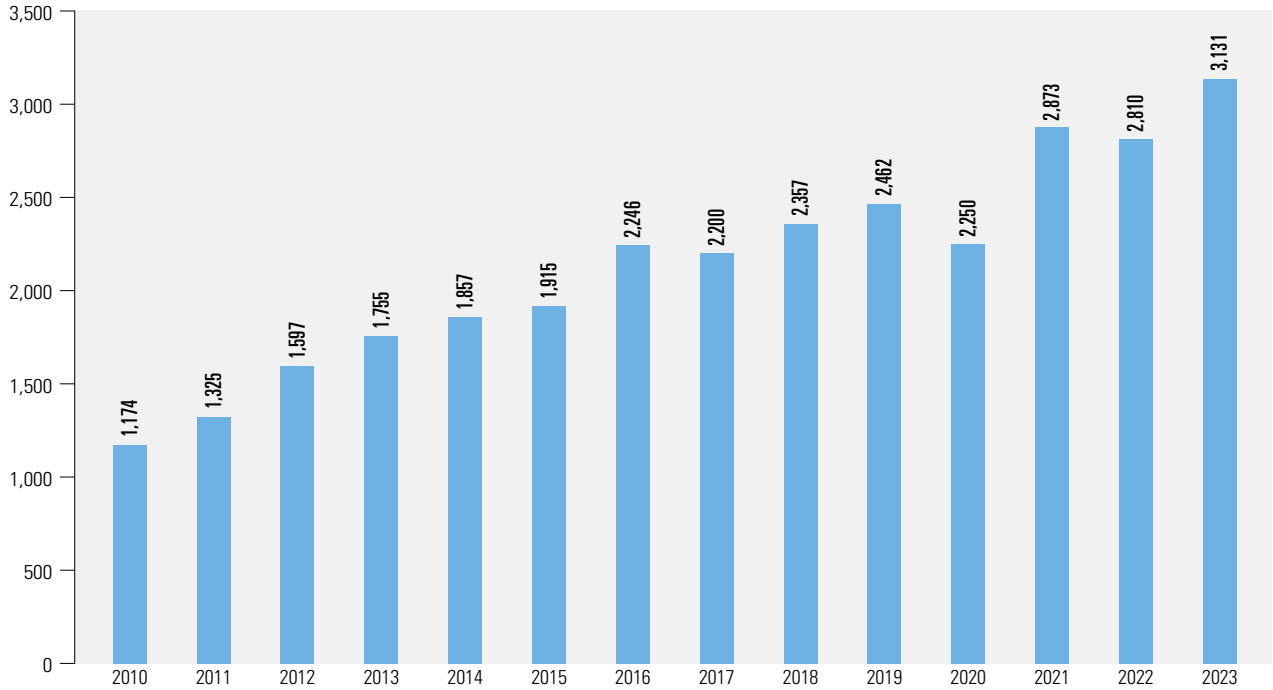
유상원조(7.3억 달러)가 포함된다. 다자원조(8.4억 달러)는 저소득·취약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1.9억 달러 증액되어 전년 대비 41.9%나 증가하였다.

국제사회에서 ODA 규모가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이다. 2023년 기준(증여등가액, 잠정치) 미국의 ODA 규모는 66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다음으로는 독일(367억 달러), 일본(196억 달러), 영국(191억 달러), 프랑스(154억 달러)의 순이다. 한국의 ODA 규모는 OECD DAC 회원국 중 14위 수준이다. 각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은 0.18%로 전년에 비



한국의 OAD 규모, 2010~2023

(단위: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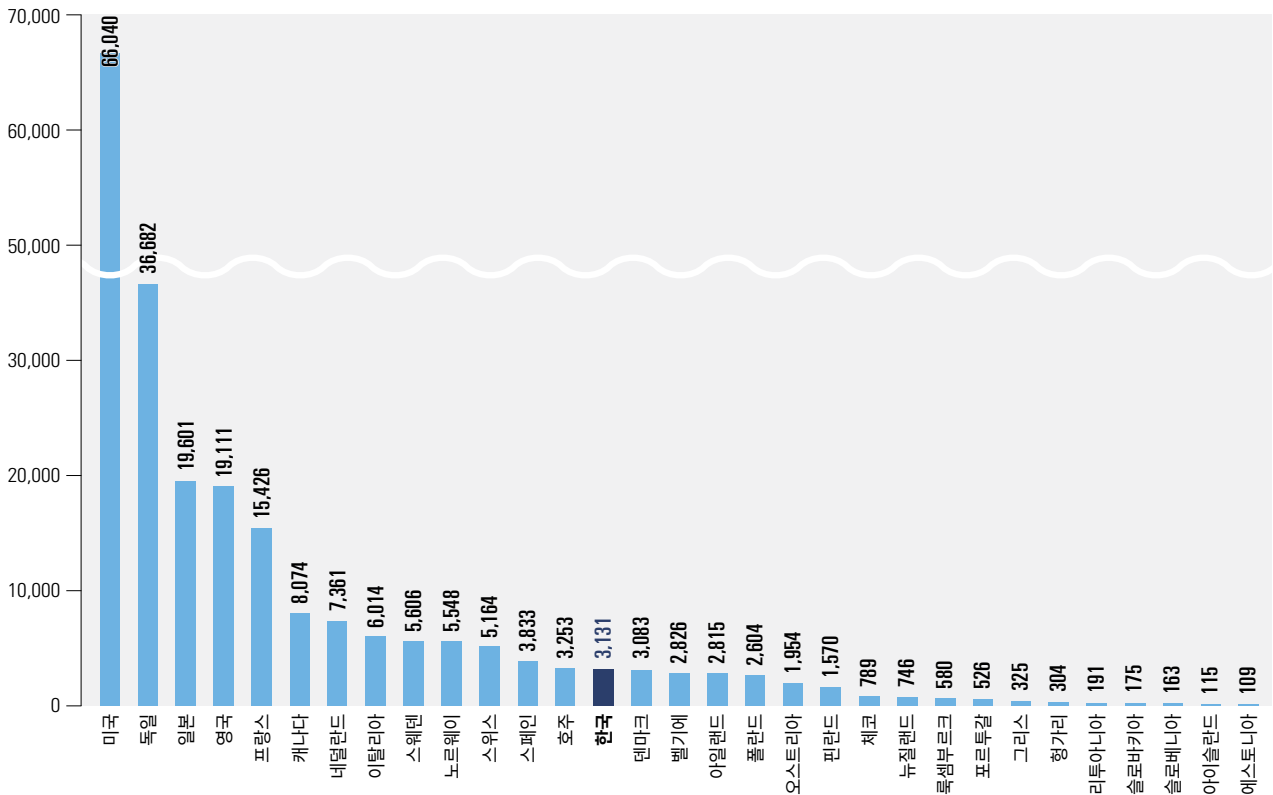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실적통계(<https://kosis.kr>, 2025.2.27. 인출)

주 : 2017년까지는 순지출 기준, 2018년부터는 증여등가액 기준(2018년도부터 유상원조 ODA 통계를 증여등가액 방식 적용(OECD DAC 고위급회의, '14.12월))

OECD DAC 회원국별 ODA 규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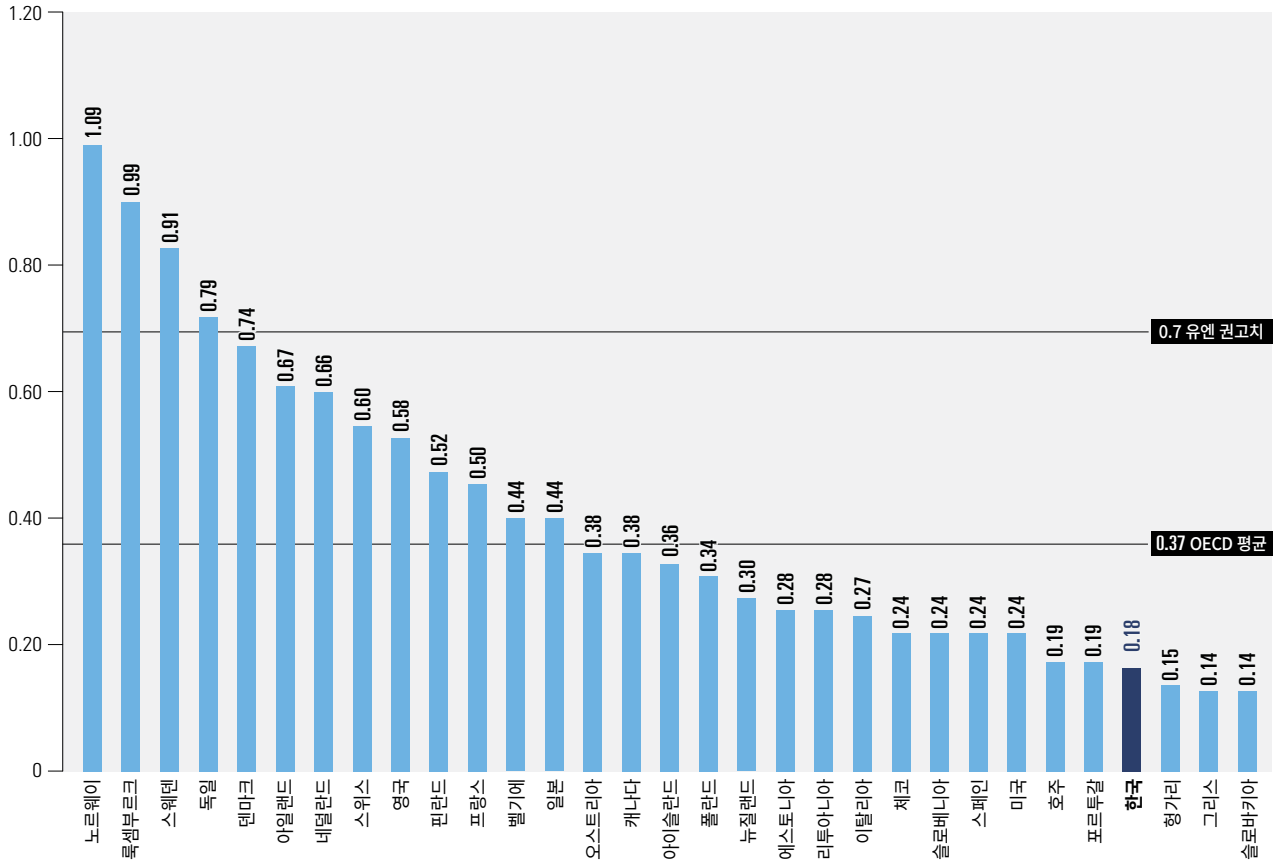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출처: OECD, 2024, ODA Levels in 2023-preliminary data: Detailed summary note([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

주1 : 증여등가액 기준

주2 : 2023년은 잠정치



출처: OECD, 2024, ODA Levels in 2023-preliminary data: Detailed summary note([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

주1 : 중여등가액 기준

주2 : 2023년은 잠정치

해 0.01%p 증가하였으나 DAC 회원국 중에서는 28위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2024년에 한국의 ODA 예산이 역대 최대 폭인 31.1% 확대 되었으며, 2025년은 전년대비 3.8% 증가하여 GNI 대비 비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평균 0.37%로 집계되는데, 이 중 UN 권고치인 0.7%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1.09%), 룩셈부르크(0.99%), 스웨덴(0.91%), 독일(0.79%), 덴마크(0.74%) 등 5개국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체제의 재편에 대응하여 한국이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주도하고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ODA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개도국의 SDG 이행 역량을 지원하고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일관성을 갖도록 보다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해 ODA 재원과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허성 차관 중심의 개발협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크므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간지원 수단(PSI)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규모 증가

(🔗 관련 지표 17.2.1)

한국의 양자원조는 2022년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s) 기준으로 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다. UN에서는 SDG 이행을 위한 개발 자원 수요가 높은 최저개발국(LDC)에 대한 지원을 GNI 대비 0.15~0.2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GNI 대비 최저개발국 지원 비율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0.0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양자 ODA에서 차



지하는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도 높은 편이다.

한국의 최저개발국 ODA 규모(총지출액 기준)는 2022년 8억 4,341만 달러로 전체 양자 ODA의 34.1%를 차지한다. 이는 DAC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양자 ODA에서 하위 중소득국(LMICs)이 차지하는 비중(36.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하위 중소득국(LMICs) 지원은 8억 9,677만 달러(36.3%), 상위 중소득국(UMICs) 지원은 2억 9,793만 달러(12.1%)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저개발국 중 내륙에 위치하여 경제개발에 제약이 큰 내륙 개발도상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에 양자 ODA의 21.8%를 지원하여 에티오피아, 라오스 등과 같은 내륙국에 총 5억 3,760만 달러가 공여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군소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에도 양자 ODA의 4.1%를 배정하여 1억 11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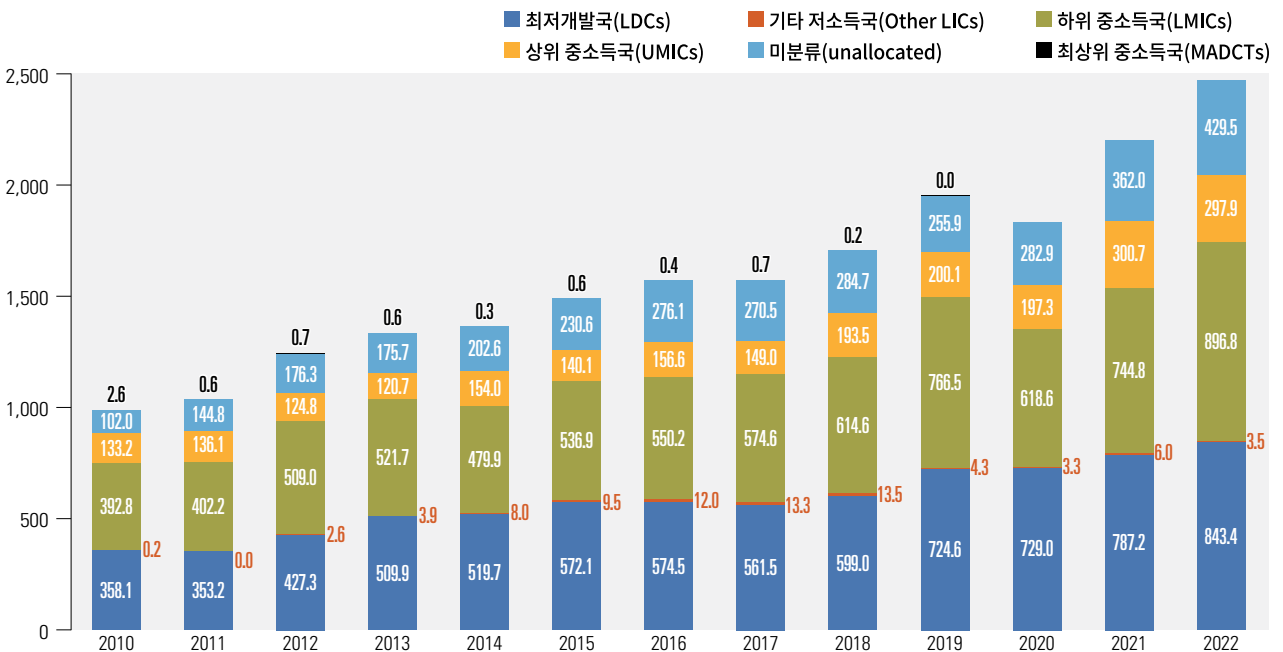
지난 2023년 5월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4년 6월에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은 최저개발국이 다수이지만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다. 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를 채택하여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취약국(fragile states)에 대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과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국가 간 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UN에서 발표한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에 따라 한국에서도 2017년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한 바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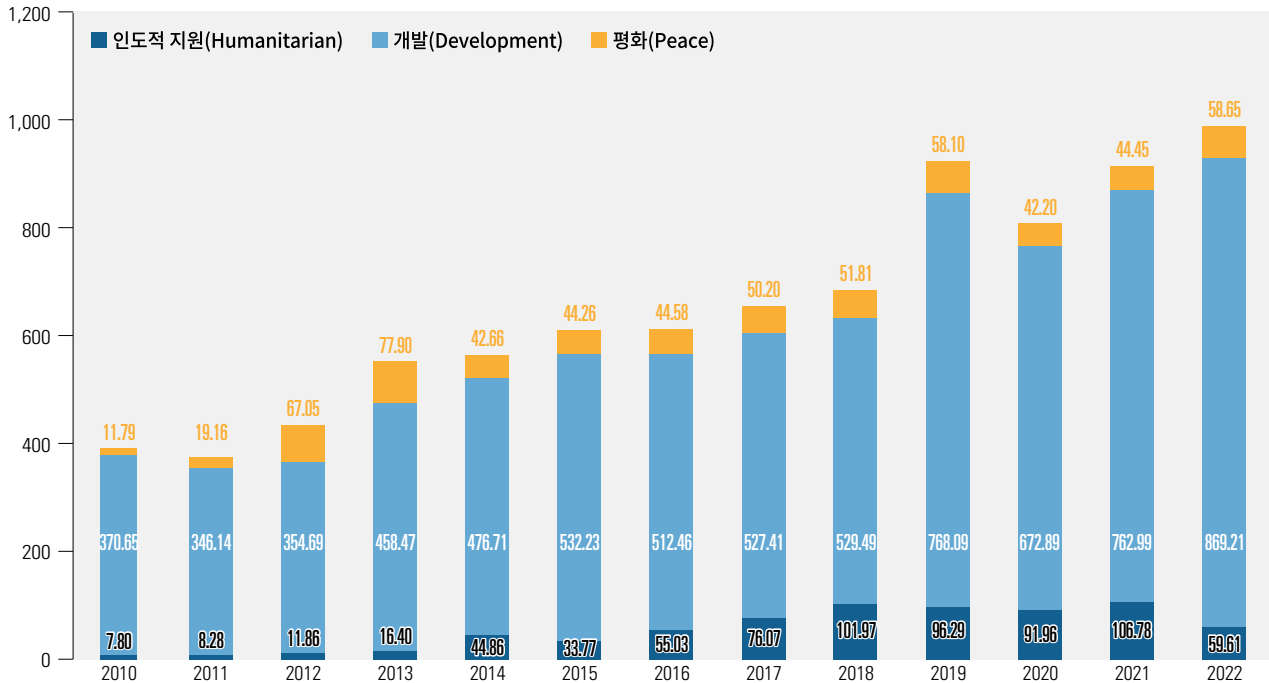
한국의 소득그룹별 ODA 규모, 2010~2022

(단위: 100만 달러)



출처: OECD, 2024,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https://doi.org/10.1787/2dcf1367-en>, 2025.1.29. 인출)

주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출처: OECD, 2024,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https://doi.org/10.1787/2dcf1367-en>, 2025.1.29. 인출)

주 : 2022년 불변가격 기준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다. 취약국가에 대한 한국의 ODA 지원 규모는 2022년 전년 대비 8.0% 증가한 9억 8,747만 달러로 총 양자 ODA의 40.0%를 차지한다. 국제적으로 취약국 원조는 분쟁과 재난 직후 긴급 구호와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2년 취약국 지원액 중 개발 분야의 비중이 88.0%로 가장 크고, 인도적 분야에는 6.0%가 지출되었다. 평화 분야 지출은 5.9%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17.3.1 / 지표 17.11.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817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3년에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2% 감소한 652억 달러로 집계된다. 이 중 개도국에 대한 투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4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개도국 투자 비중은 42.4%에 달하였다. 2023년에는 해외직접투자 총액이 크게 줄어들고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개도국 투자 비중은

34.4%(224억 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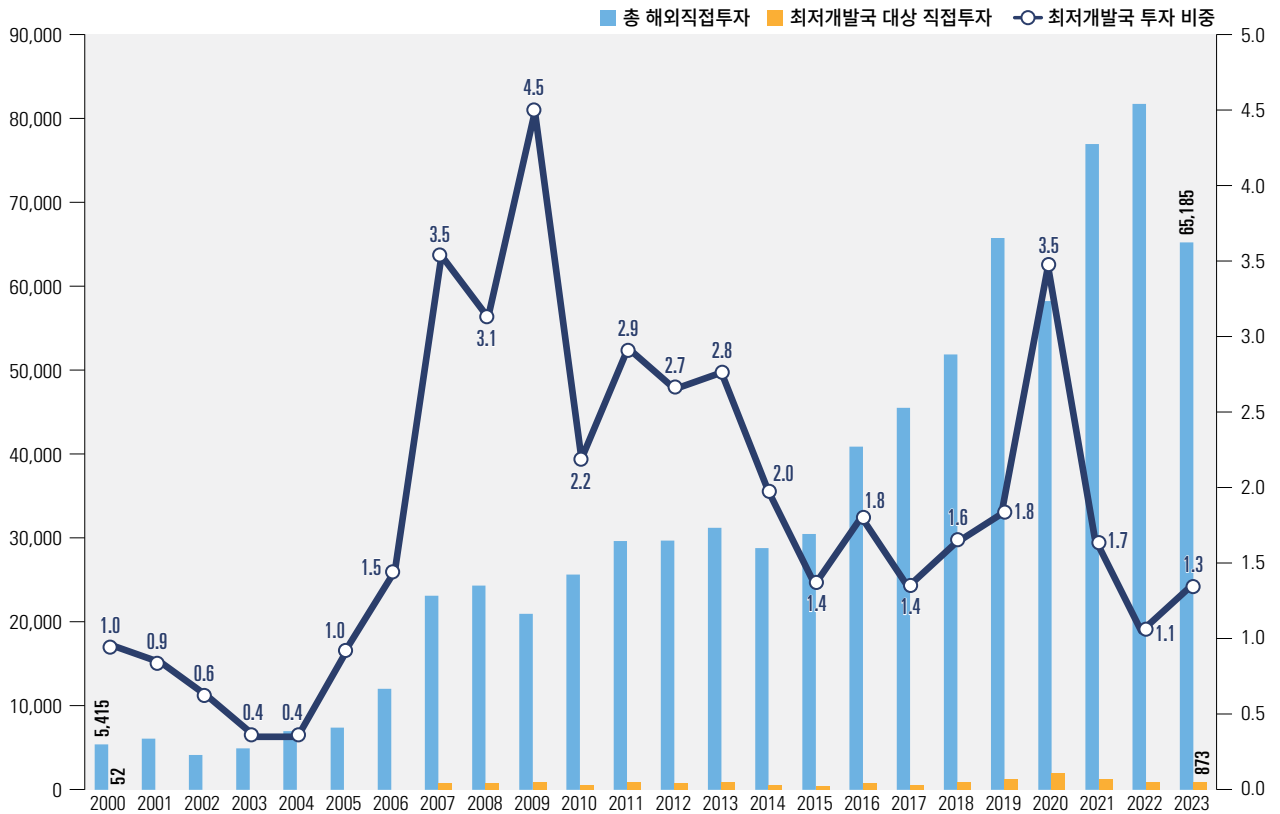
최저개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5.6억 달러에 그치며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는 2020년 20.1억 달러로 최고 규모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 12.9억 달러, 2022년 8.7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8.7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다.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당시에는 3.5%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2022년에는 1.1%까지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3%로 다소 회복하였다. 최근 소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저개발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SDG 이행을 위한 자원 중 민간투자는 대부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저개발국을 위한 투자 촉진이 중요하다. 저소득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와 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포용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면에서 SDG 달성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도하개발어젠다의 협상결과를 포함하여 WTO 체제의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위해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지원하고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비중, 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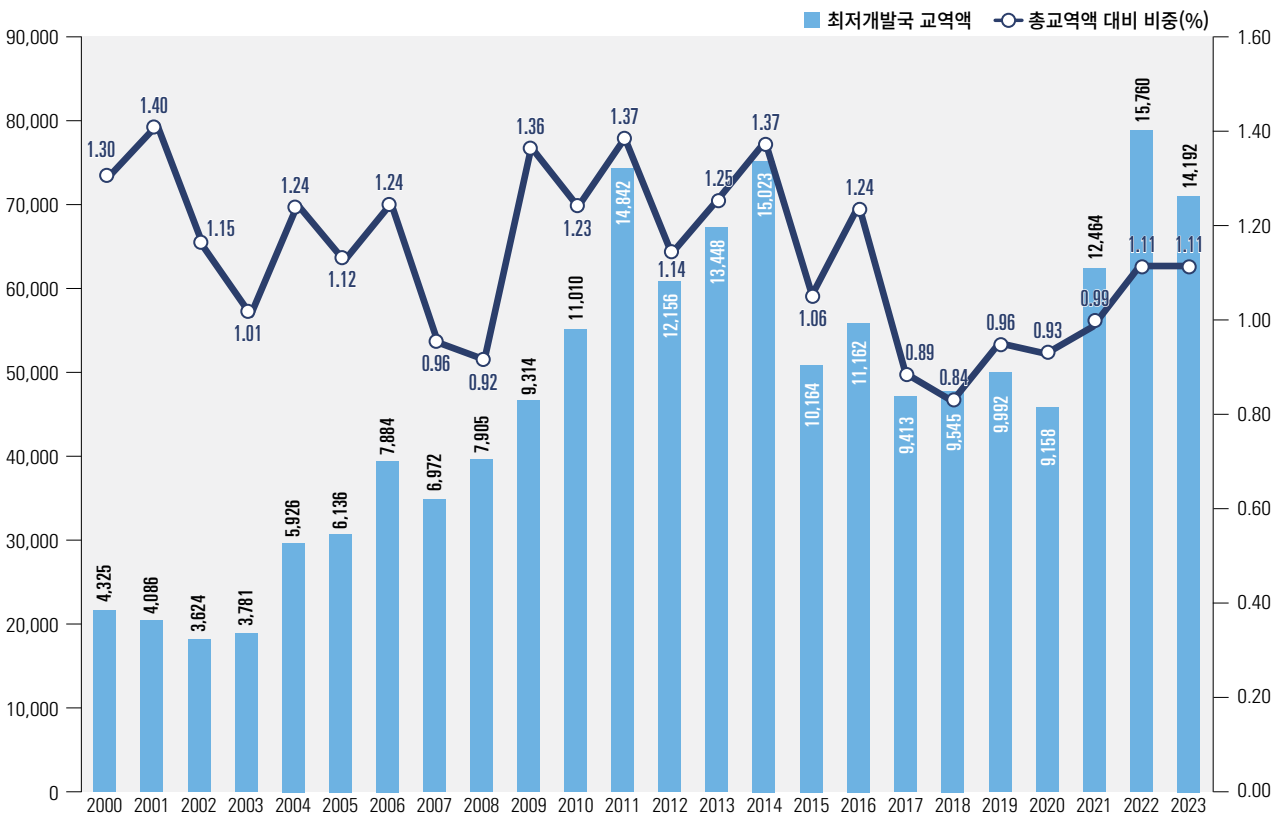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 2025.2.12. 인출)

한국의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 규모 및 비중, 2000~2023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2025.2.1. 인출)

최저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등을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DG 17번 목표에서 무역은 SDG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주요 이행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SDG 17.11 세부목표에서는 전 세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의 비중을 두 배로 늘리고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대폭 높이려 한다.

한국의 개도국 교역액은 2023년 6,979억 달러로 총교역액의 54.7%를 차지한다. 반면에 최저개발국과의 교역액은 141.9억 달러로 총교역액의 1.1%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최저개발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특혜관세의 수혜 품목 및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시행 초기에 전체 교역품의 1.8%에만 적용되던 특혜관세가 2012년에 95%까지 수혜 품목이 늘어났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액은 2022년 역대 최대인 157.6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9.9% 감소한 141.9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은 97.4%에 이르지만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은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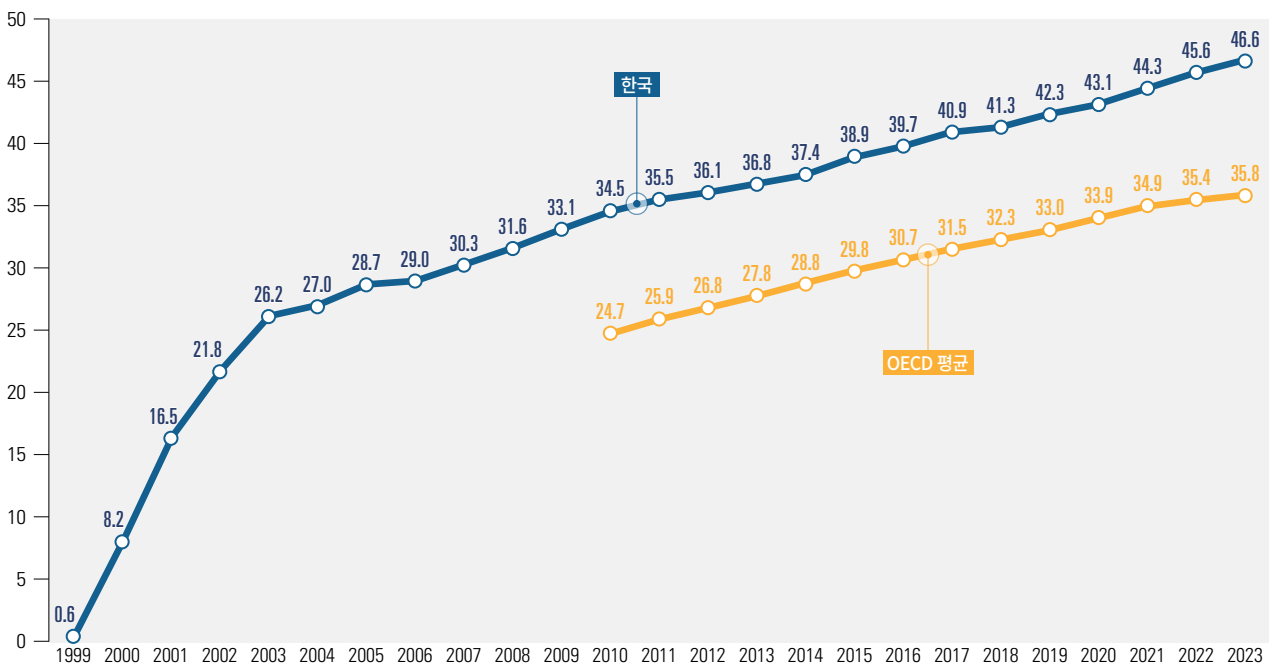
(📊 관련 지표 17.6.1 / 17.8.1)

한국의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23년 기준 약 2,409만 8천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인구 100명당 46.6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1998년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후 빠르게 증가하여 4년 만인 2002년에 20%를 넘어섰고 2017년부터는 40%를 웃돌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프랑스(4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35.8%)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OECD에서는 16~74세 인구 중 지난 3개월간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의 비율로 인터넷 이용률을 집계한다. 이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3년 97.4%에 달한다. 이제 인터넷은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보편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다만 2021년(97.6%) 이후로는 증가세를 멈추고 97%대에 머무르고 있어, 인터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1999~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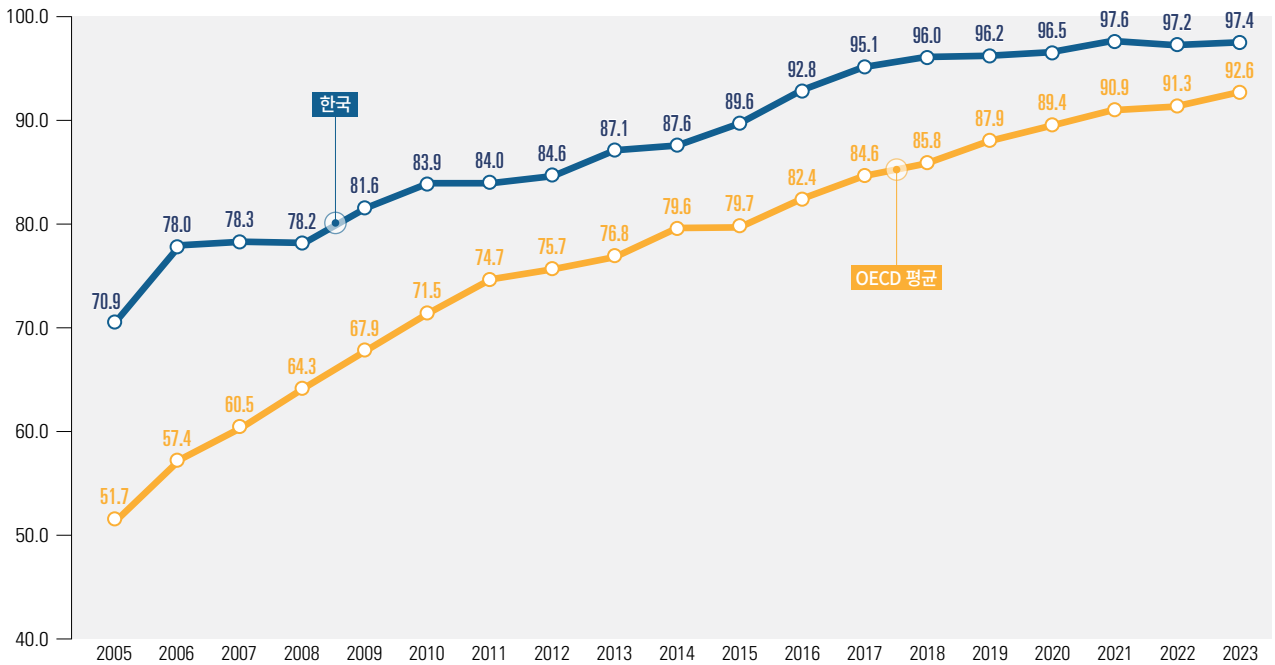
출처: OECD, Broadband statistics(<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broadband-statistics.html>, 2025.1.28. 인출)

주 :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fixed broadband)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률, 2005~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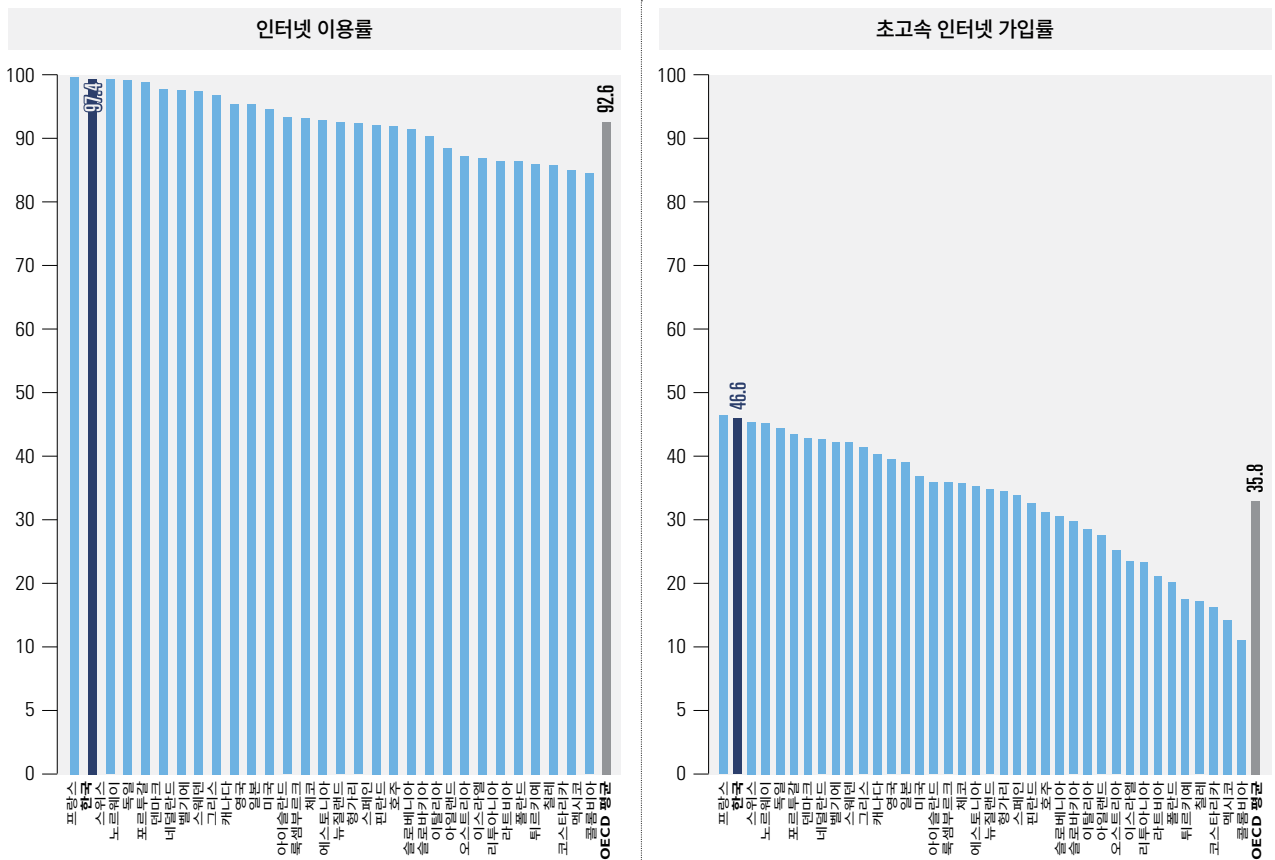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1.28. 인출)

주1: 16~74세 인구 중 지난 3개월간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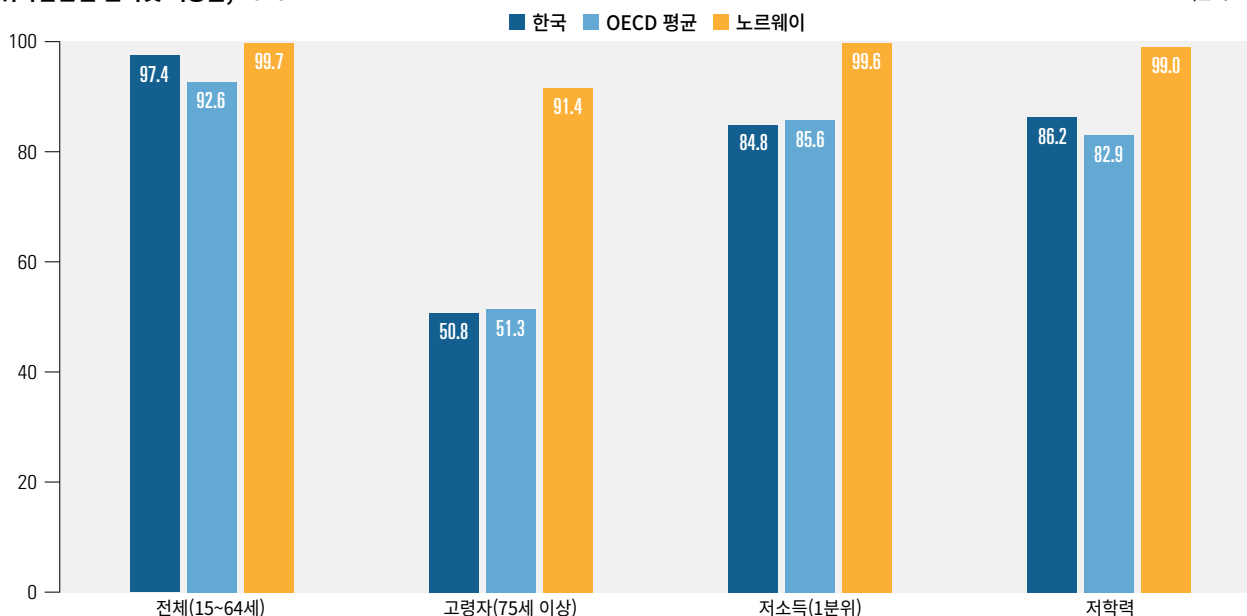
주2: OECD 평균은 연도별로 자료가 공개된 28~33개국 평균

OECD 국가별 인터넷 이용률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2023

(단위: %)



출처: OECD, Broadband statistics(<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broadband-statistics.html>, 2025.1.28. 인출);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1.28. 인출)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1.28. 인출)

주 : 고령자, 저소득층, 저학력층 인터넷 이용률은 자료가 공개된 OECD 10개국, 27개국, 30개국 평균

넷 이용에서 뒤처진 계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2023년 자료가 공개된 OECD 30개국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92.6%이며, 한국은 이보다 4.8%p 높다. 한국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99.7%), 룩셈부르크(99.3%), 스위스(99.3%), 네덜란드(99.2%), 덴마크(98.8%), 핀란드(97.7%), 스웨덴(97.6%)을 포함한 7개국에 그친다.

견고한 인터넷 기반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낮다. 2023년 16~74세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97.4%인 데 비해 75세 이상에서는 50.8%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75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 자료가 공개된 OECD 10개국의 평균도 51.3%에 불과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OECD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75세 이상의 이용률도 91.4%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은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과 저학력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84.8%와 86.2%에 그치며 전체 인구의 이용률과 10%p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과 인터넷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취약국가(fragile states)** :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사회 내 상호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국가
- **초고속 인터넷** : ITU 조사 기준으로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256kb(킬로바이트)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
- **증여등가액(ODA grant equivalent)** :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ODA 재무 조건을 소득그룹과 무관하게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 25% 이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2018년 이후 ODA로 인정하는 증여율을 소득그룹별로 차등화하고 측정 방식을 순지출(총지출액-총상환액) 방식에서 증여등가액(총지출×증여율) 방식으로 변경함. 변경된 소득그룹별 증여율 기준은 최저개발국을 포함한 저소득국 45% 이상, 하위 중소득국(LMICs) 15% 이상, 상위 중소득국(UMICs) 10% 이상임



목적 및 활용

SDG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이다. SDG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가 통합적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NOB, 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원칙으로 한다.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완수하기 위해, 매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4년 주기로는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의 자발적 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SDG 채택문인 2030의제에서는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현황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당연직 부처로 통계청을 포함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 또한 정비 하였다.

통계청은 SDG 한국 데이터 책임연락기관(data focal point)으로서, SDG 국내 데이터 수집 및 국제기구 자료제공, 한국의 SDG 이행현황 보고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글로벌 렌즈를 통해 본 한국의 SDG 데이터와 이행현황』이라는 기초보고서를 발간한 이래로, 2021년부터 매년 3월말 한국의 SDG 이

행보고서 국문과 영문 보고서를 동시에 발간하였다. 지표별 이행현황에 대한 유의미하고 풍부한 분석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계열 분석, 국내 인구집단 또는 지역 등에 따른 세분화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현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래프 등 시각적인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 정보의 활용도와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일반인, 학생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되, 전문용어 등은 풀어쓰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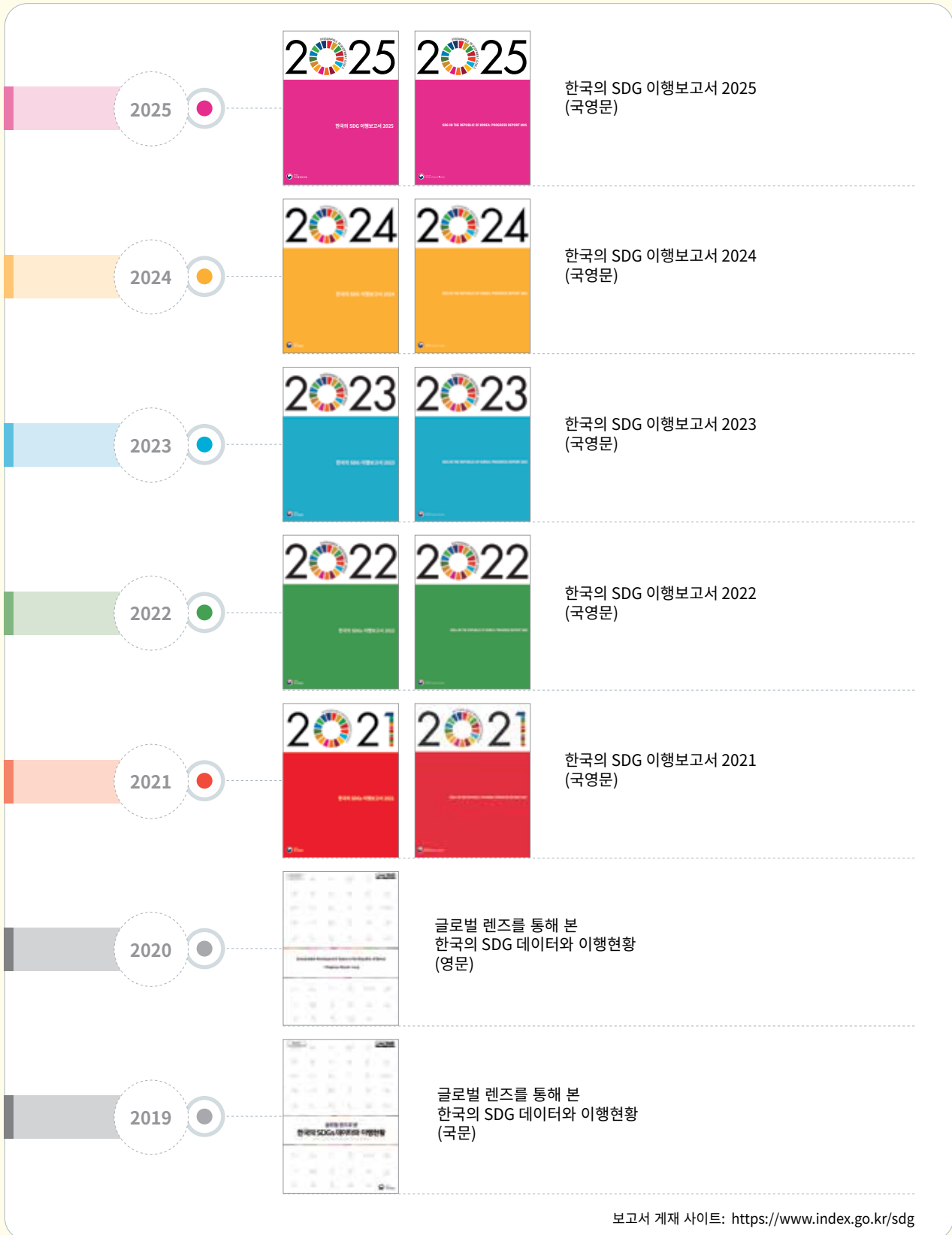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정책담당자와 각 분야 연구자를 위한 정책자료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언론·미디어, 시민사회 등 대국민 정책홍보·교육·소통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고서의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됨으로써 해외 관련기관 및 연구자 등에게도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출처

지표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는 통계청 지표누리(<https://index.go.kr>)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승인통계, 정책자료 등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국제데이터의 경우, UN SDG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신 및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각 지표를 소관하고 있는 국제기구 데이터도 함께 사용하였다.

연혁

* 보고서 표지 색은 목표별 색상을 적용함





SDG 진전을 가속화하고 분명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 제공에서 통계데이터의 역할이 크다. 신뢰할만하고 시의적이며 세분화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은 SDG 지표 통계데이터 역량강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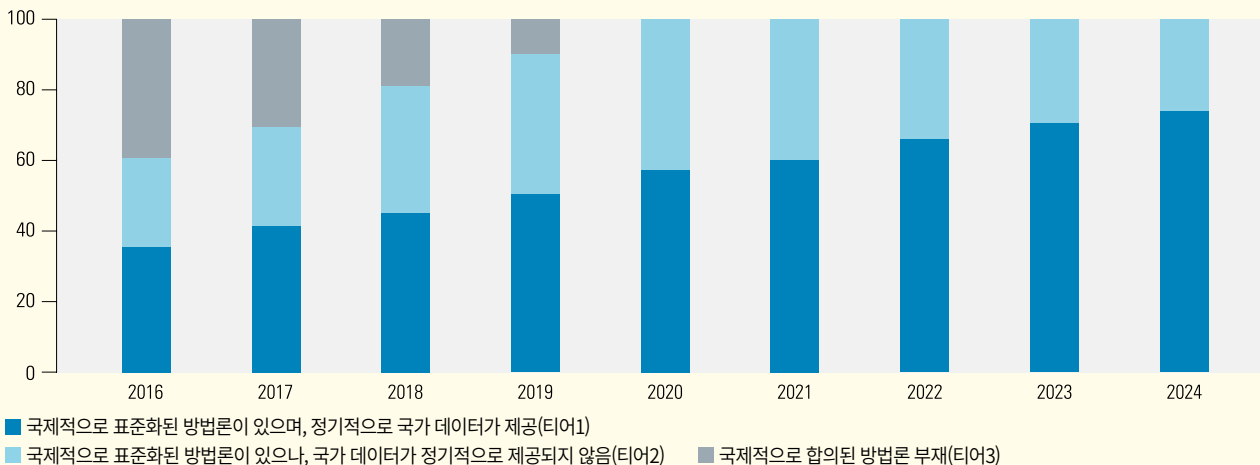
2016년 글로벌 SDG 지표 프레임워크 초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39%의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론을 갖추지 못하였으나(티어3), 4년 만인 2020년, 마침내 모든 지표가 표준화된 방법론을 구비하게 되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지표도 2016년 36%에서 2024년 72%로 증가하였다(티어1). 이를 통해

글로벌 SDG 지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8% 지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 제공되지 않는 상황(티어2)이어서 통계역량이 부족한 국가 대상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SDG 지표에 대응하는 한국 데이터 가용률은 2024년 기준으로 82%이다. 한국 통계청은 글로벌 SDG 지표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국내외 통계를 파악하여 관련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지표누리(<https://index.go.kr/sdg>)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목표별 데이터 가용률을 보면, 전체 평균 가용률에 비해 낮은 가용률을 보이는 목표는 8개이며, 이 중에서도 성평등(목표5) 및 기후변화(목표13), 평화 및 정의(목표16)에서 데이터가 취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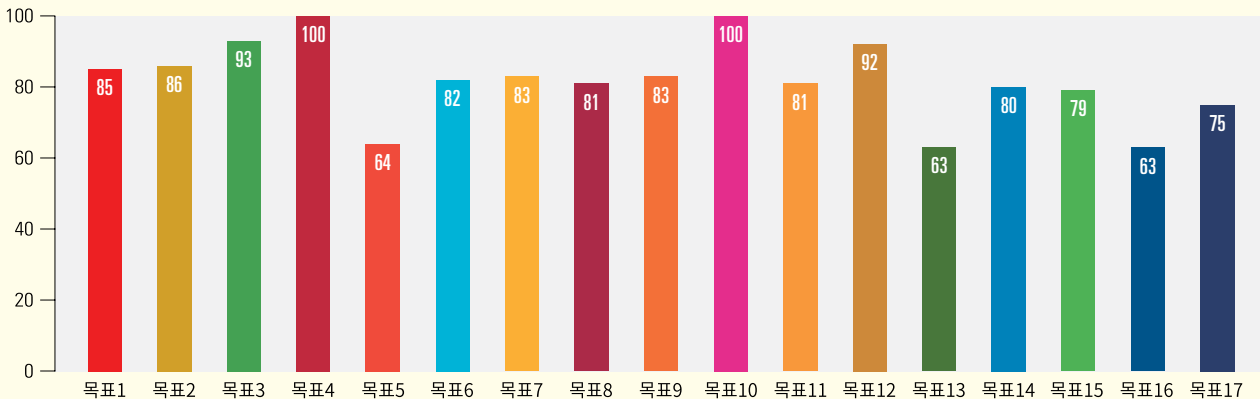
글로벌 SDG 지표 티어 현황

(단위: %)



목표별 한국 데이터 가용률(2024년 12월 기준)

(단위: %)



SDG 지표 총괄표

2023년부터 목표별 대표지표 및 순환지표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현황 점검 체계를 운영. 대표지표는 매년, 순환지표는 3~5년주기로 현황 점검에 활용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	○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이밍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고를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력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	○	○	○	○	●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	○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해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 여부별)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여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	○			○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 소득(성 및 원주민 여부별)	○	○	○	○		●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			○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 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	
	2.a.2 농업 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해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 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		○		●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모성 사망비	○				○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로 감소	3.2.1 5세 미만 사망률	○					
	3.2.2 신생아 사망률			○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				
	3.4.2 자살률	○		○			●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3.8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으로 인력 밀도 및 분포	○	○	○	○	○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수 보장	4.1.1 (a)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초등학교 말 (c)중학교 말에 (i)읽기와 (ii)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	○	○	○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중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유아·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중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			○	○	●
4.4 2030년까지 전문·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 실질적으로 증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 유형별)			○		○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	○	○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	4.6.1 특정 연령집단에서 기능적 (a)언어역량과 (b)수리역량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4.7.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유형별)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b.1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 부문 및 연구유형별)					○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	○	○	○	●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 보호 정책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축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	○	○			
5.5 정치, 경제, 공공 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1 (a)여성 국회의원 비율 (b)여성 지방의원 비율	○	○	○	○	○	●
	5.5.2 여성 관리자 비율	○	○	○	○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		
	5.a.2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 사용 강화(특히 ICT)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와 성평등 축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6.2.1 (a)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 등을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	○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	○	○	○	●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2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	○	○	○	○	●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 연간 7% GDP 성장을 유지	8.1.1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	○	○	○	●
8.2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			○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	○	○	○	○	●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적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 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 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	○	○	○	○	●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 인구 비율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 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9.1 경제 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	○		○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	○	○	○	●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	○	●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상당)연구원 수	○	○	○	○	○	●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 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해 개도국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152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	○	○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	○	○	○	○	●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 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	○		○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 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지원, 직접투자권장	10.b.1 개발재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로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	○	○	○	○	●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 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		○	○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5.3 재난으로 인한 중요 사회기반시설 손상 및 기초서비스 중단						
11.6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 감소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	○	○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인구수 가중)	○	○			○	●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공간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	○		●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해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 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2분의 1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				○	●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2 (a)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		○	○	○	●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	○	○	○	○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			○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인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틀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해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3.1 기후 관련 위험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	○	●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	○	○	○	●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달러 동원 촉구 이행	13.a.1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	○	○	○	○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	○	○	○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		○		○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체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		●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증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 보장	15.1.1 총 국토면적중 산림면적의 비율	○		○	○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유형별)		○	○	○	○	●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	○	○	○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해,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		○	○	○	●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동물 비율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 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 다양성의 통합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 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산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 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 (성 및 연령별)	○		○	○	○	●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신체적, (b)정서적, (c)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				○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 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고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			●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
16.10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 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	

목표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 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 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순ODA의 비율 2)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	○	○	○	○	●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	○	●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혁신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해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허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 증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 지원금액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	○		●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해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들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만·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연도별 데이터 수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sdg>)

- 강미나 외, 2020,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경찰청, 2024, 2023 경찰통계연보(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7)
- 경찰청, 범죄통계
- 고용노동부, 2014~2023, 2014~2023년도 AA 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https://aa-net.or.kr/user/board/workerRepor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관계부처 합동, 2023,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안건)
-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 관계부처합동, 2024, 역동경제 로드맵
- 교육부 보도자료(2023.1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결과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24.09.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
- 교육부, 2023,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3.12.26)
- 구경아 외, 2021,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 구경아 외, 2021,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
- 구경아 외, 2022, 생물다양성보전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I), 한국환경연구원
- 구경아 외, 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관리지표 마련 연구, 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 국립수산과학원, 2022, 수과원, 국내 처음으로 장기 해양산성화 관측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2.11.14)
- 국립수산과학원, 2024,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2024, 대기환경연보 2023
-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2024, '23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1.3억불 지원, 보도자료(2024.4.14)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8-1호)
- 국토교통부, 2024,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 권율 외, 2012,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KIEP 연구보고서 1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 2016, SDGs 도입 이후 개도국의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 2021,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2019,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추진과제: K-SDGs 수립과정과 추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권율, 2022,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미래정책 포커스 2022년 겨울호 Vol. 35,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권율, 2023,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지식공유 브리프 2023년 특별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권율, 2024,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예산춘추 Vol. 74, 국회예산정책처
- 김태훈·김지연, 2013, 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효정 외, 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3, 양정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4.19.),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120&act=view)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7.18.),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신부와 아동 보호”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자살률(10만 명당) 27.3명, 보도자료(2024.10.4)
- 보건복지부, 202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을 유지, 보도자료(2024.7.29)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산업연구원, 2024, 주요산업동향지표, 2024년 6월 통권 제45호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5, 2024 에너지통계연보
- 서원주, 2013,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영국 교육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12호, 한국교육개발원
- 여성가족부, 2024,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 윤민희 외, 2021, GIS를 활용한 SDGs 지표 생산 연구, 통계개발원
- 인사혁신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https://www.mpm.go.kr/mpm/lawStat/infoStatistics/hrStatistics/hrStatistics03>)
- 인사혁신처, 2024,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
-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1
-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
- 통계개발원, 2023,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 통계개발원, 2024,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통계청, 연금통계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한국국토정보공사, 2024, 2023 도시계획현황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 한혜진 외, 2020,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 해양수산부, 2023, IUU 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사전예고제 시행, 보도자료(2023.2.15)
- 해양수산부, 2024,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통계(2023.12.31.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1&nttId=110482,
2024.8.28. 인출)
- 홍연아·박미성·이용선·윤찬미, 2021,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2) 공표('06, '96 IPCC 지침)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2) 요약
- 환경부, 202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 환경부, 2024, 2023 상수도통계(<https://www.waternow.go.kr/web/board/STAT/36690/?pMENUID=9>)
- 환경부, 2025,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 톤, 전년 대비 2.3% 감소, 보도자료(2025.1.3)
- CBD, 2020, Global Biodiversity Outlook 5
- FAO, 2024,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4
- Global Water Partnership, 2000,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Global Water Partnership
- OECD, 2020, Blended Finance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20: Supporting a Resilient COVID-19 Recovery
- OECD, 202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
(<https://www.oecd.org/dac/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747721.htm>)
- OECD, 2021, OECD skills outlook 2021: Learning for life
-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

OECD, 2024,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https://doi.org/10.1787/2dcf1367-en>)

OECD, 2024, ODA Levels in 2023-preliminary data: Detailed summary note([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Sachs, J. D. et al., 2024,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Dublin University Press, doi:10.25546/108572

Sachs, J.,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F. Woelm, 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2024, SDG indicator metadata

UN, 2024,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EP, 2021, Food Waste Index Report 2021

UNEP, 2024, Food Waste Index Report 2024

UNISD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UNISDR, 2017, Technical Guidance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on Progress in Achieving the Global Targets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8, Progress o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Global Indicator 6.5.1. Updates and Acceleration Needs

UN재난위험감사사무소(UNISDR), 2017, 어떻게 도시 복원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리더를 위한 핸드북 (https://www.unclearn.org/wp-content/uploads/library/unisdr_-_handbook_for_local_government_leaders_2017_korean.pdf)

WHO, 2022, Suicide: facts and figures globally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360460/WHO-MSD-UCN-MHE-22.03-eng.pdf?sequence=1>)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Global Social Mobility Report 2020: Equality, Opportunity and a New Economic Imperative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마당(<https://www.water.go.kr/464>)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회복사업(<https://www.nifs.go.kr/contents/actionContentsCons0121.do>)

국토교통부, V-WORLD 디지털트윈국토, 공간시설(현황)(https://www.vworld.kr/dtmk/dtmk_ntads_s002.do?svcCde=MK&dsId=30068)

국회사무처,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8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https://news.seoul.go.kr/env/city_park_tim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

통계청, SDG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Main.d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한국무역협회, K-stat(<https://stat.kita.net>)

한국수산자원공단, TAC 소개(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https://gsis.kwdi.re.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환경기준물질(https://www.airkorea.or.kr/web/airMatter?pMENU_NO=13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portal/main.do>)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European Commission,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https://environment.ec.europa.eu/strategy/biodiversity-strategy-2030_en)

European Commission, Nature Restoration Law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nature-restoration-law_en)

FAO, AQUASTAT(<https://www.fao.org/aquastat/en>)

FAO, FAODATA explorer(<https://de-public-statsuite.fao.org>)

FAO, FAOSTAT(<https://www.fao.org/faostat>)

FAO, UN Report: Global hunger numbers rose to as many as 828 million in 2021
(<https://www.fao.org/newsroom/detail/un-report-global-hunger-SOFI-2022-FAO/en>)

IEA, Fossil Fuel Subsidies(<https://www.iea.org/topics/fossil-fuel-subsidies>)

IEA, The global energy crisis pushed fossil fuel consumption subsidies to an all-time high
(<https://www.iea.org/commentaries/the-global-energy-crisis-pushed-fossil-fuel-consumption-subsidies-to-an-all-time-high>)

IEA, World Energy Balances(<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product/world-energy-balances#indicators>)

ILO, ILOSTAT(<https://ilostat.ilo.org/topics/sdg>)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https://ipbes.net/global-assessment>)

IPBES, IPBES-IPCC Co-Sponsored Workshop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https://ipbes.net/events/ipbes-ipcc-co-sponsored-workshop-biodiversity-and-climate-change>)

IPU, Parline Data(<https://data.ipu.org>)

ITU, DataHub(<https://datahub.itu.int>)

IUCN, Nature-based Solutions(<https://www.iucn.org/our-work/nature-based-solutions>)

IUCN, Raw Data to Red List(<https://www.iucnredlist.org/assessment/process>)

IWRM Action Hub(<https://iwrmaactionhub.org/about/iwrma-explained>)

IWRM Data Portal(<https://iwrmdataportal.unepdhi.org>)

Key Biodiversity Areas, World Database of Key Biodiversity Areas(<http://keybiodiversityareas.org/kba-data/request>)

OECD, Broadband statistics(<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broadband-statistics.html>)

OECD, Fragility Framework(<http://www3.compareyourcountry.org/states-of-fragility/countries/AFG>)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UNDRR,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https://sendaimonitor.undrr.org>)

UNEP,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https://www.unep.org/resources/kunming-montreal-global-biodiversity-framework?gclid=CjwKCAjw9-6oBhBaEiwAHv1QvOMGJmHCHLCYRIKwejBCazRGScyS4vbbJiA2_3KtoZ1OUEWWOrwb9xoCvXUQAvD_BwE)

UNFCCC, Glasgow Climate Pact(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ma2021_10_add1_adv.pdf)

WHO, Health workforce(https://www.who.int/health-topics/health-workforce#tab=tab_1)

WHO, Vaccines and immunization(https://www.who.int/health-topics/vaccines-and-immunization#tab=tab_1)

WHO, What are the WHO Air quality guidelines?
(<https://www.who.int/news-room/feature-stories/detail/what-are-the-who-air-quality-guidelines>)

World Bank Group,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Series/NV.IND.MANF.ZS>)



-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국제개발협회)
-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
-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국제보건규정)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국제자연보전연맹)
-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통합물관리)
- KEEP30**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 LCR** Land Consumption Rate(토지소모율)
- LDC** Least Developed Country(최저개발국, 최빈개도국)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 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해외직접투자)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DAC**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 개발원조위원회)
-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 PGR** Population Growth Rate(인구증가율)
- 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국제성인역량조사)
-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국제학업성취도평가)
- RIR** Rent to Income Ratio(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RLE** Red List of Ecosystems(생태계 적색목록)
-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연구)
-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UNDRR**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UN재난위험감사무국)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우리는 2030 의제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 우리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집필진

연구책임 정우현(한국환경연구원, 목표16)

공동연구 정해식(보건사회연구원, 목표1)

박준기(농촌경제연구원, 목표2)

신정우(보건사회연구원, 목표3)

한효정(교육개발원, 목표4)

김도균(한국환경연구원, 목표5)

현윤정(한국환경연구원, 목표6)

안재균(에너지경제연구원, 목표7)

오상봉(노동연구원, 목표8)

임소영(산업연구원, 목표9)

박주영(한국환경연구원, 목표10)

임용호(국토연구원, 목표11)

주문술(한국환경연구원, 목표12)

박진한(한국환경연구원, 목표13)

김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해양))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수산))

구경아(한국환경연구원, 목표15)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표17)

김태동(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목표17)

연구보조 서은주(한국환경연구원)

편집진

김의영(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

박영실(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

안진숙(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주무관)

발행 2025년 3월

발행처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 2765-3803

디자인 강문인쇄사

인쇄처 강문인쇄사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71-10



SDG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25